



2024.12.30.

국회미래연구원 | 연구보고서 | 24-16호

국민과 미래대화: 이머징 시티즌의 미래인식

박성원, 박현석, 김태경, 전준, 이상직, 인천연구원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국민과 미래대화: 이머징 시티즌의 미래인식

연구진

■ 내부연구진 ■

박성원 연구위원(연구책임)

박현석 연구위원

김태경 부연구위원

■ 외부연구진 ■

전준 KAIST 디지털인문사회과학부 교수

이상직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

채은경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장

최태림 인천연구원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장

이명화 인천연구원 전임연구원

정민선 인천연구원 전임연구원

정진원 인천연구원 전임연구원

정남숙 인천연구원 전임연구원

백승아 인천연구원 전임연구원

문재철 인천연구원 전임연구원

윤주현 인천연구원 전임연구원

이준호 인천연구원 전임연구원

- ◆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 보고서를 무단 전재 또는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 ◆ 본 보고서의 내용은 국회미래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발 | 간 | 사

변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오늘날, 미래를 준비하는 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도 시급합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기존의 사회적 틀 안에서 그늘에 가려져 있던 목소리와 이들의 가능성입니다. 이번 연구에서 다룬 이머징 시티즌은 바로 그런 목소리이자 가능성의 핵심입니다.

이머징 시티즌은 단순히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범주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들은 지역성, 소수성, 교차성, 창발성이라는 독특한 특징을 통해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사회적 전환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들은 우리가 원하는 미래와 회피하고자 하는 미래를 동시에 그려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렌즈이며, 사회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탐지하고 대안을 설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핵심적 주체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다양한 맥락에서 이머징 시티즌을 조명하고, 그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분석하며,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습니다. 예컨대, 지역적 맥락에서는 인천시민과의 미래 대화를 통해 지역 불균형 문제와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논의하였으며, 의료 분야에서는 AI 기술의 도입이 의료 전문가와 환자에게 미칠 영향을 탐구했습니다. 또한, 여성 평화운동가와 다문화 유학생의 경험을 통해 젠더와 문화적 차원의 사회 변화를 논의하며, SF 작가의 상상력을 통해 소수자의 관점에서 본 기술과 미래를 재조명했습니다.

이머징 시티즌은 단지 변화의 대상이 아니라, 변화를 만들어가는 주체입니다. 이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개인의 고립된 경험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구조적 불균형과 불평등을 드러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신호를 주의 깊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정책적, 입법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이머징 시티즌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 복합적 차별과 구조적 문제 해결: 이머징 시티즌의 경험과 목소리를 기반으로 다차원적 차별을 해소하는 정책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 포용적 사회 구축: 사회적 연대와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새로운 형태의 협력적 사회 모델을 제시합니다.

- 미래 사회의 전환 신호 탐지: 이들이 발신하는 이슈는 사회적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머징 시티즌의 목소리는 사회의 약한 고리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강력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시작점입니다. 이들의 창발적 대응과 혁신적 접근은 우리의 미래를 보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며, 포용적인 방향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번 보고서가 정책 입안자와 연구자,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에게 이머징 시티즌의 중요성과 그 가능성을 다시금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 미래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대안을 설계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보고서 작성을 위해 연구의 책임을 맡아 이끌어주신 박성원 박사님, 연구에 적극 참여해주신 김태경 박사님과 박현석 박사님 그리고 KAIST 전주 교수님, 경북대 이상직 교수님과 인천연구원의 채은경 박사님, 최태림 박사님 등 연구진과 인천시청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4년 12월
국회미래연구원

제1장 서론	1
제1절 미래대화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제2절 선행연구와 차별성	11
제3절 연구의 주요 내용과 목표	14
제2장 이머징 시티즌 연구	19
제1절 이머징 시티즌의 정의와 특징	21
제2절 미래연구에서 이머징 시티즌 발굴의 중요성	28
제3절 정책연구로서 한계와 과제	32
제3장 이머징 시티즌으로서 지역시민과 미래	37
제1절 인천시민과 미래대화 개요 및 목표	39
제2절 인천시민과 미래대화 결과 분석	48
제3절 미래 이슈 추적기 내용 분석	63
제4절 정책적 시사점	77

제4장 이머징 시티즌으로서 혁신가와 미래 81

제1절 들어가며: 의료 AI와 이머징 시티즌 83

제2절 연구방법 및 대상 85

제3절 연구결과: 전문가주의, 국가, 그리고 미래의료 88

제4절 미래 시나리오 115

제5절 결론 및 논의 119

제5장 이머징 시티즌으로서의 외국인 유학생과 미래 121

제1절 왜 외국인 유학생인가? 123

제2절 ‘지방’에 온 중국인 유학생 130

제3절 유학의 맥락과 계기 140

제4절 유학 경험과 미래 전망 145

제5절 한시적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중국인 유학생 147

제6장 이머징 시티즌으로서 여성평화운동가들 151

제1절 이머징 시티즌으로서 여성평화활동가들 153

제2절 평화운동가이자 여성, 여성이자 평화운동가:
군사주의-가부장주의 비판의 다양한 형태 158

제3절 일상의 평화, 모두의 평화라는 미래 비전 170

제4절 여성평화활동가:
더 많은 민주주의와 평화구축(peacebuilding) 178

제5절 결론 및 함의 182

제7장 SF작가 최의택 185

제1절 소수약자를 넘어: 장애인 SF작가 최의택 사례 187

제2절 그와 나눈 이야기 189

제3절 이머징 시티즌으로서 최의택 작가 196

제8장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199
제1절 이머징 시티즌의 의제와 사회적 시사점	201
제2절 입법적 과제	206
제3절 미래 과제와 결론	209
 참고문헌	 211
 Abstract	 222

〈표 1-1〉 2021년 이머징 시티즌 인터뷰 대상자	9
〈표 1-2〉 2022년 이머징 시티즌 인터뷰 대상자	10
〈표 1-3〉 2023년 이머징 시티즌 인터뷰 대상자	10
〈표 2-1〉 사회적 전환기에 이머징 시티즌의 역할 (출처: 저자 작성)	31
〈표 3-1〉 인천시민 미래대화 참가자 인구학적 특성(총 56명 답변) (순위별 정리)	43
〈표 3-2〉 인천시민과 미래대화 프로그램	46
〈표 3-3〉 시민의 미래전망을 돕는 카드 내용(A, B 유형 구분은 특별한 의미 없음)	46
〈표 3-4〉 인구 10만 명당 고독사 발생이 전국 평균보다 많은 4개 지역 (단위: %)	50
〈표 3-6〉 2022년 6대 광역시별 주요 범죄 발생 총건수 (단위: 명)	51
〈표 3-7〉 2023년 6대 광역시별 문화시설 현황	52
〈표 3-8〉 사후 미래 선택(56명이 참여했으나 2명은 표기 오류 및 무응답으로 제거)	60
〈표 3-9〉 미래 이슈 추적기 사례	64
〈표 4-1〉 의료 AI 질적 연구 대상 정리	86
〈표 4-2〉 전문가 중심적 AI 개발 인터뷰 범주	87
〈표 5-1〉 출신지역별 유학생수(2023년)	131
〈표 5-2〉 주요 국가별 유학생 수(2018-2023)	132
〈표 5-3〉 중국과 베트남 국적 유학생 수(2023년, 과정별)	133
〈표 5-4〉 학교별 유학생 수(2023년)	136
〈표 6-1〉 여성평화활동가 인터뷰	157
〈표 6-2〉 주요 인터뷰 질문	157

그림 목 차

[그림 2-1] 이머징 시티즌이 형성되는 과정과 사회전환에서 역할	29
[그림 3-1] 다가올 네 가지 미래의 유형과 주요 동인들	44
[그림 3-2] 숙의토론으로 가능미래와 선호미래를 논의하는 인천시민들	45
[그림 3-3] 미래대화 참석자들에게 나눠준 미래 키워드 카드 예시	47
[그림 5-1] 연도별 고등교육기관 유학생수(2003-2023년)	124
[그림 5-2] 체류외국인 수(1997-2023년)	125
[그림 5-3] 유학 형태별 유학생 비중(2023년)	126
[그림 5-4] 중국인 유학생 수 추이(1990-2019년)	134

요 약

1 서론

● 이머징 시티즌의 정의 및 중요성

- 이머징 시티즌은 지역성, 소수성, 교차성, 창발성 등 한 가지 이상을 포함하며, 향후 사회적 변화를 주도할 잠재력을 가진 시민으로 정의
- 이들은 단순한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미래 사회 전환의 주요 동인

● 이머징 시티즌 연구의 의의

- 기존 연구에서 간과된 복합적 사회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을 강조
- 선호미래뿐 아니라 회피미래 시나리오를 통해 사회적 위기를 예방하고 대응책을 마련

● 정책적 시사점

- 이머징 시티즌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은 포용성과 형평성을 증대하고, 미래 사회의 대안을 제시
- 지역 기반의 문제 해결 및 사회적 약자의 요구를 통합적으로 반영한 정책 수립 필요

□ 선행연구와 차별성

● 기존 연구와의 차별화

- 기존의 선호미래 연구를 회피미래 연구로 확장, 사회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탐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
- 이머징 이슈를 발신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연구,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회 변화를 탐구

- 새로운 접근의 독창성

- 이머징 시티즌 연구는 국내외에서 새로운 분야로, 복합적 차별과 구조적 문제를 분석
- 이머징 시티즌이 제기하는 문제는 사회적 전환의 중요한 신호로, 장기적 대책 마련 필요
- 정책 설계 시 복합적 차별과 불평등을 고려한 다차원적 접근 요구

□ 연구의 주요 내용과 목표

- 연구 모듈 구성

- 지역주민과의 미래대화: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변화를 선도할 주체로서 지역주민의 역할 강조
- 새롭게 부각할 이머징 시티즌 발굴: 초기 혁신가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변화를 이끌 주체 탐구
- 사회적 소수약자와 미래대화: 복합적 차별을 경험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와 대안을 논의

- 연구의 정책적 목표

- 이머징 시티즌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포용적 정책을 설계
- 미래 사회의 구조적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해결책 제시

2 이머징 시티즌 연구

□ 이머징 시티즌의 특징

- 주요 특징

- 지역성: 서울 중심의 자원 배분 불균형 속에서 지역 문제를 발신하며 국가적 변화의 필요성 제시

- 소수성: 기존 시스템에서 배제된 시민으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사회적 변화를 촉진
- 교차성: 복합적 차별과 불평등을 경험하며, 다차원적 억압을 드러냄
- 창발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발적이고 혁신적인 대응을 통해 사회적 변화를 주도

□ 미래연구에서 이머징 시티즌 발굴의 중요성

● 발굴의 의미

- 이머징 시티즌은 미래 사회의 주요 전환점과 문제 해결의 선구자가 될 가능성을 지님
- 이들이 제기하는 이슈는 사회적 전환과 정책 방향성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신호로 작용

● 사례와 발견

- 장애인 이동권 문제, 성소수자 인권운동, 청년 기후 행동 등은 이머징 시티즌의 창발성 사례
- 이들이 발신한 이슈는 구조적 불평등을 개선하고, 포용적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

3 이머징 시티즌으로서 지역시민과 미래

□ 인천시민과 미래대화 개요 및 목표

● 대화의 배경과 목적

- 인천시민과의 미래대화는 지역 시민의 현실적 문제와 바람직한 미래상을 탐구하기 위해 추진
- 총 56명의 시민과 인천연구원의 연구진, 인천시청 공무원들이 참여해 미래 사회의 주요 이슈와 정책적 해결책을 논의

□ 인천시민과 미래대화 결과

● 미래에 대한 시민들의 주요 우려와 기대

- 지역 경제 침체, 의료 인프라 부족, 환경 문제 등 제시
- 교육, 문화적 기회 확충과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기대

● 선호 미래 선택

- ‘보존사회’: 기존의 자원을 보존하고 환경친화적 정책을 통해 균형 잡힌 발전 모색
- ‘변형사회’: 기술과 혁신을 기반으로 급격한 변화를 통해 지역 경제와 사회를 재편

● 정책적 시사점

- 시민의 우려와 기대를 반영한 정책 수립 필요
- 기술 혁신과 환경 보존 간 균형을 고려한 종합적 발전 전략 제언

□ 미래이슈 추적기 내용 분석

● 미래 이슈의 발굴

- 인천시민 대화를 통해 고독사, 아토피 피부염, 범죄 증가 등 지역적 문제들이 주요 이슈로 부각
- 각 이슈는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이 필요한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

● 분석 결과

- 고독사와 같은 사회적 고립 문제는 공공 서비스와 사회적 연대 부족에서 기인
- 환경, 보건,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민의 문제 해결 요구 강함

4 이머징 시티즌으로서 혁신가와 미래

□ 의료 AI와 이머징 시티즌

• 의료 AI와 이머징 시티즌의 연계성

- 의료 AI 기술은 의료 분야에서 이머징 시티즌을 형성하는 중요한 변화를 촉발
- 기술 발전은 의료인의 전문성 변화와 건강보험 체계의 재구성을 요구
- 의료 AI는 의료 노동 시장에 영향을 미치며, 전문성과 자동화의 경계가 재정립되고 있음
- 기존 의료 시스템에서 배제된 환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 가능성

□ 연구방법 및 대상

• 연구 구성

- 의료 분야에서 AI와 협업 중인 의사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 AI가 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질적으로 분석, 주요 이슈와 도전 과제 도출

• 주요 분석 요소

- 전문가주의와 기술 간의 갈등
- 의료 시스템 내 AI 활용 가능성과 한계

□ 연구결과: 전문가주의, 국가, 그리고 미래의료

• 주요 발견

- 의료 AI 기술은 의사의 전문성과 직업적 역할을 재정립하는 계기로 작용
- 기술 도입 초기에는 의료인들의 불안과 저항이 강했으나, 점차 협업 가능성을 인식
- 국가 차원에서 AI 의료 도입과 관련된 규제 및 지원 체계 마련 필요

- 공공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강조

● 정책적 시사점

- 의료 AI의 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데이터 관리와 윤리적 기준 수립 필요
- 의료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응 요구

□ 미래 시나리오

● 의료 AI 기반의 미래 시나리오

- 시나리오 1, AI 중심의 의료 혁신: 진단 및 치료 과정이 AI에 의해 주도, 비용 효율성과 접근성 강화
- 시나리오 2, 인간-AI 협업 의료 체계: 의료진과 AI가 협력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
- 시나리오 3, 기술에 의존하지 않는 의료 보수화: 기술의 위험성을 우려해 기존 의료 체계를 유지

● 정책적 시사점

- 시나리오별로 기술 도입, 규제, 의료 교육 시스템의 변화 필요
- 의료인의 재교육과 AI 시스템 개발 간의 균형을 고려한 정책 방향 설정

5 이머징 시티즌으로서 다문화 유학생과 미래

□ 왜 외국인 유학생인가?

● 외국인 유학생의 중요성

- 외국인 유학생은 글로벌화된 사회에서 이머징 시티즌으로 주목받는 그룹
- 그들은 한국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과 새로운 사회적 가능성을 창출

□ 지방에 온 중국인 유학생

● 중국인 유학생의 현황

- 대부분의 외국인 유학생은 지방 대학에서 학업하며, 한국 내 다양한 지역적 맥락 경험
- 학업 외에 지역 공동체와의 상호작용에서 사회적 제약을 경험

● 주요 발견

- 지방 유학생은 지역사회 경제 및 문화 활성화에 기여 가능성
- 언어와 제도적 장벽이 학업 및 일상생활에서의 큰 어려움으로 작용

□ 유학의 맥락과 계기

● 유학 결정 요인

- 경제적 동기, 교육적 기회,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이 주요 요인
- 유학생의 가족 및 지역적 배경이 유학 동기와 경험에 큰 영향을 미침

● 주요 발견

- 유학생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는 경제적 접근성과 안정적 환경 때문
- 유학 이후의 경로(귀국, 취업)에서 다양한 불확실성과 사회적 제약 경험

□ 유학 경험과 미래 전망

● 유학 경험이 미래에 미치는 영향

- 유학생들은 한국 체류 중 언어와 문화적 장벽을 극복하며 새로운 시각을 형성
- 체류 경험이 한국 사회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뿐만 아니라 도전 과제도 제공

- **주요 발견**

- 유학생의 긍정적 경험은 향후 한국과의 경제·문화적 관계 강화에 기여
- 부정적 경험은 귀국 후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국가적 이미지 손상 가능성

□ **한시적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중국인 유학생**

- **유학생들의 위치와 정체성**

- 유학생들은 학업 기간에 한시적으로 한국인으로 간주되며, 문화적·법적 경계 경험
- 그들은 다문화적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정체성을 구축

- **주요 발견**

- 유학생의 임시적 지위는 이민정책과 사회적 통합 문제를 촉발
- 장기적으로 체류 및 정착할 가능성이 있는 유학생을 위한 정책적 대안 부족

- **정책적 시사점**

- 유학생의 임시적 지위를 보완하는 법적 체계와 사회적 포용성 강화 필요
- 유학생의 장기 체류 가능성을 고려한 이민 책 및 정착 지원 제도 마련

6 **이머징 시티즌으로서 여성평화운동가들**

□ **이머징 시티즌으로서 여성평화활동가들**

- **여성평화활동가의 중요성**

- 여성평화운동가들은 젠더 불평등과 한반도의 분단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실천적 행동가들

- 평화와 성평등의 접점에서 새로운 담론과 실천을 이끄는 중요한 사회적 주체

□ 평화운동가이자 여성, 여성이자 평화운동가

● 복합적 정체성의 특징

- 여성평화운동가들은 성별, 사회적 역할, 정치적 위치의 교차로에서 복합적 차별과 도전을 경험
- 여성이라는 정체성은 그들이 추진하는 평화 운동에 독특한 관점을 부여

● 주요 발견

- 전쟁과 군사적 갈등 상황에서 여성의 목소리는 배제되었으나, 현재 평화 담론의 중심으로 부상
- 평화운동과 성평등을 통합하는 접근이 새로운 평화 구축 모델을 제시

□ 일상의 평화, 모두의 평화라는 미래 비전

● 평화의 새로운 정의

- 여성평화운동가들은 군사적 갈등 해소뿐 아니라, 일상 속 평화와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강조
- 평화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닌, 모두의 일상에서 구현되는 상태로 정의

● 주요 발견

- 여성들은 평화를 위한 일상의 변화, 특히 지역사회의 역할을 중시
- 젠더 기반 폭력 근절, 사회적 안전망 강화 등이 평화의 필수 요소로 제시

□ 여성평화활동가: 더 많은 민주주의와 평화구축

● 민주주의와 평화의 상관관계

- 여성평화활동가들은 평화 구축 과정에서 민주주의 원칙의 강화와 사회적 참여 확대를 지향
- 이들의 활동은 단순한 갈등 해결을 넘어, 더 포용적인 사회를 지향하는 변화를 촉진

● 주요 발견

- 민주주의의 결핍은 갈등을 심화시키며, 평화 구축 과정에서 시민 참여의 중요성 부각
- 여성 활동가들은 갈등 해결 과정에서 성평등과 평등주의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

● 정책적 시사점

- 민주적 평화구축 원칙을 정책 설계에 반영하여 시민 참여 기회 확대
- 젠더 기반 정책과 시민 주도의 평화 활동을 연결하는 구조 마련

□ 결론 및 함의

● 핵심 요약

- 여성평화운동가들은 사회적 소외와 차별을 극복하며 평화와 민주주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
- 이들은 이머징 시티즌으로서 평화 구축 과정에서 중요한 변화를 이끄는 주체
- 평화와 성평등을 결합한 정책 프레임워크 개발 필요
- 여성평화운동가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제도화하는 다층적 접근 요구

7 SF작가 최의택

□ 소수약자를 넘어: 장애인 SF작가 최의택 사례

● 최의택 작가를 만난 이유

- 장애인으로서, 그리고 SF작가로서 독특한 시각과 상상력을 통해 사회적 담론을 제시
- 장애 문제를 기술과 미래 사회의 맥락에서 재해석하며, 소수약자 경험의 의미를 확장

□ 그와 나눈 이야기

● 작가의 통찰과 메시지

- 장애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며, 기술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주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주장
- 사회가 기술을 통해 인간 중심적 시스템을 재구성할 필요성을 제기

● 주요 발견

- 기술은 장애인에게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주지만, 동시에 사회적 차별 구조를 강화할 위험성 존재
- 인간과 기술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작가의 작품은 사회적 공감을 형성하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짐
- 기술 활용이 소외 계층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보호 장치 마련 필요
- 예술과 기술을 결합한 접근을 통해 포용적 사회 모델 개발 가능

□ 이머징 시티즌으로서 최의택 작가

● 최의택 작가의 이머징 시티즌적 역할

- 그는 장애인의 경험과 사회적 배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조명하며, 기술과

상상력을 통해 이를 극복

- SF 장르를 활용해 장애와 기술의 관계를 탐구하며, 사회적 전환의 가능성을 제시
- 장애는 기술적 문제 해결을 넘어, 사회적 통합과 인식 변화가 필요한 복합적 문제임을 강조
- 작가의 작업은 소수자의 문제를 공론화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변화의 동력을 제공

● 정책적 시사점

- 창의적 접근 방식을 활용해 소수자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 개발 필요
- 문화와 예술을 통해 이머징 시티즌의 목소리를 확대하는 전략 마련

8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 이머징 시티즌의 의제와 사회적 시사점

● 이머징 시티즌 의제의 중요성

- 이머징 시티즌은 기존 사회 구조의 문제를 드러내고, 미래 사회 전환의 중요한 신호를 제공
- 이들의 경험과 목소리는 복합적 차별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함

● 주요 발견

- 이머징 시티즌이 제기하는 이슈는 단순히 소수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조적 문제로 확산 가능
- 지역적 불균형, 복합적 차별, 기술과 인간의 협력 등 다양한 의제가 정책적 해결을 요구
- 이머징 시티즌의 경험을 반영한 정책 개발을 통해 포용적 사회 기반 구축 필요

-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새로운 형태의 시민 참여 모델을 통해 사회 전환 유도

□ 입법적 과제

● 입법의 필요성

- 이머징 시티즌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법적 틀이 필요
- 복합적 차별과 사회적 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기반 마련
- 소수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법안 부재
- 기술 발전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동시에 고려한 정책적 조화 필요

□ 미래 과제와 결론

● 이머징 시티즌 연구의 미래적 의의

- 이머징 시티즌은 미래 사회 전환의 주체,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
- 이들의 문제를 데이터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는 체계적 연구 요구
- 이머징 시티즌은 단순히 약자가 아니라, 창발적 대응을 통해 사회 변화를 촉진하는 동인
- 이들의 목소리가 정책과 사회 구조에 반영될 때,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로의 전환 가능
- 이머징 시티즌 연구는 입법, 정책 설계, 사회적 연대 강화에 실질적 기여 가능
-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정책 모델을 통해 공정하고 포용적인 사회 구현 필요

제 1 장

서론

제1절 미래대화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선행연구와 차별성

제3절 연구의 주요 내용과 목표

제 1 절

미래대화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이머징 시티즌의 개념

국민과 미래대화 연구에서 '국민'은 일반적인 의미의 국민이 아니라, '이머징 시티즌(emerging citizen)'으로서의 국민을 뜻한다. 이머징 시티즌은 현재 지역 시민이거나 소수자, 또는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지만, 향후 다양한 사회적 변화와 함께 그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시민들로 정의된다. 이들이 현재 직면한 사회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사회 전체로 확산하여 구조적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머징 시티즌은 미래학의 관점에서 이머징 이슈(지금은 데이터가 적어 실현의 가능성이 낮지만 일어나면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일으킬 이슈)를 발신하는 주체이자,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거나 일으키는 능동적인 시민으로 간주된다. 이들은 기존의 사회 구조 내에서 소외되거나 주목받지 못하던 시민들이지만, 향후 사회적 변화로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는 이머징 시티즌을 단순한 소수자의 범주를 넘어, 사회적 변화의 중요한 주체로 간주하려고 했다. 이들의 특징은 지역성, 소수성, 교차성, 창발성 등이 하나 이상 결합한 시민으로 볼 수 있는데, 이들을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 우리사회에 새로운 동인으로 재인식할 수 있다. 아래 4가지 이머징 시티즌의 특징은 간략한 내용이고, 제2장 이머징 시티즌 연구에서 좀 더 자세히 서술할 것이다.

가. 지역성

이머징 시티즌의 지역성은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로부터 나타난다. 그동안 많은 정책과 사회적 담론은 대도시, 특히 서울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지역 거주 시민들의 문제는 장기적으로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경제적 기회, 교육, 사회적 인프라의 부족으로 소외될 위험이 있으며, 이러한 지역성은 새로운 사회적 이슈로 부각하고 있다.

나. 소수성

소수성은 이머징 시티즌이 주로 사회적 약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이들은 경제적, 사회적 자원이 부족하며, 정치적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예를 들어,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등이 이에 속하며, 그 수가 현재는 적지만 미래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소수 시민이 겪는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할 위험이 크다.

다. 교차성

이머징 시티즌은 여러 사회적 정체성이 교차하는 위치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여성이면서 장애인이면서 다문화 가정 출신인 시민은 단일한 정체성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복합적인 약자성을 지니게 된다. 교차성은 사회적 약자가 더욱 소외될 가능성이 큰 위치에 놓이게 만들며, 여러 정체성이 결합할수록 이들이 직면하는 사회적 제약과 불평등은 더욱 심화한다.

라. 창발성

그럼에도 이머징 시티즌은 단순히 자신의 문제를 수동적으로 경험하는 시민들로 그치지 않는다. 이들은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창발성을 발휘한다. 즉, 문제를 문제로 남겨두지 않고,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시도하며, 이러한 행동은 때로는 사회적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들은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방식으로 사회적 대응 전략을 개발하고, 이로 인해 일정 부분 효과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 사회에서 중요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주체로 주목받고 있다.

이머징 시티즌은 단순히 현재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로 간주되는 시민들이 아니다. 이들은 지역성, 소수성, 교차성 등을 하나 이상 포함하고 있는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동시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발적인 힘을 통해 사회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을 지닌 존재들이다. 본 연구는 이머징 시티즌이 미래 사회에 미칠 영향과 그들의 문제 해결 능력에 주목하며, 이를 통해 장차 사회적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탐구하고자 한다.

2 이머징 시티즌으로서 지역주민

앞서 언급한 소수약자들을 이머징 시티즌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 연구의 경험으로 볼 때 별다른 이의는 제기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역주민을 이머징 시티즌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지역주민과 소수약자를 이머징 시티즌으로 한 데 묶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지역주민의 목소리가 중앙집권화된 우리사회에서 소수약자의 위치에 있으며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경험하는 문제들은 장차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고, 더 나아가 이들이 창발적인 아이디어로 지자체에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머징 시티즌으로 바꿔 불러도 좋다고 생각한다.

지역주민을 이머징 시티즌으로 개념화하는 논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더 보완할 수 있다. 지역적 특성과 변화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주체로서의 재정의의 강조하고, 왜 이머징 시티즌이 지역주민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가. 지역적 불균형의 심화

우선, 지역성을 이머징 시티즌의 중요한 특성으로 간주하는 이유는 서울 중심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자원 분배가 매우 불균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에 있다. 서울 중심의 발전은 다른 지역주민들을 점점 더 소외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간 격차는 더욱 심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교육, 의료, 문화적 기회뿐만 아니라 인프라, 일자리의 접근성, 지역기업의 연구개발비 수준에서도 지역주민들은 점차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고 있다(박세준, 김종길, 2022; 김재훈, 2021; 박정흠, 2023; 박성원 외, 2022). 이러한 지역 불균형은 향후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커, 지역주민들이 새로운 사회적 이슈의 핵심 주체로 떠오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은 수도권 중심의 정책에서 배제된 채 사회적 약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지역 거주 시민들이 이머징 시티즌으로 간주할 수 있는 중요한 논리적 기반이 된다.

나. 지역주민의 이머징 이슈 발신 주체화

지역주민들은 그동안 중앙 정책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직

면하는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하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이런 점에서 이머징 이슈를 발신하는 주체로 기능할 가능성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지방 경제 침체나 지역 의료 인프라 부족과 같은 이슈들은 현재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지만, 지역주민들에게는 긴급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겪는 지역 문제를 적극적으로 발신하고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이러한 창발성은 이머징 시티즌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로 자리 잡는다.

또한, 이머징 이슈가 처음엔 지역적 차원에서 발생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영향이 전국적 혹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기후 변화나 환경 문제는 처음에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와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로 발전해 왔다. 지역주민들이 발신하는 이머징 이슈는 미래 사회의 중요한 구조적 변화를 내포하며 더 나아가 이들은 문제 해결의 새로운 사회적 주체로 등장할 수 있다.

다. 지역의 창발적 대응과 사회적 전환

이머징 시티즌으로서의 지역주민들은 단순히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는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발적인 대응을 하는 주체다. 지역주민들은 지역의 문제를 중앙 정책이 해결해주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지역 문제에 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공동체 기반의 자조적인 해결 전략을 수립한다. 이러한 행동은 수도권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덜 직면하는 문제에 대해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만들며,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전환을 촉발할 수 있다.

지역성을 이머징 시티즌으로 개념화하는 중요한 이유는, 지역주민들이 기존 사회 구조에서 소외되었지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창발적인 대응을 통해 사회 변화를 주도할 가능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이들은 장차 더 큰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낼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다.

3 이머징 시티즌과 미래대화 필요성

가. 이머징 시티즌의 등장과 사회적 중요성

이머징 시티즌은 단순히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사회적 변화의 중요한 주체로 떠오를 가능성이 큰 시민들이다. 이들은 현재 사회 내에서 소외되거나 주목받지 못하고 있지만, 사회적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그 수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슈 발신과 변화를 주도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이머징 시티즌들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자원에 접근할 기회가 제한되어 있지만, 동시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창발성을 발휘해 미래 사회의 구조적 전환에 기여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머징 시티즌이 미래 사회의 주요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미래대화는 매우 필요하다. 이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미래 사회는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슈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고,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미래대화의 정의와 역할

미래대화는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미래를 전망하고, 이들이 예상하는 미래와 바라는 미래에 관해 토론하는 과정이다. 이는 단순한 의견 교환에 그치지 않고, 미래 지향적 행동과 사회적 연대의 기초를 마련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박성원 외(2022; 2023)에 따르면, 미래대화는 평범한 시민들이 모여 20년 후의 미래를 예측하고,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을 논의하는 자리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미래 사회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도모하고, 시민들 간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미래대화는 이머징 시티즌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들은 사회적 주류와 달리, 다가올 미래에 대한 우려나 불안이 더욱 클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도 더 절실하다. 미래대화를 통해 이머징 시티즌들이 자신의 기대와 걱정을 공론화하고, 이들이 원하는 미래의 청사진을 정부와 정책 담당자들이 사전에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면, 더욱 포용적인 사회 구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다. 미래대화의 필요성: 이머징 시티즌의 참여

미래대화가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이머징 시티즌들이 겪는 문제들이 미래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들이 직면한 문제는 단순히 그들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거나, 구조적인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따라서 이머징 시티즌의 목소리를 정책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며, 미래대화는 이를 위한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작동할 수 있다.

특히, 미래대화는 이머징 시티즌들이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들의 경험과 인식이 미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이는 소외된 목소리를 사회적 대화의 중심으로 끌어올리고, 이머징 시티즌들이 바라는 미래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라. 미래대화의 효과: 사회적 연대와 정책적 반영

미래대화는 평범한 시민들이 모여 다양한 미래를 논의함으로써, 사회적 연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머징 시티즌을 포함한 여러 시민이 서로의 경험과 기대를 공유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연대와 통합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

또한, 미래대화는 정책적 반영의 기회를 제공한다. 정부와 정책 담당자들이 이러한 대화에서 도출된 시민들의 희망과 우려를 사전에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다면, 시민들이 바라는 미래사회의 청사진을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추진할 수 있다. 특히 이머징 시티즌들의 경험과 인식이 정책에 반영된다면, 이들은 미래 사회의 구조적 전환을 이끄는 중요한 주체로서 활약할 수 있다.

마. 지금까지 만난 이머징 시티즌

우리는 2021년(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 2021), 2022년(박성원 외, 2022), 2023년(박성원 외, 2023)에 이머징 시티즌을 찾아나섰다. [표 1-1]에서 [표 1-3]까지는 우리가 만난 이머징 시티즌을 정리한 것이다. 초기에는 연구자와 학자, 사회적 활동가 등에 집중했다가 점차 다양한 시민들을 만난 여정이 기록되어 있다.

2021년 우리는 한국사회를 구성하는 핵심 차원을 몇 가지로 규정하고 각 차원에서

거시적 환경과 정책적 맥락, 주요 의제를 포괄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섭외해 발제를 듣고, 대화를 나눴다. 기후·에너지, 먹거리, 교육, 노동, 주거·복지, 보건·의료, 기술·사회 등이 그러한 차원이었다. 우리가 만난 이들은 대개 연구자나 현장활동가였다.

2022년에는 좀 더 구체적인 맥락에서 대화를 나누고자 했다. [표 1-2]는 이 당시 우리가 만난 이들의 명단이다. 가족, 장애, 빈곤, 동물, 죽음이라는 키워드로 활동가, 사회적기업가, 사진작가, 교수 등을 만났다. 2023년에는 주제를 넓혀 성소수자, 탈북여성과 자녀들, 원폭피해자, 이주민 여성, 영케어러, 소년범 변호인, 청년정치인들까지 만나 인터뷰했다.

〈표 1-1〉 2021년 이머징 시티즌 인터뷰 대상자

	이름	소속	제목	분야
1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이사	2050 탄소중립과 그린 뉴딜 지방정부의 역할	기후
2	홍덕화	충북대 사회학과 교수	원전 체제의 과거, 현재, 미래	에너지
3	윤병선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농업과 먹거리 문제의 대안 모색	먹거리
4	변수용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 교육학과 교수	교육영역에서 우리사회가 나아가야할 미래	교육(체제)
5	서덕희	조선대 교육학과 교수	생활세계의 교육 실천공동체의 자기조직적 생성과 확산의 관점에서 본 국가 차원의 미래교육의 설계	교육(실천)
6	양선희	계명대 동산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산업재해 예방: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노동(안전)
7	김영선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	과로사회의 여가풍경	노동(구조)
8	김명수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교수	내 집에 갇힌 사회: 생존과 투기 사이에서	주거
9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미래 소득보장의 원리: 필요 vs 배당	복지
10	김종희	원주의료사협 밝음의원 의사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포괄적 환자돌봄 모델	돌봄 (보건의료)
11	여준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시설의 역사: 배제와 구분의 역사	장애(시설)
12	이정전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보통 사람의 시대	기술(사회)

〈표 1-2〉 2022년 이머징 시티즌 인터뷰 대상자

	이름	지위	제목	키워드
1	정은주	전국입양가족연대 활동가	가족 관계의 미래: 핏줄 신화를 넘어 또 다른 가족을 상상하며	가족(입양)
2	백정연	사회적기업 '소소한소통' 대표	장애인과 함께 사는 법: 다양한 몸 사이의 경계를 허물기 위하여	장애
3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반빈곤의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말하다	빈곤
4	문선희	사진 작가	문다: 가족 살처분과 매장공간에 대한 인문학적 시선	동물
5	김형숙	순천향대 간호학과 교수	한국인의 죽음	죽음

출처: 박성원 외(2022: 101)

〈표 1-3〉 2023년 이머징 시티즌 인터뷰 대상자

	이름	지위	내용	키워드
1	전갑생	연구자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원폭
2	오은정	연구자	한국원폭피해자2세 환우회	원폭
3	김우창	시민연구자	원전마을 주민	원전
4	한인정	지역주민	어딘가에 싸우는 이주여성이 있다	이주민
5	영케어러	청년 주민	가족돌봄 청년들	돌봄
6	김형신	대안학교 교사	대안학교의 청소년들	학교
7	김광민	변호사	소년범 이야기	청소년
8	공개안함	다큐 감독	탈북 여성 및 제3국 출생 자녀	탈북
9	공개안함	시민	성소수자의 미래	성소수자
10	청년정치인들	정치인	청년정치인들과 미래대화	정치

제2절

선행연구와 차별성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미래대화를 통해 이머징 시티즌들이 겪고 있는 현재의 문제와 그들이 예상하는 미래의 문제를 드러낼 수 있다. 이러한 대화는 우리 사회가 향후 마주할 수 있는 ‘회피해야 할 미래’에 대한 경로를 찾는 데 필수적인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이머징 시티즌 조사연구는 기존의 이머징 이슈 분석이 갖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측면을 보완하여, 실제 시민들의 삶과 문제의식을 통해 사회구조적 변화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미래전망의 가장 큰 쓸모는 단순히 미래 사건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사회가 원하는 미래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 경로를 찾는 데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머징 시티즌 연구는 우리 사회가 선호하는 미래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무엇이 잘못될 수 있을까?’, ‘이대로 가면 어떤 부정적 미래에 도달할까?’와 같은 중요한 질문에 답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잘못된 미래 경로를 찾아내어 사회에 제시하고, 이를 통해 적절한 대응과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따라서 이머징 시티즌과 미래대화는 우리 사회가 향후 직면할 수 있는 위험과 부정적 미래 경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호하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과 사회적 연대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1 선호미래에서 회피미래로 연구 확장

선호미래 연구는 국회미래연구원에서 오랫동안 추진해 온 주요 연구주제 중 하나로, 특히 2018년 이후 국민이 원하는 미래 비전과 실행 전략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어 왔다. 선호미래는 시민들이 바라는 긍정적 미래의 모습을 탐구하고 이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경로와 정책적 대응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머징 시티즌 연구는 기존의 선호미래 연구를 유지하면서 회피미래까지 확장해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창성을 갖는다. 회피미래란 사람들이 피하고자 하는 부정적 미래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연구하며, 이를 통해 사회가 직면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리 발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이다.

마틴 셀리그먼 외 (2021)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이 미래를 알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문제, 실패, 그리고 끔찍한 사건들을 피하기 위함이다. 이는 미래를 긍정적으로 이끄는 것만큼이나 부정적 미래의 회피가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며, 이러한 회피미래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사회적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 비교적 용이하다는 강점이 있다. 또한 심리학적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미래를 생각할 때 손실 회피를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 회피미래에 대한 연구는 인간의 본성에 더욱 부합하는 접근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민이 회피하고자 하는 미래를 탐구함으로써,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 요소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드러내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선호미래 연구가 다루지 못했던 부정적 경로를 예방하고 미래 사회에 대한 현실적 위기관리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2 이머징 시티즌 연구의 독창성

이머징 시티즌 연구는 아직 국내외에서 선행 사례를 찾기 힘든 연구 분야이다. 이 연구는 기존의 이머징 이슈 연구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머징 이슈를 발신하는 사람들에 관한 연구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이머징 이슈는 주로 사회학적 관점에서 ‘고통’, ‘불안’, ‘우려’를 유발할 문제로 해석된다. 이러한 이슈들은 단순히 발생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파급효과를 일으켜 더 큰 문제로 확산할 수 있다. 따라서, 이머징 시티즌이란, 이러한 이슈를 먼저 발신하고 대응하려는 시민들을 뜻하며, 이들이 제기하는 문제의 근원과 사회적 파급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 목표이다.

특히, 이머징 시티즌 연구는 복합적인 차별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여성이면서 장애인, 노인이면서 다문화 이주민인 시민들이 직면하는 복합적 차별은 사회가 어려움에 직면할 때 더욱 심화한다. 이러한 복합적

차별은 이머징 시티즌들이 겪는 고통을 가중시키며, 이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위기 그룹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높인다.

이머징 시티즌들이 직면한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고 방치할 경우, 이들은 사회적 뿌리를 찾지 못하고 떠나거나 부유하는 그룹으로 전락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더 큰 사회적 문제의 촉매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머징 시티즌 연구는 이들의 문제를 드러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3 사회적 위기의 사전 예측 및 대응

이 연구는 이머징 시티즌의 문제를 단순히 관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들이 제기하는 회피미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사회적 위기를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는 기존의 선호미래 연구가 다루지 않았던 부정적 미래를 탐구함으로써 잘못될 수 있는 미래 경로를 예측하고, 이를 통해 부정적 미래의 도래를 막기 위한 실행 전략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다.

결국, 이 연구는 이머징 시티즌이 직면한 문제를 통해 미래 사회가 맞이할 위기 요소를 미리 발견하고, 이를 사회 전반에 알림으로써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머징 시티즌 연구는 기존의 미래 연구와는 차별화된 접근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미래 전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3절

연구의 주요 내용과 목표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연구 추진의 3가지 모듈

이 연구는 이머징 시티즌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시민들의 문제와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는 다음의 3가지 모듈로 나누어 추진되었다.

가. 지역주민과 미래대화

이 모듈은 지역연구원 및 지역 정부와 협업하여 지역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재 문제와 미래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주민들이 겪는 소외와 불균형의 문제를 탐구하며, 이러한 지역적 이슈가 향후 사회 구조적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예측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미래 사회의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이들이 제시하는 이슈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 만난 지역주민들은 인천시민들이었다. 이들과 미래대화를 하면서 인천이 수도권 역차별을 넘어 세계적 변혁도시를 꿈꾸고 있음을 이해했다. 총 56명의 시민과 15명의 연구진 및 인천시청직원이 참여했다. 대화의 결과, 인천시민들은 보존사회와 변형사회라는 두 가지 미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미래대화를 통해 인천시민들이 느끼는 현실적 문제와 그들이 바라는 미래사회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천은 세계적 변혁도시로의 발전을 위해 사회적 불균형 해소와 첨단 산업 투자, 안전도시 구축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나. 새롭게 등장할 이머징 시티즌 조사 발굴

이 모듈은 초기 혁신가(early innovator)에 해당하는, 새롭게 부각할 이머징 시티즌을 발굴하고 조사하는 과정이다. 이들은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보이지 않던 소수자이지만, 급변하는 사회적 흐름과 함께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는 시민들이다. 이머징 시티즌은 새로운 변화의 신호로 작용하며, 사회적 전환의 선구자가 될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이러한 새로운 주체를 조명하고, 이들이 사회에 기여할 가능성을 탐색하며, 향후 변화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번 연구에서 우리는 AI와 협업하는 의사들을 만나보았다. 이들은 인공지능 기술이 의료 분야에서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경험하고 있는 이머징 시티즌이다. 그들은 AI 의료 기술의 도입으로 의료 전문가의 전문성이 위협받을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의료 시스템과 보험 제도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AI 기반 의료서비스가 의료 노동시장을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들은 의료 AI가 시장을 형성하는 경제적 잠재력을 지닌다는 점에서, 의료 및 기술 정책의 융합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다. 사회적 소수약자와 미래대화

이 모듈은 사회적 소수약자와의 미래대화를 통해, 현재의 사회 구조에서 정상성으로 간주되는 것에 도전하고, 뉴 노멀적 관점에서 미래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소수약자들이 겪고 있는 복합적 차별의 문제를 드러내고, 이들이 바라는 미래 사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논의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대안적 정책과 미래 지향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정상성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지며, 더 포용적이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번 연구에서 우리가 만난 이머징 시티즌으로 장애인 SF 소설가 최의택씨를 들 수 있다. 그는 장애를 기술로 극복하는 혁신적 방안을 제시하면서도, 도시의 폭력성을 드러내는 문제를 제기한다. 그는 도시가 장애인을 배제하는 공간적 구조를 어떻게 변형해야 하는지를 논의함으로써, 포용적 도시 계획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장애인 이동권과 같은 기본적인 사회적 권리 보장뿐만 아니라, 기술을 통한 장애 극복

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소수성 때문에 미래 해안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만나보았다. 풀뿌리 여성평화운동가들은 한국 사회에서의 젠더 불평등과 한반도의 냉전 및 분단 구조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실천가들이다. 이들은 평화군축 및 핵무기 문제와 관련된 담론을 형성하며, 중장기적으로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 문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이들의 활동은 핵 군비통제 관련 입법과 평화 결의안 채택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며, 성평등 문제를 국가 안보와 연결하여 해석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우리사회에는 여러 소수약자가 있는데, 중국 유학생과 같은 외국인 유학생들도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유학생들의 증가와 그로 인한 사회적 긴장은 이민 정책과 유학생 정책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들은 한국 사회에서 유동적인 위치에 있으며, 향후 이민 정책의 변화에 따라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민자 통합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들이 시민권을 포함한 정책적 논의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2 연구의 목표

이머징 시티즌은 현재 소외되거나 사회적 약자로 간주되지만, 향후 사회적 변화와 함께 중요한 주체로 부상할 가능성이 큰 시민들로 정의된다. 이들은 단순한 소수자의 개념을 넘어서,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낼 새로운 주체로 간주된다.

가. 이머징 시티즌의 특징 정의

이 연구는 이머징 시티즌의 특징을 지역성, 소수성, 교차성, 그리고 창발성 중에서 하나 이상을 갖춘 시민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주민이거나, 복합적인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소수약자로서, 사회 구조의 변화 속에서 창발적 대응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민들이다. 특히, 교차성은 이머징 시티즌의 중요한 특징으로, 여러 사회적 정체성들이 복합적으로 얹히며, 그로 인해 경험하는 차별과 어려움이 심화된다. 이들은 여러 정체성의 교차로 발생하는 차별을 극복하고자 창발적 대응을 시도하는 중요한 주체로 간주된다.

나. 정책적 문제 재조명 및 대안 제시

이머징 시티즌은 현재의 정책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문제들을 다시 조명하며, 대안적 가능성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연구는 이머징 시티즌을 통해, 현재 정책이 놓치고 있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그룹의 문제를 다시 살펴보고, 이들이 요구하는 정책적 필요를 반영하여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이머징 시티즌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을 넘어서, 정책적으로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이다.

다. 미래전망 측면에서의 이머징 시티즌 연구의 효용성

이 연구는 이머징 시티즌을 새로운 신호이자 새로운 시민의 등장으로 해석한다. 이머징 시티즌은 단순히 현재의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사회적 전환의 단초를 열어갈 미래의 주체로 해석되며, 이는 미래 사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에 대한 중요한 신호로 작용한다.

이머징 시티즌이 제기하는 이슈들은 사회적 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이머징 시티즌들이 미래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갈 가능성을 탐구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전환의 방향성을 예측하며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머징 시티즌의 연구는 이들이 처한 상황과 이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체계화된 데이터로 제시하며, 이를 통해 입법 및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다. 이를 통해 이머징 시티즌이 제기하는 이슈를 정책적 해결책으로 연결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표이다.

제2장

이머징 시티즌 연구

제1절 이머징 시티즌의 정의와 특징

제2절 미래연구에서 이머징 시티즌 발굴의 중요성

제3절 정책연구로서 한계와 과제

제 1 절

이머징 시티즌의 정의와 특징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이머징 시티즌의 정의

이머징 시티즌은 현재 사회의 소수자 혹은 약자로 간주하지만, 미래 사회의 변화를 선도할 가능성을 보이는 시민들을 뜻한다. 이들은 사회 구조적 변화에서 이머징 이슈를 발신하는 주체로 등장하며,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제의 징조를 앞서 보여준다. 이 연구는 이머징 시티즌을 변화를 이끌어가는 주체로 바라보고, 이들이 제기하는 이슈가 미래 사회의 중요한 전환점을 형성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2 이머징 시티즌의 주요 특징

가. 지역성

지역성이라는 관점에서 이머징 시티즌은 특정 지역에서 나타나는 지역적 문제를 발신하는 시민들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바탕으로 미래 사회에 영향을 미칠 이머징 이슈를 제기한다. Molitor(1977)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변화의 흐름을 주도하는 주(州)들이 있으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 또한 서울 및 수도권이 변화를 선도하는 것으로 간주하지만, 실제로는 개별 사안에 따라 지역적 이슈의 중요성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은 경제적 불균형이나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면서 국가적 변화를 선도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파악될 수 있다. 이머징 시티즌은 자신이 속한 지역의 문제를 발신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국가적 차원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나. 소수성

소수자는 기존의 사회적 시스템에서 배제되거나 목소리를 내지 못한 그룹으로, 이는 종종 그들의 정체성이나 지위에서 비롯된다. 이들은 성별, 인종, 장애, 경제적 약자성 등 다양한 요인으로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경험한다. 소수자들이 직면한 문제는 종종 개인의 문제로 취급되지만, 실제로는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반영한다. 이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는 처음에는 일부 장애인들의 요구로 시작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문제는 도시 설계와 공공 인프라의 구조적 문제로 확장되었다. 이는 결국 포용적 도시 계획이라는 더 큰 사회적 변화로 이어졌고, 장애인을 위한 물리적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며, 더 많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분석한다면 탈시설을 요구하는 장애인들은 이머징 시티즌으로서 사회적 변화의 주요한 주체로 간주할 수 있다.

이머징 시티즌은 소수자로서의 위치를 통해 기존 사회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발신한다. Molitor(1977)는 사회적 소수자, 아웃사이더, 사회개혁가, 그리고 과학기술 혁신가와 같은 사람들이 이머징 이슈의 발신자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회적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가능성을 지니며, 특히 그들의 문제는 사회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경고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MeToo 운동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성적 착취와 권력 남용의 피해자였던 여성들이 소수자로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그들의 경험과 주장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했으며, 성범죄와 권력 남용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 운동은 기존의 사회 구조에서 소외된 소수자들이 이머징 시티즌으로서, 사회적 변화의 촉매제로서 활약한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성소수자 인권운동도 중요한 사례이다. 한때는 사회적 주변부에 머물던 성소수자들의 권리 요구는 점차 사회적 대화의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법적 권리 보장과 사회적 인식 변화를 이끌어냈다. 이러한 변화는 성소수자들이 이머징 시티즌으로서 소수자성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변화를 발신하고, 이를 통해 제도적 변화를 촉발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소수자의 문제는 종종 교차적 성격을 띠며, 이는 이머징 시티즌이 사회적 변화를 발

신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여성이면서 장애인이거나, 이주민이면서 성소수자인 경우, 그들이 겪는 차별과 불평등은 더 복잡하고 심화된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교차적 소수성은 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드러내며, 이머징 시티즌이 제기하는 이슈는 더욱 큰 사회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머징 시티즌은 소수자성을 통해 사회적 경고 신호를 발신하며, 이는 정책적 변화를 이끌어낼 중요한 기회가 된다. 이머징 시티즌이 제기하는 문제들은 단순히 소수자들의 요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불평등 구조를 바로잡고, 더 포용적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지표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 권리 협약과 같은 국제적인 정책 변화는 장애인들의 오랜 요구와 투쟁이 사회적으로 수용된 결과이다. 이러한 변화는 소수자의 목소리가 사회 전반에 걸쳐 받아들여지고, 제도적 장치로 반영된 예시라 할 수 있다. 소수자성을 기반으로 한 이머징 시티즌의 활동은 결국 사회적 변화를 촉발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기여한다.

다. 교차성

교차성은 이머징 시티즌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 이들은 여러 사회적 정체성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다양한 형태의 차별과 불평등을 경험하는 시민들이다. 단일한 정체성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이머징 시티즌은 중첩된 사회적 제약을 동시에 겪는다. 이러한 교차성은 이들이 경험하는 차별과 어려움을 폭넓게 이해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변화를 촉발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머징 시티즌이 경험하는 교차적 정체성은 단순히 사회적 약자성을 넘어서는 복합적 차별의 맥락을 드러낸다. 이는 성별, 인종, 장애, 성적 지향 등 여러 정체성이 교차하면서 나타나는 복잡한 사회적 불평등을 의미한다. 이들이 겪는 차별 경험은 하나의 정체성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복합적인 차별과 불평등은 다차원적 억압의 형태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여성이면서 장애인인 사람은 여성으로서의 성차별과 장애인으로서의 차별을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차별은 별개의 문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차적으로 상호작용하며 더 큰 억압을 낳는다. 일본 여성장애인 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사사키 사다코씨는 2011년부터 장애인임에 더해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사회적으로

로 드러내고자 동료들과 ‘장애가 있는 여성이 겪는 생활의 어려움’이라는 복합차별 실태보고서를 발간했다(사사키 사다코, 2020). 이 보고서는 여성장애인이 겪는 다수의 성적 피해, 불안정한 경제, 돌봄의 부족, 부정되기 쉬운 성과 생식의 권리 등이 기록되어 있다.

보고서의 한 사례는 장애여성이 겪는 복합차별의 현장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어느 뇌성마비 여성이 자궁근종 진단을 받았을 때 ‘자궁을 드러내면 낫는다’는 의사의 말에 ‘아이를 낳고 싶다’고 그 여성이 말하자 의사가 너무 놀라는 것을 보고 큰 상처를 입었다. 사사키 사다코는 “장애를 가진 여성은 아이를 출산할 일이 없을 거라는 의료진의 선입견에, 질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방침이 좌우되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사사키 사다코, 2020).

또한, 다문화 이주민이면서 성소수자인 사람들은 이중적인 소외와 차별을 경험한다. 이주민으로서 이들이 겪는 문화적, 법적 차별에 더해, 성소수자라는 정체성으로 인한 차별은 그들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더욱 약화한다. 이들은 주류 사회 내에서 인정받기 어렵고, 정책적으로도 보호받기 힘든 이중적인 차별 속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머징 시티즌은 자신들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경험하고 발신하게 되며, 이는 사회적 문제의 경고 신호로 작용한다.

이머징 시티즌이 교차적 정체성으로 겪는 복합적 차별은 단순한 개인의 경험을 넘어 사회 구조적 문제로 확장된다. 이들이 겪는 문제는 개인의 어려움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 다수의 소외된 그룹이 동시에 겪는 문제로서, 다층적 차별과 불평등을 드러낸다. 이머징 시티즌은 이들 문제를 발신하면서, 기존의 단일적 사고방식이나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사회 문제를 제기한다.

예를 들어, 흑인 여성 페미니즘 운동은 흑인 여성들이 인종적 차별과 성차별을 동시에 경험하는 현실에서 출발했다. 흑인 여성들은 백인 여성들이 주도하던 페미니즘 운동에서조차 소외되었으며, 이들의 경험은 단순히 여성으로서의 차별뿐만 아니라 인종적 차별과 경제적 불평등을 함께 반영하고 있었다. 이러한 교차적 차별을 경험한 흑인 여성들은 인터섹셔널리티(intersectionality, 교차성)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새로운 페미니즘 논의를 촉발했고, 현재 다양한 학문과 사회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관점이 되었다. 이머징 시티즌으로서 흑인 여성들은 기존 페미니즘 담론을 재구성하며, 복합적인 차별 구조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다.

교차성에 의한 차별은 이 차별이 어느 요인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애매하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하다. 교차성의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인권운동가 킴벌리 월리엄스 크렌쇼는 “차별은 교차로에서의 통행과 같이, 한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고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다”며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그것은 여러 방향에서 오는 차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모든 방향에서 오는 차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며 “어떤 운전자가 상해를 입혔는지 판별하는 시도를 좌절시킨다”고 지적했다(박종주, 2018). 이런 이유로 박종주(2018:159)는 교차성을 말하려면 “새로운 프레임,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머징 시티즌의 교차적 정체성은 정책적 관점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단일한 차별 문제를 다루는 기존의 정책들은 복합적 차별을 겪는 시민들에게는 충분한 해결책을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교차적 차별을 경험하는 이머징 시티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차원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성소수자 난민은 성적 지향과 난민으로서의 법적 지위 문제를 동시에 겪는다. 그들은 출신국에서 성소수자로서의 박해를 피해 도망쳐 나왔지만, 도착한 국가에서도 난민으로서의 법적 보호와 성적 지향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교차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성소수자 인권 보호와 난민 보호를 동시에 다루는 포괄적 정책이 필요하다. 교차성에 대한 인식 없이 단일한 차별 문제만을 다루는 정책은 이러한 이머징 시티즌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또한, 장애인 여성을 위한 정책도 마찬가지이다. 장애인 복지 정책과 여성 복지 정책이 별도로 존재하지만, 장애인 여성이 겪는 문제는 두 정책이 교차한 지점에서 발생한다. 이들은 장애인으로서 필요한 서비스와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차별을 모두 해결해야 하며, 이는 단순한 복지 확충을 넘어선 통합적 복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머징 시티즌이 교차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제기하는 이슈들은 단순히 특정 집단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 전체의 구조적 문제를 반영하는 경고 신호로 작용한다. 이들이 직면하는 차별과 불평등은 사회적 변화를 촉발하는 중요한 신호로 작용하며, 그들이 발신하는 문제는 향후 사회가 해결해야 할 복잡한 이슈로 부각된다.

따라서 이머징 시티즌의 교차성은 단순히 소외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 존재하는 복합적 억압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들이 제기하는 이슈는 다양한 사회적 차별의 교차 지점에서 발생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 해결책을

요구한다. 이들은 단일한 문제 해결을 넘어서 다층적 차별을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라. 창발성

창발성은 이머징 시티즌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로, 이는 이들이 단순히 수동적으로 문제를 겪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능동적인 노력을 통해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을 말한다. 창발성은 이머징 시티즌이 기존 사회 구조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혁신적인 방식을 찾아내어 새로운 이슈를 발신하고, 궁극적으로 미래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중요한 동력이다. 이러한 창발성은 특히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위치에서 더욱 강하게 발현된다. 기존 시스템에 의해 소외되거나 배제된 이들이 창발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창발성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창발성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거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적용하는 것을 넘어서,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이다. 이머징 시티즌은 기존의 제도나 규범이 그들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할 때, 자신만의 새로운 방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 전체의 변화를 촉발한다.

예를 들어, 최의택과 같은 장애인 소설가는 단순히 장애로 인한 불편함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과 인간의 관계를 SF 소설로 풀어내며 장애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제기한다(제7장 최의택 사례 참고). 그는 장애를 기술로 극복하는 사회적 상상력을 제시하며, 그동안 장애인들이 경험해온 고통을 사회적으로 재구성하는 혁신적인 사고를 보여준다. 최의택은 자신의 창발적인 사고를 통해, 장애인이 더 이상 사회의 배제된 존재가 아니라, 기술과 미래 사회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이는 장애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한다.

이머징 시티즌의 창발성을 이해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례는 AI와 협업하는 의사들이다. 의사라는 전통적 전문 직종은 의료 분야에서 오랫동안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 인공지능(AI) 발전은 의사들이 기존의 방식을 재고하고, 새로운 기술과 협력하는 방식을 모색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게 했다.

일부 의사들은 이러한 기술적 도전에 대해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AI와의 협업을 통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AI 기반 의

로 진단 시스템은 의료 전문가들이 빠르게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이 과정에서 의사의 전문성과 기술의 결합이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창발적인 변화는 의료 시스템을 혁신할 수 있게 하며, 이는 기존의 의료 관행을 넘어선 새로운 해결책을 제공하는 중요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또한, 청년 기후 행동가들 역시 창발성의 좋은 예이다. 이들은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정치 및 경제 구조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 변화를 모색한다. 그들은 거리에서의 시위뿐만 아니라, 소셜 미디어와 같은 새로운 기술 플랫폼을 활용하여 기후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고,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들은 기존의 문제 해결 방식을 답습하지 않고, 창발적인 방법으로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는 이머징 시티즌으로 재조명할 수 있다.

이머징 시티즌의 창발성은 단순히 그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주도하는 힘이 된다. 창발성은 기존의 사회 구조와 패러다임을 재구성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길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많은 국가에서 재택근무가 급격하게 확산했고, 기존의 일터 중심의 근로 문화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IT업계 종사자들은 기존의 물리적 공간에서 벗어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근무 형태를 창발적으로 도입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일시적 대응이 아니라, 미래의 일자리 형태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향후 노동시장의 패러다임을 재구성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창발성은 이머징 시티즌이 기존 사회 구조의 한계를 뛰어넘어 혁신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미래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중요한 특징이다. 이들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위치에 있더라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능동적인 노력을 통해 기존의 제약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적 구조를 창출하는 주체다. 기술, 사회 운동, 새로운 사고방식을 결합하여 창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이머징 시티즌은 미래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동력이 될 수 있다.

제2절

미래연구에서 이머징 시티즌 발굴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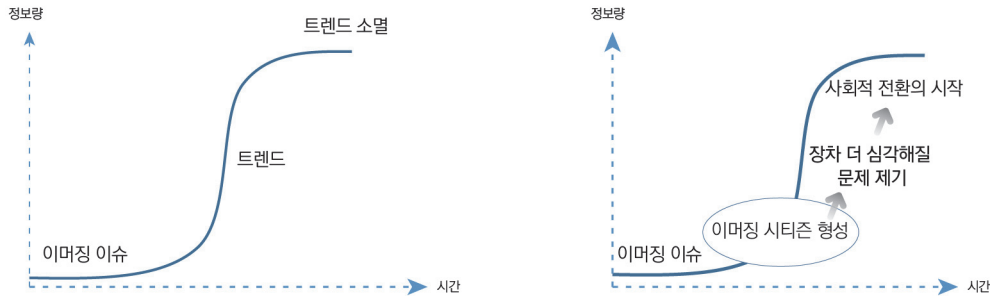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이머징 시티즌은 언제 어디서 등장하는가?

이머징 시티즌은 사회 구조의 변화 속에서 이머징 이슈를 발신하는 주체로 등장하며,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제의 징조를 보여준다. 이머징 이슈가 트렌드로 발전하기 직전의 순간을 이해하는 것은 이머징 시티즌의 역할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이머징 이슈는 일반적으로 소수가 비공식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여, 점차 공공의 의제로 떠오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의 트렌드로 성장한다. 그 이후에는 충분히 성숙하여 사회의 일부로 통합되거나, 점차 사라지는 과정을 거친다(Molitor, 1977; 2010).

이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시점은 바로 이머징 이슈가 트렌드가 되기 직전의 순간이다. 이는 이머징 시티즌이 사회 변화의 신호를 발신하는 중요한 시기로 볼 수 있다. 이머징 시티즌은 사회에서 주목받지 않던 문제를 최초로 인식하고, 그것이 공론화되어 트렌드로 발전하기 직전에 이를 발신하는 사람들이다(그림 2-1 참조).

이 시점에서 이머징 시티즌은 자신들이 직면한 문제를 단순히 문제로 인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 이슈로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한다. 그들이 발신한 이슈는 점차 더 많은 사람에게 공유되고, 공공의 관심을 받으며, 트렌드로 성장한다. 이머징 시티즌은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 변화의 선구자 역할을 하며, 기존의 문제를 재해석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미래 사회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주체로 작용한다. 이머징 시티즌은 이머징 이슈가 트렌드로 도약하기 직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들의 발신은 사회적 변화를 촉진한다.



(출처: 저자 작성)

[그림 2-1] 이머징 시티즌이 형성되는 과정과 사회전환에서 역할

2 이머징 시티즌이 사회에 등장하는 과정

이머징 이슈가 트렌드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4가지 주요 특징은 이머징 시티즌의 등장과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다. 이머징 시티즌은 바로 이러한 특징들이 작동하는 순간에 나타나며, 사회적 변화를 촉진한다. 다음은 이 4가지 특징을 이머징 시티즌의 역할과 연결하여 설명한 내용이다.

가. 돌이킬 수 없는 변화(No return)

이머징 시티즌은 사회에서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촉매적 사건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기존 사회 구조로 되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지거나, 새로운 상태가 기존 상태보다 더 나은 이점을 제공하여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불리한 상황을 말한다. 이머징 시티즌은 이러한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이끌어가는 주체로, 그들이 제기하는 문제와 발신하는 이슈는 기존 사회 구조에 대한 도전을 제시하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 이동권을 주장하는 이머징 시티즌이 있다면, 그들의 주장과 노력은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만들어낸다. 이동권 확보가 시민권의 일부로 인정되면, 더 이상 과거의 불평등한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 이머징 시티즌은 이렇게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변화를 촉발하며,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

나. 새로운 이해관계자의 등장(New agents)

이머징 시티즌은 새로운 이해관계자들이 등장하는 순간, 그 변화의 선두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Molitor(1977)의 이론에 따르면,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다양한 개인, 그룹, 혹은 조직들이 이머징 이슈가 공론화되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등장한다. 이들은 기존 문제를 재구성하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새로운 접근 방식을 도입한다.

이머징 시티즌은 이러한 새로운 이해관계자 중 하나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로서 자신이 속한 문제를 새로운 도전과 기회로 전환하는 주체이다. 예를 들어, 여성평화운동가들이 젠더 불평등과 분단 구조에 대한 변화를 추구할 때, 이들은 새로운 이해관계자로서 사회적 논의를 확장하고, 젠더와 평화의 교차 지점에서 혁신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 이머징 시티즌은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며,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가는 주요 주체로 떠오른다.

다. 비범주적 문제(Non-categorical issues)

이머징 시티즌이 제기하는 이슈는 종종 비범주적 문제로 나타나는데, 이는 기존의 사회적 틀이나 범주로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를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종종 여러 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치며, 단일한 접근 방식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머징 시티즌은 이러한 비범주적 문제를 처음으로 인식하고 발신하는 주체로, 기존의 카테고리를 초월하는 새로운 해결책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AI)과 관련된 윤리적, 법적 문제는 단순히 기술적 영역에서 다룰 수 없는 비범주적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기술, 법, 사회과학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며, 그 해결을 위해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하다. AI와 협업하는 의사들이 바로 이러한 이머징 시티즌으로, AI가 의료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 윤리적으로 고민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라. 새로운 방향성(Novel direction)

이머징 시티즌은 사회적 변화를 위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주체로 등장한다. 이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단순히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방향성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한다. 이머징 시티즌은 여러 분야에서 지식이 결집되면서 형성된 지식 클러스터를 바탕으로,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경로를 제시한다.

예를 들어, 메타버스와 같은 개념은 현실과 가상 세계의 경계를 허물며,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상호작용, 경제,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를 제시한다. 메타버스는 다양한 학문과 기술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대표적인 예시이며, 이를 발신하는 이머징 시티즌들은 사회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처럼 이머징 시티즌은 돌이킬 수 없는 변화, 새로운 이해관계자의 등장, 비범주적 문제, 그리고 새로운 방향성이라는 4가지 특징을 통해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가며, 이머징 이슈를 트렌드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표 2-1 참조). 이들은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재해석하고,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미래 사회의 전환점을 만들어낸다.

〈표 2-1〉 사회적 전환기에 이머징 시티즌의 역할 (출처: 저자 작성)

이머징 이슈 특징	핵심 내용	이머징 시티즌의 역할	사례
돌이킬 수 없는 변화 (No return to the past)	작은 경고의 목소리들이 축매적 사건 이후 사회적 트렌드로 성장함	이머징 시티즌은 자신의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확대하고,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촉발하는 역할을 함	장애인 이동권 촉구 후 도시 구조 개혁
새로운 이해관계자의 등장 (New change agents)	다양한 개인 및 조직이 비정상적 현상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경쟁	이머징 시티즌은 새로운 이슈를 발신하며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이 문제 해결에 참여하도록 유도함	네덜란드에서 매춘 합법화 논의 및 제도화
비범주적 문제 (Non-categorical issues)	서로 다른 분야의 정보가 결합되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함	이머징 시티즌은 여러 학문 및 영역을 넘나드는 복잡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통해 다학제적 접근을 촉진함	AI 기술과 윤리적 문제, 법적 규제 논의
새로운 방향성 (Novel direction)	서로 다른 학문이 새로운 키워드를 중심으로 클러스터 형성	이머징 시티즌은 기존의 틀을 넘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사회적 변화를 위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함	메타버스, 웹 계량학(webometrics) 등의 새로운 연구 분야 출현

제 3 절

정책연구로서 한계와 과제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이머징 시티즌에 관한 체계화된 데이터의 부족

이머징 시티즌 연구의 가장 큰 한계 중 하나는 체계화된 데이터의 부족이다. 이머징 시티즌은 사회의 주류에서 벗어나거나 소외된 집단으로, 이들이 처한 문제는 사회 구조의 변화나 미래의 중요한 이슈를 예고하는 신호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역할에도 이머징 시티즌에 대한 데이터는 충분히 수집되지 않거나, 체계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한계는 연구의 정확성과 정책적 대응의 적절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가. 정의의 모호성

이머징 시티즌은 복합적이고 교차적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로, 기존의 범주화 방식으로는 이들을 명확하게 정의하거나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들은 성별, 인종, 장애, 성적 지향, 경제적 약자성 등 다양한 사회적 정체성이 복합적으로 교차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 단일한 기준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다. 이러한 교차성은 이머징 시티즌의 문제를 다차원적으로 만들며, 그로 인해 일관된 데이터를 수집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성소수자 청년의 경우, 이들은 다문화적 배경에서 오는 사회적 소외뿐만 아니라, 성소수자로서 겪는 차별까지 함께 경험한다. 이들의 복합적 정체성을 고려한 맞춤형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머징 시티즌으로서 이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차별과 불평등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이는 이머징 시티즌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이며, 그로 인해 이들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거나 적절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나.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는 공식 통계나 정부 데이터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이들이 법적,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나, 사회적으로 은폐된 상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성소수자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공개하지 않거나, 성소수자 인구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부족하여 정책 수립 시 그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이민자 커뮤니티나 난민과 같은 집단도 공식적인 데이터에서 종종 누락된다. 이들은 법적 지위나 사회적 위치가 불안정한 경우가 많아, 정확한 수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는 이머징 시티즌 연구에서 이러한 그룹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없게 만들며, 그들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 개발이 어려워진다. 예를 들어, 유럽의 난민 위기 동안 다수의 난민이 유입되었지만, 그들에 대한 데이터 부족으로 난민들이 겪는 경제적 불안정과 사회적 통합의 어려움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이는 난민 관련 정책 수립에서 중요한 결함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 데이터 부족이 초래하는 연구 및 정책의 한계

이머징 시티즌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면, 그들이 직면한 문제를 정확히 분석하고, 실질적인 정책적 제안을 만드는 데 있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데이터 부족은 이머징 시티즌이 사회적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거나, 그들의 문제를 과소평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동시장에서의 소수자 차별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다면, 이러한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노동법 개정이나 사회적 안전망 확충과 같은 정책적 대응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특히, 이머징 시티즌과 같이 다양한 사회적 정체성이 교차하는 집단에 관한 연구와 데이터는 맞춤형 정책 개발에 필수적이지만, 이러한 데이터가 부족할 경우 정책 입안자들이 이들의 문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데이터 부족은 장기적인 연구와 계획 수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머징 시티즌은 사회 변화의 초기 경고 신호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데이터가 부족할 경우, 사회적 문제의 선제적 대응이 어려워지며, 이를 통해 더 큰 사회적 문제로 확산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이머징 시티즌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이 필수적이다. 성별, 인종, 장애, 성적 지향, 경제적 지위 등 다양한 사회적 정체성을 고려한 다차원적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들이 직면한 복합적인 문제를 더욱 명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정부와 공공기관, 학계는 이러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확한 연구와 정책적 대응을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한다. 그래야만 이머징 시티즌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미래 사회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다.

2 입법과제와 공공정책의 연계성 강화 과제

이머징 시티즌 연구가 사회적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연구 결과가 입법과 공공정책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이는 이머징 시티즌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이 제기하는 새로운 이슈들을 사회적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 그러나 현재 이머징 시티즌 연구와 입법 및 정책 사이의 연계성은 미흡한 부분이 많다. 이러한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은 향후 이머징 시티즌 연구의 성과를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데 있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가. 입법적 반영의 부족

이머징 시티즌이 제기하는 문제들은 종종 새롭고 긴급한 사회적 이슈로, 기존의 법과 제도에서는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주로 사회적 변화의 속도와 입법 과정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사회적 변화는 기술 발전, 환경 변화, 새로운 사회적 가치관의 형성과 같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 빠르게 진행되지만, 입법 과정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자동화와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일자리가 대체되거나, 새로운 형태의 직업이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노동법이나 고용 정책은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는 기존 법체계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이머징 시티즌들이 직면한 문제를 적시에 해결하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

또한, 기후 변화와 같은 이슈는 이머징 시티즌이 가장 심각하게 직면할 수 있는 문제 중 하나이다. 기후 변화는 농업, 건강, 생활 환경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며, 특히 경제적 약자와 소수자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입법 과정은 주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지연되거나 충분히 구체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기후 변화의 피해를 가장 먼저 겪는 이머징 시티즌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나. 정책적 실행력 부족

공공정책은 이머징 시티즌의 요구를 반영하여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정책적 실행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특히, 정책이 실제로 시행되기까지는 예산 문제나 정치적 우선순위와 같은 요인이 작용하여, 정책이 제안되더라도 충분히 실현되지 않거나 형식적인 수준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성별 임금 격차 문제는 공공정책에서 수차례 논의되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여전히 부족하다. 성별 임금 격차의 주된 원인으로 성별화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문제를 풀지 않는 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권리 보호와 관련된 정책들도 형식적 수준에서 그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다문화 가정은 한국 사회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은 여전히 부족하다. 특히, 이주민 여성과 같은 소수자는 법적 보호와 사회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으며, 이들이 겪는 차별과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적 대응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러한 경우, 공공정책이 형식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제로 이머징 시티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다. 입법과 공공정책의 연계성 강화

이머징 시티즌 연구와 입법, 공공정책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데이터 기반 입법: 이머징 시티즌의 요구와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체계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이머징 시티즌이 겪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법안을 마련할 수 있으며, 그들의 요구를 적시에 반영하는 시의

성 있는 입법이 가능해진다.

정책 실행력 강화: 공공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와 함께 정치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공공정책이 실질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정책 실행에 있어서 모니터링과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적 의지와 협력: 이머징 시티즌이 제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 학계가 협력하여 공동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이는 사회적 변화를 위한 정책적 실행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머징 시티즌 연구가 사회적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연구결과가 입법과 공공정책으로 구체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입법적 반영과 정책적 실행력을 강화해야 한다. 데이터 기반의 입법과 정책을 통해 이머징 시티즌의 요구를 적시에 반영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정책적 실행력을 확보해야만, 이머징 시티즌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 사회를 구축할 수 있다.

제3장

이머징 시티즌으로서 지역주민과 미래

제1절 인천주민과 미래대화 개요 및 목표

제2절 인천주민과 미래대화 결과 분석

제3절 미래 이슈 추적기 내용 분석

제4절 정책적 시사점

제 1 절

인천시민과 미래대화 개요 및 목표¹⁾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미래대화 개요

가. 연구의 배경

국회미래연구원은 2022년부터 ‘선호미래연구’를 ‘국민과 미래대화 연구’로 확장하고, 17개 시도의 주민들과 지역의 미래를 예측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미래대화’(Dialogues on Futures)는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미래를 전망하면서 이들이 어떤 미래를 예상하는지, 어떤 미래를 선호하는지 논의하는 자리로 개념화했다.

해외에서는 시민참여의 미래연구가 잘 발달되어 있다. 이 중에서도 유럽과 싱가포르 사례는 주목할만 하다(박성원 외, 2022; 2023). 유럽은 2013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장클로드 융커 위원장의 주도로 2014년부터 유럽의회의 모든 국가가 의무적으로 시민들과 미래대화를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2015년 53개 시민 대화를 시작으로 해마다 실시되었고, 2019년에는 1200개의 미래대화가 시행, 5년 동안 유럽시민 26만 명이 미래대화에 참여, 140만 명이 이 대화를 지켜보았다(European Committee of the Regions, 2019; 박성원, 2020에서 재인용).²⁾ 싱가포르도 2015-2016년 시민 8,300명이 미래대화에 참여했고, 121개의 논의 주제를 만들어 선호하는 미래사회를 구상한 바 있다(박성원, 2020). 해외에서는 시민들과 함께 ‘대화’를 통해 도시와 지역의 미래 비전을 논의하고 이를 정부의 계획에 반영하는 노력을 지속한다(예컨대, Ortegon-Sanchez & Tyler, 2016).

국회미래연구원은 '22년부터 강원, 경북, 대전, 전북, 전남, 제주연구원과 협업해 지역주민 120명을 만나 미래대화를 추진했다(박성원 외, 2022). '23년에는 부산연구원, 부산시청과 공동으로 ‘부산시민과 미래대화’를 개최했다(박성원, 2023). 24년에는 인천

1) 이 글의 일부는 박성원. (2024). 수도권 역차별을 넘어 세계적 변혁도시로: 인천시민과 미래대화 조사연구. 국가미래전략 Insight 90호, 국회미래연구원에 게재된 내용을 인용했다.

2) 유럽에서 추진한 미래대화의 결과는 2020년 발표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의 발발로 연기. 대신 유럽집행위원회는 2020년부터 ‘전략적 미래 보고서(Strategic Foresight Report)’를 해마다 발표하면서 유럽시민의 선호미래를 실현하는 정책을 제시함.

연구원, 인천시청과 공동으로 인천시민과 미래대화를 기획하고 추진했다.

나. 연구의 목적

미래대화의 목적은 시민들이 예측한 다양한 미래의 모습과 바라는 미래를 조사하는 것이다. 평범한 시민들이 모여 20년 뒤의 미래를 예측하고, 바람직한 미래사회의 모습을 논의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미래지향적 행동이자 사회적 연대의 초석이 된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인식하는 미래사회의 모습에는 시민사회의 희망, 기대, 걱정, 우려의 요인들이 담겨 있다. 이런 요인들은 새로운 미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며 역으로 새로운 미래의 도래를 막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정부 정책담당자들이 이런 요인들을 사전에 이해하고 대응한다면 시민들이 원하는 미래사회의 청사진을 만들고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미래대화는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추진하는 ‘변화창조시민’(change agents)의 양성에도 목적이 있다. 미래는 정부와 전문가, 시민 등 3자의 협력으로 만들어지며 이 3각 체계에서 시민들의 협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 정부와 전문가들이 원하는 미래라도 시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실현되기 힘들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미래’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의 산물로 평가된다(마틴 셀리그먼 외, 2021). 변화의 창조자이자 추진자로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미래계획이나 비전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고 정례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역주민들과 미래대화는 시민이 지역사회의 변화 창조자로 성장할 기회이기도 하다.

미래대화는 지역정부의 최고 의사결정자까지 연결하는 과정의 실험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부산시민과 미래대화 사례처럼 인천시민과 미래대화도 국회미래연구원의 독자적 연구 프레임과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전문가집단인 인천연구원, 지역정부인 인천시청과 공동으로 기획하고 추진한 프로젝트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인천연구원 연구진을 대상으로 미래예측의 이론과 방법론, 미래대화 촉진자(facilitator) 역할에 대해 학습시키고 실습하면서 미래대화를 준비했다. 시민과 숙의토론에서 나온 결론을 인천시와 공유하고 시민들이 걱정하는 미래와 희망하는 미래를 위한 정책적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미래대화에서는 미래이슈를 추적하는 툴(the future issues tracker)을 만들어 인천연구원 연구진과 긴밀하게 협업했다. 이 툴은 뒤에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이를 통해 미래대화가 단순히 시민 간의

대화로 끝나지 않고 주요 정책담당자에게 전달되어 미래를 향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주려고 했다.

다. 미래이슈 추적기(Future Issues Tracker) 개발과 활용

1) 미래이슈 추적기 개념

미래 이슈 추적기는 시민들과의 미래 대화를 통해 현재 문제이면서 미래에 더욱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 있는 이슈들을 식별하고 추적하는 도구다. 이 도구는 지역연구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해당 이슈들이 지역사회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예측한다. 미래 이슈 추적기는 미래에 대한 대응이 미흡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함으로써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이 과정은 5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1단계 이슈 식별: 시민들과의 미래대화를 통해 현재 및 미래 이슈를 파악한다. 이 대화는 일상에서 경험하는 문제들이 미래에 어떻게 진화할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이슈를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단계 대응 조사: 각 지자체 및 지역연구원이 현재 직면한 이슈들에 대해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이를 요약한다. 이 과정은 각 기관의 정책, 프로그램, 그리고 이니셔티브를 분석하는 것을 포함한다.

3단계 효과 평가: 조사된 대응들을 효과성에 따라 상, 중, 하로 평가한다. 이 평가는 해당 대응들이 이슈를 해결하거나 완화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4단계 개선 전략: 평가 결과, 중 또는 하로 평가된 대응 방안들에 대한 개선 전략을 마련한다. 이 단계에서는 기존 대응 방안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대응 전략을 제안하여 미래 이슈에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방안을 모색한다.

5단계 지속적 모니터링: 지자체와 지역연구원이 미래 이슈에 대응하는 과정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한다. 이는 정기적인 리뷰를 통해 각 대응의 지속 가능성과 효과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이 5단계 프로세스는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현안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지자체 및 연구 기관이 미래 지향적인 대응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는 공공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2) 미래 이슈 추적기의 정책적, 전략적 쓸모

우선순위 설정: 미래 이슈 추적기를 통해 정책 담당자는 다가올 위험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다. 이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시급한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예방적 대응 강화: 예측 모델을 통해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초기 단계에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이는 큰 비용과 사회적 불안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역사회의 참여 유도: 시민들과의 대화를 기반으로 한 이슈 식별은 지역사회의 참여를 촉진하고, 이해관계자들이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지속 가능한 발전 지원: 장기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미래 세대의 안녕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한다.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투명한 데이터 기반 접근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정책의 신뢰성과 지역사회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미래 이슈 추적기는 지역사회가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도전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통해 더욱 회복력 있고 적응력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도구는 정책 담당자들이 미래 지향적인 결정을 내리고, 효과적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2 미래대화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진행 과정

가. 참여 시민 모집 방법 및 인구학적 특성

인천연구원의 홈페이지 배너광고를 통해 ‘인천시민과 미래대화’에 참여할 시민 모집했다. 그 결과 총 80명의 시민이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최종 56명 참여(소정의 교통비

지급)했다. 미래대화는 2024년 1월27일(토요일) 오후 1-5시까지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미래대화에 참여한 시민들의 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3-1 참조). 미래대화에 참여한 인천시민은 남성(54%)이 여성(46%)보다 상회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30.4%)가 가장 많았고, 30대(23.2%), 40대(21.4%), 60대(19.6%) 순이었다. 직업으로는 직장인(41%), 전문직(21.4%), 자영업자(12.5%)와 주부(12.5%) 순으로 많았다. 거주지별로는 연수구(23.2%), 남동구(21.4%), 서구(17.8%) 순으로 많았다.

〈표 3-1〉 인천시민 미래대화 참가자 인구학적 특성(총 56명 답변) (순위별 정리)

성별	연령	직업	거주지
남성(30명, 54%) 여성(26명, 46%)	50대(17명, 30.4%) 30대(13명, 23.2%) 40대(12명, 21.4%) 60대(11명, 19.6%) 20대(3명, 5.4%)	직장인(23명, 41.0%) 전문직(12명, 21.4%) 자영업자(7명, 12.5%) 주부(7명, 12.5%) 무직(3명, 5.4%) 학생(2명, 3.6%) 비공개(2명, 3.6%)	연수구(13명, 23.2%) 남동구(12명, 21.4%) 서구(10명, 17.8%) 미추홀구(8명, 14.3%) 부평구(5명, 8.9%) 계양구(3명, 5.4%) 중구(3명, 5.4%) 강화군(1명, 1.8%) 동구(1명,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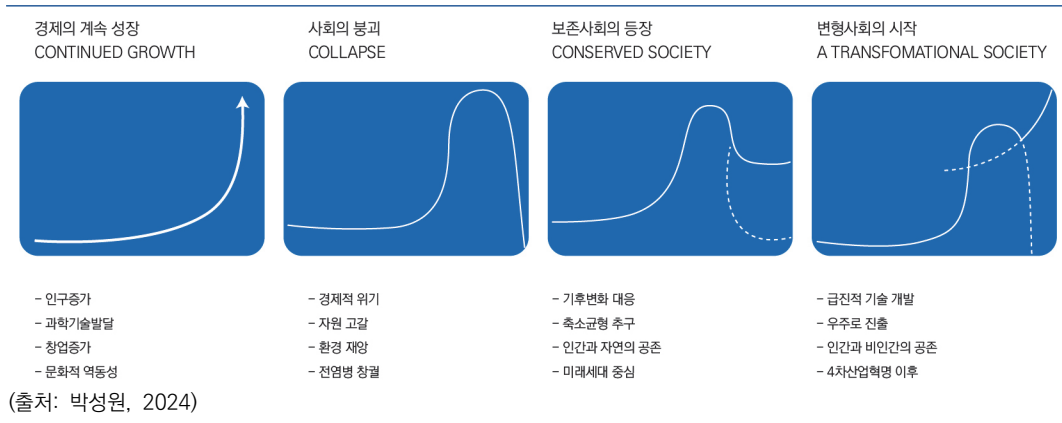
나. 미래대화 진행 과정

1) 사전 숙의자료 제공 및 미래인식 조사

인천의 2050년 미래 가능성과 선호하는 미래 조사를 위해 연구진은 행사 2주 전부터 참석자들에게 사전 숙의 자료를 제공하고 학습하도록 요청했다. 사전숙의자료에는 국회 미래연구원이 2022년 연구한 미래전망의 주요 결과를 담아 다양한 미래변화의 요인을 설명했다(박성원 외, 2022). 이 자료에 더해 인천연구원의 연구진은 인천의 맥락에서 변화와 전망을 분야별로 작성했다.

숙의자료를 읽은 참여자들은 4가지 미래상(그림 3-1 참조)을 이해하고 이 중에서 ‘이대로 가면 맞이할 인천의 미래’와 ‘미래세대까지 고려했을 때 바람직한 인천의 미래’를 선택한다. 4가지 미래상은 국내외 미래학계에서 활용하는 예측방법론으로 다가올 미래를 4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한 것이다(Dator, 2002; Park, 2018). 사전 조사 자료는 ‘미

래대화' 이후 다시 같은 내용을 조사한 것과 비교해 시민들이 미래대화를 통해 어느 정도 의견 변화가 있었는지 대조하면서 확인한다.



[그림 3-1] 다가올 네 가지 미래의 유형과 주요 동인들

2) 숙의토론형 미래대화 진행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중장기 미래의 변화를 논의하면서, 다가올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과제 도출한다(표 미래대화 프로그램 참조). 총 12개 팀으로 참여자를 나누고 각 팀별로 인천연구원과 국회미래연구원의 연구자들이 '미래대화 촉진자(facilitator)'로 참여하고 논의 내용을 상세히 기록했다(그림 3-2 참조). 미래대화 촉진자는 미래대화에 필요한 여러 질문을 제기하고 참석자들이 골고루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한다. 미래의 변화를 4가지 관점에서 논의하고(그림 3-1 참조), 지역사회가 4가지 미래사회 중 어느 미래로 갈 가능성이 큰지, 어느 미래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숙의하면서 토론한다. 바람직한 미래(선호미래)로 가려면 필요한 정책과 사회적 과제가 무엇인지도 제안한다.

3) 미래전망에 도움을 주는 키워드 카드 제작

미래대화는 시민과 함께 미래를 전망하고 평가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이를 위해 미래전망에 도움을 주는 키워드 카드를 제작하고 참여자들에게 나눠준다(표 3-3 참조). 키워드 카드는 관계, 거주환경, 에너지, 과학기술, 교육, 경제, 정치, 국제관계 등으로 분야를 나눠 분야별로 2개의 키워드를 제시한다. 예컨대, 관계에서는 다문화 이주민과

1인 가족, 에너지 분야에서는 원자력 발전 또는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제시할 수 있다.

키워드는 증가나 감소, 확대나 축소 등의 방향성을 넣지 않고 제시해 시민들이 직접 미래를 예측하면서 방향성을 전망하도록 유도한다(시민들의 미래예측 연습). 키워드 카드는 인천연구원 연구진과 함께 인천의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논의하고 이 중 분야별로 2개씩 선정했다. 인천의 맥락에서 ‘신도심과 원도심의 생활수준 격차’나 ‘바이오, 반도체, 로봇산업 발달’ ‘수도권 역차별’ 등은 다른 도시와 달리 인천만의 변화를 나타낸다.



[그림 3-2] 숙의토론으로 가능미래와 선호미래를 논의하는 인천시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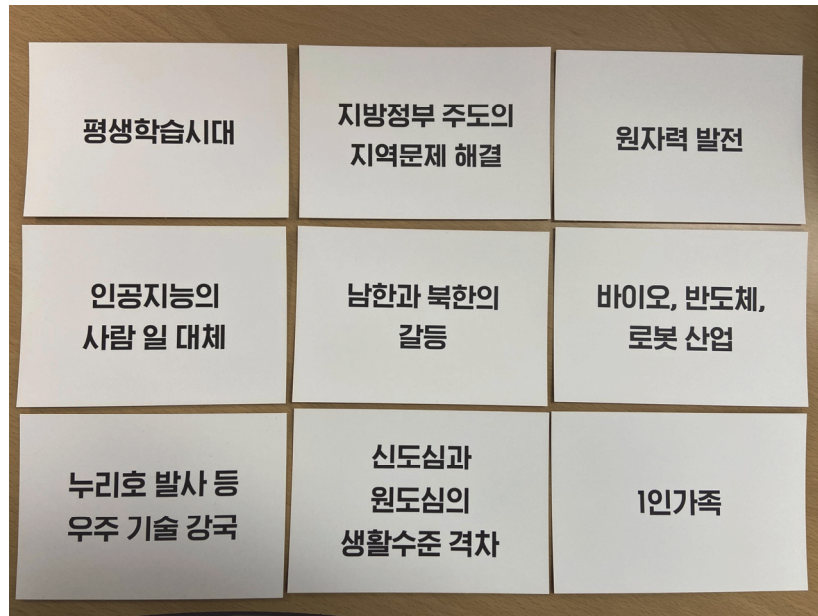
〈표 3-2〉 인천시민과 미래대화 프로그램

일정		내용
13:00~14:00(60분)	준비	회의장 준비 및 참석자 자리 안내, 참석자들과 라포(신뢰, 친밀감) 형성
14:00~14:30(30분)	오프닝	국회미래연구원장, 인천연구원 부원장, 인천시장 인사 및 축사
		미래대화 소개 및 인천시 동영상 시청
14:30~14:50(20분)	세션1	인천의 과거와 현재에서 겪는 어려움 논의
14:50~15:10(20분)	세션2	미래에 겪을 어려움 또는 새로운 기회 논의 (전망을 도와줄 카드* 세트 제공)
15:10~15:20(10분)	휴식	
15:20~16:20(60분)	세션3	4가지 대안 미래 탐색 (그룹별 논의)
16:20~16:25(5분)	투표	4가지 미래 중에서 '이대로 가면 맞이할 미래' 및 '미래세대까지 원하는 선호미래' 투표 및 토론
16:25~16:50(25분)	공개토론	4가지 미래 투표 결과 공개 및 토론 (가능미래와 선호미래를 선택한 이유)
16:50~17:10(20분)	클로징	최종 설문 작성

* 전망용 카드는 아래 〈표 3-3〉을 참조

〈표 3-3〉 시민의 미래전망을 돕는 카드 내용(A, B 유형 구분은 특별한 의미 없음)

분야	A형	B형
관계	다문화이주민	1인 가족
거주환경	신도심과 원도심의 생활수준 격차	폭염, 홍수, 가뭄 등 기후위기
에너지	원자력 발전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과학기술	누리호 발사 등 우주 기술 강국	바이오, 반도체, 로봇 산업
교육	계층 상승 기회	평생학습 시대
경제	수도권 역차별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 대체
정치	지방정부 주도의 지역문제 해결	사회적 통합에 실패한 정부와 국회
국제	남한과 북한의 갈등	미국과 중국 전략적 경쟁



[그림 3-3] 미래대화 참석자들에게 나눠준 미래 키워드 카드 예시

3) 사후 조사의 분석

미래대화가 끝나고 참여자들은 자신이 예측한 가능미래와 선호미래의 근거를 작성한다. 연구진은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에서 참여자들의 의견 변화를 조사하고 분석해야 한다. 사전과 사후 의견의 차이를 조사하는 이유는 숙의토론형 미래대화를 통해 바뀐 시민들의 의견을 분석해 가능미래와 선호미래의 타당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참여자들이 제시한 ‘이대로 가면 맞이할 미래’(가능미래)와 ‘미래세대까지 고려한 바람직한 미래(선호미래)’의 다양한 이유를 확인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한다. 이를 통해 인천시민 참여자들의 미래에 관한 희망, 기대, 걱정, 우려를 파악할 수 있다.

시민과 미래대화의 성공 요건 중 하나는 미래대화의 내용이 시민들 간의 대화로 끝나지 않고 인천시의 미래 계획에 관여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연구기관 및 지역정부와 공유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이 확립되어야 미래대화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열정을 끌어낼 수 있고, 과거와 현재의 문제를 풀어 더 나은 미래사회를 만들어간다는 믿음을 줄 수 있다.

제2절

인천시민과 미래대화 결과 분석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미래대화에서 밝힌 참석자들의 과거, 현재, 미래 인식

미래대화에 참여한 시민들은 3단계 과정에서 미래 인식의 폭과 깊이를 심화했다.

1단계: 과거와 현재까지 지속하는 어려움 논의.

2단계: 20년 뒤의 미래를 가정하고 자유롭게 미래의 위험과 기회를 논의.

3단계: 주어진 4개의 미래상을 두고 토론하면서 ‘이대로 가면 맞이할 인천의 미래’와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에게 바람직한 선호미래’를 논의.

이 과정을 모두 완료한 뒤 시민들은 무기명 투표를 통해 가능미래와 선호미래를 선택했다. 3시간 동안 12그룹으로 나뉘 총 56명이 참여한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전사해 분석했다. 시민들의 발언 내용을 접та옴표로 묶어 인용하면서 이들의 의견을 공유해보자.

가. 과거와 현재까지의 어려움

1) 경제적 격차

“경제적 침체로 소상공인 폐업 상태가 인천이 전국(17개 도시)에서 1위래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수진(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인천지역 폐업자수는 12만2천403명(9.1%)으로 서울 15만4천655명(8.3%), 부산 12만4천747명(8.9%), 대구 6만7천427명(8.3%) 등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폐업률을 기록했다.³⁾

“여성의 급여 수준이 남성과 많이 차이가 나요. 인천은 특히나 중소기업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공단이 많아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해요.”

“똑같이 회사 생활하고 똑같이 월급을 받는데 서울에 집 산 사람들은 3배가 오르고

3) 윤상홍. (2023년11월15일자). 인천지역 소상공인 폐업률 9.1% ‘전국 최고’. 중부일보

인천은 거의 오른 게 없고. 직장인은 그걸로 노후 바라보는데 괴리감이 커요.”

인천시가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와 인천여성가족재단의 공공기관에 대한 성별 임금 격차를 분석한 결과, 인천지역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는 38.4%였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인천에서 최근 5년 동안 성별 임금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8년 35.7%, 2019년 33.8%, 2020년 34.2%, 2021년 37.4%, 2022년 38.4%)⁴⁾.

2) 구도심과 신도심의 격차

“신도시는 지원이 많아지니까 더 발전하고 구도심은 점점 더 격차가 심해져서 학교가 공동화 현상으로 아예 비거나, 여러 가지 문화시설은 아예 없거나 취약하고.”

“2018년부터 도시재생법이 시행되고, 각 구의 취약 지역에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얼마나 개선이 된 건지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최근에 친구들 만나러 부평구에 가 보면 주차 문제 엄청 심하고. 서구 검단은 겁나요, 집에 제시간에 못 돌아올까 봐. 약속도 그쪽으로 안 잡게 돼요.”

3) 돌봄문제

“인천에는 고독사가 많아요. 저는 그게 노인들뿐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2022년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천은 전국 평균보다 고독사가 많은 지역에 속하며 2017년 이후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표 참조)⁵⁾.

4) 김지혜. (2024년1월9일). 남성이 여성보다 38% 더 번다...인천 임금차별 심각. 경기일보

5)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6대 광역시별 비교표는 지역별 인구수를 고려해서 볼 필요가 있음. 통계청 2024년2월 기준으로 부산 인구 329만 명, 인천 300만 명, 대구 237만 명, 대전 144만 명, 광주 141만 명, 울산 110만 명.

〈표 3-4〉 인구 10만 명당 고독사 발생이 전국 평균보다 많은 4개 지역 (단위: %)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국 평균	4.7	5.9	5.7	6.4	6.6
부산	6.4	8.5	7.5	9.4	9.8
인천	5.4	7.5	6.5	8.5	8.5
광주	7.2	7.2	7.8	8.2	7.7
충남	7.2	7.2	7.9	9.2	8.3

(출처: 보건복지부,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4) 주거환경

“인천에 온 지 20년이 됐는데 아이 셋 다 비염에 걸렸어요. 주변 얘기 들어보니까 인천에 살면 비염을 달고 산다고 하대요.”

“요즘 태어나는 아이들이 아토피가 너무 많고 치아의 부정교합도 환경병이에요.”

2023년 국민건강보험의 아토피 피부염 환자 조사 결과, 인천은 2018년 이후 소폭 감소세이나 6대 광역시와 비교해 가장 높았다(표 참조).

〈표 3-5〉 아토피 피부염 환자 6대 광역시별 현황 (단위: 명)

광역시 (인구)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부산 (329만 명)	44,589	50,606	53,083	52,745	51,569
인천 (300만 명)	56,958	57,375	55,779	56,867	55,450
대구 (237만 명)	38,177	40,520	41,801	42,628	41,200
대전 (144만 명)	35,472	37,150	36,289	37,530	35,299
광주 (141만 명)	25,553	26,137	27,494	26,673	24,697
울산 (110만 명)	18,177	19,458	19,234	17,284	16,296

(출처: 국민건강보험, 2023)

“제가 공단 쪽에 가까이 살아요. 근데 기업들이 법망을 피해서 밤에 악취 나는 거를 많이 뿜어내거든요. 환경 관련 법이 더 강화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023년 9월 환경부는 악취 원인으로 지목된 업체가 환경부 통합관리환경제도 기준치를 초과한 악취를 낸 것으로 보고 개선 명령을 내렸다.⁶⁾

“인천에서 다들 사시면 사료 냄새 나거나 이상한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특히 송도 센트럴파크에서는 썩은 냄새가 많이 납니다.”

2023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이 가을 폭염과 열대야에 악취까지 삼중고를 겪었고, 열대야가 이어져 창문을 열고 지내는데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쓰레기 배출시간대에 악취가 진동한 것으로 확인됐다.⁷⁾

5) 안전: ‘범죄 도시’라는 이미지

“하수처리장의 하수를 검사했는데 인천이 마약 검출량 1위라는 소식이 있고요.”

검찰청 2022년 주요 범죄 발생 자료에서 인천은 6대 광역시와 비교해 범죄발생건수 2위, 마약 사건은 1위, 음주운전이나 주거침입도 상대적으로 높았다(표 참조). 인천연구원의 안승현과 조성운(2023)은 ‘인천 안전도시 이미지 강화 정책 방안’에서 방법과 치안 수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만연하여 도시 이미지가 실추되고 심리적 불안감이 확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2022년 기준 인천시의 범죄 분야 ‘지역안전지수’에서 미추홀구와 부평구는 최근 5년간 계속 4등급을 기록, 미추홀구는 모든 범죄 유형이 가장 많이 집계되었다. 연구진은 “도시재생 연계 테마형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추진, 도시 경쟁력 평가체계 내 안전 관련 지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 3-6〉 2022년 6대 광역시별 주요 범죄 발생 총건수 (단위: 명)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범죄발생 총건수	118,130	91,182	71,386	45,650	42,963	17,776
강력범죄 (폭력)	13,660	12,327	8,772	6,188	4,913	1,994
마약 (향정)	677	1,433	321	100	127	46
음주운전	4,432	5,133	5,580	2,359	3,607	1,381
주거침입	1,430	1,409	758	416	310	119

(출처: 검찰청, KOSIS에서 2023년12월18일 자료 갱신)

6) 박규호. (2023년9월15일). 인천 논현동 악취로 주민 불편 여전... “기준 초과, 개선 명령”. 인천투데이

7) 손민영. (2023년9월8일). 송도국제도시 가을 바람 타고 온 악취. 기호일보.

6) 문화시설

“인천은 박물관, 미술관, 공연 전시 같은 문화시설이 되게 부족해요.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애를 데리고 갈 만한 장소가 부족해서 서울이나 다른 경기도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년 문화기반시설총람을 보면 인천이 6대 광역시와 비교해 공공도서관과 박물관, 문예회관은 많지만, 미술관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인천 연구원의 박찬운, 황지환(2023)은 ‘공공 문화체육시설의 공간적 불균형 분석’에서 공공도서관의 경우 영종지역, 서구 아라뱃길 북측지역, 송도국제도시가 타지역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박물관의 경우 서구와 연수구, 영종도 중심으로 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표 3-7〉 2023년 6대 광역시별 문화시설 현황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공공도서관	51	58	44	25	27	20
박물관	32	30	17	15	13	10
미술관	9	5	4	5	14	1
생활문화센터	20	10	11	2	8	3
문예회관	12	12	11	5	8	6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전국 문화기반시설총람)

7) 기후·자연환경

“여름철에는 인천이 바닷가와 가까워 도시에 대한 홍수, 침수도 엄청 많이 일어나는 편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대처가 느리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천에 9개의 하천이 있습니다.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면서 개발해야 하는데 자꾸 훼손해 가면서 하니까 결국은 예산 낭비하면서 하천이 더 오염되요. 주민들하고 좀 상의해서 그대로 실천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천 살리기 포럼에 저도 참여를 했거든요. 인천이 갖고 있는 하천, 갯벌 이런 거에 대한 생태 자원이 풍부한데 개발할 때 전혀 시민들과 소통하지 않으니까 시민들의 불만이 오면 그걸 또 뒤엎었다가 다시 또 개발하고 세금만 낭비하고 이어요. 이번에 승기천

도 또다시 하잖아요. 그것도 잘못됐잖아요.”

인천 연수구는 2024년 승기천의 수질과 악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며, 인천시와 협력해 2026년까지 제방 보강, 보행로 개선, 수질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천녹색연합은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시대에 승기천 하천변을 개발하는 것보다 자연생태공간으로 복원하고 그린벨트를 보전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성명을 내놓은 바 있다.⁸⁾

8) 국제관계: 북한, 중국과 갈등

“인천이 바다와 가장 가까운 도시라지만, 사실은 바다하고 가장 멀리 떨어져서 지낸 도시예요. 최근에 와서 1·8부두를 다시 개방한다지만 북한과 접경 지역이어서 북한과 관계가 틀어지면 안 돼요.”

“제가 하던 일을 관두게 된 거는 한중 관계가 안 좋아서. 여전히 지금도 불안감을 느껴요. 요즘은 ‘혹시 이러다 전쟁이 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있어요.”

“인천이 북한과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만약에 갈등으로 피해를 보게 되면 인천일 가능성이 가장 클 겁니다.”

“지역적으로 중국하고 교류가 많지 않으면 사실은 인천의 발전이 어렵잖아요. 동인천과 인천항은 거의 중국 사람들인데. 그 동네가 거의 다 죽는 거 아니예요. 지금 미국하고만 (교류)하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지금 악화되고 있어요.”

나. 미래에 예상되는 어려움과 새로운 기회

1) 돌봄과 복지

“저는 지금 미혼 싱글인데 사실 ‘결혼을 꼭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없어요. 다만 이러다 내가 아프면 누가 나를 돌보고 나를 대신해 줄 사람이 있을까? 걱정돼요.”

“다른 지자체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프로그램 지원도 많은데 인천은 적은 편.”

“노인들을 어떻게 할지. 치매도 많다고 하는데 국가적으로 관리가 안 되면 가정도 파탄. 눈에 보이는 노인만 케어할 수는 없잖아요. 이분들 찾아가서 말동무도 해드려야 하

8) 출처: <https://greenincheon.org/?p=176025>

는데 관련 예산은 삭감되어 안타까워요.”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최근 정신건강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전혀 케어가 되지 않아요. 되게 위험해요. 정말 감정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이에요. 정책적 개선이 필요해요.”

“은둔형 외톨이 문제가 심각해요.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하거나 창업하거나 이런 식으로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데 공백이 생기고 늘어나 점점 무기력해지는. 공백이 5년 이상 늘면 그냥 아예 다 포기하고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살겠다, 일하지 않겠다. 이런 청년들이 많아요.”

2) 주거와 기후환경

“최근에 인천의 송도도 그렇고 인천의 구월 2지구, 저희 바로 옆 1만 8천 가구, 1만 5천 가구. 새 아파트를 짓겠다고 일단 엄청 나오고 있어요. 인천의 인구가 늘어났지만 출산율은 최저잖아요. 앞으로 10년 안에 이런 식으로 새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면 기존의 아파트나 주택의 공동화 문제가 좀 심각할 것 같아요.”

“지금보다 환경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겁니다.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문제라든가. 미래에 병원은 정말 약국을 드나들듯 자주 이용할 것 같아요.”

“홍수도 많이 나지만 가뭄도 많고. 20년 뒤에는 이게 더 극심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인천 같은 경우는 해수면에 대한 상승이 심해져요. 일본이 100년 뒤에는 없어진다고 얘기하듯이 인천도 마찬가지거든요.”

“외국에서 해수면 상승 연구를 봤는데 인천의 저지대에 있는 지역들은 다 없어지고 계양산, 문학산 등 높은 지역들만 있더라고요.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3) 다문화사회

“다문화 사람들은 저희의 도움이 굉장히 절실히 필요할 것 같고 같이 따뜻하게 살 수 있게 저희 시민들이 도와주면서 지낼 수 있는 뭔가를 만들면서 인천이 좀 앞서 나가도록 준비가 되었으면.”

“러시아 연방 출신 친구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한 500명이 드리니까 꽤 많죠. 근데 그분들하고 우리하고 거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인천의 미래가 제일 걱정되는 거는 뭐냐 하면 다문화 프로그램이 많은데 이게 역으로 인천시민들을 차별하지 않을까. 복지정책에서 다문화 이주민에 대한 복지가 더 많다 보니까 소외된 인천시민들 더 어려운 취약계층이 오히려 그 밑에 있을까 봐.”

4) 격차 사회

“부동산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차이가 있으니까 이게 가까워지기 어려울 것 같아요. 계속 평행선을 달리지 않을까요?”

“송도 쪽에는 다 소득도 높고 다 잘살고 가좌동 쪽에는 되게 살기 어렵고 주변에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도 없고. 다문화 학생 퍼센트가 30% 정도 돼요. 점점 저소득층만 유입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빈부 격차가 심해져서 2040년에는 문제가 크게 될 것 같아요.”

5) 일자리와 평생학습

“반도체랑 로봇 산업, 인천에 유진 로봇도 있고. 그리고 연세대에서는 ‘나이버트’라고 바이오공정 전문 인력양성 과정이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있고 롯데 바이오로직스도 들어올 거고 그 부분을 인천에서 투자해서 잘 키워나가면 인천만의 힘이 되지 않을까요?”

“평생학습이 인천의 기회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요새 인천의 복지센터에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인천이 발전할 기회 요인이 되지 않을까.”

“제물포 스마트타운에 인천시에서 하는 고령사회 대응센터가 있잖아요. 자주 다니면서 학습하는 데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많아요. 수업이 수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수업으로 공동체도 형성하고, 내가 배워서 가르쳐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해요.”

7)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인천

“바이오산업이나 이런 게 인천으로 많이 몰려오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큰 시너지를 내

면 다른 지역보다 우위를 선점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인천도 미추홀구, 계양구, 서구의 특징이 다 다르잖아요.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다 다르고 역사가 다른데 그곳에서만 가지고 있는 매력을 극대화해서 부각시키면 어떨까요?”

“국제도시가 잘돼서 외국인 산업을 유치하고 그 유치에 따른 외국인의 유입이 있고 그래서 인천이 계속 발전하고 경제와 인구가 모두 성장할 것.”

“로봇 산업은 인천뿐만 아니라 글로벌 메가트렌드 산업이라 이게 인구가 100명 들어올 게 아니라 진짜 만 명 단위까지도 들어올 수 있는 산업이라.”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을 산업체에서 채용할 때 가족들도 오게 하면 인구가 늘어날 듯.”

“서울과의 교통 근접을 해결하면 우리가 지금 바이오나 첨단 시설들, 의료 기반이 돼 있고 교통이 가까우니까 인천의 취업률이 높아질 수 있잖아요.”

다. 다가오는 4가지 미래와 인천시민들의 인식

1) 인천은 경제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

경제의 계속 성장
CONTINUED GROWTH



“제가 작년하고 올해 항공 우주 체험 캠프를 했어요. 그중에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 ‘나는 우주 비행사가 돼서 화성에 가서 살겠다’고 당찬 꿈을 얘기해서 놀랐어요.”

“드론을 타고 날아다니는 세상이 분명 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내가 탄 드론을 어디에 주차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가면 드론을 주차할 곳이 없어서 헤매지 않을까요.”

“인천이 인천공항이라는 상징이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위성도 쏘잖아요. 그게 잘 되면 우리나라가 항공우주기술 쪽으로 좋을 것 같아요.”

“노년 인구가 많아질 텐데 노인들이 인공지능과 함께 일하는 기회가 왔으면.”

“일자리를 소위 로봇에 많이 뺏길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반면에 이런 로봇이나 인공지능 같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늘어난다면 계층 상승의 기회도 될 수 있겠다. 이게 또 안 좋게 보면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솔직히 말해서 ‘인공지능’ 단어만 들어도 암울해요, 솔직히 저는. 인공지능 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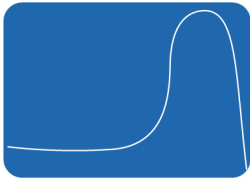
기 들면 그냥 괜히 인간을 배척하는 것 같아서 암울해요”

“인간의 몸에 칩을 넣어서 건강 관리, 바이탈 체크, AI로 유전자 변형도 가능하고, 신경 조절 이런 게 다 가능해진다는 거지. 결국, 개인 위주로 사회가 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경제가 계속 성장하려면) 공정한 분배로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또 이렇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서로서로 으쌰으쌰할 수 있는 정신이 중요해요.”

2) 인천이 붕괴의 미래로 가는 것은 아닐까?

사회의 붕괴
COLLAPSE



“부평에 살 때는 공단 공해가 굉장히 심해서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나 두 번째로 공해가 심각하다고 들었는데, 또 연수구 쪽에 사는 남동 공단 쪽에 공해가 심각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NGO 활동을 하다 보니 시민들하고 같이 활동을 많이 하는데 예전보다 점점 어려워졌어요. ‘서로 얘기를 안 하는 시대가 왔구나’ 하는 게 느껴져요.”

“저는 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국에 가라. 빨리 도망쳐라’”

“제 주변 분들도 문화예술인들은 인천에서는 일자리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결국 일을 할 수 있는 서울로 나가게 됐다고.”

“요즘에 덩크(Double Income, No Kids)가 아니고 ‘싱크’라고 해요. 싱크는 혼자(Single) 벌고 그냥 애 안 낳고 산다.”

“중국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2035년까지 3.6배 증설하고 석탄 발전소를 168기 짓는다고 한 대요. 중국이 강대국이고 권위주의적이어서 저희가 크게 얘기를 못 해요. 인천이 중국과 가장 인접하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에 문제가 생기면 인천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사고 하나만 터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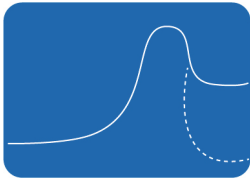
“인천에서 계속 마약 거래가 이뤄져서 내 이웃이 마약 범죄자나 마피아면 인천을 떠나지 않겠어요?”

“원도심하고 신도시의 양극화가 앞으로 2040년까지 더 심해지면 인천은 붕괴될 것 같아요. 거기에 더해 고립되는 1인 가구가 많아지면 더 빨리 붕괴.”

“미국이랑 중국이 박 터지게 싸우면 우리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인천은 수출입으로 먹고 사는데, 붕괴되지 않을까.”

3) 인천은 보존사회로 진입하는 것인가?

보존사회의 등장
CONSERVED SOCIETY



“갈수록 기후변화처럼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문제가 많아지면 사람들은 성장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려고 할 듯.”

“아빠가 서울로 출퇴근할지언정 우린 여기에 살 거예요. 30-40평대에서 살 수 있는 곳은 인천뿐이니까, 우린 못 떠나요.”

“인구는 보존사회처럼 더는 증가하지 않겠지만 반면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해야 하지 않을까. 생활 곳곳에 인공지능과 함께할 것 같아요.”

“AI 로봇을 지배할 수 있게끔 우리는 지역 내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독서를 꾸준히 해야 될 것 같고. 생태 환경은 지금이라도 한계를 넘지 않게끔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충분히 해준다면 이 미래가 되지 않을까요. 또 친환경 물품을 구매하고 친환경 인증을 한 기업에서 나온 물품만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가 도입되면 좋겠어요.”

“영종도나 섬 있죠. 그쪽을 슬로시티, 휴양지, 노년층들이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콘셉트의 도시로 만든다고 들었어요. 그런 산업에 치중할 경우 인천은 보존사회라는 미래로 갈 것 같아요. 미국에 플로리다주가 있는데 잘살아요. 휴양지로도 되게 좋아요. 근데 성장을 하질 않아요. 그냥 슬로시티. 근데 그걸 원하시는 분도 인천의 중장년층 중에 많아요.”

“무분별하게 계속 발전만 추구하지 말고, 어느 정도 사람이 쉬어야 되잖아요. 좀 쉬면서 과거도 돌아보고 미래 전환에 대비해야 할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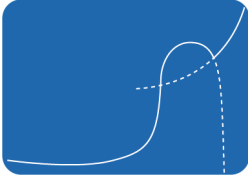
“요즘에는 환경도 고려하고 개인들도 옛날처럼 자기를 갈아 넣기보다는 개인의 삶도 중요하고 자기의 여가나 개인의 라이프도 중요해서 보존사회로 갈 것 같아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월급 차이를 30% 이내로, 그 이상으로 벌어지지 않게 한다면 보존사회가 될 듯 합니다.”

“‘내가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하루에 4시간만 일할 수밖에 없어’라고 해도 아이를 키우는 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국가에서 채워준다면 아이 출생률이 조금은 올라가지 않을까요.”

4) 인천은 전례가 없는 변형사회가 될 수 있는가?

변형사회의 시작
A TRANSFORMATIONAL SOCIETY



“인천만의 시범 사업으로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운영하겠다고 하면 사람들이 궁금해서라도 한 번쯤 인천에 들어와 보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인천에서 우주로 갈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면 어떨까요? 인천국제공항이 아니라 인천우주공항이 되면 비약적으로 발돋움할 것 같아요.”

“강화군에는 카페 로봇이 서빙도 해주고 배달해 주고 그러거든요. 어르신들을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적응하고 계시고 부담감이 없다고 느꼈거든요.”

“메타버스 시대가 근접한다면 우리가 온라인상의 아바타로 생활할 것 같아요.”

“보통 70세가 넘으면 아프신 분들은 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데 만약에 뇌의 어딘가에 조금 이상이 생겨서 말을 못할 경우에 뇌에 칩을 넣으면 그분이 하고자 하는 말을 할 수 있죠. 그런 의료 체계가 나오지 않을까요?”

“송도에 K-바이오산업 센터가 생기면 정말 거기서 뭔가 강력한 바이러스를 대처할 수 있는 신약이 개발될 것 같아요. 또 폐기물이나 화학물질을 새로운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한다면 인천이 발전하지 않을까요.”

“청라에 국립생물자원센터가 있거든요. 생물종을 다 연구하고 보관합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종을 발견하다 보면, 진짜 인간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종을 발견하지 않을까요? 그런 상상도 해봤어요.”

“북한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왕래도 하고, 북한에서 가장 가까운 인천으로 와서 살고, 또 거기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라든가 자원이 인천으로 바로 와서 그걸 활용한다면 변형사회로 성장하지 않을까요.”

2 모든 토론을 마친 후, 인천시민들의 미래 선택

가. 이대로 가면 맞이할 인천의 미래는 ‘보존사회’

〈표 3-8〉 사후 미래 선택(56명이 참여했으나 2명은 표기 오류 및 무응답으로 제거)

미래유형	이대로 가면 맞이할 미래	미래세대까지 고려한 선호미래
경제의 계속 성장	7.4% (4명)	11.1% (6명)
사회의 붕괴	14.8% (8명)	0% (0명)
보존사회 등장	63.0% (34명)	22.2% (12명)
변형사회의 시작	14.8% (8명)	66.7% (36명)

시민들은 3시간의 토론을 마치고 각자 무기명 투표에 참여했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대로 가면 맞이할 인천의 미래’에서 보존사회가 63%로 가장 높게 선택되었다(표 참조).

그 이유로는 “기후변화 등 세계적 상황이 심각해 경제가 계속 발전하기 어렵기 때문”, “성장의 한계 시대에는 일보호퇴가 필요”, “생산인구의 부족, 과도한 규제, 낮은 연구개발 참여 때문”, “사회에서 각종 갈등이 분출될 것”, “각자도생의 미래가 지속할 것 이기에”,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사회의 극단적 개인화 때문”, “인구감소, 기후위기, 팬데믹에도 붕괴까지는 가지 않고 회복탄력성이 있을 듯”, “느린사회의 도래가 예상”, “교통인프라와 수도권으로 올라온 인재들 덕에 유지는 될 듯” 등을 제시했다.

보존사회의 도래 가능성은 미래대화 이후 증가했다. 사전조사에서 54.6%였으나 사후 조사에서 63%로 증가했다.

사후설문 조사에서 보존사회로 의견을 바꾼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인천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봤지만 토론을 통해 마냥 성장만 추구할 수 없는 환경 문제, 인구 감소 추세, 경쟁도시의 출현 등으로 보존사회의 가능성을 크게 인식”, “사전조사에서는 인천의 쇠퇴 가능성을 크게 봤지만 토론을 통해 인천시민들이 위기에 강하다고 믿게 되어 붕괴보다 보존사회를 택함”, “대화를 하다 보니 보존사회의 가능성을 달리 보았음”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보존사회의 높은 가능성은 경제성장주의에 대한 경고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경고를 무시할 경우 인천은 붕괴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한 것이 주목된다. 시민들은 인천시가

경제성장의 지표에만 몰두할 경우 원도심과 신도시의 양극화 심화, 고립되는 가구의 증가, 기후위기의 대응 실패, 환경 파괴 심화 등으로 보존사회는커녕 붕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민들의 다음 의견은 주목해야 한다. “미래세대의 희생을 전제로 현세대만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만들면 인천은 장차 퇴보할 것”, “근시안적 경제발전지표는 붕괴사회의 도래 가능성을 높일 뿐”, “인천시의 정책들이 신도시 위주로 비춰지는데 다른 지역에서 바라고 있는 요구들을 정부가 많이 놓치고 있음”.

북한, 중국과 갈등은 인천의 미래에 드리워진 깊은 그늘로 분석된다. 인천시민들은 미래대화에서 우리나라가 중국과 북한과 갈등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매우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는 물론, 사회의 안전, 불안감, 생명에 위협까지 느끼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천은 물류거래의 중심지여서 국제사회의 동향에 민감하며 이런 외부변수에 대응하는 거버넌스의 구축, 시민사회의 대응력 향상 등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나. 인천시민이 바라는 미래는 ‘변형사회’

‘미래세대까지 고려한 선호미래’에서는 변형사회가 66.7%로 가장 높았다(표 참조)다. 그 이유로는 “변화를 추구하는 것만이 사회를 유지하는 방법”, “과거의 성공과 다른 방법으로 재도약하기를 바라기 때문”, “다문화사회로의 혁신적 전환 필요”, “토론을 통해 해결할 문제가 많다고 느꼈고, 이를 해결하려면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하기에”, “인공지능로봇과 친구가 되는 미래가 좋아서”, “미래대화를 통해 인천의 잠재력을 느껴서”, “인천만이 유일하게 육해공으로 사람과 물류를 움직이기 때문에”, “신기술에 의한 새로운 기회를 기대” 등을 제시했다.

변형사회의 선호성은 미래대화 이후 증가했다. 사전조사에서 60%였으나 사후조사에 66.7%로 증가했다. 사후설문 조사에서 변형사회로 의견을 바꾼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미래대화를 통해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는 아직은 가늠하기 힘들고 우려되는 요인들이 있지만 도약하려면 필요한 변화임을 깨닫고 변형사회를 선택”, “새로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할 것 같아서”, “이민청, 재외동포청을 통해 우수한 해외 인재가 들어와야 할 것 같아서”, “대량생산과 소비의 양적 팽창만 성장을 견인하지 않고 세대단절, 지역단절, 계층단절을 극복하면 더 좋은 사회가 도래할 수 있다고 믿음”, “지금까지의 경

제성장증심을 반성하면서 약간의 정체기를 갖는다면 변형사회가 올 수 있다고 봄”,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을 새롭게 이해하면서 변형사회의 믿음이 생김”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인천시민이 선호하는 ‘변형사회’를 실현하자면 혁신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은 미래대화에서 변형사회를 전망하면서 인천에 혁신의 잠재력이 있다고 믿었다. 이들은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항공과 우주 산업 관련 다양한 기업을 유치하거나 우주체험형 전시관, 로봇과 인공지능, 바이오 등 첨단기술에 지속적 투자로 세계적인 성과를 내는 지역으로 발돋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시민들은 기술 분야의 혁신뿐 아니라 사회적 혁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이 국내에서 가장 다문화를 포용하는 도시가 돼야 한다거나 신도심과 원도심의 경제적 격차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의 실행, 성별 임금 격차의 완화, 안전한 사회 구축, 환경 문제도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생태계를 보존하는 정부의 노력을 촉구한 것이 주목된다.

시민들과 나눈 미래대화를 통해 연구진은 인천이 역사와 문화적 특징을 보존하고 혁신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주목했다. 역사적으로 인천은 국내 최초의 타이틀을 다수 보유한 곳이다.⁹⁾ 1883년 인천이 개항하면서 일본과 청나라, 서구 열강의 사람과 물자들이 밀려들어와 당시 조선에서는 신문물을 가장 먼저 접할 수 있었던 지역이었다. 최초의 서양식 호텔, 최초의 철도(인천 제물포와 서울 노량진을 잇는 경인선 1899년 9월18일 완공), 축구도 인천을 통해 들어왔으며 성냥공장도 인천이 최초였다. 1902년 최초의 이민선 갤릭호가 한인 101명을 싣고 제물포항에서 출발해 공식 해외 이민 1호로 기록, 이곳에서 하와이로 정착한 교포들은 사탕수수 농장에서 흘린 땀으로 번 돈을 고국에 공과대학을 설립하라고 성금, 그 결과 인하대학교(인천과 하와이 첫 글자를 따서 작명) 설립되었다. 이런 혁신의 역사를 인천이 새롭게 창의적으로 계승한다면 인천시민의 현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도 바라는 미래 도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9) 다음 웹사이트에서 발췌: 백오십년째, 첨단도시 인천 이야기. <https://brunch.co.kr/@demory/92>

제3절

미래 이슈 추적기 내용 분석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미래 이슈 추적기의 필요

제3절에서는 기존의 미래대화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방법론을 활용해 시민들의 미래 의견을 분석하려고 한다. 이미 제2절에서 현재와 미래에 대해 걱정하거나 우려하는 이슈, 그리고 희망하거나 기대하는 미래이슈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그 과정을 다시 할 필요는 없지만, 인천연구원의 연구진 시각에서 인천시민의 현재와 미래 이슈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궁금하다. 미래대화는 지역주민과 지역연구원, 지자체와 함께 협업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역연구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 이들이 어떤 문제를 중시하고 어떻게 대응할지에 따라 지자체의 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인천연구원 연구진에게 시민들과 나눈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이들이 어떤 현재 이슈를 제기하고 있으며, 이들 이슈 중 미래에 더욱 심화하거나 악화할 이슈들 그리고 현재보다 미래에 더 큰 기회로 다가올 이슈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미래이슈 추적기에 담아줄 것을 요청했다. 미래이슈 추적기에는 현재 이슈, 이슈의 주요 내용, 해당 지역, 인천연구원의 관련 연구, 미래 동인, 미래 동인이 촉발할 미래 이슈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정책 제시로 구성되어 있다(표 3-9 참조).

표의 내용을 근거로 예를 들면 인천시민들은 미래대화에서 인천이 범죄도시로 간주되는 것에 불안함을 토로했다. 마약의 유통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전국 하수 검사에서 인천이 마약 검출량 1위에 올랐다는 점, 음주운전이나 주거침입이 증가했다는 점이 거론되었다. 주로 인천의 미추홀구와 남동구에서 이런 이슈가 언급되었다. 인천연구원의 안승현과 조성윤은 2023년 인천의 안전도시 이미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 이를 통해 시민들의 심리적 불안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그러나 좀 더 먼 미래까지 예측한다면 신도심과 구도심의 인프라 양극화가 더욱 진행되고 낙후된 도심의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도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지만, 낯선 문화의 유입으로 누군가에는 불안감을 일으킬 수도 있다. 여

기에 더해 페이크(fake) 기술의 발달로 처벌의 근거가 애매한 범죄나 신종 범죄가 증가할 수 있는 여지, 경찰 인력의 감소까지 벌어지면 사회적 불안은 매우 심각해진다. 이런 미래이슈에 대응하는 미래 정책 방향으로는 IoT(사물인터넷)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해 지역의 안전지수를 만들고 평가하면서 지역별 맞춤형 안전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음이 제시되었다.

〈표 3-9〉 미래 이슈 추적기 사례

현재 이슈 키워드	주요 내용	언급된 장소	기존 대안 (인천연 보고서)	주요 미래 동인	미래 이슈	정책 제언
범죄 도시	-인천 하수 검사: 마약 검출량 1위 -음주운전, 주거침입 증가 추세	미추홀구 남동구	안승현, 조성윤(2023) -안전도시 이미 지 강화 -심리적 불안 차단	-신도심과 구도심 인프라 양극화 -외국인 노동자 증가	-fake 기술 발달로 처벌 근거 애매한 범죄 증가 -경찰 인력 감소	-IoT/AI 활용 지역안전지수 향상 전략 도출
문화시설	-박물관, 미술관, 공연 부족 -문화 욕구 포기, 문화력 약화	서구 연수구	박찬운, 황지환(2023) -문화시설의 공간적 불균형 완화 필요	-문화 욕구 채우려 서울로 진출 확대 -다문화 이주민 증가로 글로벌 문화 향유	-다문화 포용 확산	-이민청 유치 -글로벌 공생 문화도시 전략

2 미래 이슈 추적기 내용 분석

가. 현재 이슈와 미래 이슈

인천연구원 연구진 10명이 작성한 미래이슈 추적기에는 총 46개의 이슈가 정리되어 있다. 이 중에서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미래 이슈를 연결하지 못한 이슈를 골라내서 총 42개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고, 다시 중복이슈를 합쳐 21개 이슈로 정리했다. 이 내용에는 시민들이 제기한 현재 이슈, 그 이슈의 주요 내용, 해당 지역, 그리고 인천연구원의 관련 연구 목록, 미래 이슈, 대응 미래정책이 포함된다. 총 21개의 이슈를 5개 분야로 분류한 뒤 하나씩 분석했다.

1) 교육

① 초등교육

주요 내용: 공립학교의 신뢰도 저하와 프로그램 부족

해당 지역: 미추홀구 등 원도심

관련 연구: 배은주(2020) 교육 균형을 위한 교육인프라 현황 조사

미래 이슈: 학생 감소로 원도심의 생활환경 쇠퇴와 고령화 더욱 심화, 원도심 지역 초등학교 회피 현상 가속화, 학생 감소, 투자 기피, 학부모 불만 증가

미래 정책: 인구감소 지역의 초등학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특성화된 대안 마련

② 교육

주요 내용: 인천 학생들의 학력이 낮음

해당 지역: 연수구

관련 연구: 배은주(2020) 교육 균형을 위한 교육인프라 현황 조사

미래 이슈: 학력보다는 경력과 직업 안정성을 중시하는 도시로 변화, 학력보다 직업 훈련과 경력 개발에 대한 요구 증가

미래 정책: 공교육 정책에 IB(역량중심교육) 과정 도입, 공정한 기회 정책, 도서관과 평생교육 정책의 연계

③ 보육

주요 내용: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부족,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칭

해당 지역: 부평구

관련 연구: 정혜은(2022) 도시 계획단계에서 보육시설 부지 확보를 의무화 방안, 주기적인 아동인구 추계를 통하여 수요와 공급의 적정설 점검

미래 이슈: 저출생률 지속, 가족 구조 변화로 다수의 어린이집 폐업 확산

미래 정책: 아동인구변화 모니터링 후 결과 반영으로 보육 수준 향상

2) 사회 및 문화

① 청년 정책

주요 내용: 인천을 찾아오는 청년에 대한 지원과 배려 필요, 인천 정착 청년에 웰컴 기프트 제공

해당 지역: 영종도 등 원도심

관련 연구: 최영화(2022)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

미래 이슈: 인천을 찾아오는 청년들의 이탈 증가

미래 정책: 청년 커뮤니티 형성 지원,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일거리 만들기

② 사회적 연대

주요 내용: 서로 얘기를 안하는 시대 지속, 주민과 지자체 소통 부족

해당 지역: 강화군, 계양구

관련 연구: 심진범 외(2023) 시민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김정욱(2022) 연수구형 마을공유공간 조성 및 운영방안, 윤혜영(2023) 제물포르네상스 시민참여 방안연구

미래 이슈: 사회적 단절과 고립감 증가, 지역사회 내 연대감 약화, 육아공동체의 부정적 인식 확산

미래 정책: 인구 일자리 교육 등과 연계한 공동체 정책, 시간 여유 정책을 통한 공동체 사업 실시

③ 다문화 증가

주요 내용: 외국인 증가에 따른 지역주민의 배타적 태도, 구도심과 신도심의 인프라 격차, 인천에 대한 부정적 인식 심화

해당 지역: 연수구

관련 연구: 배은주(2023) 인천시 차세대 재외동포 교육지원 방향과 과제; 민경선(2020) 문화다양성 증진 조례 개정, 인천시 문화다양성 소통 센터 설치,

다문화 감수성 확산, 정책 추진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

미래 이슈: 글로벌 이주 증가, 경제적 기회 차이 지속, 외국인에 대한 시민들의 포용성 지체, 외국인과 일자리 경쟁으로 사회적 갈등 증가, 구도심과 신도심의 인프라 격차, 인천에 대한 부정적 인식 심화

미래 정책: 시민들의 다문화 포용성을 유도하는 사회 정책

④ 세대 갈등

주요 내용: 직장 내 조직문화 후진, 가정 내 자식과의 소통 어려움, 관습처럼 행해지는 직장 내 갈등

해당 지역: 인천 전체

대응 연구: 배은주 허효선(2020) 구·군별 인구특성에 맞춘 교육 정책 수립 필요

미래 이슈: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 증가, 노동 시장의 글로벌화, 신조어 증가와 외국인 비율 증가로 소통 어려움 심화, 인구 감소로 이민자 적극 수용 필요성 증가

미래 정책: 한국적 문화 보존 및 교육 활성화, 존중과 차별금지 등 좋은시민 유도 정책

⑤ 저출생, 고령화

주요 내용: 1인가구 증가, 미혼 증가, 노인 일자리와 복지 부족

해당 지역: 인천 전체

관련 연구: 정혜은(2022) 1인가구 증가 따른 정책; 안내영(2020) 원도심, 신시가지 인구구조 변화 뚜렷해 도시계획 마련, 삶의질 제고 위한 정주환경 창출필요

미래 이슈: 저출생로 일자리 감소 및 경제력 약화, 노년기 인구 증가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및 경제력 약화

미래 정책: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인천시 자체의 특화된 정책, 지역 발전을 통해 외부 인구 유입을 이끌수 있는 방안 추진

3) 도시 교통, 안전, 이미지

① 광역교통체계 문제

주요 내용: 강화도 교통 어려움 지속, 서울 및 다른 지역까지 교통 어려움

해당 지역: 강화군, 연수구, 미추홀구

대응 연구: 석종수(2023) 제물포 르네상스를 위한 중단기 광역 교통정책; 석종수 (2021) 지속가능한 교통정책 수립을 위한 인천시민의 교통부문 만족도 분석

미래 이슈: 도시 확장, 인구 이동 증가, 광역교통에 대한 서울 인천 경기의 이해관계 복잡성 증가

미래 정책: SRT 사업을 인천 김포 강화와 연계, 모빌리티 서비스의 수도권광역교통 위원회 권한 강화

② 교통 서비스

주요 내용: 버스 노선 변경 빈번, 송도에 가려면 자차 필수, 서울과 연결성은 좋으나 인천 내부 교통 서비스 불편, 원도심 주거단지 아파트 건설시 도로계획 미비, 출퇴근 시간 지연 및 신도시와 원도심 연결 불편

해당 지역: 인천 전체

대응 연구: 김종형 외(2022) 교통 사각 및 취약지역 내 I-MOD 대중교통 도입, 정동재 이재우(2022) 버스 서비스 취약지역 도출 및 해소방안 제시, 박민호 김태호(2017) 운전자의 준법의식 고취를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

미래 이슈: 인구 고령화, 도시 인프라 요구 증가, 버스 노선 개편은 버스준공영제 개선을 요구하나 다양한 이해관계자 발생, 고령자의 관점에서 불편 증가,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으로 이용자 감소와 공급 부족, 지역 격차 발생

미래 정책: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고도화

③ 도시 안전

주요 내용: 부평구 문화거리 야간에 무서움, 제물포역 인근 환경개선 필요

해당 지역: 부평구, 미추홀구(송의동)

대응 연구: 조성윤(2023) 범죄분야 취약

미래 이슈: 공공 안전 투자 부족 지속

미래 정책: 부정적 도시 이미지 극복을 위한 정책, 생활안전분야 안전도 제고

④ 도시 이미지

주요 내용: 인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부재, 아동학대와 범죄 관련 뉴스 증가, 드라마와 영화의 범죄 장면에서 인천이 자주 등장, 소상공인 폐업률 전국 1위, 부산과 다른 해양도시 이미지, 북한과 비교적 근거리에 위치하여 위험한 도시 이미지

해당 지역: 논현동,

대응 연구: 안승현 조성윤(2023) 안전도시 이미지 강화, 글로벌산업전략연구단 (2023) 뉴홍콩시티 프로젝트를 통해 인천을 글로벌 허브 육성

미래 이슈: 신도심 집중화 지속으로 원도심 낙후, 북한과 갈등 지속, 외국인 노동자 증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 증가, 북한과 관계 악화 가능성

미래 정책: 글로벌 Top10 도시 진입, 많은 섬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로 창업 등 일 자리 창출

4) 경제 및 산업

① 신산업 성장

주요 내용: 송도, 검단, 청라 등에서 개발사업들이 성공을 거둬 인구 지속 유입, 항공과 바이오 등 신산업의 성장세 지속

해당 지역: 신도시

대응 연구: 기윤환(2023)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장 및 기회요인;

미래 이슈: 수도권외의 지리적 잇점이 있으나 성장중심주의의 문제 증가

미래 정책: 인적자원 개발, 양질의 생활 환경 등 질적 변화를 꾀하는 정책

② 일자리

주요 내용: 자동화 확대와 일자리 감소, 일자리 미스매치, 경의선을 타고 서울에서 근무, 송도 외 좋은 일자리 부재

해당 지역: 미추홀구

대응 연구: 민규량(2022) 인천광역시 청년 노동시장 현황 및 이행요인 분석; 최태림(2023) 인천의 디지털 신산업 현황과 미래전략; 윤석진(2023) 인천시의 글로벌 투자 유치 현황과 활성화 방안

미래 이슈: 국가산업단지의 재생화, 4차 산업혁명, 플랫폼 경제 확산

미래 정책: 도시 정부의 유연한 노동 정책 추진, 주 40시간 이하 공공형 일자리 창출, 청년 시기의 도전과 노년 시기의 여유를 결합하는 세대의 상호보완적 일자리 설계

③ 경제성장

주요 내용: 30~40년전 도시 모습에서 변하지 않음, 지방도시보다 못한 느낌, 사람이 모이지 않음

해당 지역: 중구, 인천항, 동인천

대응 연구: 조상운 외(2023) 인천역, 동인천역 역세권 거점 개발, 내항 일대 친수공간 조성

미래 이슈: 바이오, 로봇 도시 등 유치, 역세권 활성화 사업 추진, 경인선 지하화 등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으로 인한 인프라 정비와 일자리 창출

미래 정책: 균형발전정책 유지

④ 청년 일자리

주요 내용: 인천의 중소기업 일자리는 많으나 취업자들은 대기업의 안정적 일자리 요구, 일자리 창출이 송도 영종 청라에 집중

해당 지역: 인천 전체

대응 연구: 민규량(2022) 인천광역시 청년 노동시장 현황 및 이행요인 분석

미래 이슈: 전국 평균대비 낮은 임금수준과 임금 증가율, 근로조건 열악, 양질의 일자리 부족,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타지역으로 지역인재 유출 증가, 청년 근로자 감소

미래 정책: 일가정 양립 관련 환경 조성, 인천시 청년 일자리 환경 분석을 통해 적극적인 행정력 투입

⑤ 관광

주요 내용: 도서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배삯 할인, 로컬 콘텐츠 개발 필요, K-컬처 활용 관광산업 활성화, 관광 산업의 발전 및 관광객 유치 전략

해당 지역: 옹진군

대응 연구: 심진범(2023) - 관광취약계층 지원필요, 관광향유 정책추진 필요

미래 이슈: 관광취약계층 지원의 약화

미래 정책: 관광약자 관광향유 기회확대, 시민 생활관광 활성화 정책

⑥ 수도권 역차별

주요 내용: 수도권내에서 배제되는 이미지, 문화 인프라 부족

해당 지역: 인천 전체

대응 연구: 이준영(2023) - 지역별 성장회계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미래 이슈: 문화인프라가 서울에 집중 심화, 수도권에 역차별 받는 도시라는 인식 확대

미래 정책: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

5) 환경 및 지속 가능성

① 환경 오염

주요 내용: 미세먼지, 먹거리 오염으로 아이들 건강 이슈(아토피, 부정교합 등) 증가, 악취(법망을 피해 밤에 살포), 서울 등에서 인천으로 쓰레기 계속 반입, 갯벌을 지속해서 매립하여 천연자원 훼손, 재생에너지 시설의 지속가능성

불확실(태양광패널 철거 등)

해당 지역: 남동공단, 수도권 매립지, 소래포구, 서구(목재단지), 중구, 동구, 옥련동, 센트럴파크, 인천대공원

대응 연구: 조경두 최종석(2023) -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참여형 행동계획 제안; 최여울 홍미진(2023) 중소기업 사업자 대상 시설 정기 점검, 화학물질 관리 지침서 배출 등 운영; 안내영(2022) 노후산단과 주공혼재구역에대한 관리 계획 필요

미래 이슈: 환경 보존에 대한 교육 및 인식 개선 지체,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개발을 지자체의 노력 약화, 주거단지 이전 불가한 주민 증가

미래 정책: 환경친화적 도시를 위한 행동, 해상풍력 수소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 활성화, 시민들이 앱을 활용하여 신고 활성화

② 기후환경

주요 내용: 인천은 자연환경 및 기후 변화에 취약한 자리적 조건을 가진 도시, 중국과의 인접성과 항공 항만 보유 등으로 환경오염에도 취약

해당 지역: 강화군, 옹진군, 해안선을 접한 내륙권역 기초지자체

대응 연구: 한준(2021) -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의 그린뉴딜 추진방안, 녹색에너지산업 육성 및 녹색기후환경산업으로의 산업구조 전환 노력

미래 이슈: 지구온난화로 해수면 상승과 저지대 침수 증가, 가뭄 홍수 태풍 등 재난 증가, 새로운 질병과 전염병 창궐

미래 정책: 도시정비와 재생사업에 기후변화 요인 고려 절차 확보, 시민 환경 교육 및 재난 대응 교육 강화, 지역에서 그린산업으로의 변화 주도

③ 해양 환경

주요 내용: 해양도시인데 해안을 즐길 수 없음, 북한이랑 가깝다는 이유로 해안이 철조망과 사석들로 가득차 있음, 백령도를 자차로 가려면 갈 방법이 없을 정도

해당 지역: 대청도, 소청도, 백령도

대응 연구: 기윤환(2017) - 인천해안지역 친수공간 접근성 확보 방안

미래 이슈: 부산 다른 친수도시와 비교해 경쟁력 저하

미래 정책: UAM 같은 미래 교통기술을 통한 섬 간 접근성 향상

3 인천의 미래를 위한 사회적 이슈

인천시민들이 현재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이슈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4개의 분야별로 인천이 어떤 도시인지를 내포하는지 알 수 있다.

도시 개발 및 인프라 문제: 광역교통체계의 문제점, 도시 경쟁력의 강화 필요성, 그리고 공공 교통 서비스의 개선 요구 등은 인천이 급속한 도시 확장과 현대화 과정에서 직면한 도전들을 나타낸다. 이는 인천이 대도시로서의 인프라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려는 시도를 반영하며, 효율적인 도시 관리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도시임을 보여준다.

환경 문제: 환경 오염과 기후환경 이슈는 인천이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을 받는 도시임을 시사한다. 남동공단, 수도권 매립지, 소래포구 등 특정 지역에서의 환경 문제는 산업 활동과 인구 밀집이 자연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인천이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시사한다.

사회적 이슈: 고령화, 저출생, 세대 갈등, 다문화 증가와 같은 문제들은 인천이 사회적 다양성과 인구 구조 변화의 중심에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이슈들은 인천이 포용적이고 다문화적인 사회로 발전하기 위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문화와 세대 간의 조화를 이루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드러낸다.

경제 및 산업 발전: 신산업 성장과 경제성장의 필요성은 인천이 기술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도시임을 드러낸다. 청년 일자리 문제와 같은 경제적 이슈는 인천이 젊은 인구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이슈들은 인천이 직면한 다양한 도전을 보여주며, 이는 도시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다. 인천시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러한 문제들은 도시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 직면한 현실을 반영한다.

인천 시민들이 우려하는 미래 이슈를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도시의 불균형 발전, 환경 오염, 사회적 갈등, 인구 문제, 경제 불안정성이 주요한 핵심 우려 사항으로 분석된다. 인천은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발전 불균형이 심화되고, 이는 지역 간의 경제적 격차와 사회적 갈등을 악화시키고 있다. 환경 오염 문제는 대기 질 악화, 악취, 해양 접근성 부족 등으로 나타나며,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저출생과 고령화로 노동력 부족과 복지 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청년층의 이탈은 인천의 경제적 활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세대 간, 문화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마약 범죄 증가 등 도시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인천은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위기에 처하며, 경쟁력을 상실한 쇠퇴하는 도시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미래 이슈에 대응하는 개선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정책은 균형 발전, 지속 가능성, 사회적 통합, 인구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의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생 및 개발 정책, 환경 오염과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정책, 그리고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복지와 보육 지원 정책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지역 사회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소통과 협력 프로그램도 강조되고 있다.

지자체는 다음과 같은 관점과 시각을 가지고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해야 한다

통합적 인구 유입 및 고령화 대책: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응은 단순한 복지 확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인천은 세대 간 상생을 촉진하는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령층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는 세대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층과 고령층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고령층의 사회적 고립을 줄이는 동시에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지속 가능한 교통 혁신: 미래 교통 기술(UAM, 자율주행 버스)을 통한 섬 간 접근성 향상은 필수다. 더 나아가 탄소중립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천을 녹색 교통 도시로 변모시킬 수 있다. 모든 신축 도로나 교통 체계 개선에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

고, 스마트 교통 앱을 개발하여 실시간 교통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교통 혼잡을 줄일 수 있다.

다문화 사회의 통합적 발전 모델: 다문화 저소득층 유입에 따른 격차 해소는 단순한 지원금 확대가 아닌 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해결할 수 있다. 다문화 가정과 기존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사회 문화 축제와 언어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사회적 통합을 촉진할 수 있다.

혁신적인 도시 재생: 원도심 활성화 정책은 도시 재생을 넘어서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로 확대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친환경 건축과 에너지 자급자족 빌딩을 도입하여 원도심을 스마트하고 에너지 효율적인 공간으로 재설계하고, 주민 참여형 도시 재생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도시 개발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 섬과 해양을 활용한 관광 자원 개발은 관광객 유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생태 관광으로 전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해양 생태계 보호와 관광을 연계한 생태 탐방 코스를 마련하고, 환경 보존에 기여하는 관광객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관광 약자를 위한 접근성 개선과 지역 주민과 연계된 로컬 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이 지역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스마트 복지 도시 구축: 복지 정책은 디지털 기술과 연계하여 맞춤형 복지 서비스로 발전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고령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AI 기반 복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 수요 예측 시스템을 도입하여 복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도시의 브랜드 강화: 인천의 도시 이미지를 부정적인 사건에서 벗어나기 위해, 글로벌 랜드마크 프로젝트를 통해 인천을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도시로 브랜딩해야 한다. 라스베가스의 스피어 같은 랜드마크를 도입하고 인천만의 역사적 유산을 활용한 독특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여 관광객 유치와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디지털 시민 참여 플랫폼: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 공론화 플랫폼을 구축하여 모든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정기적인 미래 대화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도시의 장기적 비전을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는 디지털 참여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기후 변화 대응 및 그린 산업: 인천은 기후 변화에 취약하므로, 모든 도시 재생 사업과 산업 개발에 기후 변화 요인을 고려한 친환경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그린 에너지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지역 경제를 성장시키고, 시민 환경 교육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청년층의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센터를 설립하고, 인천을 혁신적인 창업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민간 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신기술 기반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이와 같은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개선 정책들은 단순히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인천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기획되어야 한다. 지자체는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목표로, 시민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제4절

정책적 시사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선호미래상과 미래 이슈 추적기를 연계한 정책적 시사점

인천시민과 미래대화 조사연구는 ‘이대로 가면 맞이할 인천의 미래’와 ‘미래세대를 고려한 선호 미래’를 도출했다. 시민들은 기후위기, 인구 감소, 경제 정체와 같은 문제로 인천이 안정과 유지에 초점을 맞춘 보존사회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반면, 시민들이 바람직한 미래로 선택한 변형사회는 사회적 혁신과 기술 발전을 통해 인천이 재도약하는 미래를 담고 있다.

미래 이슈 추적기에서는 시민들이 제기한 현재의 문제들이 미래에 더욱 심화될 가능성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보존사회의 위험을 예방하고 변형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미래 대화에서 나온 시민들의 목소리와 이슈 추적기에서 분석한 내용을 긴밀히 연계해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은 인구 감소와 경제 성장의 둔화, 기후 변화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인천이 보존사회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는 사회적 안정과 유지를 목표로 하지만, 경제 성장 정체와 구도심과 신도심 간의 격차 심화로 인해 도시 경쟁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한편, 시민들은 신기술 도입과 사회적 혁신을 통해 인천이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변형사회를 선호하는 미래로 선택했다. 이는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 신기술 산업 육성, 사회적 연대 회복을 통해 도시의 회복력을 높이고,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반영한다.

미래 이슈 추적기에서는 시민들이 제기한 현재 문제와 미래에 예상되는 이슈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화와 분석은 서로 긴밀하게 맞물려 보존사회의 위험을 줄이고 변형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구도심과 신도심 간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 지역 간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고,

구도심의 도시 재생을 통해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주민들이 주도하는 재생 사업과 커뮤니티 형성을 통해 사회적 연대감을 회복한다.

둘째,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과 포용 정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다문화 이주민과 지역 주민 간 상호 이해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글로벌 공생 프로그램과 이민청 유치 등을 통해 인천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셋째, 기후 변화 대응과 환경 복원을 강화해야 한다. 재생 에너지 전환과 친환경 정책을 강화해 기후 위기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 시민 참여형 자연 생태 복원 프로젝트를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넷째, 범죄 예방과 안전 도시 구축에 힘써야 한다.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범죄 예방 시스템을 도입하고, 지역 안전지수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커뮤니티 중심의 범죄 예방 활동을 확대해야 한다.

다섯째, 신기술 산업 육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바이오산업과 우주항공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첨단기술 중심의 성장을 추진한다. 또한 평생학습 체계를 강화해 청년과 고령층의 경제 활동 참여를 지원한다.

인천 시민과의 미래 대화와 미래 이슈 추적기에서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은 상호 보완적이다. 보존사회의 위험을 예방하고 변형사회로의 전환을 이루기 위해 인천시는 단기적 성장에 집착하기보다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미래 이슈 추적기를 통해 시민들이 제기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정책의 실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조정이 필요하다. 시민 참여와 정책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인천은 회복력 있는 도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2 앞으로의 과제

연구진은 향후 미래 대화와 미래 이슈 추적기의 통합적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미래 대화에서 시민들이 도출한 선호 미래와 이슈 추적기의 분석 결과를 지속적인 피드백 루프로 연결해야 한다. 시민들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정책에 반영되는 과정을 추적하고, 그 진행 상황을 다시 시민들과 공유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미래 대화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과 이슈를 정량적·정성적으로 분석해 정책적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견을 구조화하고 클러스터링하는 데이터 분석 도구를 도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수의 시민이 지적인 주제는 정책적으로 더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 대응 방안을 개발한다.

시민 의견이 단순히 논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책 기획과 실행 과정에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 참여형 정책 워킹그룹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워킹그룹은 이슈가 해결될 때까지 모니터링하며 대응 방안을 조정한다.

미래 이슈 추적기의 분석을 기반으로 시민들이 제안한 선호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맞춤형 시나리오를 개발할 수도 있다. 각 이슈에 대해 다양한 미래 시나리오(성공 시나리오, 실패 시나리오 등)를 작성하고, 정책 담당자와 시민이 함께 토론하며 대안을 찾는 과정을 거친다.

현재 연구는 미래 대화와 이슈 추적기를 분리된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동시적 설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래 대화 중에 이슈 추적기 도구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문제를 식별하고, 그 자리에서 이슈의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대화의 결과가 즉각 정책 분석에 반영될 수 있다.

연구 디자인에 혼합 연구 방법(Mixed Methods)을 도입해 미래 대화의 정성적 데이터와 이슈 추적기의 정량적 데이터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시민 의견의 패턴과 정책 효과성을 더욱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텍스트 분석 도구를 활용해 시민 대화 내용을 분석한 후, 이 내용을 이슈 추적기의 데이터와 연계해 인사이트를 도출한다.

미래 대화에 참여하기 전과 후에 동일한 설문지를 통해 시민 인식의 변화를 추적하고, 이 변화를 이슈 추적기의 정책 평가와 연계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화가 시민 인식과 정책 방향에 미친 영향을 더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

미래 이슈 추적기에서 도출된 이슈의 잠재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예측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 모델은 시민 대화에서 발견된 이슈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진화할지를 시뮬레이션해 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도구로 활용된다.

연구진과 정책 담당자, 시민 대표가 정기적으로 협업하며 대화와 이슈 분석의 연계를 강화하는 정보 공유 시스템도 구축하면 좋을 것 같다. 예를 들어, 연구진이 개발한 이슈

분석 결과와 정책 제안을 주기적으로 시민과 공유하며 피드백을 수집하는 프로세스를 운영한다.

제4장

이머징 시티즌으로서 혁신가와 미래

제1절 들어가며: 의료 AI와 이머징 시티즌

제2절 연구방법 및 대상

제3절 연구결과: 전문가주의, 국가, 그리고 미래의료

제4절 미래 시나리오

제5절 결론 및 논의

제 1 절

들어가며: 의료 AI와 이머징 시티즌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인공지능이 다양한 노동 현장에서의 직무를 대체할 수 있을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분석은 단순한 기능들로 구성된 직군들에 대한 사례 분석으로 수행되고 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의 대중화는 인공지능과 노동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고민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자동화를 통해 육체 노동 직군이 대체되어 온 수 세기에 걸친 역사가 다양한 노동 직군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AI 기술이 사회에 미칠 다양한 파급력에 대한 학계의 예측은 장기간에 걸쳐 이론적 연구와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다 (강승규, 2021; 구본진, 2022; 박대민, 2020; 윤정섭, 2023; Bundy, 2017; Joyce et al., 2021; Schuilenburg & Peeters, 2020; Zajko, 2022). 거대 언어모델 (LLM)과 기계학습 (Machine Learning)을 활용한 다양한 기술들이 사회 다방면에 걸쳐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이는 무엇 보다도 상용화된 기술의 완성도가 전산분야 연구자들의 예측을 뛰어넘을 정도로 강력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으로부터 기인한다 (Porsdam Mann et al., 2023; Thirunavukarasu et al., 2023). 기계화와 자동화가 경제, 생산성, 그리고 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에 비해 (Parolin, 2020; Wajcman, 2017; Zetka, 1991), 다양한 형태의 인공지능이 사회 변화를 일으키는 양상은 훨씬 더 복잡하고 심원할 것으로 예측된다 (송성수, 2022; 엄효진, 이명진, 2020; 하대청, 2018).

가령 노동시장에서는 기존에 블루칼라 노동자들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던 “자동화”의 영향이 다양한 노동자들에게로 확대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며 (Acemoglu & Restrepo, 2018; Furman & Seamans, 2019), 과학, 기술, 의학연구 (STEM) 분야에서는 기존에 시도되지 못하던 대규모의 시뮬레이션 및 모델링 연구가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는 학자도 있다 (하대청, 2023; Thirunavukarasu et al., 2023).

이에 대응하는 교육 분야 또한 큰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데, 공통 교육과정과 대학교육 모두 인공지능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지연 외, 2023; 정문성, 이바름, 2023).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알고리즘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시민들의 커뮤

니케이션과 정치행위도 변화하고 있다. 인공지능으로 인해 양극화가 가속화된다는 진단과 함께 (이기완, 2021; Schuilenburg & Peeters, 2020; Smith, 2020; Zajko, 2022), 인공지능을 활용해 여론을 더욱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도 부상하고 있다 (Kim & Lee, 2023; Roberts et al., 2014).

이처럼, 다수의 연구자들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비롯한 새로운 기술적인 발전이 사무직을 비롯한 거의 모든 직종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이 아직 시도하지 못한 연구 영역들이 다수 존재한다. 첫째, 지식노동 및 사무직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직종, 특히 대한민국의 맥락으로 치환하자면, 국가가 공인한 지식 권력계급으로서의 ‘전문가 직종’이 인공지능과 어떤 상호작용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부재하다. 전문가와 인공지능에 대한 가장 최신의 논의를 포괄하고 있는 다니엘 서스킨드와 리차드 서스킨드의 저작 “직업의 미래 (The Future of Profession)”은 전문가들 또한 인공지능으로 인해 약화되고 대체될 직업군중 하나라고 단언한다. 왜냐하면 이들이 보기에, 전문가들의 지식 또한 ‘인류가 축적해 온 지식’의 일부이며, 인공지능은 이미 언어의 형태로 표현된 인간의 지능을 학습하고 재현할 수 있을 정도의 기능을 충분히 갖추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의 분석은 미국을 공간적 범위로 한정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한계로 인해, 대한민국과 같이 국가중심적으로 전문직종이 강력히 규제되고 통제되는 맥락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결정적인 한계가 있다.

둘째, 인공지능과 노동 사이의 관계를 기술 대체의 관점으로 지나치게 국한시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면 인간 대신 해당 직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수행되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노동의 관계적 속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즉, 노동은 노동자 개인이 특정 ‘기능’만을 수행하는 행위가 아니며, 노동자들끼리의 관계의 맥락에서 수행되는 집단적인 과업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어떤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지와는 별도로, 이러한 인공지능이 노동의 현장에서 다른 노동자와 어떤 방식으로 함께 ‘노동’할 수 있을지, 이로 인해 노동자들 사이의 관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장은 인공지능, 전문직, 노동관계, 국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특히, 본 장은 최근 급격하게 발달하고 있는 인공지능 활용 분야 중 하나인 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경험적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방법 및 대상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본 연구는 의료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연구 대상으로 한정한다. 여기서 전문가들이란 대한민국에서 의료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 전문가, 즉 의사집단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 외에도 병원 및 의과대학에서 연구를 수행중인 의료 연구인력도 포괄한다. 의료 주변 전문인력들(간호사, 간호조무사, 영상기사,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등) 또한 잠재적 연구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연구 대상을 이와 같이 국한 시킨 데에는 다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의료 주변인력을 포함하여 질적 연구를 수행할 경우, 의료 현장에서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협업하는 구조를 파악하는데 유리하지만, 인공지능으로 인해 전문직종 자체의 구체적인 미래상에 대해 이해하기에는 부적합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현재 전문직종과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는 전문직의 기능을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로 집중되어 있고, 이로 인해 해당 직종의 미래 뿐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변화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진단으로 본 연구는 시작되었기에, 의료 주변인력을 모두 포괄하기 보다는, 의료 전문가들만을 대상으로 최대한 질적 연구의 범위를 국한시키고자 하였다.

둘째, 파일럿 스터디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의사들은 의료 전문성만을 가질 뿐 아니라, 그들 스스로 의료 AI의 개발의 방향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확장적 전문성’을 보유한 집단 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의사이면서 동시에 다른 다양한 전문성(프로그래밍 기술, 기초의학 연구 기술, 창업 및 투자 등)을 갖고 있는 경우,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질적인 구술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파일럿 인터뷰 이후 전반적인 인터뷰의 방향을 의사이면서 동시에 타 전문성을 갖춘 대상들, 특히, 의료 AI 개발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져왔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표 4-1〉 의료 AI 질적 연구 대상 정리

이름	직업 및 전문성	특징
A	의사 및 AI 벤처 경험자	근골격계 질환 관련 디지털치료제 개발 경험 의료 데이터 전처리 벤처 창업 및 실패 경험
B	의사 및 AI 벤처 경험자	흉부 엑스레이 진단 AI 사용경험 있음 전문의가 없는 일반의
C	의과대학 연구교수 및 AI 관리자	의사 자격증은 없으며, 인공지능 공학 기술 전문성 보유
D	의사 및 AI 벤처 경험자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졸업한 의사
E	의사 및 AI 벤처 경험자	수면 분석 검사 관련 스타트업 창업 경험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졸업한 의사
F	의사 및 AI 벤처 경험자	
G	빅데이터 연구자 및 의료 AI 연구 경험자	
H	빅데이터 연구자 및 의료 AI 연구 경험자	
I	의사 및 의료 AI 분야 연구교수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졸업한 의사 의료 AI에 대한 저서 집필 경험

본 연구는 질적연구의 다양한 방법론 중에서도, 특히 인터뷰를 바탕으로 하는 근거이론적 접근을 활용하였다. 근거이론적 접근은 질적 현장연구 혹은 인터뷰 연구를 통해 수집한 질적인 자료를 통해 다양한 경험적 범주를 추출해 내며, 이렇게 추출된 범주들을 바탕으로 질적 데이터를 분류하고 해석하는 일련의 기법을 칭한다. 분석의 범주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각 인터뷰 대상과의 라포 형성을 위해 나누었던 대화 및 데이터의 맥락화를 위해 질의하였던 개별 인터뷰 대상의 상황에 대한 대화는 제외하여 분석하였다. 9건의 인터뷰를 통해 추출한 범주는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4-2〉 전문가 중심적 AI 개발 인터뷰 범주

범주	하위범주	주요 내용
전문가 중심적 AI 개발	의사들이 AI 개발에 참여하는 주요 동인	의료 현장에서의 유용성 인공지능 스타트업에서의 의사의 중요성 경제적 동인
	의료 AI의 필수통과지점으로서의 의사 전문가	의사가 인공지능에 회의적인 이유 의사가 인공지능에 회의적일 때 해당 프로젝트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 의사 집단의 윤리적 보수성 의사 집단의 자기예언적 전문성
의료 AI와 국가의 규제	의료 AI의 시장구조와 국가	의료 AI의 사업모델 (B to B, B to C) 의료 AI의 의료수가 산정 문제 의료 AI와 의료보험 의료 AI업계와 투자
	의료 AI의 국가별 독립성	해외 의료 AI 현황과 대한민국의 대응 한국 의료 AI 업계의 영업모델
의료 AI의 혜택을 보는 의사와 환자	의사들이 의료 AI를 사용할 동인	홍보를 위한 미사여구로서의 AI 의료화의 정당성의 도구로서의 AI AI와 새로운 시장의 개척
	환자들이 의료 AI를 사용할 동인	환자의 알 권리와 의사의 '숨길 권리'의 충돌 의사와 환자의 '책임의 문제'의 재편

제 3 절

연구결과: 전문가주의, 국가, 그리고 미래의료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의료 AI의 전문가 중심적 특징들

(1) 의사들이 AI 개발에 참여하는 주요 동인

1) 의료 현장에서의 유용성

많은 의사들은 과거에 비해 의료 인공지능에 대한 막연한 회의감은 크게 줄어들었다고 대답하였다. 오히려, 이제는 의료 현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다는 점에 상당수의 의사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이는 인공지능의 정확도 뿐 아니라 그 속도와 업무 효율의 증가로 인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B

네. 2016년에 제가 XX 회사에 (익명 처리) 있을 때만 하더라도 인공지능이 자신의 직업을 침해한다, 영상학과 의사들이 침해한다라는 의견들이 대다수였는데 반해 지금은 인공지능이 개발되고 나서 상장도 하고 그 이후에 소프트웨어들이 인허가를 받고 사용을 했을 때 이게 나의 직업을 위협하기보다는 나의 직업 능력을 올려주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좀 강해져서 오히려 많이 사용을 권장을 하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 보통은 이전에는 영상학과 의사들을 한 명을 대체하는 비용으로 설명을 했다면 지금은 이 사람이 얼마나 더 새로운 능력을 창출해 내서 비용을 더 월급 이상의 비용을 만들어 내는지에 마케팅 포인트가 좀 달라진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실제로 사용을 했을 때 정신과 의사가 소프트웨어 때문에 해고되기보다는 주로 자신의 업무를 줄여주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됐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많이 사용되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 앞서 말씀드린 인공지능에 대한 그냥 단순한 반감. 이게 과연 나를 대체한다, 애가 나보다 뛰어난 거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인공지능이 얼마나 정확하겠어?’라는 불신들도 꽤 많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던 분들도 지금은 인공지능의 마니아가 되셔가지고 Gen AI로 창업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인공지능에 대한 믿음이 커졌다 (...)

C

일단 약을 처방하는 데 있어서 의사들도 약의 모든 걸 알지는 못하고 검색해서 EMR 프로그램 안에서 클릭클릭해서 처방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환자에게 굉장히 과다 복용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이 환자가 병원에 기록이 있다면 아주 몇 년 전에 몇 달 전에 처방을 받았던 이력이 있거나 이랬을 경우에 중복이나 약물의 오남용 등을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 그래서 ‘이거는 이미 이 환자에게는 과다 복용입니다.’ 하는 약물에 있어서 clinical decision을 서포트 시스템 해주는 이런 것도 있고요. (...) 쓰임에 있어서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의도적으로 생각지 않아도 자동으로 계속 보여지는 시스템. 예를 들면 아까 약재 말씀드렸던 거. 약을 처방해야 되는데 그건 내가 이 시스템을 켜놓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계속해서 ‘맞다, 아니다’를 약물 감시를 해주니까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써야지.’ 의도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써지는 거고요. (...) 두 번째는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것 같아요. 방사선종양학과에서는 환자에게 radiation을 조사해서 종양을 치료하는데 그 과정에서 normal tissue는 건드리지 말고 oncology tissue만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세부적인 조직은 반드시 잘 그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요즘은 사람이 한 건 할 때 AI가 열댓 건씩 할 수 있고 사람이 눈으로만 판독하면 되고 하니까 필수적인 게 돼서 (...)

D

일단 이미지 분석이 가장 파워풀한 툴이 될 것 같은데 사실 분야는 너무 다양해 가지고 (...) 오늘도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환자들이 패턴화돼 있거든요. 환자들이 질병이나 아니면 이야기하는 히스토리 내용들도 대부분 패턴화돼 있어서 이런 패턴에 추천되는 처방 리스트 같은 거 딱 나오면 사실 되게... 결국 그게 의사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 제2의 의사가 한 명 서포트가 돼 주는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

I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그 엑스레이가 파밍하는 그 피처를 아주그런 복잡한 고차원 피처를 인간에 대한 어떤 인지 기능으로 완벽하게 캐치하지 못한다는 어떤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요. 근데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떤 정형적인 피처를 아주 정형적으로 잘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람보다 조금 잘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료 인공지능의 일반적인 유용성 담론〉

의사들은 인공지능이 ‘일반적으로 유용하다’는 의견 외에도,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 현장에 주어져 있는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한계가 의료 인공지능으로 인해 어느정도 해결될 수 있다는 의견 또한 개진하였다. 대표적으로, 공공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들의 대부분이 전문의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소수의 전문 분야만을 가지고 진료하고 있는 상황이 그 예이다. 동료 의사에게 자문을 구하기 어렵거나, 의사 스스로가 아직 수련이 부족한 경우 의료 인공지능은 부분적으로 훌륭한 의료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B

보건소에서 일어나는 업무인데요. 주로 결핵 진단을 합니다. 제가 실제로 사용했던 예이긴 하고요. 보건소에서 결핵 진단을 엑스레이로 하는데 그 엑스레이 판독을 일반의사가 하는데 일반 General Physician이 그거에 대한 진단 역량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인공지능 역량을 보조를 해서 사용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없던 결핵을 찾아내서 좀 더 보건학적으로 기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영상학과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정확도를 올리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걸로 보이고요.

D

근데 예를 들어 레지던트 1년 차, 2년 차가 교수 정도의 퍼포먼스를 내는 데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상향평준화시키는 거에서는 분명히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어떤 전체적인 expertise 자체를 높이는 거에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F

마침 폐를 찍었는데 기침을 하더라. 이거 내가 예전에 엑스레이 사진을 보기는 했지만 폐 사진을 보긴 했지만 이게 과연 뭘까. 당장 내가 영상학과 친구한테 연락해서 물어보기도 그렇고. (...) CT가 있는 병원이라면 뇌 CT를 찍었는데 조금 약간 neurologic한 신경과적인 증상이 보이는데 조금 여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이거에 대해서 가능성이 뭘까. 근데 내가 지금 당장 영상학과 선생님이 우리 병원에 없다. 이럴 때. (...) 내가 전문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전문의의 도움을 지금 바로 구할 수 없다면 당연히 그거는 큰 도움이 되겠죠.

I

양상불이라고 하는 이제 어떤 의사결정 방법이 있는데 기계학습 그러니까 AI 시스템이 제시한 답과 그다음에 의사 본인이 의사 본인이 AI가 준 답을 참고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것과 그냥 본인 단독으로 의사 혼자서 어떤 결정을 했을 때의 어떤 정답률을 비교해 봤을 때 비록 둘 다 언서튼티가 있긴하겠지만 AI가 주는 판독을 참고해서 나의 최종적인 결정을 했을 때 정확도가 더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현재의 의료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보완책으로서의 의료 AI〉

2) 인공지능 스타트업에서의 의사의 핵심적인 역할

의사들이 의료 인공지능 개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나가고 있다는 증언 또한 다수 확보되었다. 의사들은 의료계와 인공지능 업계를 연결하고, 의료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연결하며, 국가 의료보험 제도와 의료 현장 사이를 연결하는 중간지점에 놓여있다는 점에서, 의료 인공지능의 사용자가 아닌 개발자로서 작동 가능하다는 것이다.

A

대신에 제가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저는 개발자분들보다도 그냥 계신 의사분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의사분들이 되게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랑 저를 두고 비교했을 때는 AI에 대한 백그라운드, 그리고 AI 개발자들과 소통하는 방법, 그리고 어떤 AI 기획에 있어서 어쨌든 저희는 그 엔드포인트에 환자가 있기 때문에 메디컬적인 어떤 인사이트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AI 본부랑 자유롭게 소통을 할 수 있다.

의사 사회를 조금 이해하고 이 의사라는 사람들 어쨌든 디지털 치료제라는 거는 수가 인정을 받았든 비급여를 해서든 의사가 처방을 하고 의사가 환자에게 유도를 해내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엔드포인트에 있는 유저들이 두 가지 분류입니다. 의사도 있고 환자도 있기 때문에 의사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훨씬 더 잘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막연하게 ‘이게 되게 좋은 거니까 의사들이 쓰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의사들은 이거 돈 안 되면 안 쓴다.’ 사실 되게 나이브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특성들에 대해서 재원을 주는 게 사실 굉장히 큰 부분에 있습니다.

D

저희랑 적극적으로 같이 코워킹 하시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이비인후과 교수님이시거든요. 그 교수님께서 하시는 거는 주로 코골이가 너무 심하다든지 아니면 수면 무호흡이 너무 심하면 여기 호흡기 쪽에 절개 수술을 해서 그런 것들을 한다든지 처방을 내려가지고 경과를 본다든지 하는데 저희 서비스나 이런 거 디지털 치료제가 좀 효과가 있는 부분은 정확도가 일단 검증이 됐고 이리다 보니까 이 환자들이 자신의 수술의 경과를 객관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 왜냐하면 원래 만약에 처음에 진료를 받으러 와서 수술하기 전에 “한 일주일 써보고 다시 오세요.”라고 하면 내가 여기 수면 무호흡이 얼마나 심한지가 나오잖아요.

〈의사들이 의료 인공지능 개발 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 담론〉

3) 경제적 동인

의사들이 인공지능 개발에 뛰어드는 이유는, 그들이 그럴 수 있는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럴만한 경제적인 유도 요인 또한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의사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의료의 본질 의료 지식이 아니라 의료 자본일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며, 이러한 자본의 흐름에 자신들의 전문성을 가미할 때 개인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A

MD 면허 자체가 나라에서 보장해 주는 혹은 의식적으로 사회에서 보장해 주는 영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영역은 다른 스페셜티보다 좀 더 강하게 내가 갖고 있는 전문 영역을 지킬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사업적으로 보아도 내가 MD를 갖고서 접근을 했을 때 조금 더 이 분야의 전문가라는 것 그 이상의 어떤 파워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F

친목 모임, 연구자 모임 겸 해서 액티브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이 실제 병원에 있다가 말씀하신 소프트웨어 우리나라에서 알 만한 그런 기업인데 의료 쪽을 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가 계신 분도 있고 벤처로 하시는 분도 있고 지인적인 모임들이 있어요. (...) 시간은 많죠. 시간은 밤을 새서도 되고 같이하다 보면 시너지가 나서 효과가 나는데 결국에는 자금이에요, 이게. 항상 그걸 느껴요. 결국에는 항상 제가 연구도 해보고 발표도 해보고 해보지만 결국 자본이구나. (...)

〈의사들이 의료 인공지능에 개입하는 경제적 동인〉

(2) 의료 AI의 필수통과지점으로서의 의사 전문가

1) 의사가 인공지능에 회의적인 이유

한편, 여전히 의료 인공지능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 또한 명확하다는 증언이 많았다. 먼저 기술적으로 의료 인공지능이 여전히 위음성의 오류를 저지룰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즉, 전문의가 진단시 질환이 있을 것으로 의심할 수 있었을 영상에 대해 인공지능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는 경우, 이는 한 건의 오류의 문제를 넘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가 된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대량의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는 장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인간 전문가의 2차 검수를 받을 수밖에 없고, 또한 그래야 한다는 것이다.

B

(대학병원은 앞으로 바뀌겠지만) 1차 병원들은 일단 기계를 쓰는 경우가 좀 적고요. 주로 처치를 통해서 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치를 통해서 주로 매출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 병원만 하더라도 엑스레이가 없는 병원이어서 진짜 청진기로만 진단하고 약을 처방하는 병원이고 대다수의 1차 의원들이 그런 식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좀 다를 것 같긴 하고요.

C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치매다 아니다. 치매에 대해서 영상을 보고 분석하는 거는 AI가 리포트는 잘 만들어주지만 경험 많은 의사들이 더 정확하거든요. 뇌경색도 AI를 막 돌리는 과정에서 응급실에서 그거 기다릴 바에는 영상 보고 일단 빨리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방치된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 이게 만약에 후속 트래킹을 위해서 환자가 다 나한테서 진단도 받고 보조도 받았는데 이 사람을 한 번 더 데이터를 체크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현실적으로 의사 인력 부족하고 시간이 없어서 안 돼요. (...) 내가 시간과 노력과 공을 들여서 애가 했던 걸 다시 검수하는 불편함을 하고 싶지는 않은 거죠.

E

지금은 사실 저희 프로젝트에서 생각했을 때는 조금 잘 모르겠는데 어떤 게 있냐면 사실 의료기기는 false-negative, 그러니까 있는데 병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야 되잖아요. (...) 없어야 하는데. 암이 있는데 암이 없다라고 진단을 해버리면 그건 큰일 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 근데 또 다행히 수면 분야는 사실 수요는 잠을 못 자는 거에 대한, 잠을 잘 자고 싶은 거에 대한 수요는 크지만 그게 false-negative에 대한 리스크가 다른 병에 비해서는 크지는 않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개발할수 있는거죠. (...)

F

(여차피) 내가 그거를 AI 돌려가지고 이 결과를 보고 ‘여기 nodule이 있다’, ‘여기에 폐기종이 있다’ 혹은 ‘아래쪽에 있는데 그게 약간 cancer like하다’라고 보고 이걸 고민하지 않고요. (...) 이미 그걸 가지고 의심되는 거 환자한테 또 물어보잖아요. 안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있잖아요. 어지러우냐. 숨쉬기 어려우냐. 소변 볼 때 피 나오냐. 의사로서 이미 가지고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내가 치료할 수 있는 그것, 내 술기로 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이미 어떤 실력과 어떤 지견이 있는 의사라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충분한 실력을 가진 의사라면 다 누구나 할 것 같아요.

〈인공지능에 회의적인 기술적인 이유〉

의료행위의 대면적 속성을 고려할 때, 인공지능이 부담할 수 있는 역할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의견 또한 설득력이 있다. 가령, 환자가 의사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인공지능

을 통해 진단과 처방을 받을수 있을것이라는 등의 예측은 단기적으로 달성되기 어려운 데, 왜냐하면 환자는 의사 라는 인간을 만나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 또한 치유 과정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의료 현장에서의 인공지능은 인간 의사의 뒤편으로 숨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A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메디컬의 영역은 환자들의 특성상 직접 의사를 대면하는 데 굉장히 큰 니즈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든 특히 미국은 의료의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접근성을 늘리려는 텔레메디컬적인 요소가 굉장히 대세였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더 우리나라는 환자들의 컴플라이언스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거 하면 되게 그냥 장난 같고 '이거 이렇게 해도 돼?' 이런 불신이 조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D

우리나라 사람 특성일 수도 있겠는데, 물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의사를 만났다는 것만으로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내가 치유를 받았다는 느낌 혹은 치료를 받고 있다는 느낌, 말 한마디 하는 것만으로도. 그런 심리적인 효과를 많이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서비스고 돈이 되는 장사가 되게 하려면 그들의 만족과 그들의 좋은 피드백이 있어야 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그냥 치료사만 보내는 걸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의사를 끼워 넣어봤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인공지능에 회의적인 제도적, 심리적 이유〉

2) 의사 집단의 윤리적 보수성

인공지능에 회의적인 의사들의 담론중 상당수는 또한 의사들은 집단적으로 응당 의료적 처치에 대해서는 보수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식의 규범적인 답변이었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생명 현상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큰 차이가 없는데, 이를 다루는 의료행위의 패러다임이 너무나 급속도로 변할 경우, 안전한 처방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주를 이루었다. 의료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지나친 혁신은 오히려 혁신이 아닐 수 있다는 담론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A

좋아 보이고 뭔가 충분히 하면 폭발적인 어떤 disruptive innovation을 이뤄낼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러기엔 의료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의료는 굉장히 무거워야 되고 보수적이어야 하고 쉽게 바뀌면 안 되는 것이 의료이기 때문에 그 기술이 발전해 나가는 속도를 절대 의료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D

내가 그러니까 아무리 typical하고 패턴화된 환자들만 온다고 해도 사실은 그 사람들 중에서 그 1%, 2%, 0.1%, 0.2%의 다른 가능성을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한 1차 진료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AI 덕분에 의사결정 과정이 조금 더 빨라진다고 하더라도 막 드라마틱하게 진료 시간을 단축시키고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D

AI로 인한 변화는 다만 크지는 않을 것 같고 메디컬할 것 같지는 않아요. 아주 보수적인 집단이고 보수적이어야 하는 working environment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뭔가 변할 것 같지는 않지만 (...) 계속해서 의료를 바꾸게 되면 아주 공통된 혹은 constant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진짜 목숨을 걸고 만드는 그 가이드라인에 정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거든요, 의사들은. (...) 당연한 컨센서스가 생길 만큼 가이드라인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다 보니 모든 성향이 다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함에 있어서도 되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 저는 수술 방에서 수술하는 교수님들 보면서 왜 바느질을 할까.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직도 왜 바느질을 하고 앉았을까. 마치 소위 18년, 20년 가까이 의학만 공부했다는 사람들 셋이 머리를 맞대고 한두 시간 동안 서가지고 바느질하는 거 구경하고 있는 게 저는 너무 웃긴 거예요. (...) 그런데 점점 '그게 확실하고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없었으니까'라는 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사람 스스로에게 스스로가. 근데 그 부분을 저는 절대 무시해서는 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의사들의 직업윤리와 인공지능의 관계〉

혁신적이어 보이는 개발품이,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아무 쓸모가 없는 혁신일 수 있다는 점 또한 지적되었다. 가령, 땀을 통해 병을 진단하는 기구의 경우, 과학기술적으로는 큰 성과일지 모르나,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 절대 다수의 환자들의

특성상, 채혈에 비해 실질적인 유용성이 나타나기 힘들다. 또한, 환자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에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 또한 잘못되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자신의 건강상태를 알고자 하는 수요가 없고, 그 순응도도 매우 떨어진다는 것이다.

A

이게 실질 치료에 처방이 되느냐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의료는 보통 미국, 그리고 미국에서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하면은 임상 지침을 발표를 하면 한국 당뇨병학회든 관련 학회에서 대한민국 임상 지침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디지털 치료제나 디지털 헬스케어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걸 치료해 내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마일드한 거를 조금 저비용 혹은 접근성을 좀 높여주는 데 의의를 갖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 커피우유 같은 저런 마일드한 이펙트를 가지고 여기에 폭발적으로 뭔가 사용을 하게 된다. ‘내가 이게 너무 좋아 가지고 이걸 써야겠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의사 혹은 환자의 효용을 명확하게 증대시켜 주지 않는 한 의사들이 쉽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D

사실 이게 non-invasive냐 혹은 invasive냐 혹은 땀을 쓰냐 피를 쓰냐 눈물을 쓰느냐 이거에 따라서 진짜 천차만별인데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생각보다 불편합니다. 이것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편하지가 않고요. 환자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제가 실제로 환자를 지금 보는 입장에서 조금 더 피부로 느끼는 거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혈당이나 자기 건강 상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 거기다가 non-invasive하게 땀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겠다라는 거는 ‘네가 운동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운동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측정을 하겠다는 건데 측정하는 건 고사하고 일단 운동도 안 하는데 뭘 어떻게 하겠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피해갈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

〈의료의 고유한 성질로 인한 의사들의 보수성〉

3) 의사 집단의 자기예언적 전문성

이러한 의사들의 역할과 의견은 현장에서 의료 인공지능의 개발 과정에 고스란히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의사들은 실제로 의사들이 활용하였을 때 병원과 의사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도구가 무엇인지 궁극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의료 인공지능 업계는 과학기술적으로 용요한 개발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의사가 없이는 실제로 ‘현장에서 도움이 될’ 혁신을 만들어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사들의 전문성은 도구적인 것을 넘어 자기예언적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C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데이터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병원이 주도해서 어떤 정부 사업을 많이 만드는, 그러니까 연구도 하고 논문도 나오고 기술도 만들어가면서 결국엔 그게 하나의 증거가 되고 근거가 돼서 대규모의 정부 사업도 가져올 수도 있고 병원이 영구적으로도 네임드가 있는 그런 병원이 될 수도 있고요.

C

물리적인 치료나 물리적인 게 필요하지 않는 이상은 아직 법적 규제적으로는 굉장히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많지만 굳이 단순한 질병 같은 경우에는 원격으로 하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시범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될 것 같고. 또 ‘마이 헬스웨이’라고 해서 나의 건강정보 고속도로라는 사업도 복지부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대한민국 어느 병원을 가든지 내 의무 기록 정보들을 앱 하나로 보고 의사도 뷰어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 근데 그런 미래가 올 거라는 거에 대해서 의사들은 동의를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고도화된 진료하고 남은 시간에 또 다른 어떤 생산적인 활동들을 다들 할 수 있는 거죠.

D

제가 이틀간 정말 밤새서 의대 교수님이랑 미팅을 준비를 하면서 같이 샘플을 미리 만들고 교수님한테 짤 하고 보여드렸는데 교수님이 “야, 이거 환자한테 별로 안 쓰일 것 같은데?” 이러시더라고요. 의대 교수님이 딱 한마디 하니까 그다음 날 센서 디자인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간의 여러 시간들이 훅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경험들(...)

D

기본적으로 환자는 자기가 아픈 걸 가지고 오거든요. 자기가 불편함을 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마치 추리하듯이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야 되는 게 의사의 역할이고, 거기서 그다음 스텝으로 의사가 결정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어떤 검사를 할 건지를 정해야 돼요. 환자가 알아서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검사마저 의사가 정해야 되거든요. (...)

D

행위자의 주체가 의사들한테 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를 쓰고 싶어 하는 사람이 의사일 것 같고 공단에서 AI를 쓰는 말든 별로 관심은 없을 것 같고요. 공단의 경우에는 사실 저는 10년까지는 갈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기능을 많이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의료 행위에서의 의사의 절대적 역할 및 인공지능으로의 확장〉

2 의료 AI에서의 국가와 규제의 역할

(1) 의료 AI의 시장구조와 국가

1) 의료 AI의 사업모델 (B to B, B to C)

의사들이 의료 인공지능 사업에 뛰어들 때, 이들은 단순히 ‘성능이 좋은’ 인공지능을 만들면 자동적으로 이것이 사회적,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의사들은 성능이 아닌, 구체적인 사용 방법이 현재 환자와 의사가 만나는 지점에서 유효하게 작동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다. 따라서 의사들은 다양한 수익모델에 대해 상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A의 증언처럼, 환자들의 의료데이터 자체를 사고 팔수는 없는 현재의 대한민국의 법적 규제 안에서, 이러한 정보 자체를 사고 팔진 않더라도, 가공된 형태의 정보를 서비스하는 사업 모델은 얼마든지 구상할 수 있다.

A

최근에 개인정보와 데이터에 대한 화두를 정부에서도 던지고 여러 국제기구에서도 던지고 있는데, 그래서 데이터의 가치는 점점 높아진다. 근데 이걸 가지고 사실 지금 당장은 병원이라는 기관 혹은 통신사라는 기관이 그런 프라이빗 데이터를 굉장히 갖고는 있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value creation을 위해 쓰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나이브하게 말하면 그걸 가지고 돈을 벌지 못하고 있거든요.

F

나름대로 알고 있는 AI 기업이라든가 위원회라든가 정리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한 60% 이상, 이 이상이 영상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진단 툴 이런 것들인데 영상에 되게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요. 그렇죠,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죠. 의료라는 거에는 술기도 있을 거고 어떤 판독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어떤 진단을 내려서 decision을 내려서 처방도 있을 건데 데이터 모으고 데이터를 해서 기계적으로 뽑기는 영상이 제일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봐도. (...) 영상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거기에 잘 나오고 있고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어? 이러다 대체하게 되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훌륭하게 발전이 지금 놀랍게 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현장에서 보고 있는 사람의 그동안의 경험과 그다음에 환자의 symptom을 보고 컨펌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의료 인공지능의 B to B 모델〉

조금 더 국소적으로 상상한다면, 의사들은 환자들이 어떤 형태의 의료 서비스를 원하고 있는지, 환자가 원하는 미충족 수요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줄 수 있는 인공지능이 '현장에서 작동하는' 인공지능인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사들은 인공지능 혁신의 방향타를 잡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혁신의 조절자 역할을 하게 되는데, 시장에서 정말로 성공하는 인공지능은 기술적 혁신을 최고조로 성취한 모델이 아니라, 환자와 시장에 맞춘 시제품일 것이기 때문이다.

A

디지털 치료가 대세이기 때문에 혹은 이게 어떤 접근성을 높여주고 사회적 효용성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의사들이 이걸 더 써야 된다, 이런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진짜 이게 자연스러운 진료 과정에서 의사의 profit, 그리고 환자의 profit을 윈윈하게 만들어주는 아이템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좀 더 스며들 거고요. 만약에 그중에 어떤 포인트도 맞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사장될 거다.

B

환자가 직접 의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도 본인이 어떤 정신과적 증후를 갖고 있는지를 자가 점검해 줄 수 있게 하는 그런 정밀진단 (...) 그렇게 하면은 현재 법상으로는 불법이어서요. 일단은 자기를 객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진단 스크리닝 키트 정도 (...) 의학적인 베이스는 있긴 한데 그게 저희가 의학적인 베이스로 100% 가게 되면 아무래도 의료기기 이슈가 있고 인허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약간 좀 라이트한 스크리닝 키트 버전으로 개발을 하려고 (...)

D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료 시장의 구조 자체가 환자와 의사의 엄청나게 비대칭적인 정보의 차이 격차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로는 환자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검사나 치료나 혹은 병이나 혹은 진단 과정이나 AI 기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상 떨어진다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러라고 사실은 의사가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그거를 판단을 해주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B2C의 형태에서 그 C가 의사가 아니라 그냥 일반 환자가 됐을 경우에는 의료 자원이 아주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

〈의료 인공지능의 B to C 모델〉

의사들은 환자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의료 서비스가 수행되기 보다는, 의학 전문가의 시각에서 적절한 것으로 검증된 치료만을 수행하는 것이 의료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즉, 환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검사를 수월하게 공급한다고 한들, 이것이 오히려 한정된 의료보험 자원을 낭비하는 길이라면 이는 옳바르지 못한 것으로 본다. 의사들은 의료 인공지능이 약속하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사실 많은 경우 ‘원래 존재한 적이 없던 의료적 수요’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2) 의료 AI의 의료보험 및 의료수가 산정 문제

실제로 의료 인공지능의 시장에서의 성공의 상당 부분은 국가의 의료보험 시스템에 편입될 수 있는지의 여부로 갈리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의사의 입장에서 해당 의료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환자를 진찰하거나, 혹은 환자에게 ‘디지털 치료지’의 형태로 인공지

능 서비스를 처방하는 것이 의학적, 제도적으로 인증을 받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인증을 통과한다면, 의료 인공지능은 비록 비급여의 형태로 처방된다고 하더라도, 정식으로 의료 서비스의 국가적 체계 안으로 편입한 것이 된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의료 인공지능 업계의 가장 중대한 기로는 바로 이 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B

제도적인 허들 같은 경우에는 ‘수가 산정이 너무 적게 됐다’가 제일 아쉬운 부분이긴 하고요. 수가를 인간 판독에 비해서 좀 더 많이 주었다면 의료 AI가 좀 더 산업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을 텐데 사람 판독보다 좀 더 적게 주어서 역량이, 성장 폭이 좀 줄어들었다는 게 좀 아쉽긴 하고요. (...) 예를 들어서 현재 실제로 얘기를 들으면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보통 엑스레이 판독료는 엑스레이 촬영 비용의 10%만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엑스레이 한 번 촬영하면 한 2만 원 정도가 환자가 내는 돈 플러스 건강보험에서 내는 돈인데 2만 원 정도의 비용인데 그중에 2,000원이 판독료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2,000원보다 AI가 판독하면 그것보다 좀 덜 해서 한 1,500원. 정확한 수가 비용은 모르는데 1,500원, 1,000원 이런 식으로 (...)

B

그 당시에 AI 진단 기기가 없던 상황에 식약처에서 허가 기준이나 이런 걸 만들었을 때 업체의 의견들을 많이 청취한 거를 봐서는 지금은 업체 의견들이 반영된 규제들로 꾸며져서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지금 초기 막 개발을 완료하고 식약처 인허가를 받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로써 제공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비용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어서 수익성이 유의미하게 남길 수 있는데 (...)

D

비대면 진료 있잖아요. 비대면 진료 사실 대표적인 어떤 그런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기 서울 어디에 있는 병원은 밤 12시에도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빨리빨리 그냥 그것만 하면 되니까, 처방만 내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하여튼 많은 사람들의 케이스를 받아서 하나라도 더 처방을 하게 하려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AI 기업들... 특별히 어떤 기업에서 들어와서 그렇게 했다는 거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알고 있어요. 여러 스타트업이나 혹은 AI 의료기기 기업들 중에서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결국은 급여로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 왜냐하면 비급여 처방일 경우에는 환자 부담금이 크고. 물론 비급여로 인정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큰 성공이거든요. 왜냐하면 또 우리나라는 실비로 다 커버가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급여로 들어갔다는 건 사실상 어마어마한 메리트가 있는 거죠. 처방 내는 사람이나 환자들이나 어마어마하게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별로 거리끼지 않고 처방을 내죠. 제가 클릭을 하는 의사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E

미국은 의료보험 제도가 워낙 안 좋잖아요, 우리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좋죠. 우리나라가 너무 좋다 보니까 수면다원검사도 사실 그것도 큰 비용이긴 하지만 저희가 의사를 만나서 수면에 문제가 있다라고 처방을 받으면 그게 급여 처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적은 데는 한 12만 원에서 좀 비싼 데는 25만 원 그 정도 선에서 환자들이 수면다원검사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거가 없으면 거의 한 80만 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의료 인공지능으로 인한 국가 건강보험의 변화에 대한 담론〉

이는 미국 등 의료 인공지능 선진국과 대비하여, 한국이 갖고 있는 매우 독특한 특징을 보여준다. 미국의 경우, 건강보험 제도가 국가에 의해 수행되기 보다는 시장에 의해 수행되는 측면이 지배적이다. 의료 수가 또한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의료 수가가 국가에 의해 관리되고 있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환자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정책이 견지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의료 인공지능은 이러한형태로 이미 구축되어 있는 체계에 안착하고자 전략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3) 의료 AI업계와 투자

개발자-의사들에 의하면, 의료 인공지능 개발 업계는 타 업계에 비해 성공적으로 투자금을 유치해온 편이었다. 왜냐하면, 다른 창업에 비해, 의료 인공지능은 그 소비자와 경제적 사업 모델이 분명한 편이기 때문이다. 막대한 사회적 유용성과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에 비해, 의료 인공지능은 의사 혹은 병원을 고객으로 상정하거나 (B to B), 환자들을 고객으로 상정하는 등 (B to C), 매우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개발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A

전 세계 헬스케어 혹은 메디컬 AI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어려워졌다기보다는 그냥 show and prove의 과정에서 show까지는 잘 났지만 prove가 결국에 되지 않았더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디지털 치료제나 헬스케어에 대해 굉장히 비관론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결국에는 직접 매출로 단기간에 이어질 수 있는 모델이 아니면 지금 같은... 사실 지금은 메디컬 AI뿐만이 아니고 모든 투자 신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신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는 테마가 아닌 것 같더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B

경영 경제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는 지금 AI 기업들 중에 유일하게 매출이 되는 곳은 의료 인공지능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투자 섹터 관점에서는 가장 확실한 매출 회사라고 보고 있고요. (...) 일단 매출이 나고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현금 흐름이 돈다는 게 중요하고 (...)

E

의료 AI 쪽에서의 싸움이 워낙 장기전인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스타트업들이, 기술 기반 창업한 스타트업들이 기술적으로 올인하면 펀드가 없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올인하게 되면 그 시장에 성공을 하기까지 버틸 수 있는 자금이 없게 되는 것 같아요. (...) 의료 쪽에 성공하겠다고 마음을 먹더라도 진짜 월등한 세계적으로 넘버원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기술력만으로 계속 한 4~5년, 3~4년 그 이상으로 버틸 수 있는 펀드를 끌어오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현재 의료 인공지능 개발 업계 투자 현황에 대한 담론〉

그러나 이러한 수월성의 이면에는 장기적인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난점또한 도사리고 있다. 위에서 분석하였듯이, 의료 인공지능 업계의 최대의 목적은 국가 의료보험 체계에 편입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임상과 검증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의료 인공지능 업계는 기존의 제약업계가 경험하였듯이,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난점을 겪고 있으며, 장기적인 가치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한국의 벤처 생태계에서 명확한 한계 또한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2) 의료 AI의 국가별 독립성

1) 해외 의료 AI 현황과 대한민국의 대응

의료는 국가의 통제와 규제의 영역에 있으며, 이는 의사들의 자격 요건을 국가가 관리하고, 약물 및 치료 요법에 대한 인증과 관리 또한 국가가 수행한다는 점에서 명백하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의료 인력, 서비스, 기술, 약물 등 모든 영역에 걸쳐서, 국가별로 구획된 의료 시장이 존재한다는 뜻이 된다. 의료 인공지능은 이처럼 구획화된 국가별 시장에 다양한 방식으로 착근하고자 하는 전략을 펼칠 수밖에 없고, 이는 미국 주도의 의료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후발주자인 대한민국이 사업 모델에서의 우월성과 기회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D

인공지능을 활용한 그런 다양한 사용례들이 의료 현장에 조만간 (...) 일단 미국에는 확실히 들어올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시간이 조금 딜레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미국에 들어온 이후에는 들어올 것 같아요. (...) 미국은 규제가 훨씬 더 많이 풀려 있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조금 더 냉정하게 말하면 보험사들이 많이 꺼 있어서 보험사들은 최대한 진료 비용이나 혹은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보험료를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안 좋아하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cost effective하게 가기 위해서는 기술을 최대한 빨리 들고 싶어 하는 입장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 미국 같은 경우 보험사들이 보험 지출을 안 하기 위해서라도 환자들이 덜 아파야 되고 빨리 병을 찾아야 되고 이런 게 중요하니까 반쯤은 약간 preventive한 그런 목적으로 AI들이 의료 현장에 빨리빨리 들어올 거라고 (...)

E

CES라고 하는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가전 쇼가 있는데요. 가전 기술쇼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서 거의 3년 연속 계속 참가를 했었는데, 그 친구가. 그러면서 봤던 게 수면 슬립테크 관이 처음에는 하나였나 두 개였나 이렇게 부스가 작았는데 매년 가면 갈수록 이게 6개가 되고 12개가 되고 이렇게 늘어나는 게 눈에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시장이 좀 확실히 오겠다.

E

저희가 완전 스크래치부터 모델을 다 만든 건 아니고요. 노벨티가 있는 상태로 만든 건 아니고 당연히 기초적인 클래식피케이션 모델들이 있는데 근데 아카데미한 분야에서 나오는 그런 모델들이 리얼 월드에서도 잘 동작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델을 시도해 보고 저희도 계속 모델의 업데이트를 하면서 모델의 구조가 많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모델이 나오기도 하고.

F

AI 하시는 분들 주위의 지인들 많지는 않지만 보면 이미 답이 정해져 있어요. 답이 어디 있냐면 사실 미국에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걸 만들어서 시장을 새로 개척하기도 하지만 상당히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도 보면 미국에서 이미 플로우 된 거, 그리고 개발도 많이 됐고. 거기를 벤치마킹 플러스 발전. 핸드폰도 그렇잖아요. 우리 삼성이 처음에 핸드폰 만든 회사는 아니잖아요, 노키아라든가. 근데 이미 지금 아이폰 아니면 삼성이잖아요.

F

의료는 의료의 손기술이라든가 의료를 대하는 의료진의 열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케이스라든가 한국을 따라갈 나라는 없는 것 같고 실제 학회를 가거나 아산병원에서 찾아오시는 외국 선생님들을 보더라도 사실 우리가 거의 짱을 먹는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훌륭했어요.

〈의료 인공지능 시장에서의 한국의 강점과 약점〉

흥미로운 것은, 의료 인공지능 분야의 아이디어와 기술 모두 “미국이 답이다”라는 답변을 대부분의 의사들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대부분이 미국에서 개발된 의료 인

공지능이 한국에서 뿌리를 쉽게 내리기는 녹록치 않을것이라고 답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수많은 IT 서비스 영역에서 갈라파고스화되어 시장을 분할한 바 있는 대한민국의 IT 생태계로부터 기인한 집단 기억으로부 말미암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특히 의료 영역은 임상의 대상이 되는 환자 집단이 이질적이고, 규제 환경 또한 이질적이므로, 한국의 독특한 맥락이 인공지능 성패에 더더욱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분석할 수도 있다.

2) 한국 의료 AI 업계의 영업모델

의료 인공지능은 그 자체로 의료 서비스의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레토릭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B가 증언하듯,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정의하기 매우 어렵고, 따라서 시판되고 있는 의료 인공지능 서비스, 혹은 현재 개발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의료 인공지능들도 서로 상이한 관점에서 ‘인공지능’을 다루고 있다.

B

진짜 AI가 아닌데 알고리즘으로 AI라고 하는 경우가 좀 있긴 하거든요. 그런 거 말고는... 그리고 데이터가 20건밖에 안 되는데 좀 늘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의 bluffing 같은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좀 아쉬운 측면도 있긴 한데 (...) 실질적으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은 크게 문제는 없는데 기술이 없는데도 기술이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기술자가 없는데도 기술이 있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있어가지고 (...)

D

결국에는 고령화된 사회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령화된 소위 지불 능력이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의사를 가까이에서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의 수요가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치권에서는 그 사람들의 수요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요. (...) 사실 더 중요하게 추가되어야 하는 것은 고령의 사용자와 고령의 환자들 혹은 어떤 특정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맞춤형된 혹은 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 혹은 UI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E

저희가 우선은 B2C 혹은 B2B로 제공하고 있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타게팅을 웰니스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헬스케어 이걸로 진단을 하거나 하려면 여러 가지 인증도 받아야 되고 그런 허들이 좀 많이 있는데 저희가 바로 프로젝트 론칭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웰니스로 포커싱을 했고, 그런 유사한 프로덕트가 상당히 많아요. (...) AI 모델의 성능이나 정확성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의료기기 인증받았던 다른 의료기기 뭐 손목에 차는 어떤 그런 측정기가 있는데 그런 것보다 더 정확하다는 거, 그리고 액티그래피라고 하는 자이로스코프 센서 기반의 시계 형태의 디바이스보다 더 정확하다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열등성을 검증을 하고 그런 형태로 인증을 조금씩 받아 나가고 있는 그런 거였고, 지금은 혁신의료기기 인증이랑 그런 기초적인 의료기기 인증 같은 것들을 잘 받아가지고 비급여로 처방이 가능한 정도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의료 인공지능의 마케팅 전략 담론〉

따라서 현재 의료 인공지능이 목표로 하고 있는 시장의 영역은 건강과 직접적인 연결성은 떨어지면서도 인공지능을 자연스럽게 도입할 수 있는 웰니스 영역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서비스는 국가의 규제를 극복하기 어려울뿐더러, 시장의 규모도 웰니스 분야가 더욱 크고, 무엇보다도, 느슨한 의미의 인공지능을 활용하면서 마케팅에서의 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3 국가, 인공지능, 그리고 전문가의 새로운 관계맺기

(1) 의사들이 의료 AI를 사용할 동인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의사들은 의료 서비스와 국가 사이의 관계를 인공지능을 통해 어떻게 재구축하고 있을까? 의사들은 인공지능을 매개로 하여 환자들을 다양한 의료 서비스의 영역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동시에, 이러한 의료 인공지능의 처리와 처방이 국가의 공식적인 ‘의료 서비스’의 영역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의료 인공지능의 제도적 편입이 수행되면 의사들은 국가의 건강보험 제도와 인공지능의 수혜를 모두 받는 매개자로서의 위치성을 획득하게 된다.

1) 홍보를 위한 미사여구로서의 AI

A

보톡스의 분자 구조 예측하는 그런 거는 고도화해서 AI를 사용해서 쓰는 것 같긴 한데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marketing terminology로 사용을 하는 것 같고. 이런 미용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AI를 하면 좋지 않을까. 되게 굉장히 로우 레벨이라도 괜찮으니. 사실 미용이라는 거는 표외적인 측면을 증진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에스테틱은 아픈 사람을 낫게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subjective한 영역이고 이런 영역을 좀 objective한 result로 고객 만족을 높여줄 수 있는 terminology가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간간이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거 아이템도 좀 개발해서 나가면서 병원 차리면서 하나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는 있는데 아직 마땅한 건 딱히 없는 것 같긴 합니다.

B

1차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경영을 해봤을 때 수익이 제일의 목적이긴 하고요. CEO가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데에 초점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AI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면 부담 없이 그리고 허들 없이 도입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AI를 도입하니까 업무 효율이 좋아지니까 ‘페이닥터 4명 대신 3명으로 줄이지, 뭐.’ 이런 방식은 아니고 (...) 1차 의원들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포인트들로 보면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포인트로 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 1차 의원에 대해서는 환자들이 약간의 불신을 갖고 있어 그 불신을 인공지능으로써 해소를 하고 이걸 통해서 좀 더 추가 매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표여 가지고요.

I

이제 환자는 이제 계속 자기가 관리를 받는다는 어떤 안도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그게 어떤 그런 안도감이 과학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의료적 관점 그러니까 어떤 의료적 예술이라고 제가 아까 잠깐 잠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긴 했는데 (...) 병원 MC 365라고 하는 병원 비만 치료 병원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AI 소프트웨어를 쓴다고 굉장히 홍보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마케팅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의료적이지 않은 의료 인공지능 담론>

이때, 의료 인공지능은 ‘의료적이지 않은’ 의료 활동에도 개입하게 된다. 환자에게 안도감을 주는 수식어로 사용되거나, 위험이 극히 적은 비침습적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등의 예가 그것이다.

2) 의료화의 정당성의 도구로서의 AI

많은 의사-인공지능 전문가들은 기존에 의사들이 다루었던 것보다 훨씬 광범위한 행위들이 새로 ‘의료’의 영역으로 편입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원래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았던 다양한 몸의 형태, 증상, 농도 등이 의학적인 개입을 필요로 하는 객체로 재해석 되는 과정을 수반한다. ‘의료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가령 B는 ‘키’라는 의학적 정보가 의학적 개입을 필요로 하는 객체로 재해석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뼈 엑스레이 분석이 뼈와 키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 새로운 수단이 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는 인공지능의 수사적 설득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의료화 현상이라고 진단할 수 있다.

B

일단 첫 번째로는 손 엑스레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예이긴 하고요. 소아 손 엑스레이가 있는데요. 소아 손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성조숙증 진단을 해가지고 성장호르몬 맞추는 데 주로 도움이 되는데요. 실제로 1차 의원에서는 성장호르몬을 맞추기 위해서 많은 마케팅 역량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 전에 손 엑스레이를 찍고 객관적으로 인공지능이 분석했을 때 성조숙증이나 아니면 저성장이 진단이 된다면 보호자에게 인공지능을 설명을 하고 성장호르몬을 처방할 수 있고요. 그게 일단 하나고.

I

AI가 도입됨으로써 이제 주목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시장화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의료가 굉장히 분야가 많지만 예를 들면 이 암 환자가 치료를 받았을 때 적극적으로 치료를 할 때 생존율이 얼마나 될 것이냐 그러면 이제 정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의 어떤 판단을 하는 어떤 의료수요는 시장 같은 것들은 지금까지는 많이 없었지만 앞으로 많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다 하죠. (...) 지금까지는 그냥 의사의 주관적인 경험에 의존했던 부분이 많은 거죠.

〈인공지능의 마케팅 요소 담론〉

3) AI와 새로운 시장의 개척

의료화는 필수적으로 의료 서비스의 범위의 확장과 더불어 의료 비용의 양적인 팽창을 불러온다. 개별 의료 행위에 대한 수가가 증가하지 않더라도, 환자들은 인공지능을 매개로 하여 더 다양한 현상에 대해 의사를 만나고 처치를 받게 된다. 이는 새로운 시장이 될 뿐 아니라, D가 말한것과 같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도 한다. 미충족 의료 수요는 존재했다기 보다는 새로 구성되는 것이 된다.

B

AI 업체는 사실 크게 발전할 것 같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수가나 아니면 건강보험 문제 때문에 한계가 좀 있을 걸로 보이긴 하고요. 주로 비급여 영역에서는 많이 치고 나갈 걸로 보이고 있긴 한데 (...) 여기서 개발된 걸 바탕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성공할 수 있다면 그 기업은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내로는 또 데이터 양도 작고 환자 수량도 작기 때문에 국내 인공지능으로는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

D

내가 관심 있는 거, 내가 환자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내가 무슨 어떤 practice를 할 수 있을지, 어떤 기술로, medical unmet needs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를 미충족 의료 수요를 만들어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해서 해왔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본과 4학년 때 창업에 도전을 해보기도 하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D

제가 좀 직관적인 표현으로 의대 안에서는 제한되어 있는 환자 파이를 놓고 내가 얼마나 큰 파이를 먹을 것인가를 놓고 혹은 비싼 파이를 먹을 것인가를 놓고 땅따먹기 싸움을 한다고 저는 느꼈어요. 피부과를 하든 성형외과를 하든 무슨 재활의학과를 하든 돈 많은 사람들 혹은 돈이 되는 사람들 혹은 많은 사람들, 정형외과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더 큰 파이를 먹기 위해서 싸우는 시장이라고 저는 봤는데 그게 아니라 파이를 만들면 안 되나.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미충족 의료 수요는 어디든지 있을 것 같고 발견한 사람의 몫일 텐데 발견을 해서 그게 큰 파이든 작은 파이든 파이를 만들기만 하면 땅따먹기 하는 저 우수한 인력들을 낭비하지 않아도 될 텐데, 저는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AI 기술이 아주 cost efficient하게 진입 장벽을 낮춰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

할 수 있게 풀었다.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그렇다고 너도 나도 다 암 표지자 재고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 이미 벼랑 끝에 다다랐기 때문에 이런 드라마틱한 변화들이 자주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의 그 행위별수가제라는 체계 안에서는 더 이상 그 부담을 감당해 줄 건강보험 재정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분명히 하는 기업들이 있었죠. 하지만 안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대한민국 의료 인공지능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경로 담론〉

(2) 환자들이 의료 AI를 사용할 동인

1) 환자의 알 권리와 의사의 ‘숨길 권리’의 충돌 및 책임의 문제

의료 인공지능의 잠재적 문제는 바로 기능적 정밀성과 데이터 처리의 효율성의 영역 바깥에서 벌어지는 제도적 접점으로두터 발생하기 시작한다. 새로 개발되는 미충족 의료수요는 의료 인공지능의 도입과 확장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환자들은 더더욱 자신의 몸의 스스로 의료화 하며 다양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발생시킨다. 의사들은 이러한 흐름으로부터 이익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성찰적인 걱정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환자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인공지능으로 해 주는 의료는 정당하고 좋은 의료인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것이다.

A

의료 기술을 그러면 그거를 그 장벽을, 진료실에 오는 장벽을 무한정으로 풀어버리는 게 그러면 과연 국민 보건에 좋은가.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것들에서 이해관계가 걸리는 거고. (...) ‘그렇게 돼서 진단되고 알게 되면 좋아지겠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됐을 때 문제점은 뭐가 생기지 않을까. 과다한 진단 혹은 정확하지 않은 그런 두려움으로 인한. (...) 간에 대해서 딱 찍기만 하면 간에 대한 질병이 짝 나오는 게 나왔어요. 인기를 끌었어요. 근데 거기에 광고가 붙어요. 간장 질환, 간에 좋은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간에 좋은 (...)

D

환자의 입장에서 환자가 나는 AI에게 진료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지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다고 생각을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환자와 의사 간의 관계가 사실은 환자의 치료 수용도나 혹은 치료 효과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주는 요소가 분명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무시하고 AI가 정확한 팩트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정답이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환자의 알 권리에 대한 담론〉

특히 인공지능의 결정을 둘러싼 책임소재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논란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의 판단이 인간 의사의 판단과 정면으로 대립할 때, 그리고 이 대립이 잠재적인 분쟁의 가능성이 있을 때 어떤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다음 장에서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이러한 문제를 점검하겠다.

D

두 번째는 아까 행위의 주체 측면에서 내가 했던 practice나 내가 했던 처방이나 내가 했던 진단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느냐, 누가 법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갈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AI 만든 사람이냐, AI한테 데이터를 준 사람이냐, AI를 쓴 사람이냐. 사실 아무도 없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 누구도 사실은 되게 partially 책임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과정에서 결국은 그 AI를 사용한 의사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테니 의사보다 AI가 priority한 어떤 결정권을 갖는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F

AI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사회·경제 모든 법적인 것들 지금 의료 쪽으로 생각하면 많이 복잡한 상황이지만 AI는 발전을 해야겠죠. 시대 흐름이기도 하고 이미 여러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런 게 발전하고 있으니까,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발전해 나간 거는 사명을 갖고 해나가야 되고, 그걸 어떻게 접목시키고 어떻게 윤리적인 문제나 어떻게 그걸 적용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거는 많은 위원회도 이미 생겨 있지만 함께 논의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I

(원래는) AI 없이도 사실 의사들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지 않겠습니까? 사실 쉽지는 않지만 지금의 관례를 봤을때는 최종적으로 결국 그 어떤 환자에게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그 주치의. 그 주치의가 사실은 책임을 더 많이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루틴한 것들을 AI가 대신하는 걸 의사가 일일이 다 감독을 못 하다 보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면 그걸 감독을 하지못하는 의사가 책임을 져야 될 텐데 과연 이제 그 의사는 그러면 나는 돈 내고 이걸 썼는데 왜 내가 책임을 져야지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연 거기서 그런문제가 구체적으로 사례별로 생겼을 때 책임의 비율을 이제 어느 정도로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아직까지는 고위험 시장에는 지금 진출을 안 하는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겨도 그냥 별 상관없는 그런 분야에서 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이제 그런 것도 있거든요

I

AI 없는 상태에서도 예를 들어 항암 치료를 할 때 너 이제 3세대 항암제가 있고 2세대 항암제가 있는데 3세대 항암제가 훨씬 더 효과는 좋지만 만약에 치료에 실패하면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다. 하지만 2세대를 하면 효과는 당장 좀 더딜 수 있지만 실패해도 3세대 항암제를 다시 쓸 수 있다 어떤 걸 선택할래 그러면 환자가 사실 이걸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떻게 이런 선택을 정답이 없기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환자에게 이렇게 선택을 하라고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어떤 의사가 책임을 많이 환자에게 미루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AI가 만약에 적극 도입이 되어서 그런상황이 된다면 더더욱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겠죠.

〈책임 소재의 재편에 대한 문제〉

제4절

미래 시나리오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미래 시나리오 A: 환자의 선택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시장주 의적 의료

근거

- 현재 인공지능은 고위험 환자에게는 잘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미용, 진단, 이미지 스캐닝 등 의료 행위의 일부 분야에서만 활용되고 있는데, 이는 연해 인공지능이 내리는 의료적 결정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기 때문임
- 또한, 고위험 환자를 위한 인공지능보다는, 저위험 고비용 시술을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이 시장 경쟁력이 높으므로, 인공지능 개발 업계의 자연스러운 시장경제적 흐름으로 인한 측면도 있음
- 그러나, 미국을 비롯하여 의료비용이 매우 높은 국가들에서는, 고위험 환자에 대한 합리적인 처치가 보험회사, 병원 등의 이익 집단의 수익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이로 인해 고위험 환자를 위한 인공지능 (e.g. 암 환자를 위한 치료 시나리오 제공을 위한 인공지능)이 개발되고 있음
- 따라서 대한민국에서도 이러한 고위험 환자들을 위한 인공지능기술이 도입되는 것이 먼 미래가 아니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의료적 결정의 책임이 주치의에서 연계된 타 의사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회사, 더 나아가 모든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환자 본인에 이르기 까지 확산될 수 있음
- 이는 도덕적 책임 소재에 대한 논쟁을 넘어, 의료 분쟁이 발생될 시, 새로운 종류의 사회적, 경제적 갈등이 유발될 수 있음을 의미함

미래 시나리오

A 환자는 말기 암을 진단받았으며, 의료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시나리오를 예측해본 결과, a 항암제를 활용하였을 때 생존확률 20%, 예측 수명 3년, 치료 기간동안의 삶의 질은 비교적 높을 것임을, b 항암제를 활용하였을 때, 생존 확률 40%, 예측 수명 5년, 그러나 치료 기간동안의 삶의 질은 매우 낮을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인공지능의 판단을 믿고 A 환자와 그 가족들은 b 항암제를 활용하기를 희망했으나, 주치의는 a 항암제가 한국인들에게 더 높은 완치율을 보이기도 한다면서, 미국에서 개발된 인공지능의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환자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할 문제는 무엇일까?

선택 a: 의사를 신뢰한 환자 A는 한국인에 대한 임상 정보가 충분히 포함되지 않은 인공지능을 불신임하기로 하였고, a 항암제로 치료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치료를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A 환자는 예측 수명 3년이 되기 이전에 사망하였다. A씨의 유족은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인공지능의 합리적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말라고 의사라 잘못 판단하여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법적인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선택 b: 의사의 권고에도, A 환자와 가족들은 인공지능의 합리적인 제안을 신뢰하기로 하고 b 항암제를 활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b 항암제를 활용한 치료 과정은 매우 험난하였고, 환자는 오랫동안 투병했음에도 불구하고 5년의 기대 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A 환자의 유족은 인공지능의 오류 가능성을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망자의 남은 삶을 고통스럽게 허비하였다는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병원과 의사는 인공지능이 오판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고지하였기 때문에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A 환자의 유족은 어떤 판단을 했어야 했을까?

위와 같은 시나리오는 ‘합리적 의사결정의 주체’로서의 인공지능이 고위험 환자에 대한 의사결정에 도입되었을 때, 환자의 판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갈등의 국면을 의미한다.

2 미래 시나리오 B: 국가 의료보험 재정의 고갈과 AI 산업의 기회주의

근거

-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 AI 시장은 미국을 비롯한 타 선진국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발달한 국가 건강보험을 활용하여 성장하고 있음. 즉, 국가 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이 되는 순간 “대박”을 노릴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고수하고 있음.
- 현재, 미용, 성장 등 고위험이 아닌 기술을 중심으로 의료 AI가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기기들이 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이 되기 어려움으로 큰 문제가 없지만, 장차 환자의 치료에 활용되는 다양한 AI들이 등장하게 되면, 이에 대한 국가 건강보험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재편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보임
- 즉, 의료 인공지능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자사의 인공지능이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인데, 이를 바탕으로 수많은 의료 인공지능을 건강보험 급여의 대상으로 편입시키다 보면, 의료보험 재정의 고갈 및 모델 해저드의 위험이 대두될 수 있음
- 사설 보험의 영역에서도 의료 인공지능 전용 보험상품이 출시될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가계 부담의 요인으로 떠오를 수 있음

시나리오

의료 인공지능기업 A는 유방암 환자들의 치료 경과를 정밀하게 진단하는 영상 판독 인공지능 프로그램 a를 개발하였다. A 기업은 a 인공지능이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의 매일 매일의 치료 경과를 효과적으로 추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초음파 검사와 조직 검사에 의존하는 것에 비해 환자의 알 권리를 획기적으로 진전시켜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10년에 가까운 시도 끝에 A 기업은 a 인공지능 서비스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인정하는 의료보험 급여 대상 ‘디지털 치료제’로 허가를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결과: 이제 a 인공지능은 유방암에 걸린 환자들이라면 누구나 사용하는 ‘국민 인공지능’이 되었다. 진단 기술이 정밀해 지면서 유방암 환자 수는 폭증했고, 이들은 누구나

강박적으로 매일 매일 새로운 진단을 받고 싶어 했다. 이윽고 a 인공지능의 활용으로 인한 건강보험 지급 신청액이 폭증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타격이 발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또한 a의 사례는 다른 의료 인공지능업계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각기 탁월한 효능을 주장하는 수많은 의료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국가 건강보험의 적용을 비허가할 명분을 점차 잃게 되었다.

제5절

결론 및 논의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인공지능은 의료서비스를 바꿀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그렇다고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변화가 어떤 성질의 변화인지에 대해서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인공지능과 의료의 관계는 두 가지 극단적인 방식의 접근으로만 점철되어 왔다. 인공지능으로 인한 의료의 진보,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인한 의료 전문가의 대체에 대한 논의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 두 접근은 공통적으로 의료의 복잡한 사회현상이며, 의사, 의료주변인력, 국가, 시장, 환자 모두가 '의료 행위'를 구성하고 있는 적극적 행위자라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자들이 함께 의료 행위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은 또 하나의 행위자 집단으로 의료 행위에 개입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공지능은 기존의 전문가, 국가, 시장, 환자의 구도 내에서 작동할 수밖에 없으며, 외생적 변수로 이 모든 것을 일변도에 바꾸어 놓을 기술적 외부효과로 작동하기 어려운 것이다.

본 장은 의료 전문가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은 도출점들을 찾아 내었다.

첫째, 의료 인공지능은 외생적 기술로 의료 행위에 이식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 전문가들을 필수통과지점으로 하는 권력관계 내에서 만들어지고 적용될 것이다. 의료 AI는 그 최종 비용 부담을 환자가 하게 될 지라도, 많은 경우 그 주요 고객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 혹은 의사들이 소속된 기관이다. 따라서 의사들은 이미 행해지고 있는 의료 활동의 수익 구조 내에서 작동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선호도에 포착되지 않는 인공지능은 다양한 규제적 장벽을 넘는 기간동안 생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전문가로서의 의사의 권력구조를 침범하는 인공지능은 의사들 스스로에 의해 거부될 공산이 크며, 의사들 또한 본인들의 의료적 윤리성과 보수성을 수사로 하여 '인간이 직접 해야 하는 의료 영역'에 대한 주장을 펼칠 역량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인공지능은 의료행위의 확장된 주체로서의 국가와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편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맥락에서의 국가의 역할이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

다. 대한민국은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선진국 중에서도 의료의 공공화가 매우 높게 진행되어 있는 국가이다. 따라서, 의료행위에 도입되는 신기술 혹은 신약은 모두 국가 건강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시장에서의 성패가 1차적으로 갈라지게 된다. 의료 AI는 기존에 존재하는 의료 행위를 ‘더 잘’ ‘더 정교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존재하지 않던 질병을 새로 개발하거나, 의료적인 것으로 해석된 적이 없는 데이터를 의료적인 처치가 필요한 것으로 전환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의료’행위의 범위로 책임지고 보조해야 하는 행위의 외연이 넓어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며, 의료 인공지능 시장의 폭발은 이와 맞물려 국가 건강보험 재정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의료 인공지능의 장밋빛 시장 전망과 의료 행위에서의 낙관론으로 점철된 목소리 외에도, 의료를 더욱 국가가 규제하고 책임지는 영역으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그리고 인공지능 또한 이러한 규제와 관리의 영역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소수 의견이 점점 그 힘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된다. 인공지능은 이미 ‘이머징 시티즌’을 넘어 다수의 권력 객체의 표상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인공지능을 둘러싼 담론에는 권력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이 존재한다. 의료 전문가는 사회 전체적으로는 권력 집단 혹은 특권 집단에 가까운 것으로 분류할 수 있겠지만, 인공지능에 대해 경고하고 국가와 시장의 책임을 묻는 범주 내에서는 이머징 시티즌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제5장

이머징 시티즌으로서의 외국인 유학생과 미래

제1절 왜 외국인 유학생인가?

제2절 '지방'에 온 중국인 유학생

제3절 유학의 맥락과 계기

제4절 유학 경험과 미래 전망

제5절 한시적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중국인 유학생

제 1 절

왜 외국인 유학생인가?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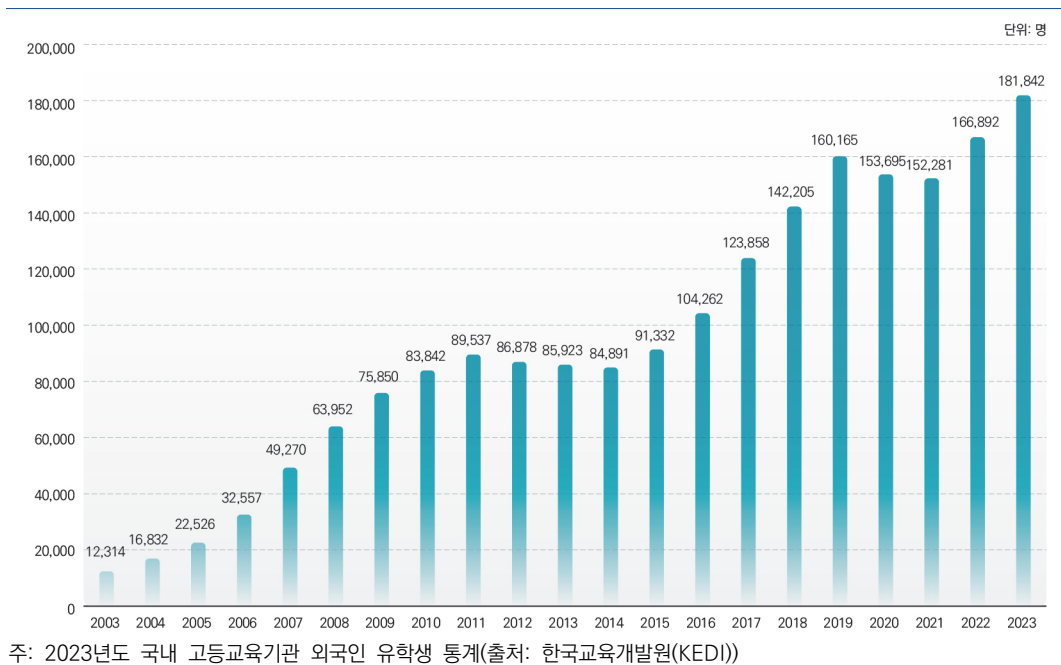
이 장은 이머징 시티즌의 사례로 학업을 위해 한국에 온 ‘외국인 유학생’에 주목한다. 즉 학업을 위해 한국의 공식 교육 기관에 적을 두고 한국에 체류했거나 체류하는 외국 국적의 학생이다. 이들은 외국인이지만 여러 의미에서 ‘이머징 시티즌’의 개념에 부합하는 대상이다.

먼저 향후 한국사회의 변화에 따라 유학생의 유입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나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 간 이동의 흐름이 확대되고 심화되는 가운데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사회경제적 개발 수준이 높아지면서 아시아 지역에서의 고등교육의 국제화도 심화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각국에서의 교육 경쟁이 심화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전반적인 출산율 감소 경향에서 대학끼리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제 유학의 흐름도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아시아에서 서구 국가로의 이동이 주된 흐름이었다면 최근에는 아시아권 내의 이동이 활발해 지고 있다(Jon, Lee and Byun, 2014). 그 가운데 한국이 아시아 국가 출신 청년들의 주된 목적지로 부상하고 있다(Jon, Lee and Byun, 2014). 이러한 유학생의 흐름은 아시아 지역의 성격을 새롭게 바꾸는 주요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Pfaff-Czarnecka1, 2020).

한국사회의 맥락도 유학생의 유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이래 저출산 경향이 심화되면서, 이른바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2020년대 후반부터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민 정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신지원, 2011; 김태환, 2017; 설동훈, 2017; 외국인정책위원회, 2018; 이혜경, 2019; 조영희·이혜경·고상동, 2021; 이상직, 2023).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유치 경쟁의 일환으로 한국의 대학과 정부는 유학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박소진, 2013). 이에 따라 매년 유학생 규모가 꾸준하게 증가했다.

[그림 5-1]은 전문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에 적을 둔 유학생의 수를 2003년부터 집계한 것이다. 유학생은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까지 가파르게 증가했다. 이후 갑작스러운 유학생 규모 증가에 따른 문제를 인식한 정부가 유학생 유치의 질을 강화하겠

다는 취지로 정책을 엄격하게 다듬으면서 증가세는 다소 둔화되었다(김성은·이교일, 2019: 71-72). 그러나 정책 정비를 한 차례 한 2010년대 중반부터는 다시금 증가세가 가팔라졌다. 코로나 대유행 시기였던 2020-2021년에 유학생 규모가 줄기는 했지만 2022년에는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2023년 기준 한국에 체류하는 유학생은 18만 명이다. 이는 적은 규모가 아니다. 같은 해 대학입학가능 인구 40만명의 약 절반 가까이 되는 규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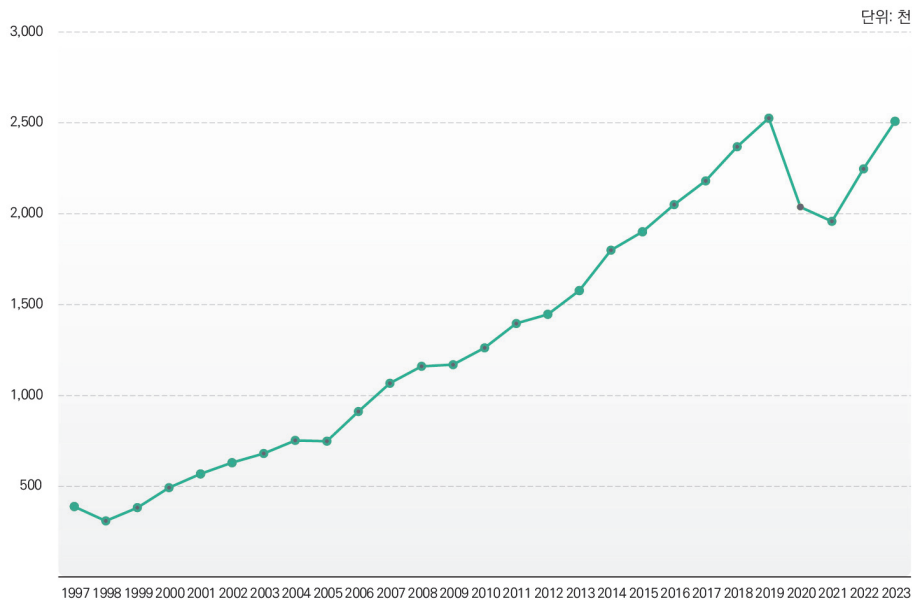


[그림 5-1] 연도별 고등교육기관 유학생수(2003-2023년)

유학생의 규모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8월 16일에 교육부는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스터디 코리아 300K 프로젝트)’을 발표했다.¹⁰⁾ 외국인 유학생을 2027년까지 30만 명으로 늘려 유학생 점유율(2020년 13위)을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린다는 게 골자다. 이는 5년 내에 12만명을 늘리겠다는 것으로 야심찬 목표다. 이러한 전망은 외국인 일반의 증가 추이와도 연결해 해석해 볼 수 있다([그림 5-2] 참조). 1998년에 30만 여 명이었던 체류 외국인 수는 2001년에 50만 명을 넘었

10) 교육부 보도자료(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유치로 세계 10대 유학강국으로 도약한다: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 발표)(2023.8.16.)

고, 2007년에 100만 명을 넘었으며, 2013년에는 150만 명을, 2016년에는 200만 명을 넘어섰다. 코로나 대유행을 계기로 증가세가 꺾이기는 했지만 2022년부터는 다시 상승세로 전환해 2023년에는 25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전체 인구의 약 5%에 달하는 규모이다. 그 규모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은 이주배경 인구가 2020년 218만 명(총인구 중 4.2%)에서 2040년 323만 명(총인구 중 6.4%)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주배경 학령인구(6~21세)는 2020년 30만 명에서 2040년 47만 명으로, 향후 20년간 1.6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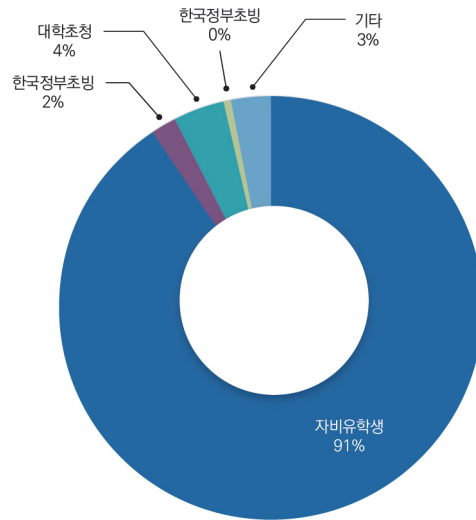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각 연도; 출처: e-나라지표

[그림 5-2] 체류외국인 수(1997-2023년)

이러한 체류 외국인 증가 추이를 배경으로 주목할 지점은 유학생 유치 맥락의 변화이다. 한국 정부나 대학이 초기에 유학생을 대하는 태도는 지극히 도구적이었다. 학령 인구 감소에 대비한 학생 유치의 일환으로, 대학재정 확보의 수단으로 유학생 유치에 접근했다(박소진, 2013). 실제로 [그림 5-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23년 기준 유학생의 91%는 자비유학생이다. 한국정부초청 유학생은 약 2%에 불과하고, 대학초청 유학

11)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 2020~2040년」(통계청 보도자료, 2022년 4월 14일).

생도 4%에 불과하다. 물론 자비유학생의 상당수가 여러 형태의 장학금(주로 등록금 감면)을 받지만 기본적으로는 학비 및 생활비를 자비로 충당하는 형태이다. 외국인 학생의 수업료는 대학 등록금 관리 정책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국인 유학생 수업료는 등록금 인상률 산출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렇기에 대학은 상대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수업료를 유연하게 책정할 수 있다.¹²⁾



주: 2023년도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통계(출처: 한국교육개발원(KEDI))

[그림 5-3] 유학 형태별 유학생 비중(2023년)

그러나 최근에는 유학생을 졸업 이후 정주할 가능성이 있는 이들로, 정주 가능성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이들로 여기기 시작했다(이창원 외, 2020). 앞에서 소개한 교육부의 ‘스터디 코리아 300K 프로젝트’에서 주목할 지점도 한국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과 정주’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이 계획은 ‘지역의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방안으로 “대학-기업-지자체 간 유학생 유치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지역의 산업이란 주조, 금형 등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이나 조선 관련 산업, (노인)돌봄 분야 등이다.¹³⁾

12)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올라 유학생들 불만...우리가 만만?”(한국대학신문, 2017.9.4.), “유학생 등록금 올려 곳간 메우는 대학들.”(한국경제, 2024.1.26.)

13) 관계부처 합동. “글로벌 교육선도국가 실현을 위한「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 Study Korea 300K Project -”(2023. 8.)

물론 이 계획에는 여전히 도구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한 지점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유학생의 지위를 다르게 보게 되었다는 점에서 관점의 변화가 시작된 것만은 분명하다. 특히 소수의 ‘우수 인재’에게만 정주 비자를 주겠다는 방침에서 다수의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정주를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 전환의 배경에는 현실적인 고려도 있다. 이미 여러 지역에서 다수의 유학생이 지역 노동시장에 참여해 생산자이자 소비자로 생활하고 있다.¹⁴⁾ 지역 인구 감소 경향이 심화되면서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에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지고 있다. 중앙의 시각에서는, 수도권외의 맥락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위치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지역에서는 유학생이 이미 학교 안과 밖에서 중요한 주체로 성장하고 있다. 이는 특정한 외국인을 ‘시민’으로 규정했던 기존의 접근법에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한다.

과거 유학생의 여러 흐름을 보면 유학을 계기로 그 나라와 맺게 된 관계는 유학생들 스스로에게 지속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학을 계기로 맺어진 두 나라의 관계에도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의 꾸준한 유입은 한국사회의 변화를 전망할 때에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인일 것이다. 이들의 체류 성격도 한시적 체류에서 정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이창원 외, 2020). 이들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좁게는 대학에서부터 노동시장,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유학생에 대한 한국사회의 시선이 피상적이었다(박소진, 2013). 향후 이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가 한국사회의 미래를 전망할 때에 중요한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이상직, 2020). 이러한 관점에서 이들의 경험을 확인하고 관련된 사회변화를 해석해 보는 작업을 해 보고자 한다.

유학생의 위치는 이 보고서의 연구 전체가 공통의 토대로 삼고 있는 ‘이머징 시티즌’ 등장을 포착하는 틀에도 부합한다. ‘이머징 시티즌’이라는 표현은 미래 연구에서 ‘이머징 이슈’를 포착하고 해석하는 틀에서 떠올린 것이다. 한국에서 이머징 이슈 연구를 꾸준히 해 온 박성원과 김유빈은 이머징 이슈가 트렌드가 되기 직전의 특징을 네 가지로 제시한 바 있다(2022: 7-9). 첫 번째는 과거와의 단절을 초래하는 촉매 사건의 발생이다. 이것은 위험성을 사전에 경고하는 작은 목소리들이 촉매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트렌드로 성장한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촉매 사건’이라는 형태로 그 이전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새로운 현상의 지속을 강조한 것이다. 저자들이 제시한 예는 독성물질 피해 확

14) “지방대 생존, 지금 우리 학교는.”(추적60분, KBS, 2024.3.8.), “인구절벽 3부 외국인 유학생 모십니다.”(PD수첩, MBC, 2023.11.7.)

산에 따른 사용금지 조치 도입이다. 두 번째는 새로운 이해관계자의 등장이다. 이것은 새로운 현상에 대한 대응법을 두고 경쟁하는 개인과 조직의 등장을 표현한 것으로 저자들이 예로 든 사례는 네덜란드의 2000년의 성매매 합법화 결정이다. 세 번째는 경계 허물기 현상이다. 이는 기존에는 서로 다른 영역으로 여겨졌던 정보나 현상이 새로운 현상의 등장으로 새롭게 연결되고, 그에 따라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는 경향성을 표현한 말이다. 저자들이 제시한 예는 인공지능이다. 저자들은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기술, 윤리, 법, 사회과학 분야가 융합되는 현상에 주목하였다. 마지막 특징은 새로운 방향성의 등장이다. 이는 앞의 세 가지 특징의 결합에 따른 일종의 결과적 현상으로, 저자들은 webometrics(월드와이드웹이 정보를 취합하는 특성을 분석하는 학문)와 같은 새로운 연구 분야의 등장을 예로 들었다.

저자들이 제시한 예와 위상은 다소 다르지만 외국인 유학생 유입의 흐름, 또는 이 흐름을 추동하는 주체인 외국인 유학생은 이머징 이슈의 트렌드화의 네 가지 특징을 일정 수준 담지하고 있다. 먼저 외국인 유학생 증가의 경향은 적어도 당분간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 흐름에 따른 사회 변화를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국면의 등장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유학생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 좁게는 대학의 유학 담당자와 교수, 학생들이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다. 넓게는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다양한 주민들이 관계 맺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유학생들끼리의 관계도 기존 한국사회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성격의 관계이다. 이렇게 형성된 관계는 지역 정부나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새로운 조직이나 인력을 요청하는 힘이 될 수 있다. 유학생의 증가는 유학생을 중계하는 유학원 종사자나 유학생의 체류 자격과 관련된 서류 업무를 맡게 되는 행정사와 같은 새로운 직업 활동을 낳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해관계자의 등장은 기존의 내국인-외국인 관계를 새롭게 재편하는 촉매가 될 수도 있다.

새로운 이해관계자의 등장은 자연스럽게 기존의 경계를 허무는 경향으로도 나타난다. 최근 한국 정부는 외국인 이주자의 '체류', 또는 '정주'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를 과거와 같이 이주민을 특정한 조건에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인력'으로 보던 것에서 잠재적 거주민으로, 나아가 한국인으로 보겠다는 관점의 전환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이것은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여성', '유학생'과 같이 따로 떼어 논의되었던 이주자의 흐름을 서로 교차하게 할 계기가 될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겠다거나 외국인 노동자가 대학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겠다는 논의가 한 예이다.¹⁵⁾ 물론 경제의 해체가 마지막 특징으로 소개된 ‘새로운’ 방향성 제시로 이어질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다만 한국 사회의 여러 현장에서 새로운 흐름이 국지적으로나마 만들어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한 현장은 한국 사회의 “미래를 먼저 경험”(김영화, 2024)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요컨대 이 장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이머징 시티즌’의 관점에서 해석해 보려는 것은 이들이 ‘이머징’의 의미에, ‘시티즌’의 의미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이 작업에서 우리는 이들을 잠재적 시민이거나 한시적 시민, 유연한 시민(Ong, 1999)으로 주목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 장에서 살펴보려는 이들은 중국인 유학생이다. 중국인에 주목하는 것은 이차적으로 이들의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이 연구가 주목하는 측면은 ‘지방’이라는 지역적 맥락이다.

2절에서는 ‘지방’에 체류하는 중국인 유학생의 위치를 통계 자료와 기존 문헌 자료 등을 활용해 파악한다. 3절과 4절에서는 지역의 한 대학을 현장으로 중국인 유학생의 유학 맥락과 동기, 경험, 평가와 전망을 살펴본다. 5절에서는 이들의 경험이 한국사회에 시사하는 점과 그에 따른 정책 과제를 정리해 본다. 이 장의 글의 자료는 연구자가 경험한 생활세계에 대한 관찰과 인터뷰, 그리고 기존 문헌에서 확인 가능한 사례들이다. 이들 사례를 종합해 유학생 흐름의 성격과 의미를 이머징 시티즌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해 보고자 한다.

15) “법무부, 비자 제도 개선을 통해 유학생을 지역 사회에 정착할 인재로 키웁니다.”(법무부 보도자료, 2023. 6. 23.) 이 보도자료에서 법무부는 “해외 우수인재 유치 및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자제도 개선과 시간제 취업 제도 개선을 제시하였다. 비자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유학 비자 발급 시 필요한 재정능력 심사 기준을 완화한다. 둘째,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유학 활동 병행을 가능하게 한다. 셋째, 유학생의 한국어능력 입증 방식을 다양화한다. 시간제 취업 제도와 관련해서는 (전문)학사과정의 시간제취업 시간을 주당 20시간에서 25시간(조건에 따라 30시간까지 가능)으로 확대하고 방향 중에는 (단순노무 분야가 아닌) 전문 분야에서 인턴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며, 법으로 정한 ‘현장 실습’에 참여할 경우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지 않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2절

'지방'에 온 중국인 유학생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이 장이 주목하는 것은 중국인 유학생이다. 중국인 유학생에 주목하는 것은 중국 출신자가 유학생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5-1]에서 확인했듯이 2023년 기준 유학생은 181,842명이다. 이들을 출신지역별로, 또 한국에서 속한 과정별로 분류해 본 것이 [표 5-1]이다.

18만명은 어학연수, (전문)학사과정, 대학원과정, 기타연수로 구분된다. 가장 비중이 큰 것은 학사과정생으로 약 8만명이다. 대학원 과정에는 약 5만명이 있다. 어학연수나 기타연수 과정으로 체류하고 있는 이들이 나머지 5만명 정도 된다.

출신지역으로 보면 단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은 아시아이다. 아시아 출신자는 약 16만명으로 절대 다수(약 90%)를 차지한다. 그 비중은 '기타 연수' 항목을 제외하면 모든 과정에서 유사하다. 아시아 지역 출신 유학생은 학사과정에 약 7만7천명이, 석사과정에 약 2만7천명이, 박사과정에 약 1만7천명이 있다.

[표 5-2]는 2010년대 후반 이래 국가별 유학생 수를 나타낸다. 6개 상위권 국가 중 미국을 제외한 5개 국가가 아시아 지역 국가이다. 그 중 다수를 차지하는 국가는 중국과 베트남이다.

〈표 5-1〉 출신지역별 유학생수(2023년)

지 역	아학 연수	과 정 별																		기타 연수	합 계
		대학(전문대학)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인문 사회	공학계	자연 과학계	예체능 계	의학계	계	인문사 회	공학계	자연 과학계	예체능 계	의학계	계	인문 사회	공학계	자연 과학계	예체능 계	의학계	계		
남아메리카	309	189	52	26	31	0	298	176	64	17	12	3	272	9	33	11	0	1	54	181	1,114
북아메리카	596	729	91	105	102	20	1,047	438	67	36	36	18	595	119	54	36	19	33	261	1,785	4,284
아시아	34,110	53,055	11,029	4,346	8,992	30	77,452	19,626	2,556	1,064	3,569	165	26,980	7,489	3,102	1,543	4,567	301	17,002	6,778	162,322
아프리카	350	314	219	48	26	0	607	762	284	113	8	7	1,174	225	254	115	1	14	609	144	2,884
오세아니아	51	80	16	14	12	2	124	54	8	3	7	2	74	13	4	5	0	1	23	125	397
유럽	2,558	1,098	170	83	206	2	1,559	773	77	35	29	3	916	76	59	47	7	3	192	5,615	10,841
합계	37,974	55,465	11,577	4,622	9,369	54	81,087	21,829	3,056	1,268	3,661	198	30,011	7,931	3,506	1,757	4,594	353	18,141	14,628	181,842

주: 2023년도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통계(출처: 한국교육개발원(KEDI))

[표 5-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0년대 후반 시점에서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은 7만명 내외로, 전체 유학생 가운데 40% 내외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비중이 큰 국적은 베트남이다. 2018년의 2만7천여명에서 2023년의 4만3천여명으로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2023년 기준으로 전체 유학생의 23.8%). 다음으로는 우즈베키스탄이나 몽골 등 중앙아시아 지역 출신자들이 많다. 베트남 유학생의 수가 많아지면서 중국인 유학생의 비중은 2018년의 48.2%에서 2023년의 37.4%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5-2〉 주요 국가별 유학생 수(2018~2023)

국가	중국	베트남	우즈베크	몽골	일본	미국	기타	계
2018	68,537	27,061	5,496	6,768	3,977	2,746	27,620	142,205
비율(%)	48.2%	19.0%	3.9%	4.8%	2.8%	1.9%	19.4%	100.0%
2019	71,067	37,426	7,492	7,381	4,392	2,915	29,492	160,165
비율(%)	44.4%	23.4%	4.7%	4.6%	2.7%	1.8%	18.4%	100.0%
2020	67,030	38,337	9,104	6,842	3,174	1,827	27,381	153,695
비율(%)	43.6%	24.9%	5.9%	4.5%	2.1%	1.2%	17.8%	100.0%
2021	67,348	35,843	8,242	6,028	3,818	2,218	28,784	152,281
비율(%)	44.2%	23.5%	5.4%	4.0%	2.5%	1.5%	18.9%	100.0%
2022	67,439	37,940	8,608	7,348	5,733	3,369	36,455	166,892
비율(%)	40.4%	22.7%	5.2%	4.4%	3.4%	2.0%	21.8%	100.0%
2023	68,065	43,361	10,409	10,375	5,850	3,214	40,568	181,842
비율(%)	37.4%	23.8%	5.7%	5.7%	3.2%	1.8%	22.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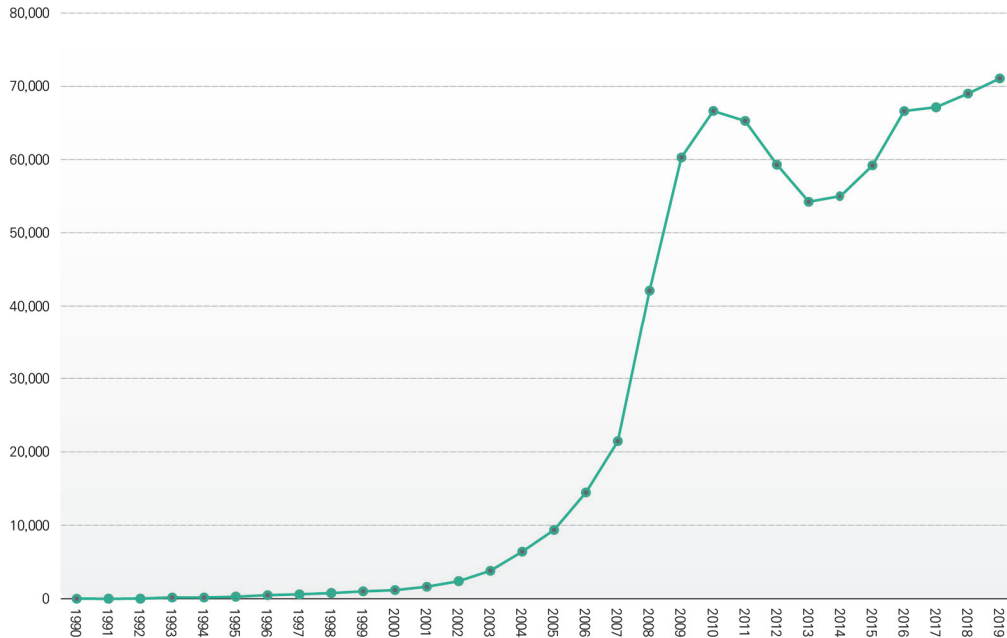
주: 2023년도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통계(출처: 한국교육개발원(KEDI))

[표 5-3]은 전체 유학생의 61.2%를 차지하는 중국과 베트남 학생의 과정별 숫자를 나타낸 것이다. 이 표를 보면 베트남 학생의 경우 어학연수 과정에 적을 두고 있는 이들의 비중이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학부 과정에 있는 이들의 비중이 크다. 즉 베트남 유학생의 최근 증가세는 어학연수 과정생이나 학부생의 증가가 추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여전히 대학원 과정을 포함한 고등교육 기관의 주요 과정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유학생은 중국 출신이다.

〈표 5-3〉 중국과 베트남 국적 유학생 수(2023년, 과정별)

과정		중국	베트남	
어학연수		5,333	16,335	
대학(전문대학)	인문사회	22,170	16,552	
	공학	2,827	3,450	
	자연과학	1,309	1,516	
	예체능	6,559	768	
	의학	2	-	
	계	32,867	22,286	
대학원	석사과정	인문사회	11,409	2,645
		공학	844	364
		자연과학	406	120
		예체능	3,202	124
		의학	35	37
		계	15,896	3,290
	박사과정	인문사회	5,570	172
		공학	887	460
		자연과학	527	202
		예체능	4,510	24
		의학	99	66
		계	11,593	924
기타 연수		2,376	526	
합계		68,065	43,361	

주: 2023년도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통계(출처: 한국교육개발원(KEDI))



자료: 교육통계서비스

[그림 5-4] 중국인 유학생 수 추이(1990-2019년)

중국인 유학생은 1992년 한중수교를 계기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증가세가 가팔랐던 시기는 2000년대 초반이고, 급격하게 증가한 때는 2000년대 후반이다. 이러한 추이가 2010년대 초반까지 이어졌으나 이후 4-5년간은 크게 하락한다. 그러나 2014년을 기점으로 다시 반등해 지금까지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는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는 경향도 나타난다(최봉환, 2020).

굴곡은 있지만 중국인 유학생 증가 추이는 상당 기간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추이는 중국과 한국의 교육 체제 변화와 이에 대한 중국 정부와 한국 정부의 정책적 대응의 맞물림에서 지속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Study Korea Project)라는 이름으로 공식적인 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발표한 때가 2004년의 이다. 한편 중국 정부는 1980-90년대에 진행한 개혁개방 이후 2000년대에 들어 중국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대학의 국제화 노력을 강조했다. 비슷한 시기에 경제발전예 따라 중산층의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중산층의 교육 열을 국내 고등교육 체제가 수용하지 못하자 중국 학생들의 상당수가 외국 유학을 선택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자국 인재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는 학생들에게 취업, 창업에서의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펴왔다.

지금까지 확인한 전체 유학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반영하듯 유학생에 관한 연구 중 다수를 차지하는 것도 중국인 유학생에 관한 연구이다. 그렇다 보니 한국에서 유학생 일반에 대한 이미지 또한 중국인 유학생을 일종의 이념형으로 형성되었다. 최근 들어 연구의 초점이 확장되고 주제도 다양해지고 있지만(예: 김도혜 외, 2021;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2023) 여전히 유학생 연구의 관점은 전형적인 틀을 벗어나 있지 않다.¹⁶⁾

대부분의 연구는 이들을 ‘학생’의 역할로 한정해 이들의 재학 중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이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정책 방안을 찾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이영남·마준·이용진, 2018; 김도혜, 2019; 이선미·김영순, 2021). 유학생이 어떠한 맥락에서 한국사회와 관계 맺게 되었는지, 유학생이 한국사회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졸업 이후 진로에 따라 유학생과 한국사회의 관계는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등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는 충분히 소개되어 있지 않다(고민경, 2022). 특히 유학생을 잠재적 시민으로 보고 이들의 경험에 의미를 찾고자 하는 시도는 소수이다.

이들 유학생의 흐름이 미치는 영향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표 5-4]는 대학교별 유학생 수를 보여준다. 다수의 유학생이 적을 두고 있는 곳은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한 사립 대학들이다. 서울에 있는 주요 사립대학(한양대, 경희대, 연세대, 성균관대, 중앙대, 고려대)에는 각각 5천명 이상의 유학생이 있다. 이 정도 규모는 아니지만 한국의 국어대학교나 동국대학교, 국민대학교, 세종대학교, 서강대학교, 건국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홍익대학교 등과 같은 사립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도 대학별로 2천명 이상이다.

16) 좁은 관점과 전공 영역별로 분절된 연구 등 외국인 유학생에 관한 연구가 갖는 한계에 대한 논의는 국내 연구에 한정된 것만은 아니다. 해외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Lipura and Collins, 2020).

〈표 5-4〉 학교별 유학생 수(2023년)

번호	학제	지역	설립	학교	어학 연수	대학	석사	박사	기타 연수	합계
1	대학교	서울	사립	한양대학교	1254	3637	1623	683	669	7866
2	대학교	서울	사립	경희대학교	1048	2971	2405	308	711	7443
3	대학교	서울	사립	연세대학교	1281	2453	1177	403	932	6246
4	대학교	서울	사립	성균관대학교	360	2586	1276	426	1184	5832
5	대학교	서울	사립	중앙대학교	684	2894	895	284	407	5164
6	대학교	서울	사립	고려대학교	1060	2092	600	203	777	4732
7	대학교	경기	사립	가천대학교	264	2412	673	403	67	3819
8	전문대학	경기	사립	서정대학교	537	2819	0	0	0	3356
9	대학교	서울	사립	한국외국어대학교	378	1745	576	164	441	3304
10	대학교	서울	사립	동국대학교	667	1133	911	152	224	3087
11	대학교	대전	사립	우송대학교	59	1639	422	354	517	2991
12	대학교	서울	사립	국민대학교	497	1337	557	344	117	2852
13	대학교	서울	사립	세종대학교	513	1059	667	440	132	2811
14	대학교	서울	사립	서강대학교	1048	807	550	34	248	2687
15	대학교	경기	사립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527	1456	166	107	382	2638
16	대학교	서울	사립	건국대학교	826	1242	271	84	213	2636
17	대학교	서울	국립대 법인	서울대학교	925	195	635	353	489	2597
18	대학교	서울	사립	송실대학교	348	1441	534	56	194	2573
19	대학교	대구	사립	계명대학교	460	1068	317	154	508	2507
20	대학교	서울	사립	이화여자대학교	362	741	688	120	356	2267
21	대학교	서울	사립	홍익대학교	367	1190	474	128	101	2260
22	대학교	인천	사립	인하대학교	402	1219	152	137	266	2176
23	대학교	경기	사립	경기대학교	402	1077	179	253	65	1976
24	대학교	전북	국립	전북대학교	177	643	408	416	198	1842
25	대학교	부산	국립	부산대학교	416	534	433	235	185	1803
26	대학교	경기	사립	단국대학교	117	824	301	339	183	1764
27	대학교	충남	사립	선문대학교	284	1200	132	20	123	1759
28	대학교	부산	국립	부경대학교	281	707	296	301	74	1659
29	대학교	경기	사립	아주대학교	613	496	301	56	191	1657
30	대학교	충남	사립	남서울대학교	645	522	214	202	54	1637
31	대학교	광주	국립	전남대학교	171	583	404	319	139	1616
32	대학교	부산	사립	부산외국어대학교	83	610	236	54	533	1516

번호	학제	지역	설립	학교	어학연수	대학	석사	박사	기타연수	합계
33	대학교	경북	사립	영남대학교	219	615	295	237	101	1467
34	대학교	대구	국립	경북대학교	252	549	324	284	0	1409
35	대학교	경북	사립	대구대학교	199	1025	88	71	1	1384
36	대학교	광주	사립	호남대학교	89	767	300	105	65	1326
37	대학교	부산	사립	경성대학교	72	977	230	12	35	1326
38	대학교	부산	사립	동아대학교	493	365	197	137	79	1271
39	대학교	경기	사립	가톨릭대학교	250	490	107	313	81	1241
40	대학교	충남	사립	중부대학교	127	569	252	241	14	1203

인천을 포함한 경기도에서는 가천대학교나 서정대학교, 명지대학교, 인하대학교, 경기대학교, 단국대학교, 아주대학교 등에 다수의 유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서울 경기 지역에서 넓은 의미에서 국립대에 속하는 학교는 서울대학교가 유일하다. 그 다음 수준으로 유학생 수가 많은 지역은 대전을 포함한 충청도이다. 우송대학교, 선문대학교, 남서울대학교, 중부대학교 등 사립대학이 유학생이 많은 주요 대학이다. 그 이하 지역으로 내려오면 눈에 띄는 점은 국립대학이 많다는 것이다. 대구의 계명대학교나 부산의 부산외국어대학교, 경성대학교, 동아대학교, 경북의 영남대학교나 광주의 호남대학교 등 사립대학도 있지만, 각 시도지역의 국립대학도 유학생이 많이 재학하고 있는 주요 대학에 속한다. 전북의 전북대학교나 광주의 전남대학교, 대구의 경북대학교나 부산의 부산대학교, 부경대학교가 그러한 국립대학이다. 즉 충청도 이남 지역에서는 유학생 유치의 주요 대학으로 국립대학의 위치가 뚜렷하다.

어떤 국적의 유학생이 어떤 대학에 얼마나 많이 가는지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정해지겠지만 대학이 위치한 지역과 설립 유형에 따라 일반적인 경향성을 말해 볼 수는 있다. 한국의 대학이 유학생을 유치하려고 하는 동기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대학재정 확보 차원에서 유학생을 유치하려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대학등록금 동결 정책에 따라 사립대 중심의 대학들은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특히 대학원 유학생의 경우 정부의 등록금 인상 제한 정책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음으로 재학생 수를 확보하기 위한 동기가 있을 수 있다. 비수도권 대학의 경우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정원을 채우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대학생의 수도권으로의 집중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지방의 대학에 입학했다고 하더라도 재수나 편입을 통해 수도권 대학에 가려는 흐름이 커지고

있다. 입학생(재학생)의 수는 대학 평가나 대학 재정 지원 사업에서 중요한 지표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대학의 국제화 지수를 높이려는 차원에서 유학생을 유치하려고 할 수 있다. 고등교육이 국제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입학생을 확보하려는 경쟁은 국제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외 학생들에게 대학의 순위는 학교를 선택하는 데에 핵심 잣대로 여겨진다. 대학 평가에서 ‘국제화 지수’는 중요한 평가 항목 중 하나다. 외국이 유학생이 많아지면 그만큼 국제화 지수 점수도 높일 수 있다. 대학 재정 확보와 국제화 지수 강화는 주로 (수도권) 사립대학들이 고려하는 것이다. 재학생 수 확보는 주로 비수도권 사립대학들이 고려하는 것이다. 비수도권 국립대학의 경우 상대적으로 국제화 지수를 중요하게 고려한다.

대학의 유학생 유치 동기에 대해 그 자체로 규범적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 나름의 맥락과 합리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의 대학이 유학생 유치를 바라보는 시각에 ‘도구적’ 성격이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한국 대학, 또는 한국 사회와 유학생의 관계의 성격을 짐작해 볼 수는 있다(이토히로코·데스빈따아유이리아니, 2019). 그로 인한 딜레마와 그것이 미래의 한국사회에 던지는 시사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글이 주목하는 것은 이른바 ‘비수도권’ 지역에 유입되는 유학생의 흐름이다. 비수도권 지역의 대학은 유학생 유치에 대한 대학의 의지가 높은 반면, 대학 위계 상에서의 위치는 상대적으로 낮다. 이러한 위치성에서 비롯되는 여러 현상은 한국사회와 외국인 유학생의 관계의 복잡성을 잘 드러내는 사례가 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유학생 유입에 따른 변화의 정도는 비수도권 지역 대학에서 훨씬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대학에서는 여전히 (대학원 과정에서도) 한국인 학생이 주를 이룬다. 그러한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이 오고 있고, 그러한 맥락에서 한국인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방에 있는 대학에서는 학부/대학원 과정에 따라, 또는 전공 분야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이 ‘소수자’의 위치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지역 대학 인문사회계열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의 상당수는 유학생이다. 일반 대학원 강의 수강생의 절반 이상이 유학생인 경우도 있다. 지역에서의 유학생의 가시성은 학교를 넘어선 지역 사회 단위에서의 이주자의 흐름과 맞물려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지역 노동시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비중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유학생 신분으로 (비)공식 지위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지방 대학에서의 유학생의 경험과 그것과 관련된 한국사회의 변화에 대한 탐색

은 한국사회의 미래를 전망할 때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지금까지는 유학생 유입의 일반적인 경향과 유학생 분포의 전체적인 지형을 살피고, 중국인 유학생에 초점을 맞추어 학생 수 변화 추이와 분포 등을 확인하였다. 이어지는 3절과 4절에서는 ‘미래 대화’라는 이 연구의 관점에 따라 좀 더 구체적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보고자 한다. 다른 장의 작업들도 마찬가지로이지만 여기에서부터는 일종의 ‘대표성’을 갖는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새롭게 생각해볼 어떠한 전형성을 드러내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 장을 작성한 필자는 서울에 위치한 국립대학에서 대학원 과정을 마쳤고, 졸업 이후 연구원 생활을 거쳐 현재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 사회계열 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맥락에서 유학생들을 접해 본 경험이 있다. 교수로 부임해서 교류한 학생들과의 경험이 이 글의 기본 자료가 된다. 지도학생을 정하는 면담으로, 중국인 유학생을 포함하는 대학원생 연구팀을 지도하는 맥락에서, 이 연구팀에서 중국인 유학생을 면담하는 맥락에서,¹⁷⁾ 학부 과목이나 대학원 과목에서 강사 대 수강생 간의 관계에서 등 다양한 위치와 맥락에서 중국인 유학생을 만났다. 이들과의 관계 맺기는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있다. 그에 따라서 그 성격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유학생 유입에 따른 대학 현장의 한 경험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미래 대화’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17) 이 작업을 염두에 두고 생애사 인터뷰 형식으로 인터뷰한 학생은 두 명이다. 각각 두 차례(회당 120분) 면담을 진행했다. 태어나서부터 한국에 유학 오기까지의 생애 이력과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 유학 경험에 대한 의미 부여를 중심으로 면담을 진행했다. 한 명은 서울의 한 대학에서 사회계열 박사과정 학생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다른 한 명은 대구의 한 대학에서 상경계열 박사과정 학생으로 생활하고 있다. 서울과 대구의 학생을 면담한 것은 두 학생의 경험을 비교해 지방 대학에서의 유학 경험의 성격을 일정하게 확인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물론 두 명의 사례가 중국인 유학생의 경험을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필자가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하게 만난 유학생들의 경험을 배경으로 두 학생의 경험을 좀 더 일반적인 맥락에서 해석했다는 점에서 개연성을 가진 사례로 삼을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제 3 절

유학의 맥락과 계기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이머징 시티즌’으로서의 중국인 유학생의 존재에 대한 이해는 그들이 어떠한 맥락과 계기에서 한국에 유학오게 되었는가, 라는 기본 질문에 대한 탐구에서부터 시작해 볼 수 있다. 유학의 맥락과 계기가 유학 생활의 성격을 규정하는 기본 맥락이 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것은 유학 생활 이후의 진로 및 전망과도 관련 있다. 그러한 점에서 이들 유학생과 한국사회의 관계성을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일차 맥락이 된다.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으로의 유학 동기를 밝힌 연구들을 참조해 정리해보자. 외국인 유학생 수로 상위 3위 내에 위치한 서울 소재 4년제 사립대학에 2018년 시점에 다니는 중국 유학생 14명에 대한 면담에 근거해 한국 유학의 동기를 탐색한 연구는 ‘문화자본으로서의 학위’의 의미를 강조한다. 이 연구(황경아·홍지아, 2018)에 따르면 “박사과정 유학생들에게 한국 대학의 박사학위는 중국 중하위권 대학의 교수 취업과 중국정부가 유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창업혜택을 보장하는 문화자본”(319쪽)이다. 즉 박사과정 유학생들에게 한국에서의 박사학위는 부모세대가 갖지 못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얻기 위한, 사회이동을 위한 자격으로 여겨진다.

학부 유학생은 맥락이 조금 다르다. “학부과정 유학생들은 원하는 중국 대학의 입학 을 실패했거나 치열한 입시 경쟁을 피하기 위해 주로 유학을 고민한다.”(319쪽) 한국으로의 선택은 영어에 대한 두려움과 한류의 영향으로 형성된 한국문화와 한국어에 대한 상대적 친근함을 배경으로 한다. 그런 점에서 한국에서의 학부 학위가 갖는 의미는 모호하다. 학부 유학에서 얻을 수 있는 ‘문화자본’은 전공 영역에 대한 전문 지식 습득의 의미보다는 한국 유학 경험으로 얻을 수 있는 ‘한국어 능력 일반’일 가능성이 높다.

관련해 한국 유학으로의 선택의 한 요인으로 언급되는 것은 입학의 문턱이 낮다는 점이다. 한국의 대학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별 없이 내용적인 측면에서 유학생의 입학 자격을 따지지 않는다. 한국어능력시험 등급을 4급 이상으로 하는지, 5급 이상으로 하는지 정도의 차이가 있다. 실질적인 판단은 학과에서 하지만 대체로 입학을 허가한다. 한국 유학 절차의 또 다른 특징은 단시간에 절차가 완료된다는 점이다. 대략 2-3개월

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으로 최근에는 유학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다양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많아졌다.

이 연구가 확인한 한국 학위의 가치, 즉 ‘유학의 의미’는 지방대학의 맥락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다. 대학원 과정 진학자들에게 한국 유학의 의미는 취업이나 창업에 도움이 될 자격으로 인식된다. 한편 학부 유학의 맥락 또한 중국 내 입시 경쟁의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중국에서 (부모나 스스로가) 기대했던 대학에 입학하지 못했을 경우, 또는 그러한 전망을 하기 어렵다고 미리 판단했을 경우 한국 유학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필자가 인터뷰한 지방 국립대학 대학원생도 비슷하게 말했다.

“중국에서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는 좋은 집 출신은 대부분도 미국 캐나다 영국에 가요. 한국에 갈 수 있는 집은 대부분 중간층 이런 가정 사람들이예요.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은 한류 때문에 아이돌 때문에 여기 오잖아요. 진짜 공부하겠다는 생각으로 오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친구들과 이야기했을 때 여기 한국에 유학하는 학생들 대부분은 중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기술대학교 3년제 대학교 이런 학생들 그리고 아마도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수능 시험 떨어져서 중국에서 좋은 대학교 가는 기회가 별로 없어서 여기에 왔어요. 이런 사람 학생들 좀 많아요.”

지방대학의 특징도 있다. 지방대학 박사학위의 가치는 서울 주요 대학 박사학위의 가치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다. 학부 수준에서의 학위의 가치도 마찬가지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대학을 선택하는 이들의 교육 이력이나 교육에 대한 관점도 서울과 지방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즉 경제적으로나 학력으로나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낮은 이들이 지방 대학을 택한다고 볼 수 있다(최민진, 2020). 이러한 점에서 특히 지방대학의 맥락에서 한국 유학의 맥락에 대한 이해는 일종의 ‘학력 세탁’의 의미로 ‘소극적’인 것으로 해석되어 온 경향이 있다(박소진, 2013).

필자가 학교에 와서 접한 중국인 유학생에게서 받은 인상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 한국어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아서 생각과 의견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지만 꼭 그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 학부생은 물론 대학원생도 유학의 의미를 분명하게 말하기 어려워했다. 어떤 측면에서는 그 의미를 너무도 비슷한 형식으로 분명하게 말한다는 인상을, 그래서 실질적인 의미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는 인상을 받았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한국 유학의 동기를 좀 더 나은 취업 기회와 좀 더 새로운 경험의 기회로 정리해 말했다.

다음은 필자가 진행한 대학원 강의 첫 시간에 과제로 내어 준 “나는 왜 대학원 공부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한 중국인 유학생의 답이다.

“첫째는 학문적 심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본 학과 단계의 학습에서 저는 본전공의 기초 지식과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접하게 되어 강한 지식욕과 탐구욕을 불러 일으켰다. 저는 특정 학문 분야에서 더 깊이있는 연구를 진행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 다음으로는 전문 능력을 향상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더 높은 수준의 전문 능력을 갖추는 것은 개인의 경력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 대학원 교육은 학생들의 독립적인 사고력, 혁신력 및 실제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둔다. 저는 이것이 앞으로의 인생에서 공부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세 번째는 진로 개척의 길을 넓히는 것이다. 대학원 학력을 보유하면 종종 저에게 더 많은 직업 선택과 발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취업시장에서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가치를 실현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성장과 자아실현이다. 대학원 단계의 학습은 지식과 기술의 향상일 뿐만 아니라 자기 도전과 성장의 과정이기도 하다. 그 과정에서 저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스트레스에 직면하여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시간을 관리하며 사람들과 협력하는 법을 배워야한다. 이런 경험은 저를 더욱 성숙하고 자신감 있게 만들어 줄 것이다. 자기 가치를 실현함과 동시에 사회에 공헌할 수 있기를 바란다.”

형식적으로는 나무랄 데가 없는 글이다. 그러나 연구자로서의 문제의식에 대한 생각이 어느 정도 담겨 있으리라 기대했던 필자에게 위의 문장은 형식적인 문장으로 다가왔다. 더욱이 다른 중국인 유학생의 글에서도 비슷한 느낌의 동기를 확인했을 때에 더욱 그러한 감정을 갖게 되었다. 강의 시간에 연구과 관련된 문제의식, 연구 질문 등을 물었을 때 많은 학생들이 당혹스러워했다. 학부생과의 면담에서도 비슷한 인상을 받았다. 왜 특정 전공을 택했냐는 질문에 학생들은 사회에 대한 지식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이상으로 특별한 답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유학의 맥락과 동기만으로 이들의 한국 유학 경험을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유학의 맥락에 대한 이해도 중국 사회의 변화라는 배경으로 그 범위를 확장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애쉬, 2018; Fong, 2004; 2011). 필자가 만난 중국인 유학생은 부모의 지위로 판단했을 때에 중산층 이상인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서 초중고등학교 생활을 했다. 그렇지 않다면 경쟁의 분위기에서 다소 벗어나 있는 소도시의 학교에서 생활했다.

이들에게 (한국) 유학 선택은 한편으로는 교육 경쟁의 실패를 예감한 것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문제시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 전략을 생각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적극성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공부에 큰 관심이 있지는 않지만’ 유학을 선택한 것에 후회하지는 않는다고, 그 경험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대학원생의 말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나한테는 지금 하고 있는 일도 경험이에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의미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생각하지 말자. 지금 하고 있는 일, 제가 선택한 일, 그리고 제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이에요. 해야 하니까 하는 거예요. 큰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선택한 길에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스스로 생각하고 또 결정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요. 한국에서 공부한 경험은 제가 어떤 일을 봤을 때 원래보다 객관적으로 보게 해 줘요. 그건 좋은 점이에요.”

이러한 의미에서 유학을 한다는 것, 사회이동을 위한 것이든 문화 체험을 위한 것이든 그 동기가 어떠하든 국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갖는 사회적, 계층적 의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당한 규모의 중국 청년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직업계 학교를 거쳐 노동시장으로 나간다는 점을 고려(Woronov, 2015)하면, 또 다른 상당 규모의 청년이 농촌과 소도시 출신으로 대도시의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Ling, 2020)하면 해외 유학을 결심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었던 위치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유학생의 유학 경험에 부여하는 구조적 위치성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사회이동의 가능성으로서의 문화자본을 획득해야 한다는 압박이다. 다른 하나는 그러한 자본의 실질적인 의미를 찾기에는 여러 가지면에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에서 비롯되는 어려움과 불안이다. 이러한 위치성에 따른 전략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학점 이수, 졸업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한국에서의 공부 경험의 의미를 좀 더 적극적으로 찾고자 애쓰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에 고민은 깊어진다. 본국에서 유학을 결정할 때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또는 그 중요성을 잘 몰랐던 지방대학의 주변적 위치성이 갖는 제약(김도혜·최희정, 2021)을 뒤늦게 느끼게 된다. 어떤 이는 서울에 있는 대학의 대학원으로의 진학을 꿈꾼다. 동시에 내가 그곳에서 잘 생활할 수 있을까 불안을 느낀다.

대학원 과정은 또 성격이 다르다. 대학원은 연구자를 훈련하는 곳이고, 그 훈련의 결과인 학위논문으로 졸업을 결정하는 곳이다. 따라서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 논문을 작성해야 한다. 학부에서와 같이 학점을 이수하는 것만으로는 졸업할 수가 없다. 이러한 점에서 대학원에 진학한 많은 유학생들이 대학원 과정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물론 이러한 어려움 외국인 유학생만 겪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 학생은 보통 대학원을 학부와 같은 방식으로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어떤 의미에서 지방 대학의 대학원에 있는 한국 학생들의 일부는 학위가 아닌 공부, 또는 연구 자체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에 학위논문 심사 과정에서 유학생과 지도교수는 신중하게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때로는 서로의 기대가 다른 점을 뒤늦게 확인하고 서로가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를 낳는 경우도 있다. 학위논문을 쓰지 않고(또는 못하고) 중국에 귀국해서 졸업을 기약하기 어려운 학생도 있다. 그렇다고 논문 심사의 수준을 낮추어서 이른바 ‘졸업을 시키는’ 방법도 생각하기가 여의치 않다. 심사위원 3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그러한 방식이 그 학생에게나 학과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요컨대 대학원에 유학생의 비중이 많아지면 대학원의 목표나 운영 방식 전반의 지향을 세울 때에 고민하게 된다. ‘누구를 대상으로 교육, 훈련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어떠한 과목을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이르기까지, 학과 차원의 정체성을 담은 주제로 어떤 것을 연구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답하기 어려운 문제를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학생은 유학생 나름대로 (지도)교수는 교수대로, 동료 (한국인) 학생은 학생대로 상황에 따라 고민하게 된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누구든 답을 내리기는 어렵다.

어쨌든 중국인 유학생은 대학의 현장에 깊게 들어와 있다. 그 존재는 단지 소수자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는다. 학과 전반의 운영 방향과 방식을 고민해야 할 맥락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주체들은 집합적인 수준에서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주어진 환경에서 의미를 찾고자 애쓰고 있다.

제4절

유학 경험과 미래 전망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필자가 만난 이들의 다수는 아직 ‘과정 중’에 있는 이들이다. 그렇기에 이들의 유학 생활이 어떠한 식으로 마무리될지, 그에 따라 유학 경험을 어떻게 해석할지 확인하기는 이르다. 그렇지만 한국에 온 이상, 유학생으로서 기대했던 자분을 얻기 위해서라도, 유학생들은 나름의 진정성으로 생활을 고민한다. 한편 학교의 다른 구성원들 또한 어떠한 맥락에서 그들을 받았건, 또는 그들이 왔건, 실질적인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고, 그러한 맥락에서 어떻게든 의미를 찾으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어렵게 학위를 받고 난 한 유학생은 한국의 대학이 좀 더 엄격하게 외국인 유학생의 입학과 학교생활, 졸업을 규율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내비친다.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학위를 취득했는데 다른 학교에서 학위를 쉽게 주면, (더욱이 순위가 높은 학교에서 학위를 쉽게 주면) 자신이 획득한 한국 학위의 가치가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유학을 시작하게 한 기능의 조건이 유학을 마칠 무렵에는 유학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하는 제약의 조건으로 다가오는 것이다(김도혜, 2023). 그러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학위 자체의 의미보다는 중국에서도 실력으로 사람을 평가할 것이라는 기대를 말하기도 한다. 동시에 지방대학에서 딴 학위의 실질적인 의미를 만들기 위해 일본어 등도 익혀 동아시아 연구자로서 자리매김하려는 노력도 표현한다.

유학 경험의 의미를 미래 전망의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이라는 곳에서의, 좁게는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위라는 것이 갖는 이중적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상당수의 유학생이 처음에는 큰 생각 없이 한국에 오지만, 막상 오고 나면 진지해지기 마련이다. 학위를 마치는 일은 쉽지 않다. 모두가 어느 정도는 ‘진정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쉽게 졸업할수록 학위의 가치가 떨어진다. 결국에는 나의 실력을 쌓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졸업 이후의 전망을 생각하면 고민이 많아진다. 시작은 “동상이몽”(박소진, 2013)이더라도 끝에는 서로 의식하지 못한 채 같은 꿈을 꾸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유학의 의미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유학생도, 그들과 관계 맺는 한국인도 유학의 무게감을 점차 느끼게 된다. 그러한 가능성과 제약 사이에서 상당수 유학생들은 좀 더 나은 기회를 만들고자, 좀 더 나은 자신의 모습을 만들고자 고군분투한다. 그 과정에서 이들은 짧게나마,

일시적으로나마 한국사회에서 ‘시민성’을 갖는 주체로 활동하게 된다.

이들에게 한국의 대학은, 한국 사회는 어떠한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인가. 어떠한 경험을 하게 할 것인가. 글로벌 교육 체제의 위계에서 스스로의 위치를 확인하게 하고 이를 발판으로 더 높은 곳으로 움직이게 하는 경쟁의 논리를 심어줄 것인가. 그에 따라 그들에게 한편으로의 우월감과 다른 한편으로의 패배감을 심어줄 것인가. 사람을 도구적으로 대하고, 그런 관점에서 유학생들의 자존감을 깎는 표정을 계속 보여줄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라면 유학생과 한국인 학생의 교류는 지금과 같이 의미 있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한국의 위치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한국의 청년 세대와 아시아 청년 세대를 묶어내어 아시아의 미래를 꿈꾸게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학교에 가기 전까지, 불과 몇 달 전까지 필자는 중국인 유학생에 관심이 없었다. 중국에 대한 관심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지금은 대학을 중심으로 한 필자의 생활세계에서 중국인 유학생의 자리가 무척 크다. 중국인 유학생을 수강생으로, 지도학생으로 만날 일이 많아지고 있다. 중국인 유학생과의 만남은 필자에게 이러한 질문을 떠올리게 한다. 필자에게 이런 질문은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은 점차 많은 사람들의 질문이 될 것이다.

제5절

한시적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중국인 유학생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7만명에 가까운 중국인 유학생들이 동질적인 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동안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인식은 다분히 이들을 같은 성격의 집단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 현재 시점에서 보면 이들은 ‘외국인’이다. 그러나 잠재적으로 보면 시민이 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이들의 규모가 더 커지면 ‘현재 시점’에서도 이들의 위치를 마냥 외국인으로 보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일종의 체류 주민으로 보아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잠재성, 한시성의 특징을 고려할 때 이들의 사회경제적 위치를 특정하기는 쉽지 않다.

이 장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내의 다양성도 염두에 두고자 했다. 한국에 유학을 왔다는 것이 어떠한 위치를 뜻하는지를 향후 다양한 맥락에서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작업은 세계적 맥락에서의 대학 교육 지형에서 한국 대학이 차지하는 위치와 중국 사회에서 이들 유학생의 위치, 한국 사회에서 이들 유학생의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인 유학생은 중국인을 대변하면서, 특정 계층을 대변하면서, 한국사회에서의 특정 집단을 대변할 수 있다. 다른 국가 출신의 유학생도 마찬가지로 위치에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복합적이고도 유동적인 위치는 향후 한국사회에서 ‘시민성’을 논의할 때에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차원이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다양한 맥락과 계기에서 해외로 이주한 한국인들이 각각 그 나라에서 미친 효과를 떠올려 보면, 유학생들이 한국사회에 미치게 될 효과를 일정 수준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사회는 여전히 이들을 철저하게 기능적인, 도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당장의 학생 수를 채워 줄 자원으로, 농업이나 제조업 등에서의 인력 부족을 해소해 줄 자원으로만 보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자유주의적 시각에서 다소 당위론적인 인권 옹호의 목소리만 나오고 있다. 김무인(2023)이 지적했듯이 이주민과의 관계 설정 문제는 여러 가치가 충돌하는 복잡한 사안을 다뤄야 할 문제이다. 학교 교육에서의 긴장, 노동시장에서의 긴장, 지역사회에서의 긴장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불거진 대구 이슬람 사원 건설을 둘러싼 논란(육주원, 2023)도 유학생의 유입으로 한국사회가 고민해야 할 질문을 던져 주고 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다양한 융합적 현

상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 다양한 해외 사례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그만큼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결국 일차원적인 관점을 넘어서는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우리가 유학생에 주목하는 것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날 한국사회가 유학생과 맺고 있는 관계를 모색하는 가운데 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유학생의 경험은 그 자체로 한국 사회의 미래를 전망할 때에 중요한 참조점이 된다. 그들은 경계를 넘은 이들이다. “유학생은 이미 경계를 넘어본 경험을 갖는 문화적 횡단자이다. 이들은 이미 문화적 횡단을 통해 이질적 문화를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하는 경험과 훈련을 쌓은 이들이다.”(이보고, 2023: 415) 그에 반해 줄곧 일국 중심의 교육만을 받은 한국인은, 또는 필자는 “자신의 언어와 행동 속에서 무의식적인 배타성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이보고, 2023: 415) 지방의 국립대학에서 중국인 유학생을 가르치는 이보고는 이렇게 말한다.

“이들은 처음에는 자신의 출발지로 돌아가려는 욕구가 강하지만, 현지의 교육을 받고 문화에 적응해가면서 점차 현지 집단 안으로 동화된다. 유학 초기에는 여전히 출발해온 지역 혹은 국가의 정체성이 유학지에서 적응하는 데 장애물로 작동하지만, 그렇다고 이들의 집단적 자기 동일성이 무한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유학지에서 이동을 실천하는 진정한 주체로 거듭난다. 여기서 이동은 공간적 이동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문화 이동도 포함된다. 이러한 이동은 언어 습득처럼 비교적 짧지 않은 시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며, 어느 순간이 되면 완전히 처음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 (...) 이들은 그 가운데 어딘가에 존재하고 정체성 정치의 구별 짓기로 규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끊임 없이 유동한다. 이중 언어생활뿐만 아니라 ‘중국인’이나 ‘한국인’ 표상 어느 하나에 고착되지 않는 문화적 정체성은 그야말로 글로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숙고하게끔 한다.”(415-416)

다양한 출신의 외국인 유학생의 규모는 앞으로 계속 늘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발전이 지속될 것이고, 그에 따른 사회변동의 흐름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로의 유학을 추동할 것이다. 한국은 그 흐름에서 주요한 도착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의 흐름에 대한 관심은 한국사회가 이주민 일반과 관계 맺는 방식에 대한 고민으로 확장될 수 있다. 유학생의 경험에 대한 관심은 이주민 2세의 교육, 이주민의 노동, 가족 관계,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등에서 한국사회가 고민해야 할 의제를 발견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좁게는 유학생 정책에서부터 넓게는 이민 정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

원에서 입법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유학생의 존재와 이들과의 관계는 새로운 시민성의 등장이라는 맥락에서도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시민권(citizenship)은 통상 법적, 제도적 지위와 시민의 덕성을 내포하는 개념으로 시민으로서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공동체 또는 공동체의 제도나 질서, 시민 사이의 상호의존성과 독자성에 관한 책임을 뜻한다(최현, 2008). 한국에서 시민권은 권리로서가 아니라 국가 발전에 대한 기여에 따라 조건부로 주어져 왔다(Chang, 2022). 한국정부가 이주자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그러한 조건부적 성격이 드러난다. 이러한 인식과 태도는 비단 한국만의 것은 아니다. 국가의 발전이라는 목표에 개인의 권리와 의미를 종속시켜 온 방식은 동아시아 사회의 공통된 특징이다(Chang and Turner, 2011). 이러한 조건부적 관점이 유학생의 흐름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흐름과 만나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시민성에 대한, 시민권에 대한 도구적, 조건부적 관점이 한국 사회의 재생산 자체를 침식하고 있는 오늘날(장경섭, 2018) 이들의 존재는 한국 사회의 생산과 재생산의 새로운 주체로 조금씩 인식되고 있다. 과연 이들과 한국사회는 어떠한 관계를 맺을 것인가? 청년의 이동이 지역소멸의 담론으로 저출산의 담론으로 규정되는 가운데 그들의 빈 자리를 해외의 청년이 채우는 경향은 최근 국내외 청년 이주 흐름의 성격과 의미를 동일한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한국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동아시아 사회의 현재와 미래라는 좀 더 넓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강명구 외, 2016; 윤영도, 2017; 조문영 외, 2017; 조문영 외, 2021). 좀 더 넓은 맥락에서 한국사회는 물론 아시아 지역의 미래를 전망해 볼 수 있도록 돕는다(Anagnost et al., 2013).

이렇게 생각한다면 사회이동의 수단이자 목적으로서의 교육(문화)자본을 획득하는 이야기로 이들의 경험을 해석하는 것은 너무 좁은 관점이다. 미래학의 관점은 이들의 경험을 좀 더 넓은 ‘청년 이주’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동아시아 청년의 이주 흐름으로 만들어낸 연대로 동아시아 단위의 변화를 만들어 갈 가능성을 떠올리게 한다(홍명교, 2021; 김지혜 외, 2023). 요컨대 미래의 가능성은 이들 청년 이주자들을 ‘이머징 시티즌’으로 볼 수 있게 한다. 그들에게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시사한다.

제6장

이머징 시티즌으로서 여성평화운동가들

제1절 이머징 시티즌으로서 여성평화활동가들

제2절 평화운동가이자 여성, 여성이자 평화운동가:
군사주의-가부장주의 비판의 다양한 형태

제3절 일상의 평화, 모두의 평화라는 미래 비전

제4절 여성평화활동가: 더 많은 민주주의와 평화구축(peacebuilding)

제5절 결론 및 함의

제 1 절

이머징 시티즌으로서 여성평화활동가들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2022년 2월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2023년 10월 시작된 가자 전쟁은 현재 진행 중이다. 세계 지역에서 분쟁 고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국제정치의 지정학적, 전략적 환경 변화는 미국 주도의 규범 기반 국제질서의 쇠퇴 및 미중 전략적 경쟁 심화에 따라 2017년경부터 ‘탈냉전’의 구도로 들어가고 있다는 평가가 부상하고 있다. ‘탈냉전’ 및 미국의 단극 질서가 붕괴하고 글로벌 패권 경쟁, 혹은 다극화 추세에 대한 전망은 다시금 ‘신냉전’의 프레임과 글로벌 불안정과 폭력, 갈등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다.

한반도 차원에서는 2018년발 한반도 평화과정의 실패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 고도화 및 핵독트린 변화, 새로운 전략무기 포함하는 국방력 강화는 미국의 대동맹 확장역지 공약 강화 및 한미일 3각 동맹의 안보협력 심화, 핵·재래식 통합 역량 확장 등으로 이어졌다. 현 정부 출범부터 한국의 핵보유 가능성이 시사되면서 60-70%에 육박하는 국내 핵무장 여론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전략핵에 기반한 억지뿐 아니라 실전에서 전술핵 사용을 고려하는 변화된 북한의 핵전략에 대항해 확장역지 및 안보협력에 대한 동맹 강화와 방기의 의심 및 자강에 대한 요구 사이에서 흔들리는 한국 사회의 선택은 중단기적으로 잠재, 지속할 수 있는 문제로 간주되는 까닭이다.

세계와 한반도에서 평화의 가능성, 평화적 방법으로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 실천은 실질적으로 위축되고 위기에 직면했다. 평화에 대한 희구가 희망적 사고로 비치는 한편 지속되는 물리적 분쟁의 평화적·정치적 해결의 방법에 대한 협상, 합의는 난망한 상황이다. 중단기, 중장기 가능미래의 범위에서 평화의 비전은 현재 그 가능성의 창이 매우 좁아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불가능의 영역, 혹은 소수 비전에 한정되는 것처럼 판단되는, 평화구축(peacebuilding)의 가능미래, 규범미래를 지향하는 여성평화활동가를 이머징 시티즌의 한 부류로 보고 그들의 현실 인식/비판으로부터 미래 비전을 위한 논의와 실천을 대안적 자원으로 검토하는 것은, 그 자체로 도전이기도 하다. 즉 중단기적으로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 평화의 전망을 두고, 그러한 미래를 예방하고 경로 전환을 꿈꾸는 ‘피스빌더’(peacebuilder)의 인식과 투쟁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대안적 접근이 향후 정치적으로 유의미한 해법, 방향으로서 주류화되는, 혹은 주류화가 아니더라도 괄목할 만한 통찰로서 참고되는 위치를 획득하기를 상상하는 것은 현재 특히 더 어려워보인다.

그럼에도, 미래전망의 영역이 가능미래, 규범미래와 함께 회피미래를 포괄한다면, 가할 수 있는 한반도 및 동아시아 (핵)전쟁, AI-핵기술이 결합된 미래전 환경에서 인간이 더 나은 미래 사회를 확보하기 위해 무엇을 고민하고 준비할 것인가의 측면에서 여성평화활동가들의 문제인식과 실천에 대한 물음은, 핵전쟁을 포함하는 몸서리쳐지는 어두운 전망을 마주하고 변화의 경로의 창발을 위한 주체성, 행위자성의 복원을 찾는 과정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어쩌면 약한 시그널로 볼 수 있는 여성평화활동가들의 담론·실천은 향후 변화의 예상치 못한 전조이자 변화의 조건이 갖춰졌을 때 정책적 향방, 삶의 방식을 찾는 데 기여하는 시민들, ‘이머징 시티즌’의 목소리일 것이다.

여성평화활동가들을 이머징 시티즌으로 상정하는 일차적 근거는 평화활동가이면서 여성, 여성이자 평화활동가로서 그들이 재현, 대표하는 **소수 비전**의 특징이다. 본 연구의 주요 질문의 하나는 한국 사회의 평화운동에서 표면적으로 다수의 참여가 확인되는 ‘여성’ 평화활동가들의 평화담론·실천에서의 위치는 어떠한가, 이들의 차별화된 선호, 주장은 얼마나 평화운동 내에서 대표되고 한국의 주요 정책의사결정과정에 반영되는가의 문제다. 이는 비단 한국 사회에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세계의 고질적 분쟁 국가, 지역에서 제기되는 여성, 성소수자의 평화구축 영역에서의 참여, 대표 문제와 결부되는 이슈이며, 특유의 한반도적 맥락에서 분쟁해결, 평화구축이 얼마나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의 주제와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여성평화활동가들을 이머징 시티즌의 사례로 주목하는 것은 평화운동 내 이들의 소수적 위치로부터 파생되는 배제나 차별에 대한 문제의식과 더불어, 더 중요하게, 이들이 평화활동가이자 여성, 여성이자 평화활동가로서 기존의 한반도 평화운동에 새로운 의제나 방법, 차별화된 방향을 제시하는가와 관련된다. 이머징 시티즌으로서 여성평화활동가를 상정하는 것은 모든 여성평화활동가들이 그들의 운동이나 정체성, 일상에서 공통된 특징을 내포한다거나 여성평화활동가가 다른 젠더, 섹슈얼리티를 갖는 평화활동가들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별개의 이념, 의제, 역량 등을 갖는다고 간주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관심은 여성x평화활동가라는 한국 사회 내 이들의 위치성으로부터 이들이 한국 사회, 한반도 사회의 평화의 미래에 대한 독특한 전망과 선호가 존재하는가를 살피고, 이에 근거한 대안적 비전 제시에 기여하는 가능성, 그 신호에 귀를 기울이

는 것이다.

이는 평화운동의 조류 내에서 존재하는 다양성, 차이를 드러내며,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갖는 사회경제적, 정치적 위치로부터 평화담론·실천의 전략, 내용에 차이가 발생하는가를 확인한다. 페미니즘x평화의 문제는 평화담론·실천에 대한 중요한 대안적 시각, 즉 평화운동의 페미니즘적 전회(feminist turn)의 차원에서 의미가 있으며, 혹은 페미니즘 이론·실천이 평화·안보 영역을 포괄하며 풀뿌리 페미니즘 운동이 이슈, 영역을 확대 심화하는 차원에서 의의가 있다.

평화운동에서 페미니즘적 전회, 혹은 페미니즘 이론의 안보/평화 영역에 대한 확산과 관련해, ‘교차성’ 논의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교차성’에 대한 킴벌리 크렌쇼, 안젤라 데이비스, 벨 훅스 등 고전적 논의가 흑인운동, 여성운동 양 측에서 소외되고 침묵된 흑인여성들의 ‘다차원적’인 경험, 관점, 실천을 통해 비가시화되고 주변화된 이들에게 정당한 위치를 부여했다(Crenshaw 1989; Crenshaw 1991; Davis 1981; Hooks 1981, Lorde 1984). 그런데 페미니즘과 평화의 주제를 ‘교차’하는 것은 다층적인 사회적 억압 기제의 상호작용 및 영향, 공모 등의 메커니즘을 의미하는 ‘교차성’의 문제, 예컨대 흑인 장애 여성 혹은 장애 퀴어 여성 등 이중, 삼중의 억압적 범주의 상호 강화 및 작동을 분석하고 이에 대항하는 문제의식, 비판적 실천과 차이가 있다. 흑인여성, 인도의 불가촉여성과 같이 사회적으로 규정된 억압기제들이 교차된 행위자들을 평화x페미니즘 주제에서 단적으로 규정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¹⁸⁾

그러나 인종, 계급, 계층, 젠더, 섹슈얼리티, 에스니시티, 환경오염, 전쟁, 빈곤 등 교차적 범주의 적용을 보다 유연하게 고려하는 것은 필요할 것이다. 사회에서 다양한 억압기제들이 뒤얹히며 작동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동시에 다양한 사회적 억압적 범주들과 함께 전쟁, 빈곤, 노동환경, 환경파괴 등 취약성 요인들의 분배에 따라 예를 들어 ‘장애’를 불평등하게 생산하는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정혜은 2023, 191-192). 요컨대 교차성 정치의 핵심은 기존의 정체성 정치에서 단일 관점, 단일 쟁점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 차이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더 많은 다양한 위치를 끌어들이는 연대의 투쟁, 연합의 정치를 만들어내는 것이다(Kafer 2013; 정혜

18) 이와 관련해, 최근의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관점에서 핵 정치의 연구·실천을 탐색한 샤인 최·캐서린 에슬레(Choi and Escle 2022)의 연구는 예외적이다. 이들은 페미니즘x평화/안보 담론·실천을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의 비판적 관점에서 검토함으로써, 글로벌 사우스 등 세계의 주변에 위치한 국가, 분쟁 사례에서 평화구축의 문제에 대한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접근을 통해 기존에 침묵된 다양한 핵 정치의 동학에 대한 조명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주류적 안보/평화 이론 및 페미니즘 이론의 확장·심화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은 2023).

한반도에서 평화x페미니즘은 여전히 진행형인 정전체제의 평화로의 전환이라는 한반도적 맥락에서 지속가능한 평화에 대한 근본적 질문에 대한 전략 및 로드맵 실행뿐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특히 최근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 및 ‘리부트’ 등의 맥락에서 여성으로서 경험이 한반도 및 그 너머의 평화에 대한 다른 문제의식, 의제를 갖는가를 고민한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구축의 주제의 다차원성, 다중심적 성격을 조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여기서 두 차원의 ‘교차’는 사회적으로 부과된 기제의 중첩은 아니지만 분단·정전체제의 전환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페미니즘, 여성의 관점의 차이, 다양성을 포괄한다는 측면에서 큰 틀에서 전쟁, 분쟁해결, 페미니즘의 주제의 중첩을 다룬다는 의미가 있다.

이머징 시티즌으로서 여성평화활동가를 정의하는 것과 관련해, 본 연구는 여성평화활동가가 페미니스트 평화활동가와 대체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페미니즘은 반드시 젠더로서 여성이 소유가능한 이론적, 규범적 지향이 아니며 남성, 트랜스 젠더, 젠더리스(gender-less) 등 다양한 성적/로맨스적 정체성을 가진 페미니스트들의 담론, 활동으로 구성된다. 또한 페미니즘 담론, 운동 내 다양성을 고려해야 하는 것처럼, 여성 평화활동가라고 해서 반드시 여성으로서 젠더화된 사회적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을 평화활동가로서 자의식에 병행한다거나 자동적으로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평화운동을 이끌어간다고 전제할 수 없다. 페미니즘 운동가가 반드시 평화운동을 가장 중요한 자신의 의제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면서 여성평화활동가들의 한국 사회, 한반도와 그 너머의 평화의 미래전망 및 선호를 질문함으로써, 본 연구는 한반도의 정전 이후 분리/분쟁의 평화적 해결, 평화체제의 정착, 그리고 일상의 평화를 아우르는 평화구축의 문제를 여성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평화구축의 정의, 의제 및 방법론, 방식 등과 관련해 일정한 차별화된 시각,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가를 탐색하고 이들의 다양한 시각을 통합적으로 반영하는 한반도 미래전략 구상을 지향한다.

본 연구는 이머징 시티즌으로서 여성평화활동가에 주목하면서 3명과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대상은 2030 세대 여성평화활동가, 혹은 연구자이며, 결혼해 육아를 하는 여성평화활동가, 군사주의 반대, 인권운동의 맥락에서 활동하는 여성활동가, 활동가로서 스스로를 정의하지 않지만 페미니즘x평화 주제에 천착한 연구자이다. 여성

평화활동가 인터뷰 대상으로 2030 세대를 선정한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관심과 함께, 현재의 한반도 평화 담론·실천에서 2030 세대가 덜 재현·대표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한다. 특히 2010년대 들어 한국 사회의 주요 균열로 비화된 (2030 세대) 젠더갈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갈등적 환경에서 젊은 여성평화활동가들의 현실 인식 및 미래 비전을 경청함으로써 기존의 평화운동가들과 차별된 관점, 의제, 전략 등을 파악하고자 했다.

〈표 6-1〉 여성평화활동가 인터뷰

인터뷰이	인터뷰 시기	비고
OOO	2024.8	여성평화활동가, 평화저널리즘
OOO	2024.9	여성평화활동가, 군사주의 반대, 인권
OOO	2024.9	페미니즘x평화/안보 연구자

인터뷰는 여성평화활동가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한국 사회 현실에 대해 어떤 인식과 태도, 선호를 갖는가 질문했다. 또한 중장기 미래 관점에서 평화운동을 어떻게 바라보며 이러한 미래 비전에서 어떤 활동, 의제에 헌신하고 있는가, 어떤 대안적 방향이 필요한지를 들었다.

〈표 6-2〉 주요 인터뷰 질문

주요 인터뷰 질문
• 여성평화운동, 여성평화운동가의 차별화된 특성이 존재하는가? • 있다면 어떤 특성(의제, 활동 등)이 있는가? • 현재까지 활동에서 어려움은 무엇인가? • 현재 진행 중이거나 관심 있는 의제, 활동은 무엇인가? • 평화운동의 미래를 어떻게 보는가? •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2절, 3절에서는 인터뷰 내용을 통해 여성평화활동가들의 정체성과 문제의식, 의제 및 구체적 실천, 페미니즘x평화의 관점에서 미래에 대한 전망, 선호를 드러내기로 한다. 4절은 이머징 시티즌으로서 여성평화활동가의 특징을 정리하면서 이들이 예시하는 규범 미래의 상을 제시한다. 5절은 결론 및 함의를 다룬다.

제2절

평화운동가이자 여성, 여성이자 평화운동가: 군사주의-가부장주의 비판의 다양한 형태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평화운동가이면서 여성

배제에 대하여: 안보, 국방 문제에 대하여 “말할 자격’ 없는 자”

채용 과정에서, 옛날에 제가 국회 보좌진으로 인턴 활동을 한 번 했다가 대학원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취직을 하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지원했던 의원실이 국방위원회 의원실이어서 떨어졌었거든요. 저한테 “여자여서 떨어진 줄 아세요”라고 하면서 떨어뜨렸어요. 화장실에서 면접관이랑 만났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2017년이고 지금 같았으면 사실 되게 문제 삼을 만한.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취준생이었고 그렇게 뭔가 문제 제기할 만한 의식화도 많이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 당시에는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왔으니까**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당연히 저보다는 거기에 조금 더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 아니거든요. 오히려 다른 경험을 했던 사람들, 다른 위치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고 하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군대가 지켜준다고 말하는 대상들이 어쨌든 대표적으로는 여성이고 어린이고 청소년이고 **군대에 가지 않는 다양한 정상 범주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 ‘지켜준다’는 말의 실상이 무엇인가를 질문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군대라는 것이 지켜준다고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되게 타자화되고 대상화되는 객체로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보편은 지금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계속 어쨌든 군비 증강을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 영역에는 진보, 보수가 없거든요. 어떤 당이 여당이 되더라도 한 번도 ‘군사비 줄이겠다’, ‘무기 수출 좀 줄이겠다’ 했던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사실 이 한반도를 포함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계속해서 고도로 군사화되고 더 많은 돈이 군사비로 쓰이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되게 다양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쓰일 수 있는 복지라든지 기후 비용들이 되게 축소되고 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복지 비용 엄청나게 축소됐는데 사상 최고로 찍었잖아요, 군비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많이 모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도 해요, 이 평화활동가들이. 군대가 과연 우리를 지켜주냐. 오히려 ‘지켜준다’는 말로 인해서 말할 권리 없는 사람들로 취급했던 사람들이 더 ‘이거 아니다’라고 말해야 되고, 하는 것이 미래를 바꿀 것이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은 평화운동가들은 왜 여성일까? 비경제성

경제적으로 어쨌든 이거를 직업으로 삼아서 만약에 가정을 꾸린다면 그게 충당이 돼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여성들이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이 더 많았을 테니까, 남성들보다. 남성은 우리 사회에서 ‘경제력이 있어야 된다’가 우선이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기서 또 하이어나키가 생긴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남성들은 활동가로 남아 있는 사람보다는 교수이면서 여기 시민사회에 연결점을 갖고 있든지. 완전 제 추측이긴 한데 여성으로서는 그렇게 두 쪽을 다 잡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그냥 활동가로 사는 사람도 꽤 많은 것 같거든요. 교수이면서 활동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남성이 훨씬 많은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교수님이든지. 그런 하이어나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새는 조금 줄어들었나 싶기도 하면서 그거는 수치가 지금 파악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의제: 병역거부

여자라서 말 못 하는. ‘말도 하지 말라. 군대 이슈에 관해서, 징병 이슈에 관해서 얘기할 자격이 안 된다.’ 그런 것들 때문에 평화의 중요한 이슈를 아예 접근도 못 하게끔 하는 그런 문화도 있지만, 그런 데서 오는 다름도 있겠지만 오히려 여성들 중에서도 병역 거부를 선언한다든지 병역거부 운동의 다수를 차지하는 부분도 있고. 주체성을 조금 더 찾는 의미에서 피스빌더로서의 여성이 갖는 그런 목소리가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 입장에서는 병역 거부 이슈에 관해서는 욕아하는 사람들이 엄마로서 병역 거부를 선언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뭔가 실현이 되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잘 설계를 해야 될 부분이라서.

내가 어쨌든 그 대상이 되지 않아서, 징집 대상이 되지 않아서 병역 거부를 선언하지는 않고 잘 살았지만 앞으로 내 아이들이 군대를 가게 될 텐데, 남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나는 병역에 종사하지 않도록 하겠다 혹은 그 아이들을 그렇게 문화로 키우겠다, 전쟁에 연루되지 않도록 교육하면서 키우겠다라는 그런 선언들이 평화를 꿈꾸는 여성으로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육아하는 사람들로 확장가능하겠고. 나도 연루되지 않겠다, 전쟁에. 다른 사람도 그렇지 않게끔 내가 그런 방향성을 갖고 살겠다. 그런 선택을 조금 더 많이 펼쳐놓겠다. 그런 거에 노출되지 않으면 아예 상상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줄 책임이 더 있는 거죠.

의제: 군사주의, 군산복합체 비판

저는 사실 평화활동을 제가 주업으로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제가 활동을 처음 시작했던 게 앰네스티였거든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 활동을 2년 했었는데 그때 처음 사회생활이었고, 말하자면. 어쨌든 나는 사회를 바꾸는 일을 하고 싶은데 일단 먼저 취직되는 데 들어갔어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인권 활동을 하게 됐었는데 국제단체로 이 지역의 콘텍스트에서 어떤 문제들이 시급한가를 뽑아가지고 리액팅 캠페인을 하는 것도 있지만 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스트래티지 캠페인을 해나가는 게 있어요.

그때 제가 말았던 캠페인이 한국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캠페인이랑 그다음에 군대 내의 성소수자 처벌법 폐지하는 그 캠페인을 맡았었는데 그냥 어느 순간 생각을 해보니까 눈만 뜨면 국방부 앞에 가서 시위하고 있고 어느 순간 정신 차려 보면 국회 국방위원 만나서 로비하고 있고 되게 군대에 많이 가게 되는 거예요, 군대 이슈. 사람들이 존엄하게 살 수 있는 권리,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생각했을 때 한국 사회에서는 이 군대 문제를 빼놓고는 이야기를 하기가 되게 어렵겠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2018년에 예멘에서 난민들이 500명이 제주도로 입도하는 그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난민 문제도 대응을 했었는데 예멘 전쟁이라는 콘텍스트를 한국의 맥락에서 해석을 했을 때 한국이 예멘 전쟁에 관여하고 있는 UAE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에 얼마나 많은 무기를 그동안 팔아왔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내가 그 예멘 난민들이 떠나와야만 했던 그 사건에 있어서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가를 다시 한번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군사주의’, ‘전쟁’이라는 키워드로 인권을 바라봤을 때.

‘그러면 나는 이 전쟁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럼 나는 평화활동을 한번 해봐야겠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세상이 모두가 자유롭고 존엄

하게 사는 세상이라면 그러면 일단 군대와 전쟁 문제는 조금 더 앞서서 해결을 해야지 그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도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거대한 폭력이 군사주의와 전쟁을 통해서 돈을 버는 시스템과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지를 좀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의제: 무기박람회 반대 캠페인

2022년에 DX 코리아라고 하는 무기박람회 가서 탱크 위에 올라가서 이제 구호 외치고 바이올린이랑 기타 연주하고 이런 액션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게 막 엄청 뭔가 형사처벌이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했던 액션이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형사 사건으로 기소가 되어가지고 1800만 원 벌금을 받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못 낸다 재판을 청구를 해가지고 1심 무죄를 받았는데 검사 1심 무죄가 작년이었고 검사가 이제 항소해가지고 지금 2심이 막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재판이 있고 나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그전보다는 되게 많이 관심도 많이 보여주시고 진상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좀 운동들이 많이 커져 가는 것 같아요. 지금 2심 공판을 이번 주 월요일에만 마쳤고 10월 10일날 2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에요.

무기박람회는 원래 육군하고 공군하고 해군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번에 육군 지상무기 전시회가 2개로 쪼개지면서 2개가 생긴 거예요. 원래 하나였는데 그래서 DX 코리아라고 저희가 2년 전에 올라갔던 그게 따로 하고 카텍스라고 이번에 계룡대에서 처음으로 시작되는 게 있어요. 10월 초에 시작이 된.

의제: 미군 캠프 시민사회 반환 이후

(필리핀 미군 기지 관련 활동가들과의 만남에 대하여) 군사기지 오염 문제 관련한 거거든요. 너무나도 연결이 되죠. 군사기지 주변의 시민들과 그리고 말로 옮겨지지 않은 많은 비인간 존재들의 희생들, 그런 것들은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정치적인 주제들이니까. 그거랑 군사동맹들이 어떻게 기지들을 많이 만들고 이용하게 하고 그러면서 미해결 되고 책임이 공백으로 남아 있는 그 상태로 만드니까. 그래서 그런 **지정학적 이슈와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일상을 좀 이어보고 싶어 하는, 이어보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춘천의 캠프페이지 반환 이후 시민사회에 환원되는 과정을 모니터

링 하는 것도 연관된 이슈죠.

의제: 동북아시아 긴장 고조에 대한 조기경보, 공동안보

조기경보는 GPPAC이라는 단체에서, 올란바토르 프로세스에서 제안을 맨 처음 하셨었는데 이제 우리가 한반도 이슈만 안 된다, 더 이상은, 동북아로 펼쳐야 되고 regional 이슈로 가야 된다고 제기했던 것이 있죠. 한반도만의 문제가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점점 현 윤석열 정부 때문이기도 하고 여러 나라의 단체들의 지도자들이 약간 보수화되는 경향, 그리고 군사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그 경향에 따라서 동북아시아를 봐야 되고 그다음에는 거기서 조금 엮어진 거긴 한데 조기경보가 있어야 되겠다. 어쨌든 조기경보라는 것이 갈등에서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지표를 미리 보고 이거는 갈등을 예방해야 되는 차원이다. 그래서 조기경보가 필요하다.** 이 차원에서 조기경보가 있어야 된다는 거를 제안해 주셨죠. 그래서 저희가 조기경보 보고서를 쓰면서 여러 학술 네트워크에서도 발표를 한두 번 했었고 결과를 수합해 조기경보 보고서를 낸 거죠. 이제는 관련 조치로 플랫폼처럼 더 있어야겠다, 우리가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지금 단계가 약간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2 여성이면서 평화운동가

여성, 소수자, 그 다양한 정체성

(진행 중인 군사주의와 여성의 민주적 권리에 대한 용역 인터뷰에서) 민주적 권리 상황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본인의 욕구나 욕망 같은 것들이 얼마나 반영된다고 느끼냐? 얼마나 전달될 수 있다고 느끼냐?”라고 질문을 하는데 그때 “그러한 욕구와 욕망들의 기반이 되는 당신의 정체성은 무엇이야?”라고도 물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 **정체성에서 ‘여성’이라는 것이 되게 빠르게 나오는 분도 계신데 어떤 분은 안 그렇기도 해요.**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질문하거나 아니면 활동을 하면서 여성 활동가라는 점이 갖는 한계라든지 혹은 그냥 중립적인 차원에서의 영향을 물어도 “잘 모르겠다.” 혹은 자기는 “스스로를 여성으로 정체화하면서 활동을 하지 않는다.” 이전에 제가 다른 일들을 했을 때 만났던 선배 여성 세대들이 접근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느꼈어요. 여성성을 최대한 무화시키고 그런 것들을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그래서 그 대응 전략에 확실히 차이가 있고 이거는 저의 어렵풋한 느낌이지만 세대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훨씬 더 젊은 활동가일수록 그런 개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도 더 풍부하게 많이 하는 편이고 여성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나 아니면 이거를 자기 활동과 어떻게 연결시키는지에 대한 것들도 조금 더 층이 깊다고 해야 될까? 개인이 조금 더 아무래도 중요하게, 연령대가 조금 낮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정체성, 당신을 구성하는 정체성이라고 했을 때 일단 ‘여성’ 혹은 ‘퀴어’ 이런 것들이 딱 단어로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미 가지고 있는 ‘나’는 ‘여성’이고 혹은 ‘퀴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미 딱 단어로 던져질 수 있고.

그리고 활동에 진입하게 되는 경험들에서 특히 요즘에 2030 여성들이 같이 겪어왔다고 얘기되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강남역 살인사건이라든지 신당역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언급이 되는 거죠. 그때의 경험들 혹은 그때 내가 어떤 방식으로 연대하면서 이 운동에 결합하게 되었다. 이런 곳에서 처음 이 사회운동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됐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개인적인 삶에서의 안전함에 대한 감각을 물을 때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에 대해서 되게 명확하게 이야기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정체성에서 여성이라는 정체성이 묻기 전까지 나오지 않는 분들에게서는 그런 접근은 사실 잘 나오지 않아요. 내가 일상에서 한국에서 여성으로 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교제폭력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묻지마로 발생하는 사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위협을 받는다고 느낀다라고 하는 접근은 드문 거죠. 보이지 않는 거죠.

동시대의 어떤 사건들에 훨씬 더 2030 청년 여성들이 많이 감정적으로 일치되어 있는 이런 사건들에 더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좀 느껴져요. 그때는 여성 개개인들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구호들이 계속해서 나왔으니까 그런 영향이 아무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죠. 사실 운동에 이렇게 막 결합하는 게 아니라도 그냥 보기만 했어도 되지 않았겠냐. 예를 들어 강남역 살인사건의 집회 같은 경험들이 영향을 끼쳤다고 했을 때 강남역을 지나가는 여성들은 사실 수 많은데 거기에 꼭 모두가 다 동일한 수준으로 연루되지는 않잖아요. 근데 ‘왜 그랬었냐?’라고 하면 이 앞선 서사로부터, 그러니까 자기 어렸을 때부터 되게 여러 가지 경험들이 막 섞이면서 만나는 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다르다고 느꼈어요.

(저의 정체성은) 어쨌든 육아랑 관련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런 아젠다를 신경 쓰고 모임을 하는 이유가 어쨌든 우리가 작은 단위에서 충분히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가정을 꾸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작은 단위에서 무엇을 사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하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서 어쨌든 방향성을 가지고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입장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비슷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물론 지금 육아를 하지 않는 여성들이 훨씬 많아지고 있지만 서로 여성이라는 입장에서 주변을 돌본다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다음 세대들 혹은 미래를 걱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각들이 훨씬 많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래야만 할 상황에 처해져 있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의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가 좀 더 많이 여성들이 노출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좀 더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당장 생활로부터 연결되어서 그게 사회적인 결정까지 어떻게 되는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육아하는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고 이 공동체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학교에서 누구를 만나고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또 학교 아이들이 어떤 문화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사람의 존재 자체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그런 걸 되게 관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나만 잘산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를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 문화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있어야 될까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관찰하는 바로는 남성들도 육아하는 데 많이 나타나시고 진짜 많이 늘어난 게 눈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이 어떻게 보면 점점 더 소수의 육아하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성들도 그렇게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만큼의 기대치를 가지고 육아에 동참하거나 그런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육아, 교육에 대하여: “공동체에서 돌보는 자”

저는 육아하는 분들을 좀 연결시키려고 했는데 몇 년 하다가 멈췄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육아하는 분들의 1순위가 되지는 못하는 거죠, ‘육아하는 피스빌더’라고 해서 모았었는데 몇 번 모임을 되게 촘촘하게 하다가 각자의 위치랑 그게 달라지니까 또 일하게 되시는 분들도 많고 따로 시간 내기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저는 (육아하는 것이) 정

체성 중의 하나인 거죠. 육아를 먼저 하고자 했을 때 피스빌더를 어떻게 같이 할까도 고민이지만 원래 피스빌더가 내 원래의 정체성이 더 가까웠는데 그 뒤에 육아가 덧붙여진 거라서 ‘그러면 나는 육아 때문에 이걸 못 하네?’를 싸우다가, 거의 10년 동안 활동을 못 했으니까요. 내가 살고자 그런 사람들을, 정체성이 같은 사람들을 조금 찾아보고 싶다. 왔다 갔다 했는데요. 그래도 많게는 15명까지.

모임을 되게 다양하게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워크숍처럼 정체성 알아보는 워크숍부터 시작해 가지고 비인간 존재 이슈로 같이 아이들도 데리고 와서 하게끔. 안 그러면 못 오니까. 나중에는 제로웨이스트 같은 거 해서 같이 투어도 하고 음식도 어떻게 비건처럼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소비하는 입장이니까, 어쨌든. 가정에서 뭔가 결정해야 되는 입장에서 조금 더 기후위기에 맞는 소비를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실험도 해보고. 아이들 관련해서는 너무 폭력적인 미디어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비판적으로 볼 수 있을까. 폭력뿐만 아니라 성차별적인 미디어나 그런 것들도 우리가 어떻게 옆에서 잘 조언을 해주면서 혹은 가이드를 이렇게 해주면서 볼 수 있을까. 그런 것도 되게 실질적인 부분이 많죠. 장난감을 하나 살 때도 색깔이 딱 나뉘져 있고 워딩도 남자아이 여자아이 나뉘져 있고.

그나마 학교폭력 이슈라든지 그런 거를 저학년에 조금 더 저연령화되니까 유치부라든지 초등 완전 1, 2학년들 대상으로 학교폭력 이슈가 점점 내려가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감수성 교육이나 평화 교육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것도 약간 지금 이슈에서 밀리고 있긴 하죠. 우선되는 이슈들이 지금 어쨌든 전쟁 위기나 이 쪽에 너무 크게 보이는 게 많기 때문에. 저희 안에서 해내려니까 이게 약간 밀린 경향은 있는데 그래도 캐치를 하고 있긴 해요. 커들링이라는 사업을 노무현시민재단에서 받아서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미리 만나서 같은 학년이나 같은 또래 아이들과 관계 맺기를 제대로 잘 미리 평화 감수성적인 측면에서 하고 가자라고 해서 몇 번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100%는 하지 못했고 어쨌든 모집이, 지역사회에서 저희가 새로운 단체이기도 했고 그런 상황에서 크게 성공적으로 연결은 안 났는데 관심이 계속 쏟아지고 있기는 했어요.

일상의 비평화에 대한 투쟁: 새로운 언어의 발굴

(여성평화활동가 뉴스레터 연재는) 한 해의 계획을 같이 짜면서 기획이 된 건데, 주변

에 여성이고 평화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글 쓰는 걸 좋아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쓸 수 있는 꼭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기획을 하면서 의미 부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어쨌든 군사화가 만연한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에서 **군사주의에 대해서 목소리 내고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보통 남성들인 거예요.** 일단 군대 경험이 있고 군대에 대해서 뭔가 군대를 갔든 혹은 병역 거부를 해서 안 갔든 간에 그 자격을 부여받는 사람들은 어쨌든 정상성을 가지고 있는 남성들이라는 생각이 많이 있어서 **여성들이 평화활동의 의제 안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싶어 하는가, 그리고 평화활동의 무대가 아니라 일상에서 어떻게 평화를 사용하는가를 담아내는 게 - 조금 더 또래, 이번에 다 청년들이거든요 - 또래 여성들에게 어떻게 그들의 일상에서 군사주의를 더 사유하고 발견해 낼 수 있는 언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에서**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의제 중심의 글이라기보다는 되게 **일상적인 글이에요.**

저는 새로운 언어가 쌓인다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동료가 생기는 느낌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꺼내지 않았으면 그냥 나만 겪었을 문제이고 ‘나만 이상한가?’라고 생각했을 법한 그런 일들인데 그걸 어쨌든 공론장에 한번 꺼내놓은 거잖아요. 내가 일상에서 겪은 사건과 그걸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공론장에 되게 용기 내서 꺼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슷한 경험들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공유라든지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저한테 개인적으로 피드백을 주신다든지 하는 것들에서 “나도 그랬어”, “이거 내가 쓴 글 같아.” 아니면 “이거 우리 딸이 쓴 거랑 비슷해. 우리 딸이 쓴 건 줄 알았어.”라고 하면서 되게 비슷한 경험들을 꺼내주시면서 그거 자체가 되게 동료가 생기고 연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느낌인 것 같아요.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아세요? **국방백서 해설집 내는 작업** 알고 계세요? 그걸 작년부터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국방백서를 정부에서 매년 내니까, 그거를 말하자면 대중적 언어로 번역해서 시민들한테 배포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일단은 좀 쉽게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뭔가 말을 꺼내면 어려운 말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그런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없애고 **일상에서 사람들을 조금 더 많이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연결 지점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열군이 하고 계신 그런 작업들 비슷한 것들이 저는 점점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려워요.

평화교육으로 만나는 분들이랑은 일상을 어떻게 안전하게 구성할 건가라는 대화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학교라든지 일터라든지 이렇게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안전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갈 건가를 같이 학습을 하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같이 배우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있는 일상의 공간, 그리고 우리를 구성하는 사회, 그 사회를 구성하는 이 세계의 질서를 조금 더 확장시켜 가면서 이야기하려는 접근이 있고.

그다음에 캠페인으로서 접근할 때는 저 개인적으로는 무기 산업에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 사회가 성장 동력으로 삼는 무기 산업이라는 게 사실 지구 반대편에서는 사람들을 막 많이 겨누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우리 일상 속에 있다. 그게 내가 될 수도 있고 내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이미 그런 전쟁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속에서 우리 일상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 일상에서 전쟁을 떠받치고 있는 것들을 조금 찾아보자. 찾아서 거부할 수 있는 선택지를 조금 더 늘려보는 것. 그런 게 제가 좀 더 잘해 보고 싶은 일이에요.

(여성/개인의 안전과 평화 의제를 결합하는 문제와 관련해) 이번에 딥페이크 사건 보면서 어떻게 성차별주의, 가부장제 그리고 군사주의가 공모해서 이런 디지털 성범죄가 가능한 세상을 만드는가에 대해서 뭔가 메시지를 내거나 이런 소소한 시도들은 해오긴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매년 4월마다 군사비 감축 캠페인을 국내 평화단체들과 같이하는데 올해는 어떤 계획이 있었냐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올해에 예산이 깎인 부문들이 되게 많아요. 복지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많이 깎여가지고 뭔가 여성단체들이 활동할 자원들이 없다든지 아니면 여성들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성폭력을 당했을 때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실이 폐지가 됐다는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군사비 문제랑 연결시킬 수 있을지 고민을 하면서 토크쇼를 한번 연 적이 있어요, 4월에. 그렇게 윤석열 정부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라고 하고 여가부 폐지를 시도하면서 여성단체들의 예산을 다 깎았는데 그 와중에 군사비는 이렇게 올랐다. 연사가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가부 예산이 깎였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군사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포괄적 평화의 개념 지향

(평화의) 아젠다 자체가 되게 좁게 설정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나라에서 평화라 하면 안보, 군대, 군사 이거랑만 연결이 되었으니까. 여러 가지를 일

부러 더 얘기하려는 이유도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연결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거를 보여주려고 조금 더 광범위하게 일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면서. 기존의 그런 아젠다들은 평화면 안보, 평화면 통일. 사실은 통일이죠. 그런 쪽에서 일하는 분들이 주가 되니까. **그걸 또 얘기할 수 있는 문화가 되게 폐쇄적이긴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안보 이슈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어쨌든 사회적으로 광범위한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개발 이슈랑 비교해 봐도 개발 쪽은 엄청 자원들이 풍부하다고 하더라고요. 최소한 인권이나 개발, 국제개발 이쪽은.

평화라면 전쟁이 없는 것이라고만 하면 분단 문제, 통일 문제 그렇게 돼버리니까. 갈등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갈등을 다루는 그런 집단이나 운동 영역이 크게 도드라지지 않았다 보니까. 그냥 가깝게 여기는 시민사회 영역을 갈등이라고 했을 때 옴부즈맨부터 시작해서 갈등 분석만 가지고 일하시는 단체들도 많고 거기도 좀 많이 달라졌겠지만 시민사회의 폭이 되게 넓다고 느껴졌었거든요. 정책 advocacy하는 단체들도 많이 있고. **그거에 비해서 영역이 엄청 좁다.**

군사주의와 여성의 민주적 권리

용역 연구 사업이거든요. APWLD라고 Asia Pacific Forum on Women, Law and Development라는 그런 풀뿌리 여성 네트워크가 있어요. 엠브렐라 조직 같은 건데, 말하자면. 거기서 한국하고 키르기스스탄, 미얀마, 웨스트파푸아 이렇게 네 가지 지역의 여성단체한테 **각 지역의 맥락에서 군사주의가 여성의 민주적 권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분석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신 거예요.

우리끼리 그냥 활동할 때는 주변에 여성 활동가들 많으니까 우물 안 개구리로서 느끼는 걸로 주변에 다 여자인데, 남자들 별로 없고 워낙 NGO 섹터에는 남자들이 별로 없기도 하고 주변에 다 여자인데 막상 인터뷰 사업을 딱 따고 나서 단체별로 딱 만나려니까 많이 없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것도 흥미롭다. 또 발견한 게 뭐냐면 **실무 단위에서의 여성들은 되게 많은데 기획이라든지 자문이라든지 운영을 책임지는 단위는 남성들이 대부분인 단체들도 많았고.**

우리 사회에서 군사주의의 영향 같은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 어떤 주제나 어떤 소재 같은 것들을 선택해야 될까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명확히 하나로 좁혀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군사주의의 영향이라는 게 되게 광범위한데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아니**

면 물리적 충격 충돌 예방 방식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한국 사회는 교묘하게 내재적이다. 이거를 다방면에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거꾸로 물어보자 군사주의의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군사주의를 어떤 방식으로 느끼고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느냐 활동 가운데에서 이거를 물어봐야겠다고 해서 이제 인터뷰 형식이 된 거예요. 일단 여성이고요. 아니면 소수자. ... 트랜스젠더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개의 군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괄되게 된 거예요. 기존의 여성 프레임이 아니라 기존의 군사주의라든지 군사화, 그러니까 국내에서 평화 문제에 대응하는 사람들 중에서 여성인 행위자들을 찾았어요.

군사주의에 싸운다고 하는 조직 안에서도 그 안에 군사화된 문화들이라든지 사회적인 위계가 너무 만연해 있다는 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여성 활동가들이 어떻게 발견하고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가가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면 좋겠다 싶은 포인트였어요.

인터뷰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물어봤던 것들이, 특히 의미심장했던 것이, 처음에는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직후에 ‘한국이 그러면 민주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이걸 물어봤어요.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하는 것과 민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해석이. 대부분의 인터뷰이들은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하냐?”에는 “네”라고 하지만 “민주적이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트랜스 여성 당사자분을 인터뷰를 했거든요. 군대 경험이 있고 재단에서 활동을 하시는 트랜스 여성 당사자를 만났는데 그분한테 딱 물어봤을 때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분은 처음부터도 아니라고 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식이 되게 다르구나. 같은 성별을 가지더라도 어떤 경험과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권리가 되게 취약해진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인터뷰였던 것 같아요.

제 3 절

일상의 평화, 모두의 평화라는 미래 비전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백래시, 페미니즘 내 세대 단절, 그리고 현재

넓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2010년대 중반 정도부터가 맞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백래시라고 하는 흐름들이 시작되면서. 여기서는 막 문제라고 우리끼리는 얘기했지만 가법게 여겨지거나 좀 왜곡된 방식으로 이해되거나 혹은 그냥 무시되거나, 그러니까 간과된 거라고 보는 게 더 맞겠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영향력이 힘을 키워왔고 (진행하고 있는 용역 인터뷰 중에 이런 분도 있어요) 본인은 한국 남성들이 무섭다. 왜냐하면 이 논리를 그대로 체화하고 있고, 너무 완전하게 동일시하고 있고 내면화하고 있는 남성들이 많다고 느끼는 것. 그게 투표를 통해서 반영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원내 정치에 진입하고 정치적 대표성을 가지고 거리낌 없이 어떤 언어들 표현해내는데 그게 차별의 언어고 혐오의 언어인데 이게 사회적으로 통제되지 않고 문제시되지 않고 하는 것들이 존재하는 거죠.

예전에는 그래도 하다못해 부끄러운 줄이라도 알아서 설령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도 겉으로 내보낼 때 점점 더 조심해야 한다는 기류가 만들어지고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완전히 그게 없어진 게 아니냐. 그러니까 조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치의 언어가 이제 점점 혐오와 차별의 언어들 확대해서 대표하는 상황에 이르러 있으니 이보다 더 나은 다음을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딥페이크 범죄 같은 거에서도 보이지만 청소년들에게도 이런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일상적인 수준에 다다랐고, 근데 교육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할 무언가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런 가능성들은 점점 축소되고 있고 성평등 교육, 성평등 도서 다 빼버리고 너무 전방위적으로 계속해서 이게 소외되고 있다고 느낀다는 거죠.

16년 강남, 이 전후로가 가장 대중집회 같은 것들이 많이 집중됐던 시기여서. 낙태죄 폐지 그다음에 불법촬영, 강남역 이런 것들이 뭐랄까 특히 젊은 여성들을 많이 결집시켰던 경험들이니까. 제가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여성학회 같은 데 가서 보거나 아니면 여성단체들 만나면 그때 온라인을 통해서 모였던 젊은 10대, 20대 여성들은 뭐랄까 앞

서 배울 수 있는 어떤 운동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약간 단절 같은 것이 존재했던 거죠.

그 앞에 있었던 영페미. 영영페미가 여기 있고 영페미가 여기 있으면 뭔가 중간이 비어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는 감각하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90년대나 2000년대에 활동했던 분들 내지는 그거보다 더 전에 계셨던 분들은 “새로운 사람들이 구해지지 않는다. 우리의 운동이 계속해서 연결되는 동력을 잃었다.”라든지 단체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들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안 구해지고 활동가가 안 구해지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슈 자체, 평화운동이나 여성운동이나 이런 이슈 자체에 이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이 다음 세대들을 연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문제의식** 같은 것들을 가지고 계셨던 걸로 생각을 해요,

사실 아래에서 단절을 느낀 건 그냥 몰라서인 것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용하던 플랫폼, 매체 자체도 다르고 접근 가능한 접점을 많이 못 찾지 않았었나, 일단은. (영영페미 중심) 대중집회들도 트위터랑 이런 데에서 많이 확산되고 했었던 게 있으니까 2010년대 후반, 중후반 정도였던 것 같은데. ... 결정적으로 TERF라고 하는 입장에 대한, 그런 관점에 대한 입장 차이가 (세대 간에) 되게 명확히 드러났던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워마드 계열의, 그러니까 쉽게 따지자면.

그렇다고 그게 10대, 20대 젊은 친구들의 전반적인 무언가였나?’라고 하면 잘은 모르겠지만 겉으로 드러나기를 많이 그렇게 드러났으니까 **워마드의 존재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숙명여대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예멘 난민 사건 때 여성들의 입장 같은 것들, 여성 페미니스트들이 특히 젊은 페미니스트들이 난민에 대한 혐오. 두려움에서부터 출발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런 지점들에서 교차성을 이야기하는 선배 세대 페미니스트들과의 단절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그렇게 뜨겁게 활동했던, 트위터에서 특히 아니면 온라인상에서 엄청 뜨겁게 활동했던 사람들이 한풀 꺾이는 시기가 지나갔잖아요. 그때의 경험들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것들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사실 안타까운 게 그렇게 결집하고 그때 굉장히 모여서 세력을 보여주는 경험들을 했지만 전체적인 사회로 봤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더 나은 방식의 무언가들을 이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경험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N번방 가지고 그렇게 시위를 했는데 딥페이크를 또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이게 어떤 운동이나 하나의 세력으로서의 TERF가 존재한다는 느낌은 지금은

사실 잘 안 들거든요. 이제는 그냥 어떻게 보면 너무 소수의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거보다는 또 다른 의미에서 아주 어린 초중고등학생, 고등학생까지도 ... 저는 TERF들이 마구 활동하는 걸 보면서도 조금 걱정이 됐던 거는 주로 이게 좀 더 어린 친구들한테서 많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던 거다 보니까 이게 활동적인 무언가로 이어 지지는 않더라도 남성에 대한 거부감, 배타적인 감각 같은 것들을 되게 체화할 수도 있 겠다는 부분이 좀 걱정이 됐었던 게 있었고. 지금 딥페이크 보면서도 그런 생각 하거든요. 저 시기,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시기에 저런 경험들을 하고 TERF가 되지 않을 여자가 어디 있을까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게 잘못다는 게 아니라 **남성에 대한 신뢰, 이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 같은 것들이 불가능한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 그게 계속해서 그 먹이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입장들이.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사회에서 사람들을 여럿 만나고 뭔가를 하면서 변화되는 것들도 있긴 있겠지만 점점 단절의 간극은 커 지겠다. 이때는 여자와 남자를 이렇게 대충 뭉뚱그려놔야 할 때 대화 가능한 무언가 접점을 찾는 게 점점 이 영역이 줄어들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체 구조로 봤을 때 밖으로 드러나는 건 어렵지만 여성들도 같이 내려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페미니즘을 알고 있는 전체 볼륨 자체는 계속해서 커지는 것 같거든요, 2030 여성들은.** 그리고 그게 투표에서 점점 더 많이 반영되고 있다고 느끼고, 문제는 그게 양극화의 양상으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소위 ‘이대남’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이대녀’라고 말하고 싶지 않지만 그게 이런 식으로 달라지고 있는.

우리의 공간의 민주성

인터뷰 얘기 중에 기억에 남았는데 한동안 왜 대학에서 총여학생회가 폐지되는 흐름들이 짝 있었잖아요. 그때 그 총여를 폐지하는 그 논리 가운데 다수결이라고 하는 이 민주주의의 장치가 굉장히 유효하게 작동했다는 거예요. 투표를 통해서 총여학이 폐지 됐으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 총여를 폐지시키면서 “이게 다수의 뜻이지 않냐, 이게 다수의 의지다. 그리고 이거는 학생들이 모두 다 동의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 그 총여의 존재 이유라든지 아니면 이 기구가 해야 하는 기능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은 하지 않죠. 고민하지 않은 상태에서 없애버린 거니까 그때 굉장히 대 결적인 구도로 진행이 됐었고 또 거기에 많은 여학생들이 동시에 ‘이게 왜 존재하냐?’ 라고 생각하기도 했었고.

(인터뷰에 따르면) 그거를 보면서 생각했던, 경험했던 게 **민주주의의 언어로 이렇게 비민주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굉장히 충격이었다. 그때 경험했던 학생회 문화도 여전히 되게 군사주의적인 거죠. 복학한 오빠들이 와서 집행부를 위에 있는 뭔가 자리들을 차지해 나가고 밑에 있는 여성들은 계속해서 실무만 하고 있고. ‘아직도?’ 이런 느낌이었는데, 저는. 근데 그게 되게 웃긴 게 제가 거의 무슨 왜 전희경 선생님 ‘오빠는 필요없다’ 수준의 완전 옛날 운동권에서 가지고 있었던, 남성들은 정책 만들고 멋 있는 거 하고 여자들은 설거지하고 예쁜 글씨 쓰고 이런 거 하던 시절의 성별 구도 같은 구조를 2010년대 학생회에서도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었다는 게.

물론 사실 여성평화조직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에 있는 내부 구성원들이 다 민주적인 것도 아니어서 여성 내에서도 당연히 비민주적인 조직구조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선배 여성들이 가장 독재적이고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뭔가 권력을 행사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걸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얘기 하기에는 여기만큼도 못 간 것 같은 거죠. 만약에 더 민주적인 어떤, 그리고 성평등한 조직문화, 아니면 사회적으로든 뭐가 됐든 이 문화 전체를 이야기하기에는.

그리고 그런 데에서 오는 뭐랄까 실망감 같은 것들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여기는 평화운동 단체니까 내지는 여기는 페미니스트 모임이니까 이런 곳에서는 권력의 문제랄까 하는 것들이 ‘좀 더 여기는 괜찮겠지’라고 기대하면서 들어오게 되잖아요, 활동을 하는 동안에 겪다 보면 모두의 마음이 나 같지 않으니까 그런 비민주적인 상황들을 겪게 되고 그러다 보면 더 많이 실망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중년 남성이 쏜대 짓을 하고 막 가부장적으로 굴고 비민주적으로 굴고 할 때는 오히려 기대치가 없으니 ‘그럴 수 있지’, ‘아 그래, 저거 한남인가 보다’라고 하면서 넘어갈 일들도 오히려 더 민주적일 거라고 기대하는 그룹에서 혹은 더 민주적일 거라고 평화를 이야기하고 반군사주의를 얘기하고 뭔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일상생활에서는 사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들을 깨닫는 데에서 오는 차이랄까 이런 것들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지 몰라도 **개인으로서의 (정체성), 경험들을 더 많이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단체 조직이 가지고 있는 한계로서의 비민주성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더 민감해요.** ... 한국의 민주주의 상황이라는 게 본인이 활동하는 데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라고 하면 한국의 정치 구조 내지는 선거제도 이런 것들 아니면 지금의 정치 상황이 이 단체들의 활동에 엄청나게 제약을 많이 가하고 있고 그래

서 의사전달 같은 것들이 불가능하고 정책적으로 뭔가를 도모하는 가능성이 계속해서 축소되는 경험들을 하고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는데 그 외에 단체 내에서의 비민주적인 구조 혹은 그것을 깨려고 했었던 경험 같은 것들이 이야기되는 건... 캐릭터들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냥 너무 물 흐르듯이 그냥 원래 쪽 그랬던 것들. 그래서 문제의식이 존재하더라도 이것을 적극적인 방식으로 뭔가 바꾸려고 하거나 아니면 단체 내에서 이런 것들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뭔가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내부자로 있기 때문에 이 구조들을 더 보지 못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동시에 여성이라는 점에 대해서 깊이 고려하지 않는 것 혹은 그거를 최대한 일의 영역과 분리한달까, 여기에 개입시키려고 하지 않는 거. 여성성 혹은 여성 정체성 같은 것들을 다른 활동가들에 비해서 덜 고민하는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페미니즘과 평화구축

제가 생각하는 페미니즘에서 여성은 여성으로 제한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럴 때 여성과 그리고 사회 여러 영역에서 소외되어 있는 목소리들이 궁극적으로 차별받지 않는 지점에 도달한다면 사실은 군사주의의 문제든 민주주의가 가진 비민주성의 문제든 이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정도 상황에 이르렀다는 건,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차별,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약에 없어졌다고 한다면 나머지 문제들은 이미 많이 없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성 차별은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자 그 명확한 지표라고 생각하거든요. 군사주의가 작동하는 것도 결국에는 젠더 차별을 포괄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힘을 얻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군사주의라고 하는 게 보통 그냥 군대의 존재 같은 거로 좁게 보자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작동하는 논리로서 전체 크게 보았을 때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군사주의는 결국에는 지키는 자와 지킴을 받는 자를 구분해 놓고 이걸 지키겠다고 말하면서 생겨나는, 거기에 기반해서 만들어지는 구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지켜줄게’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와 명분이 될 수 있고 거기에 여성과 남성이 되게 쉬운 방식으로 기입되어 왔었던 것이고, 그 논리 안에서 지

키는 자는 강력하고 무력을 가지고 있고 폭력을 합당하게 써도 괜찮고 합법적인 폭력 기구로서의 국가가 존재하고 군대가 존재하고 그게 작동하는 방식이 여성을 계속해서 차별하고 소외시키고 배제하는 방식으로만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군사주의와 가부장제는 서로 계속해서 키우잖아요. 상호 강화하는 구조에 있다 보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성에 대한 차별, 그리고 그 여성에는 여러 다른 소수자들까지 포함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목소리가 충분히 전달되고 이들이 인권을 위해서 애써 힘쓰고 애써 막 투쟁을 해야 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 지점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 지점이 어떻게 보면 최대가 아닐까. 최소점이자 아마 최대이겠죠? 그렇다고 느끼는데.

평화운동, 평화운동가의 미래

실패의 경험들만 계속해서 쌓고 있는... 활동가로서 어떤 활동을 시작한 이래로 그 단체가 가지고 있었던 아젠다를 실현시켜본 경험 같은 것들이 너무 부재하다라든지 이러면 이제 동력을 잃기도 하는 것 같고요. 무력감을 누적해서 많이 느끼면서 ‘이게 될까?’ 하는 마음들도 좀 느껴지기는 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되게 많이 느껴지는 게 이게 현상 유지라도 되면 좋겠는데 군사주의와 민주주의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군사주의라고 하는 키워드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민주주의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현상 유지조차도 못 하고 계속해서 뭔가 후퇴하고 있다는 감각 같은 게 많이 느껴져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정치적 참여의 가능성이나 내 의사 표현의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공통 감각 같은 것들은 사라지고 기반들이 무너지고 대화할 수 있는 영역들이 너무 줄어들고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고요. 막자고 하면 그거라도 막아야겠죠? 그렇게 변하고 있는 그 상황들을. 최소한의 어떤 민주적인 대화의 가능성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다고 느낀다면 막아야 할 미래에는 그것이 더 이상 축소되지 않게 정도여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더 나은 방식으로 발전시키고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피스빌더들이) 더 소수가 될 것 같은데 소수가 엄청 또렷해질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본인을 피스빌더라고 지칭하는 일은 더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것 같고. 어쨌든 경제적으로 중심이 되어서 돌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게 아주 크게 흔들리지 않는 이상 이런 피스빌더라는 직업으로 볼 때 이게 경제적으로 매력 있

는 직업도 아니고 이게 뭔가 부를 창출하는 직업도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직업으로 생각하거나 나의 정체성으로 삼기는 어렵지 않을까. 근데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평화를 상상하는 사람들은 다 피스빌더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관심 있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다 피스빌더다라고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만약에 문화적으로 이런 공감대가 더 넓어지고 사회 이슈에 대한 관심이 넓어진다면 피스빌더도 더 많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진짜 그걸 직업으로 삼는 사람은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 아무래도.

이머징의 측면이라면 (평화 의제) 자체는 관심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끌고 나가느냐가 문제일 것 같고, 그래야만 맞을 것 같고. 미래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점점 구별이 될 텐데, 앞으로 노동이 없어도 되는 사회로 점점 갈 것 같은데 거기서 진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라고 했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조율하는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가치 위주로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그 가치를 설정하고 같이 가야 되는 그런 무언가를 설정할 때 **아젠다를 제안하든지 아니면 아젠다를 놓고 고민하는 사람들 간의 의견을 조율하든지** 뭔가 그런 세팅을 제안하는 역할에서 피스빌더가 조금 더 **평화 의제에 연결해서 이머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꿈은 있죠. 근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그 전에 전쟁에 대한 이슈가 먼저 부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는 방법을 제안할 건가, 그게 약간 숙제인 것 같고. 사람들이 그거 관련 없이 지금 그냥 살고 생활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그걸 연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받아들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러면 파이를 늘릴 것인가가 늘 저는 고민이거든요. 근데 제가 평화운동 진영에 지금 5년 정도 있었는데 커지지가 않고 줄어드는 느낌이에요. 5년만 있었는데도. 사람들이 줄고 자원이 일단 없으니까 이게 지속 가능하지가 않은 거죠. 워낙에 마이너 이슈니까. 인권만 하더라도 인권은 그래도 보편적 가치로서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지’ 이러는데 뭔가 군사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사회적인 합의라든지 동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 영역이 주목을 많이 못 받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진짜 그야말로 버티는 느낌이기도 하고.

이 군사 분야라는 게 시민사회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과를 내기가 되게 힘든 영역인 것 같아요. 뭔가 **제도적으로 바뀌낼 수 있는 게 너무나도 장벽이 크고 너무나도 성역화되어 있고** 그러니까 개입 지점은 오히려 못 찾고 있고, 근데 너무 중요하니까 붙잡

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면 사람들은 효능감을 그렇게 많이 못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지하거나 혹은 퀘스천마크를 가지고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지치게 만들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평화운동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 영역의 구조가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무력하지 않게 어떻게 효능감을 느끼게 할 것인가, 운동의 과정에서. 그래서 그 운동의 장기적인 목표가 있다면 그 안에서 세부 목표를 잘게잘게 쪼개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기박람회 저항운동이야’ 이러면 지금은 엄청 한 줌이지만 그래도 조금조금씩 사람들을 동료들을 늘려가고 이런 걸로써 효능감을 많이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저는 실제로 그러고 있기도 해요. 이 안에서 그래도 사람들이 조금조금씩 모여들고 그래도 동의하는 사람들이 조금조금씩 많아질 때, 그럴 때 ‘아, 의미 없는 움직임은 아니구나’라는 걸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4절

여성평화활동가: 더 많은 민주주의와 평화구축(peacebuilding)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여기서는 이머징 시티즌의 형성과 향후 미래에 주목할 만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변화하는 데 중요한 조건적 맥락을 살펴보면서, 회피미래에 대한 경고자, 중장기적 전환을 위한 대비자로서 여성평화활동가들의 의의를 정리한다.¹⁹⁾

첫째, 여성평화활동가들은 그들의 기층 평화운동과 개인적 삶에서 ‘돌아갈 수 없는 사건’들을 체험하며 이를 보다 넓은 집단기억으로 구성하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충격적 촉매 사건들이 의미하는 구조적 경향에 저항, 대안적 흐름을 만들기 위한 인식, 정책적 노력에 헌신한다. 예컨대 본 연구에서 인터뷰한, 상대적으로 젊은 여성평화활동가들은 불법촬영 반대시위, 강남역 살인사건, 신당역 살인사건, 최근의 딥페이크 범죄 등과 같은 사건, 기억을 공유하는 한편, 거슬러 올라가면 2002년 이라크 전쟁·파병 반대, 2009년 용산 참사, 2014년 세월호 참사와 같은 한국 사회에서 지울 수 없는 사건의 기억, 최근 글로벌 팬데믹, 기후위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전쟁과 같은 공동의 경험에서 특유의 문제의식을 보였다. 되돌릴 수 없는 트라우마 혹은 공동 투쟁의 경험, 기억이란 한국 사회 혹은 세계가 겪은 것이지만 특히 이들은 더 지속적이고 예민한 반응, 서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여성평화운동가들의 현실 비판, 실질적 어려움과 관련해, 특히 현재진행중인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과 한반도 및 주변 핵·재래식 군비경쟁 강화, 한국의 경우 핵 자강 옵션 및 나토를 포함하는 결속의 확대심화를 배경으로 기존보다 강화된, 새로운 이해관계집단의 동학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과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무기지원, 협력에 주요 행위자로 나서며 한반도 남북의 방산기업, 군산복합체 이해관계 제고라는 새로운 경향이 두드러진다. 2019년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 북한 정권이 5대전략무기 과업, 핵·미사일 역량 고도화에 매진하며 우방과의 군사적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면, 한국 정부는 킬체인 등 한국형 3축 체계, AI 첨단기술군

19) 박성원·김유빈(2022)은 이머징 이슈가 트렌드로 변화하는 네 가지 조건으로, 돌아갈 수 없는 촉매사건, 새로운 이해관계자의 등장, 경계 허물기 현상, 새로운 방향성의 등장을 제시했다. 이머징 시티즌들의 비전 실현을 위한 경로, 중장기 미래에 대한 함의를 탐색하는 데서도 이러한 조건들에 대한 성찰을 적용할 수 있다.

을 표방하며 국방예산 지출을 늘리는 동시에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 안보적 위협인식이 증대된 유럽 국가들에 대한 방산 수출에 몰두하고 있다. 무기박람회 반대 퍼포먼스, 스톡홀름평화연구소(SIPRI) 연감 번역 등을 통해 국내 무기생산 및 수출에 반대하는 반군사주의 평화활동가들의 노력은 군산복합체적 이해관계 부상과 정확히 대치한다. 국방부, DX 방산기업 등에 대한 여성평화운동가들의 규범적 비판과 정치적 반대운동은 새로운 촉매사건들에 대한 반응의 분기 및 새로운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적 동학을 보여준다.²⁰⁾

셋째, 경계 허물기 현상과 관련해, 여성평화활동가들의 위치, 의제와 실천은 특히 평화의 개념, 평화구축의 문제에서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²¹⁾ 여성평화활동가들의 문제의식, 행동은 그들이 비판하는 군사주의-가부장주의적 구조라는 주류적 규범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국가, 정부 중심의 분쟁 관리, 해결에 주로 초점을 맞춰온 한국 사회의 평화담론·실천의 범주에서도 벗어나는 지점에서 새로운 범주의 필요성, 혹은 기존의 범주 허물기의 측면을 가진다.

이들이 원하고 추구하는 평화실천의 방향에서 일상의 비평화, 비민주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 반드시 평화운동의 문맥에서 이야기되지는 않더라도 여성의 문제, 페미니즘의 문제로 의식되는 최근 한국 사회의 심각한 젠더갈등의 현상 및 영향을 고려할 때, 직면한 전쟁과 군산복합체 반대, 평화유지와 평화조성에 대한 개입을 넘어서는 평화교육, 일상의 평화구축을 위한 새로운 언어의 발굴에 대한 요구는 결국 평화 논의, 실천에서 국가-개인, 지역사회, 시민사회 간 경계를 허물고 평화 의제를 더 사적이고 일상적인 영역으로 확장하는 효과를 가진다.

여성평화운동가들의 활동은 탈냉전 초입으로 거슬러올라가면 통일운동, 노동운동, 비폭력 갈등전환 시민사회 교육, 혹은 탈핵·환경운동과 연계해 살펴볼 수 있으나, 2000년대, 특히 2010년대 여성운동, 평화운동의 조류는 기존의 시민사회 진영과 비교해 분

20) 새로운 이해관계자의 동학과 관련해, 가능한 질문은 디지털 성폭력, 성착취 범죄에 대한 디지털 공간에서 수사를 포함한 일련의 페미니스트 시민행동을 평화운동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가일 수 있다.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평화, 평화운동이 함의하는 국제정치, 남북관계 등 안보 이슈와의 연계를 고려할 때, 개인의 안전, 인권의 맥락은 평화담론·실천에서 별개의 논제로 분리되기 쉽다. 일상의 안전, 평화가 더 적극적으로 평화의 의제로 사고된다면, 젊은 페미니스트들이 상대적으로 집중해온 성폭력, 성착취 반대에 대한 실천들을 페미니즘×평화 주제의 새로운 이해관계자의 동학에서 포괄해야 할 것이다.

21) 여기서는 여성평화활동가들의 담론, 실천이 경계 허물기의 동력으로서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실제 평화학, 평화운동 자체가 평화유지, 분쟁관리, 평화조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사회 갈등구조적 전환을 포괄하는 일상의 평화구축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진화해왔다는 것을 전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평화활동가들의 문제의식, 전략이 미래 평화실천에서 중요한 자원으로 정당화되고 부상할 수 있다.

화, 단절이 심화되었고 시민사회 주류적 흐름과는 차별화된 다양성이 관찰된다.

예컨대 병역거부, 군 내 성소수자 인권운동, 무기박람회 반대행동과 같은 여성평화활동가들의 의제는 방위비 삭감 투쟁, 한반도 정전체제의 평화적 전환, 평화협정 투쟁과 같은 한반도 평화운동의 주류적 의제와 연계되지만 차별화된 인식·접근을 보이며, 1990년대-2000년대 또 다른 여성평화운동의 주류적 의제라 할 위안부 문제 투쟁, 남북교류협력에서 여성 참여 확대와도 구별된다.

전자의 흐름은 2015년 국내 여성평화운동계를 포함해 재미한인 활동가들과 해외 여성평화운동 대표적 인물들을 망라한 DMZ Cross 행사, 2023년 DMZ Cross 팀을 포함해 한국 시민평화운동에서 글로벌 캠페인으로 전개한 한반도평화행동 Korea Peace Now와 같은 사건으로 지속하는 반면, 후자의 흐름 중 남북관계발전상 여성평화운동의 실천은 최근 2030 세대 전반의 통일, 민족주의적 접근에 대한 무관심, 반감 등과 맞물려 세대적 단절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이들은 어떤 새로운 규범적 방향, 미래 비전을 추구하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 여성평화활동가들의 궤적은 한국 사회, 한반도 평화의 규범미래 상에 대한 예시가 될 수 있다. 안보·평화 의제의 공론장에서 ‘말할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의심받아온 이들이 더 많은 민주주의의 구현을 통해 특유의 문제의식과 대안을 펼치게 되는 결과, 궁극적으로 현재 안보·평화 담론, 정책과는 다른 다양한 언어들이 허용되는 범위가 넓어질 것이다. 소극적 평화로부터 일상의 민주주의, 정의, 평등을 포괄하는 평화구축에 이르는 평화 담론, 실천이 병행되는 사회는 차이와 다양성의 공존을 위한 조건으로서 연합/연방과 같은 평화의 제도화에 친화적인 환경이 될 것이다. 제도적 정착의 문제와 함께 협의주의적 정치문화가 활성화되고, 여성평화활동가들과 같은 정책적 기업가(entrepreneur)들이 주도하는 평화교육의 장기적 효과가 관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일상의 평화구축이라는 의제가 한반도에서 발발가능한 핵전쟁의 가능성을 예방하는 의제 만큼 중요하고 사실상 밀접한 상호연관을 가진다는 전제에서, 핵안보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벗어나는 정책적 옵션을 실현하는 경로가 실제 피폭자들의 사례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인간안보적 관점에서 논의되고 정책화되는 경로도 가능할 수 있다.

AI 시대, 평화교육은 인간 존재가 새로운 미래환경에서 어떤 주체성, 행위자성을 가질 수 있는가와 같은 질문을 숙고하고, 인간만이 아니라 비인간을 아우르는 모두의 평

화를 커먼스의 관점에서 고려하는 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 의제들을 누구의 관점, 누구의 보편으로 이야기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국가-지역사회-개인 등 기존의 단위간, 핵·재래식, AI 기술, 기후위기 등 전통적 안보 이슈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 영역간 경계가 평화구축과 관련해 허물어지는 과정에서 일상의 평화, 민주주의에 대한 관점은 보다 포괄적이고 심화된 모두의 평화를 구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규범미래의 비전은 대안적 방향성으로 앞서 확인한 대로 돌이킬 수 없는 새로운 촉매사건, 새로운 이해관계자 등장, 경계 허물기 과정이 비정치적, 비갈등적이라기보다 분명한 경쟁과 대결을 내포할 것이라는 점에서 결코 확정적일 수 없다. 분명한 것은 그것이 **약한 신호**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지향, 대안을 발화하고 이를 위한 실천을 조직하는 이들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복수로 존재할 수 있는 가능미래, 각각의 조건에서 합리적, 규범적일 수 있는 선택지의 하나로, 중장기 한국 사회의 다양한 조건들이 여성평화활동가들의 선호, 비전과 조응하는 경우에 그들의 전략은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다.

제5절

결론 및 함의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유엔의 WPS 의제를 비롯해,²²⁾ 여성과 평화, 안보에 대한 국제정치학 연구는 기존의 국제정치이론에서 이해되는 권력, 국가, 이분법, 과학성 등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국가 안보 주도의 프레임워크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평화와 안보의 문제를 재구성해 왔다.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은 탈냉전 이후 구성주의, 비판이론, 포스트모더니즘, 탈식민주의 등 탈실증주의적 인식론을 배경으로, 전통적 국제정치학의 젠더화된 패러다임 자체를 비판하면서 전쟁과 폭력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젠더적 분석, 여성들의 경험과 역할을 포괄하는 국제정치 현실에 대한 이해와 정책, 페미니즘 관점에서 국제정치학 이론과 정책의 재구성 등을 추구해왔다(Enloe 1989; Tickner 1992; 2001; Silvester 2001; Confortini 2012; Sjoberg 2013; 황영주 2003; 강윤희·김경마·최정원 2004; 김엘리 2010; 강윤희 2013).

여성이 경험하는 갈등, 폭력의 영향을 이해하고 젠더 평등의 관점에서 평화구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직접적 폭력의 해결이 아닌 고질적 분쟁을 야기하는 사회의 구조적 전환을 목적으로 하면서, 갈등구조의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평화구축의 과정에 모든 젠더를 포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Otto 2019). 군사적 폭력의 종식 및 위협 관리와 연관되는 평화유지(peace-keeping), 평화조약, 협정을 통한 평화조성(peacemaking)을 넘어서 일상적 수준에서 분쟁후 평화정착이라는 평화구축(peacebuilding)이라는, 보다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실현한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하는 동시에,²³⁾ 젠더, 계층, 인종 등 어떤 조건과도 관계없이 평화구축의 결과를

22) 평화안보 연구, 실천에서 여성의 경험과 인식, 역할의 차별성에 대한 인정, 이를 바탕으로 여성을 포함한 모든 젠더들이 배제되지 않는 평화구축을 설계, 수행해야 한다는 흐름은 탈냉전기 유엔 차원의 보편적 국제규범의 확립으로 이어졌다. 결정적으로 2000년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통과 이후 연속적으로 이어진 9개 결의안에 기반한 '여성·평화·안보'(Women, Peace, Security, WPS) 의제는 분쟁해결과 예방, 지속가능한 평화구축에서 모든 인간의 인권과 요구를 포괄하는 접근, 참여의 확대에 대한 다양한 담론과 실천, 기제를 촉발시켰다.

23) 고질적 분쟁을 경험했거나 그러한 분쟁의 여파를 계속해서 경험하는 사회들에서 평화과정(peace process)이란 평화실현을 위한 다양한 단계 혹은 방법으로서 서로 구분되는 개념인 평화유지(peacekeeping), 평화조성(peacemaking), 평화구축(peacebuilding)을 포함한다(Webel and Galtung 2007; Webel and Johansen 2012). 평화유지가 분쟁지역에서 평화유지군과 같은 국제기구의 평화적 수단을 통해 물리적 폭력사태의 악화를 막는 군사적 통제, 제한을 뜻한다면, 평화협정을 통한 평화조성은 폭력, 분쟁의 지속과 관련된 광범한 당사자들 간 평화협상을 바탕으로 분쟁의 재발을 막는 협정을 체결함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한 평화구축을 추구하는 것이 페미니스트 평화의 궁극적 기여이다.

중장기적 시야에서 여성평화활동가들의 평화구축에 대한 현실 인식, 미래전망과 미래 선호를 탐색하는 것은 여성의 참여, 대표가 제한적인 현재의 한반도 평화구축 노력의 변화를 위해서 필수적이다(김태경 2022). 예컨대 2018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남북간 고위급 접촉(남측 7명, 북측 9명)에 포함된 여성은 2명(강경화 전 외무장관, 김여정 당시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2018년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자문위원회에 망라된 경우는 자문위원 3명(전체 21명), 전문가 위원 4명(전체 25명)이었다(Jung 2020). 안보·평화구축의 정책결정과정의 직접적 참여 뿐 아니라 다양한 시민단체, 여론 형태로 여성들의 평화구축에 대한 문제의식과 요구를 반영하는 과정은 안보·평화 연구 및 정책적 실천에서 여전히 비주류적 위치에 머문다.

여성평화활동가들의 비판적 인식, 대안을 위한 탐색은 기존의 거시적·물리적 차원의 안보, 소극적 평화 노력은 물론 미시적·문화적 차원의 안보, 폭력의 제거를 포괄하는 다양한 평화구축의 조건들을 조명하는 노력들과 긴밀하게 연관된다는 점에서, 미래지향적 평화구축 노력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비폭력 갈등전환 교육을 포괄해 국내 평화교육, 평화담론, 평화운동에서 여성활동가들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여성x평화활동가의 목소리, 선호, 미래 비전에 대한 관심은 궁극적으로 평화구축을 위한 사회적 기반, 동력에 대한 분석으로서 (풀뿌리) 평화운동을 포함한 한국, 한반도 사회 평화의 미래를 전망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동시에 절대적 숫자가 결코 크지 않지만 기층 여성활동가들의 존재는 여성평화활동가가 갖는 특징, 그들의 선호와 위기의식, 정책적 의제 및 담론, 실천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해, 현재와 다른 미래 대안을 구성하는 항로를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평화의 구축과정에는 그 존재 여부에 따른 여파를 살게 되는 모든 사람의 참여와 대표가 필수적이다. 진전과 교착, 실패와 재개를 반복하는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비교연구는 지속가능한 평화구축의 중요한 요인으로 시민사회의 포괄적 참여, 협의주의적 거버넌스를 강조한다(Tong 2014; Paffenholz 2018). 여성평화활동가들은 그들의 사회적,

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을 의미한다(Galtung 1976; Boutros-Ghali 1992; Reychler 2010). 평화구축은 평화유지,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지속되는 분열된 사회의 구조적·문화적 조건 자체를 전환함으로써, 불신, 증오, 배제, 차별과 같이 고질적 갈등으로부터 기원하고 다시 이를 강화하는 구조로부터 벗어나 화해, 용서, 평화공존, 통합의 새로운 정치적 관계로 나아가는 중장기적 전환(transformation, transition) 과정을 의미한다(Lederach 2015; Galtung 1996).

조직적 위치라는 조건으로부터 한반도 및 국제정치상 가부장주의-군사주의적 구조가 파생하는 젠더화된 배제와 차별에 맞서, 병역, 군산복합체 등 전통적 안보 이슈에 대한 대응로부터 더 많은 민주주의, 일상의 평화를 구축하는 담론·실천의 형성에 이르기까지, 다영역, 다층적 평화구축 노력을 상상하고 구성하는 데 기여한다.

여성평화활동가들은 (페미니스트 평화운동은) 정상/비정상의 이성애적, 가부장주의 규범에서 대상화, 타자화되는 여성에 대한 폭력, 억압, 차별 등에 대한 문제의식, 출산, 육아 등 젠더화된 성역할 수행에 대한 비판 및 대안적 접근을 통해, 평화의 개념을 폭력의 부재와 같은 소극적 평화 뿐 아니라 정의, 평등을 포괄하는 적극적 평화의 수준에서 평화구축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여성평화활동가들의 문제의식 및 선호를 고려한다면, 미래 평화는 인간 안보, 그리고 비인간과 공존의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재정의, 재구성되어야 한다. 기존의 ‘소극적 평화’ 노력과 동시에 진행되면서 인간 안보, 커먼스의 관점에서 재구성된 페미니스트 평화는 그 실현과정에서 소극적 평화의 조건들에 영향을 미치고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진화의 경로를 만들어갈 것이다. 이머징 시티즌으로서 여성평화활동가를 정의함으로써 본 연구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포괄되는 평화구축의 미래를 위해 현재 누구에게 더 귀기울이고 어디에 조명을 해야할 것인가를 성찰하는 데 기여한다.

제7장

SF작가 최의택

제1절 소수악자를 넘어: SF작가 최의택 사례

제2절 그와 나눈 이야기

제3절 이머징 시티즌으로서 최의택 작가

제 1 절

소수약자를 넘어: 장애인 SF작가 최의택 사례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최의택 작가는 누구인가?

연구진은 최의택 작가를 자택 인근 회의실에서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의 작품과 활동을 바탕으로 최작가를 이머징 시티즌으로 조명하고 싶다는 인터뷰 의사를 전했고, 최작가는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줬다. 인터뷰 하는 동안 그는 매우 진지하고 유쾌한 어조로 질문에 답해주었고, 그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연구진은 그가 이머징 시티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의 말에서 사회 문제를 구조적으로 짚어내는 깊은 생각이 느껴졌고 현상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시각이 돋보였다. 그의 말은 그가 쓴 책 내용처럼 미래에 대한 영감과 통찰을 주는 내용으로 가득했다. 그와의 대화는 인터뷰 내내 즐거웠다.

최의택 작가는 장애를 겪고 있는 SF 소설가로서, 사변 소설을 집필하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독특한 시각으로 풀어내고 있다. 그는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며, 장애인이자 비인간적 존재로서 겪는 사회적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창작한다. 그의 작품은 주로 장애인 문제를 중심으로 하며, 이를 통해 사회가 보지 못하거나 무시하는 문제들을 드러내는 것뿐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상상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머징 시티즌의 면모가 두드러진다.

그는 해마다 새로운 책을 펴내고 있다. 제1회 문운성 SF 문학상 대상과 2022년 한국 SF 어워드 장편소설 부문 대상을 수상한 <슈뢰딩거의 아이들>을 필두로 <비인간>, <0과 1의 계절>, <논터널링>, <수호의 파수꾼>을 펴냈다. 공저로 참여한 <사랑과 혁명 그리고 퀘스트>, 그의 일상을 다룬 에세이 <어쩌면 가장 보통의 인간>도 있다. 에세이집 <어쩌면 가장 보통의 인간>은 그가 장애인 소년에서 장애인 소설가로 성장하면서 겪은 삶의 이야기를 담담하면서도 유쾌하게, 때론 가슴 찡하게 풀어낸다. 산문에서 그만의 창의력 원천도 엿볼 수 있어 흥미롭고 재미있었다.

최 작가는 사변적 상상력을 통해 장애, 비인간, 사회적 격리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

며, 독자들에게 깊은 성찰과 질문을 던진다.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슈뢰딩거의 아이들>은 장애인 분리 교육과 특수 학급 문제를 다루며, 사회에서 배제된 존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또한, <비인간>은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넘어서 비인간 존재, 즉 동물, 식물, 로봇, 인공지능까지 포함하는 존재론적 탐구를 시도한다. 그의 글쓰기는 장애인의 경험을 다루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경험을 확장하여 사회의 다양한 약자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 상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2절

그와 나는 이야기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그와 인터뷰한 내용을 약간 다듬어 소개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만의 비판적이면서도 본질적인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철학을 오롯이 느낄 수 있다.

(연구진) 자신을 소개해달라.

(최의택) 글 쓰는 사람인데 SF를 쓴다. 사변소설을 주로 쓴다고 생각하고 특히 사회 장애 문제를 조금 관심 있게 쓴다. 휠체어를 타고 있고 장애인이고 SF 소설을 쓰는데 장애에 대한 얘기를 많이 쓰는 사람이다.

(연구진) 외부에서는 최작가를 어떻게 보는 것 같은가.

(최의택)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아직 모르겠다. 사람들이 나를 작가로만 보는 건 아닐 거고, 그렇다고 장애인으로만 보는 것도 아닐 거고. 장애인 작가? 장애를 다루는 작가? 더 좀 껴야 봐야 알 것 같다

(연구진) 작가 본인은 에세이에서 SF 장르에 대해서 처음에는 싫다, 그런 말도 했는데, 이 장르가 자신에게 어떤 가능성, 해방의 도구, 상상의 기회가 됐는지 궁금하다.

(최의택) 어렸을 때는 SF가 너무 무서웠다. 사이보그 나오고 로봇이 나와서 사람 죽이고 외계인 나오는데 너무 무서웠다. 2018년부터 SF소설을 써야지 하고 결심한 것은 SF가 주로 한국 사회 문제들을 다뤘고, 읽다보면 ‘어? 이게 내 얘기인데!’ 싶었던 부분이 많았다. 그래서 습작하면서 모았었던 단편들이 나중에 단편집으로 묶였는데 그게 <비인간>이다. 나는 가상의 세계를 설정하고 사회를 구상하고 관계를 설정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는 게 가장 즐겁다. 내가 보고 느낀, 그다음에 생각하는 이상한 점들을 가상의 세계로 구현시키고 그 안에서 등장인물이 과연 우리처럼 그 이상한 세상에 짓눌릴까, 아니면 이상한 세상을 어떻게 부술까, 아니면 상상하지 못한 다른 방법을 찾을까, 이런 거를 사고실험하듯 글을 쓰고 있다. 소설 쓸 때 최소한의 구상을 해놓고 쓰는데, 쓰면서 줄거리나 결말 같은 게 확확 바뀐다. 그거 하려고 소설 쓰는 것 같다. 계속, 조금 더, 시뮬레이션 하는 작업이 즐겁다.

(연구진) 좀 전에 언급한 ‘그 이상한 점들’이 무엇인가?

(최의택) 내 데뷔작인 <슈뢰딩거의 아이들>을 보면 특수학급, 분리교육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이상한 점들이다. 처음부터 이런 점들을 구상한 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거리에서 장애인이 왜 안 보여? 하는 의문이 들 때 이런 이상한 점들이 드러난다. 나도 산책하면서 나 말고 장애인을 본 적이 거의 없다. 그러다 보니 그런 ‘이상한 것’을 다뤄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 짓는 데 이웃주민들이 반대해 장애인 학부모들이 무릎 꿇었던 그 유명한 일화²⁴⁾는 나론선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다. 그런 이상한 것들이 소설의 씨앗이 된다.

(연구진) ‘이거 이상한데?’ 하는 현상을 목격하고나서 계속 어떤 질문을 통해서 계속 뭘가 쌓아올리는 이 과정들이 소설이 되는 것인가?

(최의택) 소설 구상하면 일단 파일을 하나 만들고 그 파일 안에 ‘일지’라는 폴더를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 매일 생각한 내용을 그대로 느리지만 다 적는다. 그게 몇 달이 쌓이면, 보통 10만자짜리 장편소설 하나 쓸 수 있다. 일지 분량이 8만자 정도가 되니까 소설만큼 일지를 쓴다. 일지 내용을 추려보면 정말 다 쓸데없는 말들인데 생각이 발전해 가는 걸 느낀다. 비효율적이어도 이 방식을 고수한다. 어떤 사건을 보고 ‘이거 이상하다? 근데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되지? 계속되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나나? 피해자가 나타나면 개네들이 어떻게 대응할까? 그다음에 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네?’ ‘그 다음엔 뭐지? 그다음엔 뭐지?’라는 질문을 계속하시는 과정이다.

나에게만 보이는 이상한 사건들

(연구진) 경험하지도 않았고,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이야기를 어떻게 쌓아올려서 소설의 내용을 구상하는지도 궁금하다.

(최의택) 완전히 경험하지 않은 거는 사실 못 쓴다. 그래도 ‘나라면 저렇겠지’ 정도는 돼야 쓸 수 있다. 그래서 등장인물들을 설정할 때 이런 상황에서 있어야 될 것 같은 사람이 주인공이 되고, 거기에 정반대되는 사람이 적대자로 나온다. 이렇게 딱 2명이 설

24) 2017년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들어설 특수학교 건립을 둘러싼 갈등으로 지적장애 아이를 둔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다닐 수 있는 특수학교를 설립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고, 지역주민들은 특수학교는 혐오시설이라면서 거세게 반대한 사건이다. 2차례에 걸쳐 열린 공청회에서 장애 학생의 학부모들은 무릎 꿇고 눈물까지 흘리면 호소했다. 그 결과 2021년 서진학교라는 이름으로 건립되었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 후 2년 과정인 전공과까지 모두 한 건물에 있으며 한 학생이 입학하면 전공과를 마치기까지 14년을 생활한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6221>

정이 되면 나머지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넣거나 빼거나 한다. 근데 그런 인물들 하나하나가 사실 다 나다. 나의 여러 가지 면을 과장시켜서 캐릭터화하는 것 같다. 그걸 의도한 건 아닌데. 그래서 어떤 인물들, 심지어 조연도 나는 나인 것처럼 쓸 수 있다. 대사 쓸 때, 특히 티키타카 할 때 보면 나는 혼자 재미있게 한다.

(연구진) 최작가가 소설 〈비인간〉을 출간할 때 비인간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에 굉장히 주저했다는 얘기를 읽었다. “존재하는데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존재한다”는 것이 작가가 정의한 비인간의 정의인데, 미래학자의 시각에서 지금의 시대는 비인간 시대가 맞는 것 같다. 인간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넘어 비인간에는 동물도, 식물, 로봇, AI도 있다. 이런 존재들이 미래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요인들이다. 최작가의 시각에서 비인간들을 조금 더 잘 포착하는 능력이 있으신 것 같다.

(최의택) 최근 청소년을 위한 소설을 청탁 받아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의 시각에 맞춰서 사회를 보기 시작했다. 어린이가 요즘에는 가장 비인간적으로 느껴진다. 사람들이 어린이를 우선해준다고는 하는데 그게 정말 아껴서 우선하는 건지 그냥 격리시키는 건지 모르겠다. 노키즈존 그걸로 한참 말이 많았잖은가. 그런 거 보면은 출산 장려 정책으로 아이를 낳아야 한다면서도 정작 낳은 애들은 관리를 안 하고 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이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연구진) 마치 장애인을 시설에 가두듯 어린이들도 각종 학원에 가두는, 이른바. 선행 학습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격리인 셈이다.

(최의택) 선행학습 시켜서 좋은 건 누구인가? 어른들 아닌가.

우리사회에서 어린이들이 가장 비인간 취급을 받아

(연구진) 인간 정도의 지능을 갖춘, 그리고 윤리적 의식도 갖춘 인공지능이 등장하고 인간이 이런 존재와 공존해서 살아가는 미래도 상상하는가.

(최의택) 액션 스릴러 쪽으로 쓸 것 같은데. 터미네이터 같은. 이런 존재들과 완전히 융화되려면 정말 1세기는 지나야 될 것 같고, 그동안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상상하면 조금 암울하다. 사람이라는 게 일단 나 아닌 것을 배제하고 보는 게 본능인 것 같다. 그걸 넘어서려면 너무나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역사가 그랬다.

(연구진) 나 아닌 것을 배제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최의택) 옛날에 백인이 흑인 배제하고, 남자가 여자 배제하고, 어른이 아이 배제하고, 장애인 배제하고, 지금은 노인 배제하고 있다. 이번에 올림픽 관련 기사를 보았는데, 트랜스젠더로 오해 받는 복싱 선수 이슈가 있었다. 그런 걸 보면 트랜스젠더, 사이보그, 장애인 다 똑같다. 일단 남이고, 타자다. 같은 선상에 있지 않다. 같은 잘못을 해도 더 큰 죄를 묻는다. 인공지능도 결국 인공지능이 실수 한 번 하면 폐기 처분될 거고. 근데 그 인공지능들이 윤리의식까지 갖추고 있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뭔가를 할 것 같다.

(연구진) 소설 〈논터널링〉에서 비장애인을 터널링, 장애인을 논터널링으로 비유하는 것이 아주 흥미로웠는데, 이렇게 다른 이름을 붙여놓으니 장애인을 바라보는 전형적 시각에서 벗어나 다른 능력이 있다거나 고유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의택) 여러 가지 경우를 다 갖다 붙여놓고 약간 물 타기를 한다. ‘이것도 이거고 저것도 이거고 그것도 이거면 이게 별거 아니네?’ 이런 전략을 쓴다. 그렇게 하는 게 또 재밌다. 그렇게 해보면서 나도 장애인이긴 하지만 장애에 대해서 모르고 오히려 더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도 한다. 예를 들면 당사자주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디까지가 아니고 맞고를 고민 중이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경우를 대입해 보는 시도가 나 스스로를 깨는 방법이 된다.

인간은 늘 타자를 배제, 인공지능도 실수하면 폐기될 것

(연구진) SF 작가로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최의택) 매번 글 쓰는 게 도전이다. 장애인 소설가로서의 도전은 두 가지를 생각했다. 첫 번째는 그냥 농담으로 ‘시상식 무대 단상’이라고 말하고 싶다. 에세이에도 쓴 거긴 한데. SF 어워드라는, 그러니까 나라에서 하는 큰 시상식인데. 휠체어 타는 사람 불러놓고 단상이 높으니까 나를 들어서 올려주겠다고 해서 당황했다. 더 황당한 것은 단상에 올라가는 경사로에 무거운 전동 휠체어 오면 안 된다는 거다. 그런 거를 보통 차별이라고 한다. 최근에는 목발 사용자가 바닥에 깔린 유리 파손시킨다고 진입 금지해서 그거 차별이라고 시위하고 있는데, 내가 수동 휠체어를 타고 갈지 전동을 타고 갈지는 내가 선택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속적으로 좀 은근하게 느끼는 거는 일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출판 과정에서 있음직한 일들이 좀 생략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다.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으니까 확

신은 못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보통 출판사 미팅을 한다. 보통 작가가 출판사로 가서 아니면 근처에서 만나 논의하는 과정들이 있다. 나는 그 과정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온라인으로라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회의에 참여해달라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

그래서 출판사랑 소통할 때 좀 적극적으로 “저 온라인이든, 오프는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미팅 할 수 있어요”라고 말은 하는데 그런 게 거의 없다. 아무래도 장애인이라 휠체어 타는 사람이니까 이동이 어려우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걸 생략하는 건가? 그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라는 그런 생각은 든다.

(연구진) 우리사회가 정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차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질문을 좀 바꿔서 그동안 상도 많이 탔는데 어떤 성취가 가장 좋았는가.

(최의택) 소설가에게 가장 큰 성취는 2차 창작인 것 같다. 최근에 두산아트센터에서 청년지원사업으로 워크숍을 했는데 거기서 나의 ‘비인간’ 책에서 나온 ‘노인과 노봇’이라는 단편을 각색해서 연극한다고 하더라. 나에겐 큰 성취였고, 화요일에 두산아트센터에도 다녀왔다. 가서 연극도 보고, 나를 원작자라고 치켜올려 줘서 부끄러웠지만 소설 써서 상 받은 것보다 더 희한한 경험이었다.

(연구진) 인공지능, 나노, 바이오, 우주 기술들이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최의택) 최근에 내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애플 비전프로와 싱크론이라고 하나? 테슬라의 뉴럴링크랑 비교되는 업체에서 BCI를 통해서 비전프로를 제어하는 시험 영상을 올렸더라. 그걸 보면서 ‘오, 저런 거는 머리에 한번 넣어 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관심사였다. 그런 기술이 SF 소설을 쓰기 위해서 가졌던 관심들이 어떻게 보면은 최근 들어 다 나에게 적용이 될 여지가 많더라. 그래서 더 재미있게 SF 소설을 쓰는 것 같다. 어떤 가능성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하다가 이게 점점 내 일상에 와 닿고 있다. 내가 전동 휠체어를 타고는 있지만 이게 내 손에 완전히 맞춰서 손가락만 까딱이면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면 전동 휠체어도 타기 어렵다. 만약에 말로 전동 휠체어를 제어할 수 있다면, 컴퓨터를 할 수 있다면, 도대체 그걸로 어떤 것까지 가능할까 하는 상상을 한다.

애플 비전프로는 머리에 쓰고 있으면 시선을 추적하고, 손을 움직여서 클릭을 하는 거긴 한데 접근성이 좋다. 그냥 보고 있으면 클릭이 된다거나 드래그를 할 수 있다든가 하는 걸로 봐서는 내가 기존에 쓰던 컴퓨터 방식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정도더라.

기술에 윤리적인 문제가 거론되긴 하는데 일반화됐을 때 고민해도 늦지 않지 않나. 내가 오히려 장애인이기 때문에 편향적이긴 해도 기술을 사용해 보고 싶다.

22세기까지 산다면 나는 100% 전자인간

(연구진) 〈시간여행자〉에서 “미래에는 오히려 자기 개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장애를 선택한다” 이런 내용도 있던데, 미래의 SF에서는 장애를 어떻게 다룰까.

(최의택) 미래 SF에서 장애 문제가 지금만큼 첨예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좀 더 일반적인 얘기로 나오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만약 내일 출간될 소설이 인종차별에 대해서 다룬다면 그건 좀 철 지난 이야기로 취급되듯 장애도 그렇게 다룰 것 같다.

(연구진) 22세기에는 어떠한 사람들을 정상에서 벗어난 것으로 묘사할까.

(최의택) 내가 쓴 〈0과 1의 세계〉가 22세기라는 배경의 소설인데 지구에는 이제 거의 사람이 살지 않고 모두가 사이버 세계에서 존재한다. 근데 지구를 되살리고 싶어 사이버 세계 사람들이 나와서 지구를 재건해 간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거는 지구에 남아 있는 사람이 나인지. 그러니까 나로 보고 사이버 세계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타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이버 세계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나고 지구에 남아 있는 사람이 타자가 될 것인지. 그거는 입장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런 얘기를 쓴 소설인데, 사람한테 전자인간인지 전자인간한테 진짜 사람인지. 나는 22세기까지 존재한다면 100% 전자인간일 거 같다.

(연구진) 작가로서 우리 사회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최의택) 우리사회가 못 봤고, 또 안보려고 하는 것들을 가리키는 표지판을 제시하고 싶다. 이런 표지판이 많을수록 사회는 복잡해지겠지만. 표지판이 많으면 길이 복잡해지고 우왕좌왕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소설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결과는 늘 혼란스럽더라. 그래서 몇 번을 고민했다. ‘이게 정말 맞나? 정말 이 혼란을 감당할 수 있나?’ 근데 또 누구는 혼란스러운 게 정답이라고 하더라. 그래야 서로 뭐가 다르고 어떤 게 좋고 이런 걸 아니까. 다 입 다물고 있으면 바뀌는 게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라고는 하는데 사실 내가 그 혼란을 마주했을 때 정말 긍정적이기만 할까라는 의심은 든다. 그래서 탁상공론 같은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표지판을 많이 세워야 된다고는 생각한다. 당장은 혼란스럽겠지만.

(연구진) ‘이머징 시티즌’은 소수 약자지만, 소수 약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먼저 사회에 앞으로 벌어질 문제를 직면하게 되고, 그 문제가 내 문제이다 보니 어떻게든지 고군분투하면서 대안을 내놓게 되고, 그게 쌓이고 쌓여서 사회가 진짜 그런 혼란을 문제를 마주했을 때 이분들이 먼저 겪고 대안들을 얘기해 줬기 때문에 그 경험들을 갖다 쓰면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런 의미에서 ‘창발적 시민’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최작가가 펴낸 소설들 중에서 이머징 시티즌에 부합하는 인물을 꼽는다면?

(최의택) 〈논터널링〉의 이더가 아마 가장 맞는 것 같다. 전국장애인연대의 박경석 대표님 같은 분들을 만나면서 영감을 얻고 모티브가 생겨 새로운 장편을 구상하고 있는데, 가제로 ‘이상한 미래에서 너를 만나고 싶다’로 지어봤다. 2025년 하반기쯤 출간될 것으로 기대한다.

※ 논터널링은 미래의 어느 행성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그 미래에서 신인류는 어느 공간이든 자유롭게 통과하면서 다닐 수 있는 터널링으로 살아가는데, 주인공 이더는 어느날 사고로 이런 활동에 제약을 받는 논터널링 존재가 된다. 마치 우리사회의 장애인을 연상케하는 논터널링이라는 존재로 이더는 이런 제약을 제약으로 보지 않고 다양한 존재들과의 공존을 모색하는 역할을 보여준다.

(연구진) 〈어쩌면 가장 보통의 인간〉이라는 에세이에서 최작가는 “바닥의 정의를 나날이 갱신하던 중에 나는 다시 한번 내 미래를 뜯어고쳐야 했다”는 말을 하는데, 나는 그 표현이 마음에 들었다. ‘미래를 뜯어고치다.’ 이게 말처럼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는 마치 내가 살아온 과거와 그 과거와 현재가 만들어놓은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간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질문은 최작가는 어떻게 나에게 놓인 미래를 뜯어고쳐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지 궁금하다.

(최의택) 좀 고질병이라고 생각하는게 나는 포기, 체념, 단념을 잘한다. 그래서 뭔가 안 될 때 가차 없이 버릴 수 있다. 소설도 보통 수정하면서 다시 쓰고 하는데, 나는 아예 장편을 통째로 새로 쓴다. 사실 거의 매번 그런 식으로 쓴다. 그래서 ‘이게 내 장점인가 보다. 특기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다. 나는 뭔가를 잘 버린다. 먼저 가능성부터 찾아보고, 만약에 보인다면 빨리 버리고 간다. 한시라도 늦기 전에. 물론 그 가능성을 찾는 데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일단 가능성을 봤으면 버리는 데는 시간이 안 걸린다.

제 3 절

이머징 시티즌으로서 최의택 작가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최의택 작가는 장애인으로서의 삶과 사회적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를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한다. 그는 장애를 극복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작품과 인터뷰를 통해 전달한다. 그의 활동은 장애가 단순히 육체적 제약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 속에서 비가시화되고 배제되는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목표로 한다.

최 작가는 여러 경험을 통해 사회가 장애인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었다. 예컨대, 출판사와의 소통에서 물리적 미팅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경험이나 시상식에서 단상 접근 문제를 겪으며, 장애인이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현실을 체감했다. 물리적 장벽뿐 아니라 사회적 무관심도 그에게 큰 도전이었다. 예를 들어, 시상식에서 단상 접근을 위해 휠체어를 직접 들어 올리겠다는 해결책은 오히려 모욕감을 주었고, 출판사 미팅에서의 배제는 장애인이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소외되는 현실을 상징한다.

최 작가는 장애를 단순한 수용이 아닌 장애의 재정의의를 추구한다. 그는 장애인을 비인간적 존재로 보지 않고, 사회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새로운 존재'로 묘사한다. 작품에서는 장애인뿐 아니라 비인간적 존재들(예: 인공지능, 사이보그 등)이 등장하며, 사회가 정해놓은 경계와 규범을 넘어서려는 시도를 담고 있다.

최 작가의 창작은 일상 속에서 발견한 '이상함'에서 출발한다. 〈슈뢰딩거의 아이들〉에서는 특수학급과 분리 교육의 문제를 제기하며, 왜 장애인이 사회 속에서 보이지 않는지를 묻는다. 이러한 경험은 소설의 씨앗이 되며, 그는 이를 통해 독자들이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도록 돕고자 한다.

작가의 작품에서는 장애를 격리된 정체성이 아닌, 다른 가능성의 존재로 제시하는 점이 특징적이다. 예를 들어, 〈논터널링〉에서는 장애인의 경험이 단순히 사회적 약점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능력과 통찰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그려진다.

최 작가는 기술 발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인공지능(AI)과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같은 첨단 기술이 장애인의 삶을 개선할 가능성에 주목한다. 그는 애플비전프로

(Apple Vision Pro) 같은 기술이 장애인의 일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미래의 기술이 더 많은 장애인에게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기술이 단순히 도구로서가 아니라, 장애인을 진정한 사회적 존재로 인정하는 데 사용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최의택 작가는 장애인이 사회에서 '정상성'의 범주에 맞추어지는 대신, 그 자체로 존중받고 활발히 활동하는 사회를 꿈꾼다. 그는 장애를 부정적 요소가 아닌 다양성의 한 형태로 수용하는 것이 더 나은 사회로의 진전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비전을 통해 최작가는 단순한 문학 창작에 머물지 않고, 독자와 사회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혼란 속에서 새로운 질서와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는 소설을 통해 표지판을 세우듯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며, 더 복잡하고 다층적인 사회로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한다.

최의택 작가의 메시지는 명쾌하다: “장애는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장애인으로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필요하다.” 그는 사회가 표준화된 정상성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존재를 포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제8장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제1절 이머징 시티즌의 의제와 사회적 시사점

제2절 입법적 과제

제3절 미래 과제와 결론

제 1 절

이머징 시티즌의 의제와 사회적 시사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이들은 우리사회에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가?

연구진이 만난 이머징 시티즌들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와 새로운 가능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주체들로, 각자의 위치에서 고유한 의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인공지능(AI)과 협업하는 의사, 지방으로 유학 온 중국인 유학생, 평화를 추구하는 여성운동가들, 그리고 장애를 가진 SF 소설가와 같이 독창적이며 새로운 사회적 변화를 촉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머징 시티즌의 발신은 현존하는 사회적 문제를 넘어 미래 사회의 구조적 전환을 촉발할 수 있는 잠재력을 담고 있다.

의료 분야에서 AI와 협업하는 의사들은 의료 시스템의 변화를 선도하는 동시에 의료 전문가의 역할 변화와 직업적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열어가고 있다. 그들은 AI가 의료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의료 노동 시장을 재편하며 궁극적으로 건강보험 체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들의 의제는 기술 발전과 의료 윤리 사이의 균형을 고민하게 하며, 의료 및 기술 정책의 융합적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들은 의료 AI가 진단과 치료에 점점 더 많은 역할을 맡으면서 의사의 전문성이 축소되고, 직업적 정체성이 흔들릴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AI 기반의 진단 및 치료가 보편화되면 의료인의 고용구조와 의료보험 체계에 대한 재편이 필요해진다. 이는 특히 의료 서비스 접근성에서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이런 문제가 풀리지 않고 지속될 경우, 특히 의료 전문가와 AI 시스템 간의 협업이 실패할 경우, 기술 혜택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지역 의료 서비스 품질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AI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의료 사고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며, 이는 환자와 의료 시스템 간의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했다.

지방에서 유학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은 단순한 유학생을 넘어 지역사회의 글로벌화를 체감하며, 한국의 이민정책과 교육정책의 경계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 사회에서의 적응과 지역 내 인프라 부족 문제를 드러내면서, 이민정책의 변화가 교육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들의 존재는 지방 활성화와 이민 정책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발전 전략을 모색하게 만든다.

중국인 유학생들은 한국 사회에서 언어 장벽과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며, 지역 내 유학생 지원 시스템이 미흡함을 지적하고 있다. 유학생 유치는 지방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지속 가능한 유학 정책 부재로 지방의 고립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들은 이런 문제가 지속될 경우, 지역 사회의 쇠퇴를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지방 대학의 유학생 유치에 실패하면 지역 경제를 더욱 침체시킬 수 있으며, 이는 인구 감소와 함께 지방의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외국인 유학생과 지역 주민 간의 상호 이해가 부족하면 장기적으로 문화적 단절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여성평화운동가들은 젠더 불평등과 한반도의 냉전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실천적 운동을 펼치며, 평화와 안보의 담론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이들은 핵-재래식 군비 통제, 군산복합체에 대한 개입부터 미시적 평화교육에 기여하면서, 기존에 포괄되지 않았던 안보, 평화구축의 이슈 및 방법론에 대한 성찰을 심화한다. 여성평화운동가들은 젠더와 평화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새로운 사회적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여성평화운동가들은 군사화된 안보 중심 사고가 젠더 평등과 함께, 개인의 일상적 평화나 민주주의, 삶의 질에 대한 상호 연계된 평화, 안전의 문제들을 배제하고 간과해왔음을 비판한다. 이들은 젠더를 포함해 다양한 배경의 소수자들을 배제하는 안보 정책은 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시민들의 선호, 선택에 해를 끼치고, 기존의 분단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여성평화운동가들은 현재 사회에서 안보, 평화가 누구의 안보, 평화인가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며 현상유지의 안보 일변도의 접근이 아니라 한국 및 한반도 갈등구조의 근본적 전환 및 평화구축의 방향을 탐색한다.

최의택은 도시 설계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비판한다. 기술 혁신이 특정 계층에만 집중될 경우, 사회적 약자들은 더욱 소외되며 디지털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 최 작가는 기술 발전이 포용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장애인과 소수자들이 배제된 비인간적인 사회가 도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한 배타적인 도시 구조가 유지되면,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권이 제한되고 도시 내 갈등과 불만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머징 시티즌들이 제기하는 의제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와 미래에 대비해야 할

과제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AI와 의료, 이민과 교육, 평화와 젠더, 장애와 기술이라는 교차점에서 이들이 발신하는 메시지는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각 분야의 경계를 넘는 융합적 접근을 요구한다. 이들의 목소리는 단순한 소수자의 의견이 아닌, 미래 사회를 위한 경고와 가능성의 신호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는 더욱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머징 시티즌이 촉발할 사회적 변화 전망

가. AI와 협업하는 의료진

의료 AI가 진단과 치료를 보조하면서 기존의 의료 전문가 역할이 변화한다. 의사와 기업가는 AI와 협력하여 빠르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구축하며, 이는 의료 시스템이 이전의 수작업 중심 체계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든다. AI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과 협업하는 의사들이 의료 혁신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이들은 기술과 의료를 융합한 새로운 정책과 시스템을 요구하며, 기존의 의료 규제와 보험 체계를 재편하도록 압박할 것이다. AI와 의료의 결합은 단순히 의료 현장뿐 아니라 윤리, 노동시장, 보험 구조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문제를 제기한다. 이는 의료인 고용 문제와 AI의 법적 책임 소재 같은 복잡한 질문이 될 것이다. 의료인들은 AI를 활용한 예방 중심의 의료와 개인 맞춤형 치료로 기존의 치료 중심 모델을 대체할 것이다. 이는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된다.

나. 지역의 중국 유학생들

유학생들의 증가는 지방 대학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한 번 유입된 유학생 인구는 지역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촉발한다. 이는 지방이 과거의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게 만든다. 지방의 중국 유학생들은 학문적 교류뿐 아니라 지역 문화와 사회의 새로운 이해관계자로 부상할 것이다. 이들은 지역 주민들과 협력하며 이민 정책과 지역 개발 계획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학생의 존재는 이민 정책, 교육 정책, 지역 개발 문제가 얹힌 복합적 이슈를 제기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유학생과 지역 주민 간의 상호 이해와 통합이 부족하면 사회적 갈등과 긴장

이 유발될 수 있어 사회적 대화가 필요할 것이다. 유학생들은 지역의 활력 회복과 다문화적 융합 모델을 제안하며, 한국 지방 도시가 국제적 교육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비전을 제공할지 모른다. 이는 지방 활성화와 글로벌화의 결합을 가능케 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다. 여성평화운동가들

여성평화활동가들은 전쟁의 부재라는 ‘소극적 평화’ 개념을 넘어 일상의 군사주의, 위계적 구조에 대한 비판과 성찰을 통해 미시적 레벨에서 사회적 정의, 평등의 관점에서 ‘적극적 평화’를 성취하는 평화구축(peacebuilding)으로의 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여성을 포함한 소수자들에게 더 나은 평화의 규범미래상을 보여준다. 여성평화운동가들의 활동은 젠더 불평등과 군사 중심 안보 체계에 대항한 새로운 담론을 제시하며, 기존의 군사주의-가부장주의적 안보 패러다임으로 돌아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이들은 평화와 안보를 젠더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주체로 등장하며, 군비 축소와 성평등을 융합한 새로운 정책 의제를 이끌어간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기존의 안보 정책 결정 과정에 더 많은 민주주의를 요구할 것이다. 여성운동가들은 안보와 젠더 불평등의 교차 문제를 제기하며, 기존의 군사적 접근이 아니라 포괄적인 해법을 요구한다. 이는 평화구축 과정에서 성평등을 바탕으로 평화유지, 평화조성, 평화구축의 다양한 층위, 평화 문제에 연결되는 다영역, 다중심적 접근이라는 복합적 도전 과제를 제기할 것이다. 이는 기존의 안보 일변도의 정책을 넘어 평화와 인권 중심의 새로운 미래전략으로 전환을 촉진할 수 있다.

라. 장애인 SF 소설가

장애인 SF 작가 최의택의 작품은 장애와 기술의 관계를 재해석하며, 장애인을 배제하지 않는 도시 설계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는 기존의 배타적 도시 설계로 되돌아갈 수 없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는 장애와 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회적 주체로 등장하며, 포용적 기술 정책과 도시 계획을 요구한다. 이러한 메시지는 장애인과 기술 개발자 간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 최의택은 기술 발전과 사회적 배제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제기한다. 기술 혁신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면 디지털 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 위험이 있다는 경고를 담고 있다. 그는 포용적 기술과 도시 계획의 새로운

모델을 제안하며, 기술이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는 장애인 친화적이고 공평한 미래 도시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우리사회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

제2절

입법적 과제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이머징 시티즌의 요구를 반영한 입법적 과제

가. AI와 협업하는 의사와 기업가: 의료 혁신과 규제 법안

- 의료 AI 책임 규정 법제화: 의료 AI 시스템 사용에 따른 사고 발생 시, AI와 의료 전문가 간 책임 분담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 요구된다.
- AI 진료와 의료보험 연계 법안 마련: AI 활용 진료가 의료보험 체계에 통합될 수 있도록 보험 적용 기준을 설정하고 공정한 의료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 AI 시대에 맞춘 의료인 재교육 법제화: 의료인들이 AI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정이 법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 의료인 고용 보호 법안 도입: AI 도입으로 인한 의료인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 안정과 직무 재편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나. 지역의 중국인 유학생들: 다문화 통합과 지역 활성화 법안

- 유학생 정착 지원 및 사회 통합 법제화: 지방 유학생을 대상으로 언어 교육과 문화 적응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정착 지원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
- 이민 정책과 교육 정책 연계 법안: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류 비자와 취업 기회를 연계하는 법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 지방 대학 지원 및 유학생 인프라 확충 법안: 지방 대학과 지역 사회가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과 인프라 개발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 유학생-지역 사회 협업 프로그램 법제화: 유학생과 지역 주민, 기업이 협력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동 프로젝트를 제도화해야 한다.

다. 여성평화운동가: 젠더와 평화를 결합한 법안

- 젠더 평등을 반영한 군비 축소 및 평화 구축 법안: 군사 예산 배분과 군비 축소 과

정에 젠더 평등 요소를 반영하는 법안이 요구된다.

- 포괄적 평화 협상 법제화: 평화 협상과 안보 정책 수립 과정에서 여성과 소수자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 여성 인권 보호 법률 강화: 젠더 불평등과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보호 장치가 강화되어야 한다.
- 여성평화운동 지원 법안 마련: 여성평화운동가들의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을 제공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라. 장애인: 포용적 도시 설계와 기술 법제화

-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하는 도시 설계 법안: 도시 개발 과정에서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접근할 수 있는 설계가 의무화되어야 한다.
- 공공 공간 포용성 강화 법안 마련: 공공 공간이 장애인을 포함한 소외계층에게도 열려 있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 디지털 격차 해소 및 포용 법제화: 기술 발전의 혜택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공평하게 제공되도록 디지털 포용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 장애인 맞춤형 기술 지원 법안 도입: 첨단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보조기기를 장애인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2 종합적 입법 방향과 기대 효과

이머징 시티즌들의 요구를 반영한 입법적 과제는 포용적 사회 구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한다. 각 분야에서 제시된 입법 과제들은 아래와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의료 혁신과 신뢰 구축: 의료 AI 도입과 의료인의 재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 지역 활성화와 글로벌화의 균형: 외국인 유학생의 정착과 사회 통합을 도모하여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이 국제적 교육 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 포괄적 안보와 평등한 평화 구축: 군사 중심 안보 패러다임을 넘어 평화와 젠더를 결합한 포괄적 안보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더 나은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

- 포용적 기술과 도시 구현: 도시 설계와 기술 정책에서 소외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한다.

이와 같은 입법적 대응은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을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머징 시티즌들이 경고한 문제를 해결하고, 더욱 포용적이고 성숙한 미래 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절

미래 과제와 결론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연구의 한계

이 연구는 이머징 시티즌이라는 새로운 주체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중요한 시도였지만,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는 연구 결과의 범위와 실행력을 제한하며, 향후 연구와 정책 개발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이머징 시티즌은 동적이고 다차원적인 정체성을 가지며, 고정된 범주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연구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일관된 정의와 연구 범위 설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머징 시티즌과 관련된 정량적 데이터가 부족하여 정성적 인터뷰와 사례 연구에 의존해야 했다. 특히 소외 계층과 복합적 정체성을 지닌 집단에 대한 데이터 수집이 미흡했다. 연구 결과가 도출한 주요 이슈들이 입법 및 정책 개발 과정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지점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다. 사회 변화 속도에 비해 입법 절차가 느리고 복잡해, 연구에서 제안한 시사점이 정책으로 반영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정 지역(예: 지방 유학생 사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졌으나, 다양한 지역의 차별화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제약이 있다.

2 미래 과제

앞으로 이머징 시티즌 연구와 정책 개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가 필요하다.

정성적 연구와 정량적 분석을 통합한 혼합 연구 방법을 활용해 다양한 정체성과 복합적 문제를 파악해야 한다. 특히 소외 계층과 소수자 집단에 대한 심층 데이터 수집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연구 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 기관, 정부 부처와의 협력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정기적인 연구-정책 연계 포럼을 통해 연구자와 정책 입안자 간의 소통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머징 시티즌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실행 결과가 피드백으로 이어지도록 시민 참여형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 연구 과정에서 제시된 부정적 미래를 회피하기 위해 대응 시나리오와 실행 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 부정적 미래를 방지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사회적 위기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지역 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연구를 심화하고, 글로벌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문제와 국제적 동향을 연결하는 다층적 접근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이머징 시티즌이 제기하는 사회적 이슈와 변화를 분석하며, 정책적 시사점과 사회적 대응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의의 불명확성, 데이터 수집의 한계, 정책 연계 부족과 같은 제한점이 있었다. 앞으로는 정교한 데이터 수집과 입법·정책 간의 연계 강화,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해 연구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이머징 시티즌의 목소리가 더 나은 미래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1. 문헌자료
2. 웹사이트

참고문헌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문헌자료

- 강명구·김홍중·신혜선 편. 2016. 『한중일 청년을 말하다』. 진인진.
- 강승규. 2021. “인공지능(AI)이 초래한 사회적 변화와 위협의 공존가능성에 대한 검토.” 법이론실무연구 9 (4): 495-524.
- 강윤희. 2013. “여성, 평화, 안보의 국제규범 형성과 확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호를 중심으로.” 세계정치 19
- 강윤희·김경미·최정원. 2004. “한국 정치학에서의 성정치학의 연구현황과 제언.” 한국정치학회보 38(3)
- 구본진. 2022. “디지털 전환의 미래사회 위험이슈 및 대응 전략: 인공지능 역기능을 중심으로.” 이슈페이퍼, May, 1-32.
- 국민건강보험. (2023년 8월 14일자).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아토피 피부염 증상에 맞는 치료가 중요. 보도자료.
- 고민경. 2022. “외국인 유학생 연구 동향에 대한 비판적 탐색: 유학생의 다층적 경험과 정체성 이해를 위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8(4): 474-488.
- 김도혜. 2023. “가짜 유학생 담론과 한국 대학 학위의 가치: 몽골 출신 유학생의 졸업 후 삶을 통해 본 한국 유학 산업의 딜레마.” 『한국문화인류학』 57(1): 101-141.
- 김도혜. 2019. “교육 수혜자에서 초국적 청년 이주자로: 해외 유학생 연구 동향을 통해 본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 연구의 과제와 추진 방향.” 『다문화콘텐츠연구』 31: 39-68.
- 김도혜·최희정.. 2021. “지방대학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 후 진로 결정과 주요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현대사회와 다문화』 11(4): 79-106.
- 김도혜·김성은·김정숙·윤재운·이교일·최희정·바트첵게르투맹템베렐·황동진·김혜영·이예지. 2021. 『초국가주의 유학정책과 교육혁신』. 이름북하우스.

- 김무인. 2022. 『다문화 쇼크: 한국의 다문화주의는 왜 실패하는가』. 스리체어스.
- 김성은·이교일. 2019. “한국 정부 유학생 교육정책의 계보와 과제.” 『교육문화연구』 25(5): 61-78.
- 김영화. 2024. 『미래를 먼저 경험했습니다: 아프간 난민과 함께한 울산의 1년』. 메멘토.
- 김엘리. 2010. “여성과 평화의 불완전한 조우와 그 성격.” 여성과 평화, 5
- 김엘리. 2016. “여성의 군 참여 논쟁.” 한국여성학 32(1)
- 김재훈. (2021). 지역간 불균형과 지방대학의 위기, 중소도시의 관점에서. 지역사회연구 제29권4호: 1-30
- 김지연, 박범순, 장대익, 하대청, 신유정, and 유상운. 2023. “인공지능과 STS 교육 : 한국과학기술학회 학술대회 라운드 테이블 현장 증계.” 과학기술학연구 23 (2): 1-36.
- 김지혜·김현빈·류민희·보라·철·최혁규·홍명교. 2023. 『작은 불씨가 들판을 태운다: 동아시아 국제연대의 어제와 오늘』. 플랫폼씨.
- 김태환. 2017. 『다문화사회와 한국 이민정책의 이해』(개정판). 집사재.
-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편. 2023. 『초국적 관점에서 본 유학생의 경험과 유학정책: 교육 현장에서의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푸른길.
- 마틴 셀리그먼 외. (2021). 전망하는 인간, 호모 프로스펙투스. 김경일, 김태훈 옮김. 웅진지식하우스
- 문소정. 2009. “동아시아 페미니즘 시각에서 본 한국여성평화운동에 관한 연구.” 사회와역사 84
- 박강성주. 2010. “여성주의 안보연구 시론.” 여성과평화 5
- 박대민. 2020. “인공지능과 정보통치성 : 인공지능과 자동화 사회에 대한 알고리즘 통치성의 비판적 확장으로서 정보통치성.” 언론정보연구 57 (4): 55-94.
- 박성원·김유빈. 2022. ”이머징 이슈를 발견할 기회의 창: 갈등 관련 10대 이머징 이슈와 시사점.“ 『Futures Brief』 7: 1-28.
- 박성원. (2020). 2050년 서른살, 민서가 바라는 미래.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2호. 국회미래연구원

- 박성원 외. (2022). 미래정책의 국민선호 연구. 국회미래연구원
- 박성원. (2023). 지역주민들의 미래예측과 비전의 유용성: 부산시민과 미래대화 사례연구. 국가미래전략 Insight 75호, 국회미래연구원
- 박성원. (2024). 2040년 서울의 네 가지 미래 시나리오. 동향과 전망 120: 89-123
- 박세준, 김종길. (2022).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지역 불균형의 재생산. 지역사회학 제23권1호: 43-75
- 박소진. 2013. “한국 대학과 중국인 유학생의 동상이몽: 서울과 지방 소재 사립대학 비교.” 『한국문화인류학』 46(1): 191-234.
- 박정흠. (2023). 전국 주택가격 격차를 통한 지역 불균형 추이 분석. 재정포럼(23년4월호): 32-58
- 박종주. (2018). “교차성 페미니스트” 김벌리 크렌쇼가 우리에게 건네는 말. 여/성이론 38호: 156-168.
- 박찬운, 황지환. (2023). 공공 문화체육시설의 공간적 불균형 분석. 인천연구원
- 사사키 사다코. (2020년8월29일자). 코로나X장애X여성 문제는 복합차별에서 온다. 일다
- 설동훈. 2017. “한국의 이민자 수용과 이민행정조직의 정비.” 『문화와정치』 4(3):85-122.
- 송성수. 2022. “인공지능은 인간의 일자리를 얼마나 대체할 것인가 : 인공지능 시대의 기술과 노동에 관한 시론.” 코기토, no. 96: 7-37.
- 신지원. 2011. 『이민정책의 이론적 기초와 방향성 연구』. 이민정책연구원.
- 심영희·김엘리. 2005. 한국여성 평화운동사. 한울아카데미
- 안승현, 조성윤. (2023). 인천 안전도시 이미지 강화 정책 방안: 범죄 분야를 중심으로. 인천연구원
- 애쉬, 알렉. 2018. 『우리는 중국이 아닙니다: 모두가 착각했던 중국 청춘들의 삶』. 박여진 옮김. 더퀘스트.
- 엄효진, and 이명진. 2020. “인공지능(AI) 기반 지능정보사회 시대의 노동시장 변화: 경제사회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정보사회와 미디어 21 (2): 1-20.
- 윤영도 편. 2017. 『정동하는 청춘들: 동아시아 청년들의 정동과 문화실천』. 채륜.

- 윤정섭. 2023. “디지털 대전환의 미래: 인공지능 혁명 이후의 사회 변화 전망.” FUTURE HORIZON, no. 57 (December): 4-9.
- 외국인정책위원회. 2018.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18~2022)』.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이기완. 2021. “인공지능과 미래의 불평등, 그리고 민주주의.” 세계지역연구논총 39 (4): 1-23.
- 이보고. 2021. “중국 유학생과 ”우리만의 글로벌.“ 조문영 외. 『문턱의 청년들: 한국과 중국, 마주침의 현장』. 책과함께. (pp. 387-417)
- 이상직. 2023. “한국사회는 외국인과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가: 이민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시론.” 『국가미래전략 Insight』 76: 1-32.
- 이선미·김영순. 2021.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생활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동향 분석.” 『현대사회와 다문화』 11(1): 25-60.
- 이영남·마준·이용진. 2018. “재한 중국유학생에 관한 연구현황의 고찰: RISS 에 수록된 국내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중국학논집』 58: 173-195.
- 이창원·김도혜·최서리·신소희. 2020. 『국내 유학생의 학업실태 및 취업이행 연구』. 이민정책 연구원.
- 이토히로코·데스빈따아유이리아니. 2019.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과 현실의 차이: 유학생 내부 갈등과 국제교류원의 역할.” 『다문화와 디아스포라 연구』 15:55-85.
- 이혜경. 2019. “이민정책의 이론에 관한 시론과 방향.” 『대한정치학회보』 28(1): 107-136.
- 장경섭. 2018. 『내일의 종언(終焉)? : 가족자유주의와 사회재생산 위기』. 집문당.
- 정혜은. 2023. 장애로부터 교차성의 방법론과 연대를 구체화하기. 한국여성학 39 (4): 189-194.
- 조문영·류연미·김수아·이응철·유빙·양승훈·채석진·김기호·우자한·한선영·문경연·평진나·이보고. 2021. 『문턱의 청년들: 한국과 중국, 마주침의 현장』. 책과함께.
- 조문영·이민영·김수정·우승현·최희정·정가영·김주은. 2017. 『헬조선 인 앤 아웃: 떠나는 사람, 머무는 사람, 서성이는 사람, 한국 청년 글로벌 이동에 관한 인류학 보고서』. 놀민.

- 조영희·이혜경·고상두. 2021. 『이민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행정 수직·수평적 협력거버넌스』. 이민정책연구원.
- 정문성, and 이바름. 2023. “사회과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방법에 대한 탐색적 연구.” 시민 교육연구 55 (2): 215-40.
- 최민진. 2020. “주변에서 주변으로: 구조적 폭력과 한국의 지방대 재학 중국인 유학생들의 생존전략.”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 최봉환. 2020. “한국의 중국인 유학생 유입 현황과 효율적인 중국인 유학생 유치 방안.” 『인문사회21』11(5):711-723.
- 최현. 2008. “탈근대적 시민권 제도와 초국민적 정치공동체의 모색.” 『경제와사회』 79: 38-61.
- 하대청. 2018. “루프 속의 프레카리아트 :인공지능 속 인간 노동과 기술정치.” 경제와사회, June, 277-305.
- 하대청. 2023. “선물경제 위의 인공지능: 깃허브 코파일럿과 오픈 소스의 자산화.” 사회와이론, November, 53-88.
- 홍명교. 2021. 『사라진 나의 중국 친구에게: 베이징에서 마주친 젊은 저항자들』. 빨간소금.
- 황경아·홍지아. 2018. “재한 중국 유학생의 유학동기와 문화자본으로서의 취득학위의 가치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91: 319-357.
- 황영주. 2003. “평화, 안보 그리고 여성.” 국제정치논총, 43(1)
- 황영주. 2013. “페미니즘 안보연구의 기원, 주장, 그리고 분석,” 세계정치 19
- Anagnost, Ann, Hai Ren and Andrea Arai (eds.). 2013. Global Futures in East Asia: Youth, Nation, and the New Economy in Uncertain Times. Stanford University Press.
- Acemoglu, D., & Restrepo, P. (2018). Artificial intelligence, automation, and work. In The econom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 agenda(pp. 197-236).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outros-Ghali, Boutros. 1992. An Agenda for Peace. New York: United Nations

- Bundy, A. (2017). Preparing for the futur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 Society*, 32(2), 285–287.
- Chang, Kyung-Sup and Bryan Turner (eds). 2011. *Contested Citizenship in East Asia: Developmental Politics, National Unity, and Globalization*. Routledge.
- Chang, Kyung-Sup. 2022. *Transformative Citizenship in South Korea: Politics of Transformative Contributory Rights*. Springer.
- Confortini, Catia C. 2006. “Galtung, Violence, and Gender: The Case for a Peace Studies/Feminism Alliance,” *Peace & Change*, 31(3)
- Crenshaw, Kimberlé, (1989). “Demarginalizing the Intersection of Race and Sex: A Black Feminist Critique of Antidiscrimination Doctrine, Feminist Theory and Antiracist Politics,” *University of Chicago Legal Forum*, 1989/1.
- Crenshaw, Kimberlé, (1991). “Mapping the Margins: Intersectionality, Identity Politics, and Violence against Color,” *Stanford Law Review*, 43/6.
- Dator, J. (Ed.). (2002). *Advancing Futures: Futures Studies in Higher Education*. Connecticut & London: Praeger
- Davis, Angela. (1981). *Women, Race & Class*. New York: Penguin.
- European Committee of the Regions. (2019). *From Local to European: Putting Citizens at the Centre of the EU agenda*
- Enloe, Cynthia H. 1989. *Bananas, Beaches & Bases: Making Feminist Sense of International Politics*. London: Pandora.
- Galtung, Johan. 1976. “Three realistic approaches to peace: peacekeeping, peacemaking, peacebuilding.” in *Impact of Science on Society XXVI*, 1/2, pp.103-115
- Galtung, Johan. 1996. *Peace by Peaceful Means*,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Oslo; Sage Publications
- Gentry, Caron E., Laura J. Shepherd and Laura Sjoberg. 2019. *The Routledge Handbook of Gender and Securit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Furman, J., & Seamans, R. (2019). AI and the economy. *Innovation Policy and the Economy*, 19, 161-191.
- Fong, Vanessa L. 2011. *Paradise Redefined: Transnational Chinese Students and the Quest for Flexible Citizenship in the Developed World*. Stanford University Press.
- Fong, Vanessa L. 2004. *Only Hope: Coming of Age Under China's One-Child Policy*. Stanford University Press.
- Jon, Jae-Eun, Jenny J. Lee, Kiyong Byun. 2014. "The emergence of a regional hub: comparing international student choices and experiences in South Korea." *Higher Education* 67: 691-710.
- Joyce, K., Smith-Doerr, L., Alegria, S., Bell, S., Cruz, T., Hoffman, S. G., Noble, S. U., & Shestakofsky, B. (2021). Toward a Sociology of Artificial Intelligence: A Call for Research on Inequalities and Structural Change. *Socius*, 7, 2378023121999581.
- Kim, J., & Lee, B. (2023). Ai-augmented surveys: Leveraging large language models for opinion prediction in nationally representative surveys. *arXiv Preprint arXiv:2305.09620*. <http://arxiv.org/abs/2305.09620>
- Ling, Minhua. 2020. *The Inconvenient Generation: Migrant Youth Coming of Age on Shanghai's Edge*. Stanford University Press.
- Lipura, Sarah Jane & Francis Leo Collins. 2020. "Towards an integrative understanding of contemporary educational mobilities: a critical agenda for international student mobilities research." *Globalisation, Societies and Education* 18(3): 343-359.
- Ledarach, John Paul. 2015. *Little Book of Conflict Transformation*, New York: Good Books
- Ni Aolain, Fionnuala, Naomi Cahn, Dina Francesca Haynes and Nahla Valji, eds. 2018. *The Oxford Handbook of Gender and Conflic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Otto, Dianne. 2018. "Women, Peace, and Security: A Critical Analysis of the Security Council's Vision," in Fionnuala Ni Aolain, Naomi Cahn, Dina Francesca Haynes and Nahla Valji, eds. *The Oxford Handbook of Gender and Conflic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Ortegon-Sanchez, A. & Tyler, N. (2016). Constructing a Vision for an 'Ideal' Future City: a conceptual model for Transformative Urban Planning. *Transportation Research Procedia* 13: 6-17
- Ong, Aihwa(1999), *Flexible citizenship: The Cultural Logics of Transnationality*.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Pfaff-Czarnecka¹, Joanna. 2020. "Shaping Asia Through Student Mobilitie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64(10): 1400-1414.
- Park, S. (2018). A possible metric for assessing self-efficacy toward postulated futures. *Foresight* 20(1): 50-67
- Parolin, Z. (2020). Automation, Occupational Earnings Trends, and the Moderating Role of Organized Labor. *Social Forces: a Scientific Medium of Social Study and Interpretation*, 99(3), 921-946.
- Porsdam Mann, S., Earp, B. D., Møller, N., Vynn, S., & Savulescu, J. (2023). AUTOGEN: A Personalized Large Language Model for Academic Enhancement-Ethics and Proof of Principle. *The American Journal of Bioethics: AJOB*, 1-14.
- Roberts, M. E., Stewart, B. M., Tingley, D., Lucas, C., Leder-Luis, J., Gadarian, S. K., Albertson, B., & Rand, D. G. (2014). Structural topic models for open-ended survey respons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8(4), 1064-1082.
- Schuilenburg, M., & Peeters, R. (2020). *The Algorithmic Society: Technology, Power, and Knowledge*. Routledge.
- Smith, H. (2020). Algorithmic bias: should students pay the price? *AI & Society*, 35(4), 1077-1078.

- Sjoberg. 2013. "Viewing Peace Through Gender Lenses," *Ethics & International Affairs*, 27(2)
- Sylvester, Christine. 2001. *Feminist International Relations: An Unfinished Journe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ickner, J. Ann. 1992. *Gender in International Relations: Feminist Perspectives on Achieving International Securit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Thirunavukarasu, A. J., Ting, D. S. J., Elangovan, K., Gutierrez, L., Tan, T. F., & Ting, D. S. W. (2023). Large language models in medicine. *Nature Medicine*, 29(8), 1930–1940.
- Tickner, J. Ann. 2001. *Gendering World Pol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Webel, Charles and Johan Galtung, eds. 2007. *Handbook of Conflict and Peace Studi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Webel, Charles and Jorgen Johansen, eds. 2012. *Peace and Conflict Studies Reader*, London: Routledge
- Wajcman, J. (2017). Automation: is it really different this time?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68(1), 119–127.
- Woronov, T. E. 2015. *Class Work: Vocational Schools and China's Urban Youth*. Stanford University Press.
- Zajko, M. (2022).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and social inequality: Sociological contributions to contemporary debates. *Sociology Compass*, 16(3). <https://doi.org/10.1111/soc4.12962>
- Zetka, J. R., Jr. (1991). Automated technologies, institutional environments, and skilled labor processes: Toward an institutional theory of automation outcomes. *The Sociological Quarterly*, 32(4), 557–574.

2 웹사이트

Jung, Yeonju. 2020. From grassroots to peace talks: Women in the inter-Korean peace process. SIPRI Commentary. <https://www.sipri.org/commentary/topical-background/2020/grassroots-peace-talks-women-inter-korean-peace-process>(검색일: 2024.9.27.)

Reychler, Luc. 2017. Peacemaking, Peacekeeping, and Peacebuilding. Oxford Research Encyclopedias. <https://doi.org/10.1093/acrefore/9780190846626.013.274>(검색일: 2024.9.27.)

Abstract

Dialogues on the Future with Citizens: A Study on Emerging Citizens' Perceptions of the Future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As societies face increasing complexity and rapid transformation, the "Emerging Citizens" concept provides a critical lens to understand and address future societal shifts. Emerging Citizens are defined as individuals or groups characterized by one or more of their attributes such as regionality, minority status, intersectionality, or emergent behaviors. These citizens are not merely vulnerable or marginalized but possess the potential to drive societal transitions through their unique perspectives and actions.

This report explores the role and significance of Emerging Citizens in envisioning and shaping future societies. It expands upon traditional research approaches by integrating "preferred futures" with "avoided futures," thereby identifying potential social risks and actionable responses. By engaging with diverse case studies—including regional residents, medical AI users, multicultural international students, women peace activists, and an SF writer with disabilities—the report highlights how Emerging Citizens can illuminate structural inequities and propose innovative solutions.

The key findings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integrating the voices of Emerging Citizens into policymaking to foster inclusivity and equity. For example:

- **Regional engagement:** Dialogues with citizens from Incheon reveal urgent concerns such as economic stagnation, insufficient healthcare infrastructure, and environmental challenges. Solutions proposed by participants ranged from resource conservation to technological innovation.
- **Intersectional advocacy:** Women peace activists and their dual focus on

gender equality and peacebuilding demonstrate how intersectional approaches can redefine democratic and inclusive policy frameworks.

- Technological transformation: The adoption of AI in healthcare reshapes professional roles and presents ethical and regulatory challenges, highlighting the need for collaborative policymaking.
- Cultural integration: Multicultural students, particularly international students in regional areas, highlight the potential for economic and cultural revitalization but face linguistic and systemic barriers that demand targeted support.
- Creative perspectives: The work of an SF writer with disabilities exemplifies how creative approaches can redefine societal norms and envision inclusive futures through technology and storytelling.

This report concludes by emphasizing that Emerging Citizens are not merely subjects of change but active agents capable of sparking societal transformation. Their lived experiences and emergent issues serve as vital signals for detecting future risks and designing adaptive, multidimensional policies. Addressing the challenges they raise requires innovative policy frameworks, legislative support, and enhanced social solidarity to create a fairer and more sustainable society.

Through this analysis, the report aims to inspire policymakers, researchers, and stakeholders to recognize and amplify the voices of Emerging Citizens, ensuring their inclusion in shaping the trajectories of future societies.

국민과 미래대화: 이머징 시티즌의 미래인식

발행 2024년 12월 30일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전화 02)786-2190
팩스 02)786-3977
홈페이지 www.nafi.re.kr
인쇄처 세일포커스(주) 02)2275-6894

©2024 국회미래연구원

ISBN 979-11-94650-12-6 (95330)

